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박사학위논문

#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

2012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해 식

#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안 상 훈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해 식

정해식의 사회복지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조 흥 식 (인)

부 위 원 장 홍 백 의 (인)

위 원 장 덕 진 (인)

위 원 김 수 완 (인)

위 원 안 상 훈 (인)

## 국문초록

#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 -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 해 식**

본 논문은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측정하고, 이를 복지국가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한 비교사회정책 연구이다. 경제적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의 질 이론 논의에 바탕을 둔 지표를 선정하여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측정한 사회의 질을 통해 복지국가 수준을 이해하고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하여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의 분석적 유용성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사회의 질 이론은 기존의 경제적 안정성 보장을 중심으로 측정되어온 복지국가의 수준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측정할 수 있는 이론틀로,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하위 분면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의 질'은 이론적 논의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 측정이 부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24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을 구성하는 18개 하위영역에서 이론적 논의에 입각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의 질을 사회적 조건 요인으로 상정하여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하여 사회의 질 접근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 측정의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람들이 생애기간 동안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재정적 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돌봄, 일, 교육의 다섯 하위 영역에서 19개의 측정지표를 확인하였다.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지수화한 결과, 노

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높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수준을 나타냈다. 반대로, 한국,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낮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 응집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정체성의 네 하위 영역에서 8개의 측정지표를 확인하였다.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지수화한 결과,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의 순서로 높은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헝가리,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포르투갈, 일본은 낮은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시민권, 노동시장에의 포용, 서비스,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의 네 하위영역에서 11개의 측정지표를 확인하였다. 지수화의 결과는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의 순서로 높은 사회적 포용성 수준을 보였고, 한국,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은 낮은 사회적 포용성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능성은 시민들이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간역량과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식기반, 노동시장, 제도의 개방 및 지원, 공적공간, 대인관계 지원의 다섯 하위영역에서 12개의 측정지표를 확인하였다. 지수화의 결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높은 사회적 역능성을 보였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일본은 낮은 사회적 역능성을 보였다.

네 하위분면 수준에서 측정한 사회의 질을 종합한 결과, 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높은 사회의 질은 스칸디나비안 국가에서 나타났고, 이어 주로 앵글로-색슨 국가, 대륙 유럽 국가 순으로 사회의 질 수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남부 유럽 국가와 일본, 헝가리, 한국은 사회의 질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전 수준에서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회의 질 발달 수준에서는 그 하위분면 별로 개별국가에 따라서 상이한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 수준을 평가하였던, 복지국가 지출변수들은 단지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었다. 즉 복지국가의 양적 수준으로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 지출 중 사회서비스 지출은 보다 다양한 맥락의 사회의 질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서비스 지출의 활

성화가 사회의 질 수준 제고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였다. 복지국가 성과변수들 중 일자리 정책 성과와 관련된 두 변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실업률이 사회적 응집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률은 이를 포함하여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 분면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서비스 지출과 일자리와 관련된 복지국가 성과 수준이 사회의 질의 보다 다양한 맥락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의 질 하위분면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한 결과는 Esping-Andersen(1990;1999)의 세 가지 복지체제 유형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남유럽 복지국가들의 독특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구분되는 국가들은 높은 사회적 응집성을 특징으로 하였고, 보수주의 복지 체제로 구분되는 국가들은 대체로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의 발전을 특징으로 하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 체제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고른 발달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한국과 남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저조한 발달을 특징으로 하였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의 결과가 복지국가 체제유형과 비슷하다는 것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먼저 사회의 질이 구성되는 방식도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열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복지국가 수준이 대체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만을 설명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이 복지국가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조건요인으로써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과 국민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으로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 네 하위분면 수준의 발달정도의 다양한 결합이 가져오는 국민행복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먼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만을 조건요인으로 설정하고, 다음으로 이에 더하여 국민소득 수준을 조건요인에 추가하였다.

첫째 분석의 결과,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국민행복을 위해서 거의 항상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국민행복이 나타나는 사회의 질의 조건결합은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원인경로와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원인경로였다. 즉, 높은 국민행복은 사회의 질의 어느 특정한 하위분면이 발달한다고 하여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각 하위분면 조건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로 공식적 제도 영역으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국민행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사적 자원 영역을 대표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조건요인으로 추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민소득 역시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

타났다. 국민소득 수준을 추가한 국민행복의 원인경로는 세 가지가 확인되었으며, 국민소득 수준을 분석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의 질 수준의 원인경로로는 국민행복 수준의 설명력이 낮았던 일부 자유주의 복지국가 사례의 설명력을 높였다.

사회의 질을 측정하고, 이를 복지국가 수준을 이해하고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한 본 연구의 결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사회의 질 접근이 복지국가의 질적 수준의 다양함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에 대한 접근은 주로 경제적 보장에 주목해왔으며, 이는 사회의 질로 측정한 복지국가의 다양한 맥락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한편, 사회의 질 수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복지국가 유형과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의 질은 복지국가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의 질 접근이 가지는 분석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사회의 질이 국민행복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비교국가 차원에서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특정 하위분면 만의 발달이 아니라, 사회의 질 전반적인 수준의 발전이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응집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 응집성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모든 원인경로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응집성은 객관적 제도 영역의 발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중요성은 명확하다. 결국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위해서는 사회제도 수준의 전반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주요어: 사회의 질, 복지국가, 국민행복,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학 번: 2006-30756

## 〈 제목 차례 〉


제 1장. 서론 ····· 1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모형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모형 ····· 9
제 2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10
1. 사회의 질 ····· 11
2. 복지국가의 유형과 변화, 그리고 사회의 질 ····· 33
3. 행복수준에 대한 연구 ····· 47
제 3절. 연구문제 ····· 63
제 4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 65
1. 분석방법 ····· 65
2. 분석자료 ····· 66
제 5절. 논문의 구성 ····· 68

제 2장. 사회의 질(SQ): 측정과 지수화, 국가 간 비교 ····· 69
제 1절. 문제제기 ····· 69
제 2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 72
1. 분석방법 ····· 73
2. 분석자료 ····· 75
제 3절. 사회의 질 하위분면의 측정과 지수화 ····· 76
1.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측정과 지수화 ····· 76
2.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과 지수화 ····· 92
3.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측정과 지수화 ····· 100
4.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측정과 지수화 ····· 108
제 4절. 소결 ····· 117
1. 측정결과의 종합 ····· 117
2. 연구의 함의와 한계 ····· 119

**제 3장. 복지국가와 사회의 질 ····· 121**
제 1절. 문제제기 ····· 121
제 2절. 분석 방법과 분석자료 ····· 122
1. 분석방법 ····· 122
2. 분석자료 ····· 124
제 3절. 복지국가 지표와 사회의 질의 비교 ····· 125
제 4절. 사회의 질 유형화 ····· 128
1. 군집분석 ····· 128
2. 사회의 질 유형의 해석 ····· 132
제 5절. 소결 ····· 138

**제 4장.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 140**
제 1절. 문제제기 ····· 140
제 2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 145
1. 분석방법 ····· 145
2. 분석자료 ····· 152
제 3절. 국민행복 수준에 대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 156
1. 모델 특정화 ····· 156
2. 퍼지소속점수로의 변환: 측정 ····· 157
3.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 159
4. 사회의 질 수준, 국민소득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 167
제 4절. 소결 ····· 172

**제 5장. 결론 ····· 176**
제 1절. 연구 요약 ····· 176
제 2절. 연구의 함의 ····· 179
1. 이론적 함의 ····· 179
2. 정책적 함의 ····· 181

**〈참고 문헌〉** ····· 185
1. 국내 문헌 ····· 185
2. 국외 문헌 ····· 187
3. On-line Database ····· 201

〈부록 1〉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 205
〈부록 2〉 사회지표틀 ····· 210
〈부록 3〉 사회의 질 지표구성 ····· 213
〈부록 4〉 사회의 질 측정지표 ····· 220
〈부록 5〉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 225
Abstract ····· 228

# 〈 표 차례〉

〈표 1-1〉 사회의 질 건축양식(The Social Quality Architecture) ····· 14
〈표 1-2〉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 17
〈표 1-3〉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 23
〈표 1-4〉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 26
〈표 1-5〉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 28
〈표 1-6〉 복지상황(welfare positions)의 구분 ····· 49
〈표 1-7〉 삶의 질 접근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의 기준 ····· 60

〈표 2-1〉 소득1분위, 3분위 집단의 필수소비지출 비중(가구소비지출 대비) ····· 77
〈표 2-2〉 2000년대 후반 빈곤율(중위소득 60% 기준)과 빈곤감소율 ····· 79
〈표 2-3〉 자가소유비율과 가구소비지출 중 주거관련지출비율 ····· 80
〈표 2-4〉 근로시간 형태와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국가별 정규직 비율 ····· 84
〈표 2-5〉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지수화 계산 ····· 88
〈표 2-6〉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측정값 ····· 89
〈표 2-7〉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지수와 각 하위영역지수 간의 상관관계 ····· 91
〈표 2-8〉 국가별 일반신뢰 수준과 부패인식지수 ····· 93
〈표 2-9〉 국가별 사회단체 가입률 및 평균참여단체수 ····· 95
〈표 2-10〉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지수화 계산 ····· 97
〈표 2-11〉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값 ····· 98
〈표 2-12〉 사회적 응집성 분면 지수와 각 하위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 ····· 99
〈표 2-13〉 여성의원 비율과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 ····· 102
〈표 2-14〉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지수화 계산 ····· 104
〈표 2-15〉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측정값 ····· 105
〈표 2-16〉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와 각 하위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 ····· 107
〈표 2-17〉 국제성인문해조사 1단계 해당자의 비율 ····· 109
〈표 2-18〉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수화 계산 ····· 113
〈표 2-19〉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측정값 ····· 114
〈표 2-20〉 사회적 역능성 분면 지수와 각 하위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 ····· 115
〈표 2-21〉 국가별 사회의 질 점수 ····· 117
〈표 2-22〉 각 하위분면 지수의 상관관계 ····· 119

〈표 3-1〉 복지지표 측정값 ····· 125
〈표 3-2〉 사회지출 수준과 사회의 질의 상관관계 ····· 126
〈표 3-3〉 복지 성과와 사회의 질의 상관관계 ····· 127
〈표 3-4〉 군집별 기초분석표 ····· 130
〈표 3-5〉 분산분석 결과 ····· 130
〈표 3-6〉 사후검증 결과, Tukey HSD ····· 131
〈표 3-7〉 각 군집의 평균값 ····· 136

〈표 4-1〉 언어적 표현의 수학적 전환 ····· 148
〈표 4-2〉 행복 설문 문항 ····· 153
〈표 4-3〉 각국의 삶의 만족 정도와 국민소득 수준 ····· 155
〈표 4-4〉 결과변수와 원인변수의 기초통계 ····· 155
〈표 4-5〉 변수들 간 상관관계(N=24) ····· 156
〈표 4-6〉 조건 집합에의 퍼지소속점수(95% level) ····· 158
〈표 4-7〉 결과집합에 대한 원인집합의 진실표 ····· 160
〈표 4-8〉 국민행복에 대한 사회의 질의 필요조건 검증 결과 ····· 161
〈표 4-9〉 국민행복에 대한 사회의 질의 충분조건 검증 결과 ····· 164
〈표 4-10〉 국민행복의 두 원인경로(causal pathways)[분석모델 1] ····· 165
〈표 4-11〉 결과집합에 대한 원인집합의 진실표 ····· 168
〈표 4-12〉 국민행복에 대한 사회의 질, 국민소득 수준의 필요조건 검증 결과 ····· 169
〈표 4-13〉 국민행복에 대한 사회의 질, 국민소득 수준의 충분조건 검증 결과 ····· 169
〈표 4-14〉 국민행복의 세 원인경로[분석모델2] ····· 170

〈부록표 1-1〉 삶의 질 측정 지수와 결과 ····· 208
〈부록표 1-2〉 삶의 질 지수와 GDP, 국가별 삶의 만족 수준의 상관관계 ····· 209
〈부록표 2-1〉 OECD, "How's life?"의 측정지표와 한국의 순위 ····· 212
〈부록표 3-1〉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지표 구성 ····· 213
〈부록표 3-2〉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지표 구성 ····· 215
〈부록표 3-3〉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지표 구성 ····· 216
〈부록표 3-4〉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표 구성 ····· 218
〈부록표 4-1〉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의 측정값 ····· 220
〈부록표 4-2〉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값 ····· 222
〈부록표 4-3〉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측정값 ····· 223

〈부록표 4-4〉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측정값 ····· 224
〈부록표 5-1〉 '완전한 소속' 기준을 적용한 퍼지소속점수 ····· 225
〈부록표 5-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 원인 배열의 퍼지소속점수 ····· 226
〈부록표 5-3〉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계산(Y-Cons, N-Cons, Coverage) ····· 227

##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모형 ····· 10
[그림 1-2] 사회의 질 4분면(Social Quality Quadrant) ····· 13
[그림 1-3]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의 이론적 위치 ····· 20
[그림 1-4] 사회의 질 접근의 차원 영역 ····· 60
[그림 1-5] 사회의 질과 주관적 안녕, 그리고 국민행복의 관계 ····· 62

[그림 2-1]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지수의 하위영역별 분해 ····· 92
[그림 2-2] 사회적 응집성 분면 지수의 하위영역별 분해 ····· 99
[그림 2-3]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의 하위영역별 분해 ····· 108
[그림 2-4] 사회적 역능성 분면 지수의 하위영역별 분해 ····· 116

[그림 3-1] 덴드로그램 ····· 129
[그림 3-2]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군집 평균값 ····· 133

[그림 4-1] 국민소득과 국민행복 ····· 141
[그림 4-2] 한국의 국민소득과 행복감 ····· 141
[그림 4-3]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국민행복 ····· 162
[그림 4-4] 원인경로에 따른 '높은 국민행복'(분석모델1) ····· 166
[그림 4-5] 원인경로에 따른 '높은 국민행복'(분석모델2) ····· 171

# 제 1장. 서론

##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모형

###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경제적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측정하고, 이를 복지국가 발전수준의 다양한 맥락을 확인하고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경제적 선진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질 접근이 복지국가의 질적 수준의 다양함을 이해하는 도구틀이 될 수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질 수준을 사회적 조건 요인으로 상정하여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질 접근이 가지는 분석적 유용성을 확인한다.

본 논문은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진보(societal progress)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실측하는 일련의 노력을 통해 사회발전 수준을 비교해왔다. GDP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는 경제발전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제지표, 이에 더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등의 사회지표, 그리고 최근에는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지표가 사회발전 수준의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추가되고 있다(Hall, 2008). 각각 물질적 단계(material stage), 사회적 단계(social stage), 지구적 단계(global stage)로 지칭되는 지표 개발의 단계는 사회발전의 측정 기준에 대한 시대적 관심의 변화를 반영한다. 대공황과 전후 복구의 시기에는 경제성장에 주로 관심을 쏟았고, 일정 정도의 성장을 이룬 이후에는 다양한 삶의 영역과 삶의 기회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자원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다.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사회발전 지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가장 최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도 GDP, 삶의 질,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이라는 사회지표의 발전 양상과 각각의 한계를 고려하고 있다(Stiglitz, Sen & Fitoussi, 2009).

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지표에서도 변화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지표는 대체로 구성원들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안녕(well-being) 수준 측정에 주력하였던 것에서, 사회적 차원 수준의 측정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각 개인의 생활수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수준에 주목하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배제, 사회적 통합, 사회적 응집 등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사회적 조건이 구성원의 안녕과 행복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조건 하에서 동등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인식한 결과이다.

한 사회의 발전의 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향과 속성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유럽의 일군의 학자들은 '사회의 질' 접근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사회 발전의 네 가지 조건요인(conditional factors)을 설정하였고, 동시에 사회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조건요인은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이다. 이 네 가지 조건요인은 곧 사회정책 목표로 기능하는데, 복지국가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최근 복지국가 정책에서 전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제 영역을 체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접근에서 제시한 네 가지 조건 요소들로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의 유형 및 제도적 배열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복지국가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복지국가의 변화와 발전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복지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보장의 양적·질적 수준 차이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 주목하고자 하며, 사회의 질 접근을 통해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을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복지국가는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통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왔다. 이에 복지국가의 경제적 보장의 양적 차이와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사회지출 수준 등으로 측정하는 복지 투입(welfare input)[1]과 빈곤율, 불평등의 감소, 완전고용의 유지 등으로 측정하는 복지 성과

---

1) '복지 노력'(welfare efforts) 또는 복지투입의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GDP 대비 공적사회지출'이다. 하지만 이 지표는 총량적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복지가 구성되고 변화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Allan & Scruggs, 2004; Green-Pedersen, 2007). 이에 비해서 OECD의 사회지출데이터(Social Expenditure Database)는 보다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각 사회프로그램의 지출수준에 대해 1980년부터의 자료를 제공한다. 가용한 데이터의 존재를 고려하여, Castles(2002)는 차선책으로서 OECD 국가의 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유형 구분-소득대체지출(Income-replacing expenditure), 빈곤제거 및 건강보호, 서비스관련 지출-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welfare outcome)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복지국가의 질적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들에서도 경제적 보장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복지국가를 총체적이고 질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Esping-Andersen(1990)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수준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탈상품화 수준은 실업이나, 질병,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단의 상황에서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족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복지국가의 질적 차이를 표상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소득유지와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의 가능성으로써 경제적 안전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Room, 2000).

복지국가의 경제적 안정의 보장은 그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으며, 경제적 안정의 보장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능력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평등과 효율의 공존이 가능하였던 케인지언 합의(Keynesian Consensus)의 시대를 거친 이후, 복지국가는 세계경제의 문제라는 외적 측면에서의 압박과 더불어 평등의 문제라는 내적 측면에서의 압박에 부닥치고 있다(Esping-Andersen, 1996). 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표상되는 외적 측면에서의 압박은 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한 복지국가 대응능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탈규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적 측면에서의 압박에서는 기존의 사회보호 구조가 새롭게 등장하는 욕구와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국가가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내·외적 측면으로부터의 압박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응전략과 성과 수준도 고려해야만, 복지국가가 제시하는 '안녕(well-being)에의 약속'이 실현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즉, 복지국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경제적 안전성 보장을 넘어 시민들의 안녕(well-being)을 보장하는 제반 사회적 조건의 발달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복지국가, 그리고 사회정책은 복지국가의 황금기 이후의 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거나, 수동적으로 변화를 강제당하여 왔다. 변화의 흐름 하에서 사회정책 대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서비스 경제·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조합으로 제시되는 사회투자국가 논의가 이 맥락에 위치한다(Esping-Andersen, 1996; Midgley, 1999; Jenson & Saint-Martin, 2003; Perkins, Nelms & Smyth, 2004; Taylor-Gooby, 2006). 둘째,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종속되는 일련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회(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적 사회정책의 모색(Mishra, 1999), 유럽 사회모델(European Social Model)의 제시가 이 맥락에 위치한다(Vobruba, 1997; Giddens,

Diamond & Liddle, 2006).

변화에 대처하는 두 흐름은 제시되는 맥락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다. 지속적인 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 규범은 새로운 가족정책, 새로운 젠더 계약, 고용을 통한 사회적 통합, 세대 간 계약의 재구성과 같은 정책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Esping-Andersen 외, 2002). 특히, 내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국가 규범이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 지점에서 시민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고려해야할 사회적 조건과 사회정책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Taylor-Gooby, 2004; Huber & Stephens, 2006; Pierson, 2007; Bonoli, 2007a). 성역할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노동시장의 조건 변화는 복지국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임금양극화의 심화, 장기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회투자국가 또는 전략'(Social Investment State or Strategy)이다. 사회투자국가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을 물적 자본 뿐 아니라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서 찾음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참여 기회를 극대화시켜 빈곤을 예방하고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를 말한다(안상훈 외, 2007: 3). 사회투자 논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와 사회의 통합과 더불어 기회의 평등을 위한 투자, 경제적 참여에 초점을 둔다(Esping-Andersen, 1996; Midgley, 1999; Jenson & Saint-Martin, 2003; Perkins et al., 2004; Taylor-Gooby, 2006).

둘째, 빈곤과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으로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Silver, 1994; Room, 1995;1997;1999; Jordan, 1996; Bhalla & Lapeyre, 1997; Atkinson & Davoudi, 2000; Hills, Grand & Piachaud, 2002; Pierson, 2002).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활동의 참여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접근성이라는 일차원적 접근보다 포괄적이다. 빈곤과 저소득, 노동시장에의 접근성 결여,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크의 빈약함과 부재, 지역적 수준에서의 부정적 이웃 효과(negative neighbourhood effects)[2], 각종 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극복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적 목표로 제시된다(Pierson, 2002: 7-15).

셋째,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제고이다(Jenson, 1998: Gough & Olofsson, 1999; Berger-Schmitt, 2000; Chan, To & Chan, 2006). 증

2) 빈곤과 배제가 특정한 지역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문제 상황을 지칭한다.

가하는 사회적 분화와 사회적 배제가 '사회통합과 사회적 안정'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들 주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응집은 경제적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확인된다(Ritzen, Easterly & Woolcock, 2000).

이렇게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민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의 기준, 복지국가의 평가는 경제적 안정성 보장, 안정적 소비 가능성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적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각종 사회적 제도와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신뢰와 유대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어도 일정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조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을 비교·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책적 지향과 개념적 지향–예를 들어, 사회투자전략, 사회적 배제, 사회적 응집–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지표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이들 사회정책 목표들은 대부분 이념적 논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 측정을 위한 지표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 한편 이들 각각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수준과 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들에서는 특정한 정책과 이념 지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표 선정을 통해서 그 수준을 설명하는데 그친다. 이는 복지국가를 특정 정책 차원에서만 바라볼 뿐 포괄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사회정책 목표와 지표를 포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사회의 질 이론을 만들어냈다. 사회의 질 이론은 경제정책이 사회정책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유럽통합 과정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모두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새

3) 국가 간/ 시기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 제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개념틀은 '사회적 배제'이다. 유럽연합의 사회적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는 사회적 배제의 전반적 영역을 설명하는 10개의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와, 1차적 지표를 보완하고 사회적 배제 문제의 기타 차원들(dimensions)을 설명하는 8개의 2차적 지표(Secondary Indicators)를 제안하고 있다(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1). 국내에서도 이 틀을 이용하여,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타진하거나(강신욱 외, 2005; 김안나, 2007),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시도하는 연구(문진영, 2010)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제시되었다(Beck, Maesen, & Walker, 1997a: 2). 이에 따라 등장한 사회의 질 이론은 한 사회를 생산성, 경제성장, 고용, 사회보호라는 전통적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을 뛰어 넘는다. 사회의 질 이론은 각 시민들이 한 사회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ies)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회가 개별 시민들에게 충족감(self-fulfilment)을 제공하는 수준에 주목하였다(van der Maesen, Walker, & Keizer, 2005: 13).

여기에서 사회의 질이란, "시민들이 그들의 복지(well-being)와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Beck et al., 1997a: 3).[4] 사회의 질 개념의 요체는 시민들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의 '사회'(the social)이다. 이때 '사회'는 주어진 특정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자기실현(self-realization)과 사회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 간의 상호의존으로 현실화된다(Beck, Maesen, & Walker, 2001a: 310).

사회의 질은 사회발전의 정도를, 사회수준의 발전과 개인수준의 발전이라는 수직적 연속체와 체계·제도의 형성과 공동체·집단의 형성이라는 수평적 연속체 상에 위치시켜 정책 목표를 구분하고 있다. 사회의 질 이론이 상정하는 좋은 사회는 사회구성원이 생애기간 동안 충분한 자원을 가지도록 하고(사회경제적 안전성), 공유된 정체성, 가치와 규범이 공유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사회적 응집성),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며(사회적 포용성), 실현능력(capabilities)과 사회적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도록(사회적 역능성) 하는 것이다(van der Maesen et al., 2005: 45).

199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의 현실 진단을 위한 여러 개념들과 변화의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회정책의 목표와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틀로써 '사회의 질'은 복지국가 수준의 다양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등장한 지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구체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5][6] 측정지표가 제시된 것이 2000년대 초중반이라는

---

4) 가장 최근의 사회의 질 정의는 "~ 하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정도"로 개념을 확장하였다(사회의 질 유럽재단 홈페이지, http://www.socialquality.org).

5) '사회의 질'의 구체적인 지표틀이 완성된 것은 2004년 이후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 14개 국가는 2005년 사회의 질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영국, 그리스,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이 보고서는 주로 2000년

것이 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는 제시하는 지표가 가지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의 질 이론은 비록 엄밀한 지표틀을 구성하였지만, 이 지표틀에 부합하는 지표가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둘째,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지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측정이 불가능한 지표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지표의 문제는 이론틀을 중심으로 한 지표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경제적 선진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론틀에 기반하여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이 국가 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의 여러 사회지표, 성과지표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검토하고, 사회의 질 발전 수준의 유형과 복지체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안전성 보장을 중심으로 하였던 복지국가의 전통적 접근에서 이용되는 지표들과 사회의 질 수준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사회의 질 접근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값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를 통해서 복지체제에 따른 사회의 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분석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질 접근이 복지국가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도구틀이 됨을 밝힘과 동시에 각 복지국가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취해왔던 사회정책이 사회의 질 수준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 각각을 사회적 조건요인으로 상정하여,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다. 사회지표의 발전과정에서 물질적 부와 경제적 능력 이외에 시민들의 안녕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된 것은 경제적 발전이 시민들의 안녕을 측정하는 도구로 불충분하다는 인식의 결과이다. 이미 1954년 UN의

---

대 초반의 사회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구체적 측정지표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측정변수가 제외되어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6)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사회의 질'에 대해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Yee and Chang(2009)은 여러 사회지표를 이용하여 각국의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의 질' 이론틀을 이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측정 단계에서는 네 하위분면의 개념을 재구성함으로써, 측정하는 사회적 맥락을 재해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장덕진(2010)은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사회의 질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가와 저발전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체적 측정지표가 더욱 제약된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외에도 김승권 등(2008)이 국내에 사회의 질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태진 등(2008)은 사회의 질 이론틀에 기반한 일부 지표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하고, 한국의 발전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조권중·변미리(2009)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데 있어 사회의 질 이론틀을 이용하였다.

전문가들은 금전적 측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삶의 수준(level of life)을 반영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Erikson, 1993). 행복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한 국가의 행복 수준이 다른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소득과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Inkeles, 1993). 한 국가의 소득수준 뿐 아니라 복지국가 수준, 노동조건, 환경,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할 때, 소득과 행복수준의 관계는 더 많이 설명될 수 있다(Di Tella & MacCulloch, 2008). 이런 점에서 사회의 질 이론이 상정하는 좋은 사회에서 과연 국민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가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어떤 발전 수준이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가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의 질 접근을 통해서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어떤 사회적 조건 하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비교사회정책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 발전의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제안된 다양한 사회지표들에 비해 사회의 질 접근을 통해 복지국가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사회의 질 이론을 통한 접근에서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의 관점에서 사회적 조건을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구성원의 안녕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와 연관되는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련의 지표체계와 개념이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삶의 수준(level of liv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접근을 들 수 있다.[7]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에서는 각 개인을 주어진 사회적 조건 하의 피동적인 존재로 묘사한다(Walker & van der Maesen, 2003). 하지만 사회적 조건은 개인과 사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형성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 그 사회적 조건 하에서 개인과 사회가 관계 맺는 형태와 관계의 질을 동시에 고려할 때 사회적 조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변화의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총체로서의 사회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된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은 각 국가가 유지해왔던 사회제도의 배열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는 사회적 응집성의 한 요소인 신뢰를 이끌어내고(Kumlin & Rothstein, 2005a; Rothstein & Uslaner, 2005), 적극적 개입으

7) 이 외에도 한 사회의 제 현상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개념들은 '생활가능성(livability)',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등이 있다(Noll, 2002).

로서 사회투자정책의 결과는 높은 사회적 역능성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질의 각 하위분면은 사회적 맥락의 차원에서 구성되며,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다차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사회정책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안녕(well-being)을 표상하는 국민행복 수준과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8]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경제성장, 경제적 성취의 한계는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더라도 국민행복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Easterlin, 1974;1995), 특히 1인당 국민총생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소득수준과 행복수준의 관계는 매우 약해진다(Inglehart & Klingemann, 2000). 이와 같이 일정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사회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경제적 수준의 설명력이 제약된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회정책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조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사회의 질' 수준으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발전 수준에서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발전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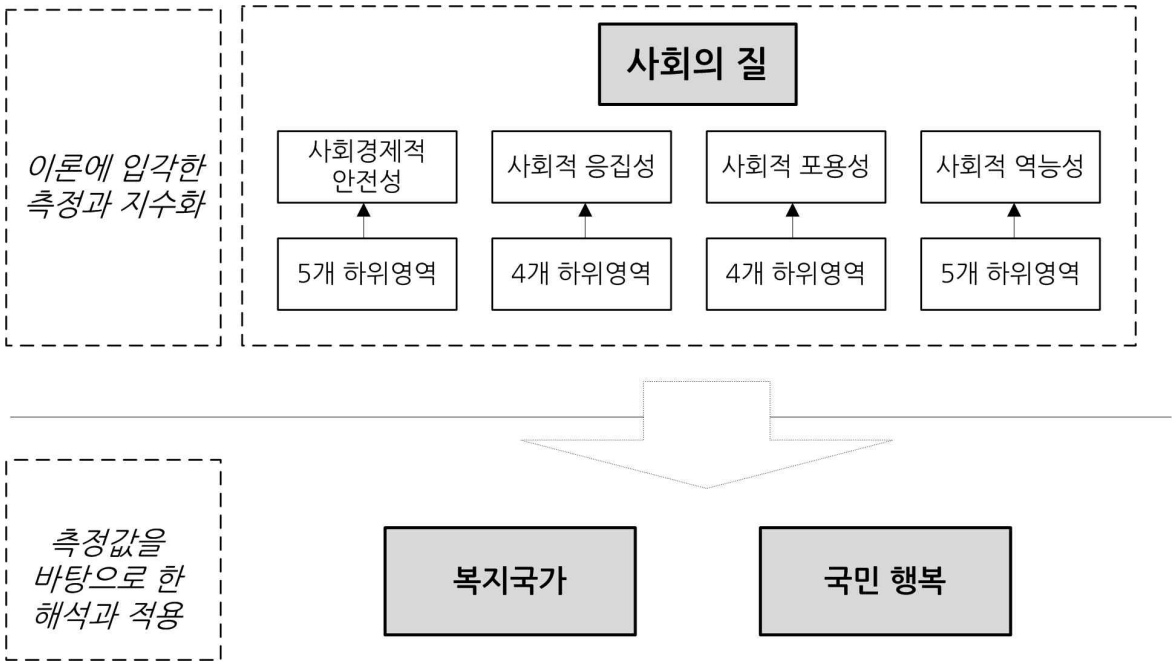
## 2. 연구모형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그림 1-1]과 같이 수립한다.

첫째, 사회의 질 이론틀에 입각하여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을 측정한다. 먼저, 측정은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네 하위분면(domain)을 구성하는 하위영역(sub-domain)을 중심으로 구체적 측정지표를 제안하고 실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으로, 지수화는 각 하위영역의 측정지표들을 표준화하여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분면 값을 구성한다.

둘째, 측정한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지수를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기존 복지국가 논의와 연결하여 해석한다. 이 분석과정을 통해서 현재 복지국가 수준을 살

8) 본 논문에서 국민행복 수준은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의 총합으로 구성한다. 삶의 만족은 각 개인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한 상태로 인지적 요소를 띄고 있다. 이에 비해 행복감(happiness)은 정서적 요소의 성격이 강하다.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인식적, 인지적 차원에서의 '삶의 만족'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삶의 만족'을 측정지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행복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거나 유의하지 않은 '소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1-1] 연구모형

펴봄에 있어 경제적 안전성 보장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조건 차원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틀로써 사회의 질 접근이 필요함을 밝힐 것이다.

셋째, 측정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값을 조건요인으로 상정하여,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질 접근이 지니는 분석적 유용성을 확인할 것이며,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발전 정책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 제 2절.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은 사회의 질 이론틀에 입각해 지표를 선정하고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며,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이 복지국가 유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 2절에서는 사회의 질, 복지국가 논의, 국민행복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의 질 이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의 질 수준의 조건요인(conditional factor)으로써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이론적 성격과 제시하는 지표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자 하는데, 사회의 질 이론이 제시하는 지표 중 실측가능하지 않은 지표들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대체가 필요하며, 지표의 대체를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해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지표의 선정기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의 분석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국가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이때 유형론과 복지국가를 둘러싼 내·외적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입각해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의 질 이론이 제기되었던 맥락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복지국가가 어떤 사회정책적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은 곧 개별 복지국가가 복지국가의 위기론 이후 지향해왔던 정책적 수준과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의 질이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 발전수준의 결과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을 조건요인으로 하여,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사회의 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설정할 것이다.

## 1. 사회의 질

### 1) 사회의 질 이론 논의[9)]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가 처음 제기되었던 1990년대에 유럽 사회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장기실업 등의 사회적 배제와 같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증가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경향과 화폐통합의 과정 속에서 개별 국가의 사회지출 능력은 제약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통합이 경제적 통합을 지향하면서 사회정책적 가치는 배제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회의 질 논의는 시작되었다.

1990년대 유럽통합이 세계화라는 경제적 자유주의 모델 하에서 진행되면서, 사회적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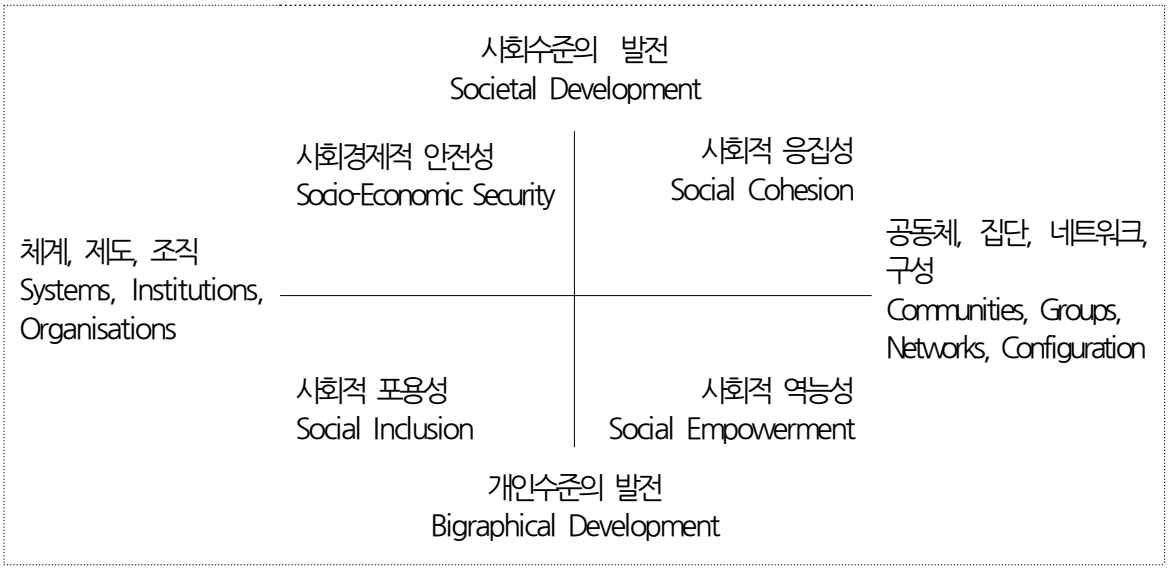
9) '사회의 질' 이론 논의의 시작과 경과는 사회의 질 유럽 재단(The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의 홈페이지(www.socialquality.org)에 소개되어 있다. 국내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사회의 질 연구' 프로젝트(http://isdpr.org/ds5_1.html), 김승권 등(2008), 조권중·변미리(2009)에 의해 그 내용이 소개되었다.

와 사회적 권리라는 유럽의 전통적 이상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Phillips, 2006). 특히,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특히 유럽경제통합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의 가입을 위해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수렴기준을 충족해야 했고(조영훈, 2001),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확대재정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전략의 사용이 더 이상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유럽통합은 복지지출을 포함한 공공지출의 감축이라는 사회정책 수준의 하향 수렴화 경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Bouget, 2006). 이런 이유로 사회정책의 하향 수렴화, 주로 복지 축소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제적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때 사회정책의 어떤 기준이 받아들여질 만하고, 이 기준은 어떤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는 가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van der Maesen et al., 2005).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새로운 유럽의 사회모델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모두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eck et al., 1997a: 2). 이에 따라 등장한 사회의 질 이론은 사회발전의 목표와 측정기준을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수준-을 통해서 제시한다. 개별 시민들이 한 사회의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네 하위분면 수준 각각에서 시민들에게 충족감을 제공하는 수준에 주목하자는 것이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13).

사회의 질 이론은 네 하위분면을 통해서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전체 사회의 질 수준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네 하위분면은 사회의 질의 '조건 요인'(conditional factor)이 된다. 네 개의 하위분면은 거시수준의 발전과 미시수준의 발전이라는 수직적 연속체 선상과 제도·조직과 공동체·집단·개별구성원의 관계라는 수평적 연속체 상에 위치하며(Beck, van der Maesen & Walker, 1997b: 320), 사회의 질 4분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2] 사회의 질 4분면(Social Quality Quadrant)




자료: van der Maesen et al.(2005), p. 45.

이때 사회는 주어진 어떤 특정 형태가 아니다. 사회의 질이 상정하는 사회는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자기실현'(self-realization)과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ies) 형성 간의 상호의존으로 현실화된다(Beck et al., 2001a: 310-11). 하지만 이 상호작용의 과정은 상호작용의 결과인 '사회' 위에서 이뤄진다. 사회의 구성은 과거에 결정되었던 구조 하에서 경로의존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새로운 맥락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그림 1-2]에서 수평축은 왼쪽에 위치하는 제도적 과정과 개입, 오른쪽에 위치하는 집합적이고 개인적인 활동들 사이의 긴장을 의미한다. 이는 하버마스(Habermas)의 시스템과 생활세계의 구분과 유사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질 이론은 한 측면의 발달이 다른 측면의 발달을 억제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Beck et al., 2001a: 319). 대신에 이 축 선상에서 시스템의 세계와 인간 행위의 세계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과정에 의해 현실화되는 '사회의 질'을 상정한다. 수직축은 사회수준의 발전과 개인수준의 발전 사이에서의 긴장을 의미한다. 수직축의 위쪽은 사회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수준에서, 수직축의 아래에는 개인수준의 발전이라는 미시적 수준으로 접근한다. 즉, 수직축의 위는 사회적 차원에, 아래는 '개별적 주체'(individual subjects)에 방점을 둔다(Beck et al., 2001a: 32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의 질 논의에서는 '사회'가 인간관계의 맥락으로 해석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현실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의 질이 발전하는 역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구성요인, 조건요인, 규범요인-을 고려해야 한다(Beck,

et al., 2001b; Herrmann & van der Maesen, 2008).

〈표 1-1〉 사회의 질 건축양식(The Social Quality Architecture)

| 구성요인<br>constitutional factors | 조건요인<br>conditional factors | 규범요인<br>normative factors |
|---|---|---|
| 개인적 보장<br>personal (human) security | 사회경제적 안전성 | 사회 정의 (공평)<br>social justice |
| 사회 인식<br>social recognition | 사회적 응집성 | 연대<br>solidatiry |
| 사회적 대응성<br>social responsiveness | 사회적 포용성 | 동등한 대우<br>equal valuation |
| 개인적 능력<br>personal (human) capacity | 사회적 역능성 | 인간 존엄<br>human dignity |

자료: van der Maesen and Verkleij(2009), p. 10.

van der Maesen and Verkleij(2009)은 비교국가 차원에서 사회의 질 개념에 접근하고, 사회의 질이 구성되는 일련의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의 질 건축양식'을 제안하였다. 위 표에서 구성요인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도구로,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차원의 내용들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적 보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 인식을 가지는지, 사회적 요구에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 개인적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사회의 발전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10] 이에 비해서 규범요인은 발전의 양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 국가의 구성원이 인식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구성요인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범이자 하나의 평가도구이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조건요인은 사회의 질 수준이다. 한 사회가 나타내는 조건요인은 구성요인과 규범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적 보장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지만, 그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낮은 사회라면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 사회가 이미 충분한 정도의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면 개인적 보장에 대한 욕구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사회의 구성요인 또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인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수준의 욕구를 파악

10) 최근에 '사회의 질' 차원에서 국제인식조사가 이뤄지는 것들은 바로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질 아시안 컨소시움'(Asian Consortium for Social Quality)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호주, 홍콩, 일본, 한국, 태국, 대만의 6개국에서 '사회의 질에 대한 설문'(social quality survey questionnaires)을 실시하였다(Lin, Xu, Huang & Zhang, 2012).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의 조건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한 사회가 보여주는 조건요인이 구성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견해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 2) '사회의 질' 하위분면의 이론적 개념과 측정지표

이제부터는 사회의 질 각각의 하위분면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각 하위분면의 하위영역(sub-domain)과 측정지표가 제시되는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이후 지표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 (1)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람들이 생애기간 동안의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van der Maesen et al., 2005).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초기 정의는 '복지제공을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충족되는 시민들의 필수적 욕구'에 초점을 맞췄다(Beck et al., 1997b: 321). 하지만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복지급여의 형태나 사회보장과 같이 개인을 피동적인 존재로 설정하는 것은 사회의 질이 의도하는 이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위험을 예방하고 삶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은 사회의 질의 다른 세 하위분면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독립적인 성격을 규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Keizer(2004)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확실성과 일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는 맥락에서 그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답은 보다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는데, 사람들이 생애기간 동안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추상적 형태의 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추가된다(Keizer, 2004: 6-7). 첫째, 측정의 단위는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개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은 물질적·비물질적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속에서 이

11) 이와 같은 가정은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의 질 수준을 비교하는 데에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사회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욕구가 발현하고 있는 사회는 구성요인에 의해서 조건요인이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되어야 한다. 자원은 사회적 행위자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역능성의 조건이 된다. 즉, 자원은 일상생활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사회적 관계 하에서 협력해나가는 수단을 의미한다. 셋째, '충분한'은 최저 수준이 아닌 것을 말한다. 사회의 질 접근에서는 최저수준보다는 높은 기준을 지향하며, 이때 '충분함'의 기준은 사회적 행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넷째, '생애기간'은 특정 시점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기간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측정 범위는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전반적인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원'에 주목하여 하위 영역(sub-domain)을 구성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하위 영역 설정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요소로서의 자산 또는 자본(capital)에의 접근을 거부하고, 사회적 삶(social life)의 강화에 주목한다(Keizer, 2004: 11). 이런 이유로 개인의 축적된 자산(asset)을 고려하지 않으며, 또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해석되는 사회적 관계의 양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주제의식,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에 맞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수준은 다섯 개의 하위영역에서 자원의 보장(security)과 질(quality)에 대해 측정한다. 이 때 보장은 자원의 공급 측면에 주목하는 것으로 자원의 충분성(sufficiency)을 보는 것이며, 질은 자원의 내재된 속성을 보는 것이다(Keizer, 2004: 12). 충분성이 강조되는 것은 자원이 최저 수준으로만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그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van der Maesen et al.(2005)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재정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주거와 환경'(housing and environment)', '건강과 돌봄'(health and care), '일'(work), 그리고 '교육'(education)의 5개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재정적 자원의 하위 영역은 한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주거와 환경의 하위영역은 사회구성원들이 안정적이며 쾌적하고,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와 환경적 조건을 측정한다. 건강과 돌봄의 하위영역은 한 사회가 어느 정도 건강과 돌봄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일의 하위영역은 사회구성원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일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12] 교육의 하위영역은 한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이 어느 정

12) 개념적으로는 노동이나 고용이라는 용어가 아닌 일(work)을 사용하는 것은, 계약이나 급여가 없는

〈표 1-2〉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 하위영역 | 세부 영역 | 개념적 지표 | 본 논문에서의 활용 여부 |
|---|---|---|---|
| 재정적 자원 (Financial Resources) | 소득충분성 | 1. 건강·주거·음식·피복에 대한 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Y |
| | 소득보장성 | 2. 생애주기적 사건들이 가구수준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Y(지표 수정) |
| | | 3.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조건부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 | Y(지표 수정) |
| 주거와 환경 (housing and environment) | 주거 안전성 | 4.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한 사람의 비율 | Y(분석 제외) |
| | | 5. 감춰진 가구의 비율 | N |
| | 주거의 조건 | 6. 가구구성원당 사용 면적 | Y(분석 제외) |
| | | 7.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주거조건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 | Y |
| | 사회적, 자연적 환경 조건 | 8. 인구1만명당 범죄 피해자수 | Y(분석 제외) |
| | | 9. 평균이상 오염상태에 노출된 가구의 비율 | Y(지표 수정) |
| 건강과 돌봄 (health and care) | 건강급여의 안정성 | 10. 건강보험(강제적, 자발적)의 포괄성 | Y |
| | 건강서비스의 적절성 | 11. 인구 1만명당 의사수 | Y |
| | | 12. 병원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 Y(지표 수정) |
| | | 13. 응급차량의 평균 도착시간 | |
| | 돌봄서비스의 적절성 | 14. 돌봄활동에 이용되는 평균 시간 | Y(지표 수정) |
| 일 (work) | 고용안정성 | 15. 노동계약 기간과 조건을 변경하기 전 사전 고지기간의 길이 | Y(지표 수정) |
| | | 16. 노동계약 종료 전 고지기간의 길이 | |
| | 근로조건 | 17. 비정규 고용계약에 기반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Y |
| | | 19. 육아휴직·병가 등을 이유로 휴직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상자 중 실제로 실행한 비율 | Y(지표 수정) |
| | | 20. 피고용자 10만명당 산재발생율 | Y |
| | | 21. 정규근로자의 주간노동시간 | Y(지표 수정) |
| 교육 (education) | 교육의 안전성 | 22.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비율 | Y |
| | | 23. 국가평균순임금 대비 교육비 수준 | Y(지표 수정) |
| | 교육의 질 | 24. 졸업 및 수료 후 1년 내에 직업을 찾은 학생의 비율 | Y(지표 수정) |

자료: van der Maesen et al.(2005), p. 53.

일도 자기실현(self-realization)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Keizer, 2004: 11), 대부분의 개념적 측정지표는 근로조건과 고용여건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안정적으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 질은 어느 수준인지를 측정한다.

이상의 각 하위영역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수준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또 다시 조건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영역은 그 성격을 특정할 수 있는 세부영역(sub-domain)으로 구성된다. 〈표 1-2〉는 사회의 질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 그리고 이의 측정지표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뒤에서 살펴볼 사회의 질의 다른 세 하위분면에 비해서 규정의 모호함도 적은 편이고, 또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측정지표로 연결되는 맥락도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사회의 질의 다른 세 하위분면 간의 관계에서는 조금씩 겹치거나, 다른 세 하위분면의 조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원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한 사회가 제공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를 의미하고, 사회적 포용성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개인이 사회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 또는 통합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현 상태를 의미하지만, 사회적 포용성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다.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또는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은 역능성과 관련된다. 이 때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Keizer, 2004: 9). 사회경제적 안전성에서의 교육은 교육자원의 공급에 주목하는 것이고, 사회적 역능성은 교육자원의 공급의 결과로서 한 사회의 지식의 사용, 정보의 접근, 실현능력에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의 관계는 비물질적 자원이란 맥락에서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비물질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질 이론에서는 이런 사회적 관계의 정도와 질적 수준은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응집성의 정도를 결정짓는 조건 요인(conditional factors)으로 고려한다.

(2)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응집성은 정체성, 가치와 규범이 공유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파괴하는 거시수준의 과정과 이런 관계들을 지탱하는 하부구조와 관련된다(Beck et al., 1997b: 323).

사회적 응집성이 표상하는 것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의 유지와 형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을 통해서 한 사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

유로 최근의 사회지표 논의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OECD, 2005a;2007a;2011a). 하지만 사회적 응집성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응집성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그 개념적 속성이 유사한 포용성(inclusion), 배제(exclusion), 통합(integration), 탈통합(disintegration), 사회적 와해(social dissolut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같은 용어들을 각각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Berman & Phillip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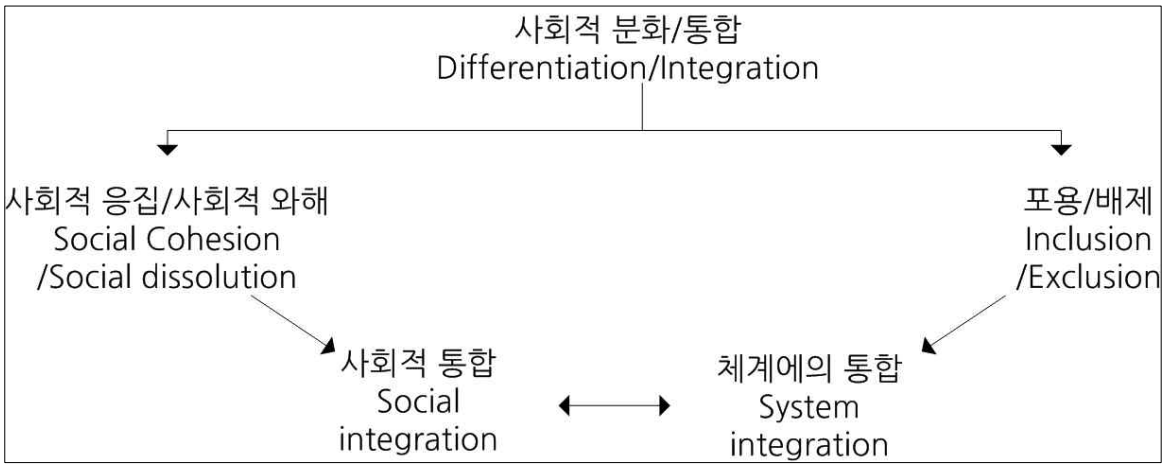
앞서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하위분면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질' 이론 논의에서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정의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의 초반에는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Beck et al.(1997b: 324)은 사회적 응집성을 공동체의 소속감 또는 '공동체 의식'(Gemeinsinn)으로 보았는데, 이들은 다양하고 분화된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사회적 응집성이 필요한가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응집성의 측정에 있어 증가하는 불평등의 원인 측면에 주목하였으며, 지역적 격차(regional disparity), 소수자에 대한 억제, 공공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경제적 부담의 불공평한 분담과 같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 측면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erman and Phillips(2000: 333-35)도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적 재화와 지위에 대한 접근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사회적 응집성은 연대(solidarity)와 공유된 정체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연대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사이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사회적 응집성 분면을 투표율과 사회적 인종적 소수자의 대표가 의회나 정부에 참여하는 정도로 측정하는 '정치적 응집', 지니계수, 소득과 부의 분배정도, 노동시장 참가율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 노동시장에의 응집', 공공안전이나 이타주의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응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응집성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연대와 통합의 효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come)로 볼 때,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의 질 사분면을 골고루, 그리고 모두 설명하게 된다(Berman & Phillips, 2004). 이는 사회적 응집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그 결과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배타적으로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적 응집성을 독립적인 하위분면으로 설정하기 위해, 초기의 이론 논의 이후 개념정의는 보다 정교해진다. 여기서 핵심은 통합(integration)[13]의 맥락에서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구분해내는 것이었다. Beck, van der Maesen, Thomese and Walker(2001c)는

다음 [그림 1-3]과 같이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구분해 내었다. 이것은 Lockwood(1999)가 사회통합의 정도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과 공적통합(civic integration)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틀을 차용한 것이다.[14] 이 구분틀에서 사회적 응집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끌어 내는 한 요소로 제안된다.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 통합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뒤이어 언급할 사회적 포용성은 체계에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림 1-3]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의 이론적 위치




자료: Beck et al.(2001), p. 338.

이와 같이 사회통합을 구분하는 노력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erger-Schmitt(2002)는 사회통합을 크게 두 차원으로 나누는데, 긍정적 차원으로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과 부정적 차원으로서 불평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불평등의 차원에서 사회통합은 한 사회 내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격차와

13) 국내에서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은 사회통합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노대명·강신욱·전지현, 2010). 외국의 연구에서 사회적 응집은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로 정의되기도 하고(예를 들어, Berger-Schmitt, 2002), 본 논문에서 접근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응집성을 주로 사회적 자본의 수준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Chan et al., 2006). 국내에서 소개되는 사회통합으로서의 사회적 응집은 대체로 전자의 견해를 따른다. 여기서 정의하는 사회적 응집-사회통합은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협의의 강도, 공유된 가치와 공통의 정체성 그리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연계하는 정도, 동등한 기회, 사회의 격차· 대립· 사회적 배제의 정도'로 정의된다(Berger-Schmitt, 2002: 406).

14) 록우드(Lockwood)는 사회적 응집의 반대 개념으로 사회적 와해(social dissolution)를 설정하고, 이를 자발적인 조직에의 참여, 전통적인 범죄, 도시폭동, 가족의 해체 등을 통해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공적통합은 선거참여율, 극우정당의 득표율, 경제범죄, 노동조합 조직률, 장기실업률, 학업중단율 등을 통해 이를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분할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의 질 접근은 후자를 구분하여 사회적 포용성이라고 본다. 즉, 사회의 질 이론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을 사회적 관계의 구조나 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성은 이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접근의 정도와 통합의 수준에 관련된다고 본다(Walker & Wigfield, 2004: 9).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사회적 응집성 분면은 사회통합의 차원 중에서 사회적 자본의 성격을 가지는 일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나 구성에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은 사회적 관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적 응집성의 측정은 크게 세 영역을 포함한다(Berman & Phillips, 2004). 첫째, 순수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와 네트워크'이다. 둘째, '신뢰와 네트워크'에 더해서 '공적, 사회적 제도'이다. 셋째, 규범적인 사회적 응집이다. 앞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개념적 정의와 실제의 측정지표와의 연관성이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서 제시되는 하위 영역들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15] Fukuyama(1995: 16)는 사회자본을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으로 집단 또는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해 구성원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이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신뢰라고 보았다. 신뢰 없이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와 규범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자본의 측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사회자본의 구성변수로 신뢰를 사용하고 있다(박희봉, 2009: 68-71).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역시 사회적 자본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Woolcock(1998: 155)은 사회자본의 정의는 일차적으로 그것의 결과보다는 원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적 관계의 구성 형태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16] 이것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신뢰의 외연이 확장되지 못하고 혈연집단 등 1차 집단에만 머무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

15)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도 상당히 소개되었다(Lin, 2001; 유석춘 외, 2003; 박희봉, 2009).

16) 사회적 자본을 단일한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Putnam(1993)은사회자본을 조절된 행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보았다. 2001년 논문에서 그는 사회자본의 어떤 속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지만 다른 속성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Putnam, 2001).

있다(Fukuyama, 1995). 이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항상 긍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17] 특정한 형태의 사회자본은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Olson, 1982; Woolcock, 1998). 이에 따라서 Berman and Phillips(2004)는 사회적 관계를 수평적 네트워크와 수직적 네트워크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직적 네트워크를 지역/공동체와 국가조직과의 관계 또는 지역/공동체 조직과 정부 조직과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공적, 사회적 제도'는 공적 책임에 대한 일반화된 사회적 규범을 사회자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자본의 기제는 호혜적 관계를 통해서 기능한다. 따라서 한 사회는 다양한 공적책임에 대한 규범적 통일성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사회의 통합은 근본적인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보다 특별한 사회적 가치나 규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존재한다(Gough & Olofsson, 1999: 2).

마지막으로, 규범적인 사회적 응집이 포함된다. 불평등, 빈곤과 배제를 최소화하는 것과 연대와 사회적 응집을 추구하는 것은 갈등의 와해와 체계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Gough, 1999). 빈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 노인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과 같이 불평등, 빈곤과 배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여부가 중요한 이유다.

최종적으로 van der Maesen et al.(2005)은 사회적 응집성을 '신뢰'(trust), '기타 통합적 규범과 가치'(Other integrative norms and values),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social network)[18], '정체성'(identity)의 4개 하위 영역(sub-domain)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 〈표 1-3〉은 사회의 질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

---

17) Portes(1998)는 사회자본을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 '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요구', '개인 자유의 제한', '하향 평준화하는 규범'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사회자본이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Olson(1982)도 단체활동이 지대추구활동(rent-seeking activity)을 수행함에 따라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런 단체가 특수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선호하는 정책에 대한 로비집단으로 기능하면서, 사회에 불균등한 비용분담을 요구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검증은 연구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Beugelsdijk and van Schaik(2005)은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수준의 측정도구의 하나로 단체활동을 Olson(1982)의 주장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Putnam 그룹으로 종교단체, 교육·예술 · 음악 · 문화단체, 청년근로에 대한 참여율이고, 다른 하나는 Olson 그룹으로 노조, 정치정당, 직능단체의 참여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 두 단체활동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이론틀에서 '사회적 관계'(social network)라는 명칭을 가지는 하위영역은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 모두 제시된다. 이 명칭의 하위영역은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형태를 말하고,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는 사회적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2장에서 구체적 지표로 이를 측정할 때, 사회적 응집성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의 참여'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포용성에서는 '사적 도움의 가능성'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사회적 포용성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으로 다시 명명하였다.

역, 그리고 이의 측정지표이다.

〈표 1-3〉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 하위영역 | 세부영역 | 개념적 지표 | 본 논문에서의 활용 여부 |
|---|---|---|---|
| 신뢰 (trust) | 일반적인 신뢰 | 25.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의 정도 | Y |
| | 특별신뢰 | 26. '정부·의회·정당·군대·사법체계·언론·노동조합·경찰·종교제도·공공서비스·경제거래'에 대한 신뢰 | Y |
| | | 27.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사건의 수 | N |
| | | 28. 가족·친구·여가·정치의 중요성/부모에 대한 존경/아동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 | N |
| 기타 통합적 규범과 가치 (Other integrative norms and values) | 이타주의 | 29. 주당 자원봉사 시간 | Y(수정 제시) |
| | | 30. 현혈 | N |
| | 관용 | 31. 이민·다원주의·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 | Y |
| | | 32. 타인의 정체성·신념·행동·선호에 대한 관용 | Y |
| | 사회계약 | 33. 빈곤에 대한 귀인 인식: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 N |
| | | 34. 빈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 N |
| | | 35. 노인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의 동의 여부 | N |
| | | 36. 소속된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체적 활동을 수행할 의지의 정도 | N |
| | | 37. 남녀 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 N |
|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social network) | 사회적 관계망 | 38. 정치활동·자원봉사·자선단체·스포츠단체에 대한 참여 정도 | Y |
| | | 39. 가족·이웃·친구로부터의 지원 | N |
| | | 40. 친구·동료와의 접촉 빈도 | N |
| 정체성 (identity) | 국적에 대한 정체성 | 41. 국가자긍심의 정도 | Y |
| | | 42. 국기 등의 국가상징에 대한 자긍심 | N |
| | 지역의 정체성 | 43. 지방/공동체/지역 정체성 | N |
| | 대인관계정체성 | 44. 가족·친족 네트워크에 대한 소속감 | N |

자료: van der Maesen et al.(2005), p. 54.

(3)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포용성은 사람들이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van der Maesen et al., 2005). 사회 구성원이 시민권을 실현

하고 있는 정도, 사람들이 노동시장과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정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포용되어 있는 정도에 주목한다. 사회적 포용성은 단순히 사회제도에 포섭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포용(inclusion)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익숙한 형태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배제는 복지국가의 빈곤과 불평등을 설명하는 연구들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개념이다(Silver, 1994; Room, 1995;1997;1999; Jordan, 1996; Bhalla & Lapeyre, 1997; Hills et al., 2002; Pierson, 2002). 사회적 배제는 빈곤보다 넓은 개념으로 물질적 수단을 적게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삶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Duffy, 1995). 하지만 사회의 질 논의에서는 사회적 배제 대신 사회적 포용성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사회적 포용성의 개념이 보다 긍정적 의미를 가지며, 사회의 질 접근이 가지고 있는 예방적 본질을 보여주며, 또한 시민권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Beck et al., 2001c). 사회적 배제가 시민권의 다양한 차원이 거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포용은 이런 시민권이 현실화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포용성의 분면을 이해하고, 측정할 때에는 다양한 사회제도의 다차원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의 개념이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포용성의 분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제도라는 다차원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은 현대 사회의 다원화(differentiation) 경향 속에서 사회의 다양한 하위 체계를 넘나들며 기능한다. 이때 다양한 하위 체계들은 각기 다른 논리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포용성은 다차원적 포괄성(multi-inclusiveness)을 고려해야 한다(Walker & Wigfield, 2004).

둘째,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참여(participation)는 다차원적 포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하위 체계 내에서 포괄과 배제의 논리가 배열되는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의 접근은 사회의 다양한 하위 체계와 사회적 구조의 복잡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동시에 이런 구조와 하위체계가 관리되는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Walker & Wigfield, 2004: 4).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특정 하위 체계는 포용하면서도, 다른 하위 체계는 배제하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 사회의 포용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은 과정(process)과 관련되지만, 동시에 사회의 상황(status)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적 포용성의 개념을 과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결과로 볼 것인

지와 관련된다. 사회적 안전성 분면과 비교할 때, 대체로 사회적 안전성 분면은 결과의 측면이 강조되고 사회적 포용성 분면은 과정의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Walker & Wigfield, 2004: 7).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적 포용성 분면이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하다.

넷째, 사회적 포용성 개념은 모든 사회적 제도에의 완전한 포괄을 상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 배제가 항상 비자발적이고, 강요된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노동은 그 개인이 다른 사회적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다.[19]

개념적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최종적으로 van der Maesen et al.(2005)은 사회적 포용성을 '시민권'(Citizenship rights), '노동시장에의 포용'(Labour market)[20],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Service),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social networks)의 4개 하위 영역(sub-domain)으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민권의 하위 영역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민권적 가치를 부여받고, 실현하고 있느냐에 주목한다. 노동시장 참여의 하위 영역은 시민들이 유급의 근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서비스의 하위 영역은 각종 사회서비스에 사람들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즉, 이들 하위영역은 주어진 사회적 제도에 한 개인이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체계·조직·제도가 이들 개인을 얼마나 포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다음 〈표 1-4〉는 사회의 질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 그리고 이의 측정지표이다.

---

19) 특히, 노동시장의 하위영역에서는 좋은 사회적 배제와 나쁜 사회적 배제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Vobruba, 1997).

20) 노동시장의 하위영역(Labour Market)은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 각각 나타난다.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 노동시장의 하위영역은 '유급일자리에의 접근가능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는 '고용계약의 통제', '직업 이동의 가능성'과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하위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는 '노동시장에의 포용',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으로 다시 명명한다.

〈표 1-4〉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 하위영역 | 세부영역 | 개념적 지표 | 본 논문에서의 활용여부 |
|---|---|---|---|
| 시민권 (Citizenship rights) | 정치권 | 45.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 N |
| | | 46. 지역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과 이를 실행한 사람의 비율 | Y |
| | 사회권 | 47.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 Y |
| | | 48.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 Y |
| | 공민권 | 49. 무료변론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 N |
| | | 50.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 N |
| | 사회적 정치적 관계 | 51. 의회에 임명된 인종적 소수자의 비율 | N |
| | | 52. 의회, 사적 기업이나 재단의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 | Y |
| 노동시장에의 포용 (Labour market) | 유급 일자리에의 접근 가능성 | 53.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 | Y |
| | | 54.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일시적 실업의 비율 | Y |
| 서비스 (Service) | 건강 서비스 | 55. 공공1차의료보호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과 이용률 | Y(수정제시) |
| | 주거 | 56. 홈리스의 비율 | N |
| | | 57. 공공주택 이용에 필요한 평균 대기기간 | N |
| | 교육 | 58. 학교교육 참가율과 고등교육 참가율 | Y(수정제시) |
| | 돌봄 서비스 | 59. 돌봄서비스의 이용 필요를 가진 사람 중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비율 | N |
| | | 60. 돌봄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평균대기기간 (아동 돌봄 포함) | N |
| | 금융 서비스 | 61. 소득집단 별로 구분한 신용거부자의 비율 | N |
| | | 62. 금융보조나 상담과 같은 지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 | N |
| | 교통 | 63. 공공교통체계에 접근가능한 사람의 비율 | N |
| | | 64. 공공교통체계의 밀집도와 도로의 밀집도 | Y(수정제시) |
| | 공공/문화서비스 | 65. 1만명당 공공 체육시설의 수 | N |
| | | 66. 1만명 당 공공/문화 시설의 수 | Y(수정제시) |
|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social networks) | 이웃참여 | 67. 이웃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비율 | Y(수정제시) |
| | 친교 | 68. 친구를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비율 | |
| | 가족 생활 | 69. 고독감/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 |
| | | 70. 친척을 만나는 주기 | |
| | | 71. 가족으로부터 비공식적 지원을 받는 사람의 비율 | |

자료: van der Maesen et al.(2005), p. 55.

(4)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

사회적 역능성은 시민들이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역량(human competencies)과 실현능력(capabilities)을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한다(Herrmann, 2004; van der Maesen et al., 2005). 사회적 역능성은 단순히 시장에서의 개인의 능력이 높은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염두에 둔,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Herrmann, 2005). 즉, 사회 환경(societal environment)을 변화시키기 위한 접근과 참여를 의미한다(Herrmann, 2005: 294). 사회의 질이 시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역능성의 영역은 사회의 질의 조건요인이 된다. 즉, 충분한 역능성을 갖춘 시민들은 스스로 사회의 다양한 구조를 결정지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사회적 역능성 하위분면은 다른 세 하위분면의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이유로 역능성의 영역은 행위자와 구조 간의 그리고 개인과 사회 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Herrmann, 2004: 5).

사회적 역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Herrmann, 2004). 첫째, 시민들이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과정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사회적 구조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조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역능성 개념이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변화를 촉발시키거나 변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 역량의 개발이 이뤄진 상태를 의미한다(Herrmann, 2004). 이런 이유로 역능성을 보다 확대하여 바라볼 때에는 능력(capacity), 실현능력(capabilities)의 개념으로까지 영역의 확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역능성의 하위 차원은 주어진 사회구조로의 접근(access), 삶의 조건들에 대한 통제(control), 참여(participation)를 특징으로 한다. 한 사회의 역능성 수준의 측정은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통제하는데 필수적인 수단(means)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processes)은 얼마나 접근가능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관계(relations)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어떠한가와 관련된다(Herrmann, 2004: 9). 따라서 어느 한 요인만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개인이 삶의 조건에 만족한다고 할 수 없고, 세 요인이 골고루 발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사회의 질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발전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 개인의 자기실현을 의도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표 1-5〉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과 지표

| 하위영역 | 세부 영역 | 개념적 지표 | 본 논문에서의 활용여부 |
|---|---|---|---|
| 지식기반 (Knowledge base) | 지식의 응용 | 72. 지식에 기반을 둔 사회이동의 정도 | Y(수정 제시) |
| | 정보의 이용가능성 | 73. 문해율 | Y(수정 제시) |
| | | 74. 미디어의 자유로운 이용가능성 | N |
| | | 75. 인터넷에의 접속 | Y |
| | 정보 이용의 사용자 친화성 | 76.사회서비스에서 정보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도 | N |
| | | 77. 무료변론, 상담, 안내센터의 이용가능성 | N |
| 노동시장 (Labour market)에서의 통제와 역능 | 고용계약의 통제 | 78. 노조조직률 | Y |
| | | 79.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 Y |
| | 직업 이동의 가능성 | 80. 피용자 중에서 근로기반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의 비율 | Y(수정 제시) |
| | | 81. 노동인구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의 비율 | |
| | | 82. 노동인구 중에서 재취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
| |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가능성 | 83. 일가족양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조직의 비율 | Y(수정 제시) |
| | | 84. 피용인구 중에서 일가족 양립수단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N |
| 제도의 개방도와 지원정도 (Openness and supportiveness of institutions) | 정치제도의 개방성과 지원체계 | 85.협의(consultation)과정과 직접민주주의(예를 들어, 국민투표)의 존재여부 | Y(수정 제시) |
| | 경제제도의 개방성 | 86. 주요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대중참여의 사례수 | N |
| | 조직의 개방성 | 87. 직장협의회가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의 비율 | N |
| 공적공간 (Public space) | 집합행동에 대한 지원 체계 | 88.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발의를 위해 배정된 전국 및 지방수준의 공공예산 비율 | N |
| | | 89. 지난 12개월간 일어난 전체 시위/행진 가운데 금지된 것의 비율 | N |
| | 문화적 고양 | 90. 모든 문화활동을 위해 배정된 지방 및 전국 수준의 예산 비율 | Y(수정 제시) |
| | | 91. 자발적으로 조직된 문화단체와 활동 숫자 | N |
| | | 92. 다양한 형태의 사적인 문화고양 활동을 정기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비율 | Y(수정 제시) |
| 대인관계 (Personal relationships) 지원 | 신체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 93. 전국 및 지방 수준에서 장애인들에게 배정된 예산의 비율 | Y(수정 제시) |
| | 개인 지원 서비스 | 94. 취학 전/후 아동보호/보육 수준 | Y(수정 제시) |
|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지원 | 95. 주거 및 환경설계의 포용성 | N |

자료: van der Maesen et al.(2005), p. 56.

최종적으로 van der Maesen et al.(2005)은 사회적 역능성을 '지식기반'(Knowledge base),

‘노동시장(Labour market)에서의 통제와 역능’, ‘제도의 개방도와 지원정도’(Openness and supportiveness of institutions), ‘공적 공간’(Public space), 그리고 ‘대인관계(Personal relationships) 지원’의 다섯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식기반의 하위 영역은 한 사회가 어느 정도로 지식기반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능력을 개인들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노동시장의 하위 영역은 고용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가능성을 시민들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직업이동의 가능성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와 같이 통제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제도의 개방도와 지원정도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조직들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가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지원은 사람들–특히, 취약계층–이 얼마나 사회적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앞의 〈표 1-5〉는 사회의 질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하위영역, 세부영역, 그리고 이의 측정지표이다.

### 3) 사회의 질 논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이상에서는 사회의 질 이론이 상정하는 네 하위분면의 성격과 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하위분면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의 질 이론은 1997년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2001년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이라는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이론적 논의와 다양한 사회지표에 대한 탐색을 거쳐 네 개의 하위분면에, 18개의 하위영역, 그리고 95개의 지표를 제안하고 있다(van der Maesen et al., 2005).

여기서는 사회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 내용이 아닌 구체적인 지수화의 과정에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의 질 개념이 제안된 이후 2005년 유럽의 14개 국가는 사회의 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각국은 그들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고, 유럽 국가에서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부가표(Annex Collective data)를 만들었다(Farrell & Demeyer, 2005). 이 부가표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 사회적 이전전후 빈곤율, 기본적 생활여건 미비의 주거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 인구당 의사수, 병원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임시계약직 피용자 비율, 산재사고율, 주당 근로시간, 조기학업중단자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서는 신뢰, 제도신뢰, 가족 등의 중요성, 주당자원봉사시간, 헌혈률, 이민 등에 대한 관점, 타인의 행위등에 대한 관용, 빈곤의 귀인 인식,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멤버십, 주기적인 접촉, 국가자긍심,

지역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는 투표율,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비율, 여성의 사회참여율(의회, 기업이사회), 장기실업률, 이웃과의 접촉, 친구와의 접촉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는 성인문해율, 인터넷 이용률, 직업훈련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가표에 제시되는 지표 중 상당수는 일부 국가가 제외되어 있거나, 1990년대 후반의 값을 이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제외하면 사회의 질이 제안된 이후, 대부분의 유럽 연구자들은 이론틀이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것인지에 주목해왔을 뿐이다.

이에 비해서 Yee and Chang(2009)의 연구는 사회의 질 이론틀을 바탕으로 구체적 지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관리와 관련된 체계(system)의 영역과, 사회적·도덕적 자원과 관련된 생활세계(life-world)의 영역으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재구성한다. 이 틀에 26개국의 19개의 지표(남성고용률, 여성고용률, 공적 교육지출, 2차교육기관등록률, 상대적 빈곤, 공적 사회지출, 노조조직률, 연금의 총소득대체율, 정부효과성, 인터넷이용률, 부패인식지수, 권리, 여성역능성, 일반신뢰, 제도신뢰, 투표율, 조직참가율,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네 개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수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확보가능한 지표들을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고유한 속성을 놓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서 장덕진(2010)은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을 재구성하지 않고, 각 분면에서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모든 변수가 사회의 질에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변수값들을 표준화하여 더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서열화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노동자 권리척도, 교육기관 취학률을,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서는 일반신뢰 수준과 가족·친구·여가·정치의 전반적 중요성, 국가자부심을,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는 투표율, 여성의 경제적 권한척도, 양성 역능성 척도, 건강재정지출을,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는 성인문해율, 언론자유, 노조조직률, 정치적 권리척도를 이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재구성하거나, 제안한 지표를 중심으로 분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하위분면의 성격을 규정하는 조건요인으로서 하위영역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전체적인 사회의 질 수준에서는 네 하위분면이 조건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시 네 하위분면의 조건요인으로 기능하는 하위영역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지표를

실제 측정의 단계로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18개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사회의 질 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Wang(2009)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데, 그는 사회의 질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지표들이 유럽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음을 고려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표들을 고려함에 있어서 하위영역의 속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구체적 측정단계로까지 확대하지는 못하고, 지표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 4)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본 논문의 분석틀

사회의 질 이론 논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하위분면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네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각 하위영역은 다시금 세부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각각의 지표가 제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질 이론이 제시하는 모든 지표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 따라서 각 하위분면의 속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위분면의 각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한 측정을 제안한다.

사회의 질 이론이 제시하는 네 하위분면의 속성은 각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각 하위 영역 안에서도 세부영역 간에는 발달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서비스 하위영역은 모두 7개의 세부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비슷한 형태의 발전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세부영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세부영역 단위에서의 변수 수집에 이를 정도로 국가 간 비교가능한 지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4개 하위분면과 18개의 하위 영역에 주목하고, 각 하위영역은 최소한 1개 이상의 변수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서는 향후 지표가 추가되더라도 기본적 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의 질이 바람직한 사회적 기준의 제시라는 점에서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 돌봄서비스의 이용 필요를 가진 사람 중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비율(no. 59)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 수준인가?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돌봄서비스의 주된 제공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높을 경우에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진다. 반대로 가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제한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

라, 상대적 발전 수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즉,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의 질을 비교하기 위한 국가 선정은 측정가능한 지표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아니라 주로 경제적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경제적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지표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인 발전 수준의 비교가 용이하다.

다음으로, 한 국가의 사회의 질 발전을 시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비교차원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지표들도 존재한다. 사회적 응집성의 측정은 사회적 관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회적 응집성의 결과와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Berman & Phillips, 2004: 4). 첫째, 연대(solidarity)로서의 응집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의 응집은 구분해야 한다.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 기준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주목하게 되고, 연대로서의 응집에 주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중도에 주목하게 된다. 둘째, 만약 응집의 집중도에 대해서만 주목하게 될 경우에는 권위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사회에서 높은 응집이 나타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응집성에서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사회적 응집이 어떤 수준이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응집은 최대화(maximization)되는 것 보다는 최적화(optimization)되는 것이 타당하다. 최적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될 경우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와 그 속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서는 지표의 값을 통해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일부 영역이 존재한다. 신뢰 영역의 '가족·친구·여가·정치의 중요성/부모에 대한 존경/아동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 통합적 규범과 가치 영역의 사회계약 세부 영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지표 구성에서 제외한다.

사회적 포용성의 영역은 사회제도의 다차원성, 그리고 사회적 포용의 개념이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Walker & Wigfield, 2004: 30). 이때 사회적 포용성은 상대적 개념이며, 이에 따라서 다른 집단/대중이 비교의 준거틀로 언급되어야 한다. 즉, 포용성의 측정은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얼마나 더 사회적 제도와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각 국가 고유의 집단 구조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의 기준을 다른 국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 복지국가의 유형과 변화, 그리고 사회의 질

사회의 질 이론은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대안이면서, 사회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틀로 기능한다. 도구틀로써 사회의 질은 특정 시점에서 사회적 수준의 국가 간 비교의 측정도구가 되면서, 동시에 질적 수준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집어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하는 맥락에 주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사회의 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전략을 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 수준은 곧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쇄관계(trade-off)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횡행에 따라,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서 사회지출의 축소가 예상되었다.[21] 그러나 복지국가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에서, 지출 수준으로 측정한 복지국가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축소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수준의 '경로의존'(path-dependent)적 변화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지출 추세를 분석한 Castles(2004: 45)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GDP 대비 평균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왔으며, 복지영역 간에 확장을 위한 투쟁이 벌어진다는 점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복지영역 간의 갈등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에 맞서 복지국가가 내적인 수준에서의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출수준의 축소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복지국가 제도의 내부적 변화는 존재할 수 있다(Green-Pedersen, 2004; Palier, 2001). 급여에 접근하는 방식을 시민권에 기반하는가, 욕구에 기반하는가, 근로의 대가에 기반하는가, 기여의 대가에 기반하는가 등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지출 수준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제도적 변화이다. 또한 급여구조의 문제, 즉 급여가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가 아니면 현금 형태로 제공되느냐는 복지국가의 변화의 또 다른 양상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금급여가 자산조사에 의한 방식인지, 정액급여인지, 소득비례인지와 같은 것도 제도 구성의 핵심이다.

사회의 질 수준에 주목하는 본 논문에서 복지국가의 유형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제도적 변화가 일련의 경향성, 그리고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보인다는 사실 때문이다. 개

---

21) 복지국가의 위기,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Esping-Andersen, 1996; Jessop, 2002; Mishra, 1999; Castles, 2004; Pierson, 2007). 변화의 원인을 주목하고, 이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복지국가의 전환은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바는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의 질 수준에 주목한다.

별 복지국가의 제도 변화는 각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확장기에 취해왔던 제도적 배열에 기반하여 이뤄진다. Esping-Andersen(1999)은 그가 주창한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기본적 구성요소가 확립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라고 보았다. 이 시기에 강력한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조절이 나타나고, 사회적 시민권이 완전히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의 복지국가의 변화의 핵심에는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이 있으며, 이와 같은 내외적 변화에 직면하여 복지국가들은 그들이 오래전에 완성해 놓았던 기본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제도를 유지해나간다고 보았다.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의존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먼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갈등의 해결방법에서는 국가간, 특히 복지체제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고용확대의 복지국가 전략을 사용해왔고,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임금과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 전략을, 유럽국가들은 사회보장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노동공급의 감소를 꾀해 왔다(Esping-Andersen, 1996: 31). 체제 유형에 따른 변화의 맥락은 복지영역 간의 갈등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구사회위험과 일반적으로 후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위험이라는 두 위험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신사회위험에 대처해왔지만, 대륙 및 남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소득대체 프로그램에 주력하였다(Bonoli, 2007b).

복지국가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은 각 국가들이 추구해왔던 복지국가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복지국가가 변화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특히 축소의 정치에서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조직적 이해관계, 제도, 프로그램의 설계가 관련된다(Pierson, 1994: 391). 또한 복지축소의 정치 상황에서는 복지 외적인 제도적-특히, 정치제도적- 특성이 고려되기도 한다(Bonoli & Palier, 1998). 이와 같이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를 제도주의에 입각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역사적, 인구학적, 그리고 경제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런 내생적 선호가 복지제도 개혁을 점진적인 것으로 제약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Pierson, 2001). 제도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제약함으로써 개인 선호의 틀을 제공하고, 각 개인의 선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형성된다(Dowding & King, 1995). 이런 결과로 소득격차의 축소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같은 복지인식에서는 복지국가, 그리고 체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Svallfors, 1997; Andres & Heien, 2001; Jaeger, 2006). 시민들의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응집성의 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의 집합적 정체 형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사회'라는 맥락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열이 사회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즉 현 시기의 사회의 질 수준은 각 복지국가, 복지체제의 오래된 전통과 그에 기

반한 개혁 방향의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 수준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전략적 개입의 형태로서 복지국가의 유형, 그리고 그 개입형태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열과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사회의 질 이론틀에서 제안하는 제반 하위영역은 이와 같은 변화의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먼저, 시민권적 권리의 발현으로써 시민권, 주거와 환경, 의료, 대인관계의 영역을 살펴보자. 이 영역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 논의에서 다뤄지는 핵심 영역이었다. 이들 영역의 사회지출은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거친 이후, 축소의 압력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시민권적 권리의 발현으로써의 이런 하위 영역은 여전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일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각 복지국가가 전후 복지국가의 확대 시기에 유지해왔던 사회적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하위영역은 고용성장과 관대한 평등주의적 사회보호 사이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유럽 사회는 만성적이고 계속되는 높은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미 국가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상승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의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북미 국가의 규제완화를 선호하는 한 경향이 존재한다. 이와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가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실시해왔던 사회투자 전략이 제안되기도 한다(Esping-Andersen, 1996: 17). 이는 사람들을 일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도록 하며, 후기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국민들에게 훈련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한편, 교육의 영역에 대한 가치는 크게 변화였다.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의 단계 이전에 교육은, 특히 성인교육은 인적자본의 발달보다는 시민권과 연대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맥락이 강하였다가, 점차적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부족한 기술을 동원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 것의 하나로 변화하였다(Jessop, 2002: 163-64).

마지막으로,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하위영역은 복지국가의 성장 단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던, 또는 너무나 당연하게 확보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었다. 즉, 전후 복지국가의 건설과정에서 복지국가는 보다 보편적이면서 계급이 없는 정의와 국민의 연대성을 약속했던 것이다(Esping-Andersen, 1996: 16). 그러나 Esping-Andersen(1996)은 복지국가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평등주의 원칙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가 너무 분화되고 이질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임금과 최종소득의 불평등의 증가를 회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동적이고 생애기회적인 평등에 대

한 신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사회 시민권 보장의 핵심은 교육과 적극적인 소득유지를 혼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Esping-Andersen, 1996: 425-26).

### 1) 복지국가 유형

사회의 질이 총체로서 한 사회의 양상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유형의 존재 또는 분류는 사회의 질 해석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사회적 포용성 분면, 사회적 역능성 분면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측면을, 그리고 그 발전수준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제도의 구성 형태는 생활 세계 또는 신뢰, 사회규범과 같은 사회적 응집성에 영향을 미친다(Kumlin & Rothstein, 2005b; Rothstein, 2010). 즉,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은 다른 세 하위영역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이 구성되는 맥락은 곧 복지국가의 구성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사회의 질 수준에서는 어떤 복지국가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각 복지국가의 수준에 주목하기보다는 각 복지국가가 공유하는 속성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발달과 성장, 그리고 제도적 차이에 대한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는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밝힘으로써 제도에 따른 결과물의 예측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질적 측면에 주목하여 유형화한 대표적인 연구는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 체제의 형태로서의 '사회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 그리고 '탈가족화'(de-familisation)를 중심으로 한 Esping-Andersen(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22] 그의 체제 구분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pp. 74-86).

자유주의 복지 체제(The Liberal Welfare Regime)는 시장 자주권(market sovereignty)을 강조하며, 개인의 위험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책을 도모한다. 이

22) Esping-Andersen(1990)은 국가-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 수준을 이용하여 유형분류를 하였다. 그러나 이 틀은 여성시민권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많은 비판이 이후 제기되었다(김영미, 2007). 예를 들어, Orloff(1993)는 국가-시장의 관계에 덧붙여 가족에 의해서 이뤄지는 복지제공을 고려해야 하며, 계층화의 차원은 성별 관계(gender relation)를 고려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탈상품화는 여성의 돌봄 노동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의 접근 제약을 고려하지 못한 개념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을 받아들인 Esping-Andersen(1999)은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탈가족화' 개념을 포함하여 복지국가 체제를 분석하였다.

체제는 세 가지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대상화된 사회부조, 선별주의, 시장기능의 적극적 이용이 그것이다. 이 중 앞의 두 요소는 잔여주의적 특징으로 간주된다.[23] 시장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위험을 해결하는 사람과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welfare dependents)을 구분하게 된다. 가족서비스에 있어서는 뒤이어 설명할 보수주의 복지 체제와 유사하게 잔여적인 속성을 보이지만 그 맥락은 다르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서는 가족서비스를 가족의 역할로 강조하는 데 비해, 자유주의 복지체제에서는 가족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자유주의 복지 체제는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비규제(unregulated)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 체제(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는 보편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복지제도는 다양한 위험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관대한 급여 수준을 보이고, 평등주의적이다. 급여의 권리는 시민권적 자격에 입각하며,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인 '욕구기반의 보조'는 제한된다. 탈상품화된 복지를 통해 시장 의존을 줄이고,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평등을 극대화한다. 한편 평등주의적 급여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시장의 개입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급여수준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이들 국가의 복지 프로그램은 상당히 높은 소득대체율을 특징으로 한다. 높은 소득대체율은 보수주의 복지 체제에서도 또한 나타나는데,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더불어 보편주의를 함께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체제는 공공고용 등의 방법을 통해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관대한 소득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 체제에서 완전고용과 생산주의(productivism)의 목적은 시민의 잠재적인 생산을 극대화해 내는 것에 있으며, 이런 목적 하에 시민들에게 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 체제(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는 지위의 분절, 위험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연대주의(solidarity)와 가족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이 체제에서는 강제적 사회보험 제도의 시행이 많은데, 사회보험은 대체로 정규화된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운영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역시 이미 취업한 성인에 대한 강력한 직업보호를 특징으로 하지만, 적극적 고용정책이나 직업훈련 정책의 시행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이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인 가족주의는 남성주소득자(male bread-winner) 모델을 가정하며,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이유로 공적 차원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높지 않으며, 가족급여의 수준 역시 높지 않다.[24]

---

23) 서비스의 대상화는 사회적 보장이 목표로 하는 서비스가 특히 나쁜 위험(bad risks)에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선별주의는 가난한 사람 또는 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복지체제 논의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성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지국가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사한 형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틀로 확인되고 있다. 많은 경험적 조사들은 Esping-Andersen에 의해 구분된 세 가지 기본적인 체제 유형을 바탕으로 설명력을 향상시키거나, 국가 간 차이에 있어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유형구분에 있어서, 그리고 변화의 예측에 있어서 Esping-Andersen의 분석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양한 형태로 실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형태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복지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astles & Mitchell, 1992; Ferrera, 1996). 이 중 대표적으로 주목할 만한 주장은 남유럽 복지국가의 특성에 대한 강조이다. Ferrera(1996)는 남유럽 국가는 보수주의 복지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파편화'(fragmented), 조합주의적인 소득 유지체계, '내적 양극화'(internal polarization)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매우 높은 급여 관대성을 보이면서도 보호수준에서 격차는 다른 보수주의 복지국가에 비해서 더 크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남유럽 복지국가는 복지영역에서 국가 개입 최소화, 공적영역과 비공적 영역의 행위자와 제도 간의 결탁, 현금보조(cash subsidies)의 선택적 배분 이끌어내는 '후견주의'(clientelism)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복지제도 특징적 구성 이외에도 남유럽은 정치적 발전에서도 늦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특징을 보이며, 경제적 발전에서는 포디즘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신현중, 2010).

둘째, Esping-Andersen의 유형 구분은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중심적 속성을 단지 한 차원에서만 고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Jessop, 2002). Jessop(2002: 59)은 케인지안복지국민국가(Keynesian Welfare National State)의 특성을 경제정책의 특성, 사회정책의 특성,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있어서 1차적 규모, 시장실패를 보상하기 위한 1차적 수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25], Esping-Andersen의 유형론은 임금노동을 탈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만 주목하였고, 교육·건강·주거와 같은 사회적 재생산에서 국가개입의 다른 차원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는 경제성장양식, 조절양식과 복지체제의 본질에 대한 경로의존적 구조결합에 대한 분석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Jessop, 2002: 64).

---

24) 하지만 보수주의 복지국가 내에서는 상당한 이질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벨기에는 가족주의 정도가 낮다(Esping-Andersen, 1999).

25) 그는 각각 '케인지안, 복지, 국민, 국가'가 전후의 복지국가 성장 과정의 특징이라고 분석한다.

사회의 질 수준의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하는 본 논문에서 이와 같은 두 번째 비판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복지국가의 다양성 논의에 입각한 연구들에서 복지제도에만 주목하지 않고, 복지제도와 생산체제를 다각적으로 다룬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때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간에는 제도적 상보성[26]이 존재한다(Huber & Stephens, 2001; 안상훈, 2005; 백승호, 2005;2006). 제도적 상보성에 대한 이들 연구는 복지체제의 핵심영역에 사회보험, 노동시장 정책, 가족지원 정책 등이 포함하고 있으며, 생산체제의 핵심영역에 노사관계, 직업훈련과 교육,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의 주요지표는 사회보장지출, 공공부문 고용, 탈상품화 지수, 사회보험의 관대성 값,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율, 취학 전 아동의 시설 등록률, 총 출산/양육휴가 기간, 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 고용보호 점수 등이, 후자의 주요지표로는 노조의 포괄범위, 조합주의 지수, 단체협상의 중앙 집중도, 식자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에 골고루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네 하위분면 수준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은 복지국가의 수준을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측정하는 이론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복지국가의 변화

복지국가를 체제에 따른 유형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사회적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위험이 구성원들 간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사회적 계층화와 연대주의와 같은 사회적 속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기능과 관련된 제도적 배열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체제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Esping-Andersen, 1999).

사회의 질 이론은 사회적 제도와 개인 간의 상호관계의 결과로서 '사회'에 주목한다. 신제도주의적 논의의 핵심도 이와 유사하게 개인의 행위, 선호가 한 사회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개인의 행위와 선호는 제도가 구성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본다.[27] 신제도주의는 사회의 구조화된 어떤 측면으로서의 제도가 개인 행위를 제약하며, 제도적 맥락 하에서 이뤄지는 개인행위는 규칙성을 띤다고 본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는 변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하연섭, 2002: 340).[28]

---

26) 제도적 상보성이란 한 제도가 다른 제도의 존재 또는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도적 상보성이 낮을 때 거시경제적 성과는 낮게 나타난다(백승호, 2006).

27)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하연섭, 2002).

28) 이외에도 제도는 공식적 규칙과 법률 등 공식적인 측면을 지닐 수도 있고, 규범과 관습 등의 비공식

제도와 개인 간의 관계적 특성에 주목하는 사회의 질은,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의 특성에 주목하는 제도주의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국가별로 한 사회의 다양한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부문의 제도가 상이한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안상훈, 2005: 208). 이 때 제도는 '행위자들의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를 형성하고, 갈등 및 협력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을 구조화하고 정치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인과요인'이 된다(Hall, 1986: 19).

사회의 질 이론은 비록 세부영역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측정을 시도하고, 이의 결과로서 네 하위분면의 하위영역, 그리고 네 하위분면을 상정하지만 결국은 한 사회의 제반 구성형태를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제공에서 공적 제도의 영역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포용성 분면, 사회적 역능성 분면도 대체로 다양한 사회 제도의 특성과 관련된다. 즉, 이들 영역은 사회의 질의 구성형태에서 주로 공식적이며, 객관적인 영역을 표상한다. 반면에 사회적 응집성 분면은 이런 제도 영역과 개인 간의 관계적 맥락의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그리고 이를 총괄한 사회의 질이 표상하는 바는 구성된 제도, 그리고 제도와 개인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구성형태에 주목하는 연구들에서는 국가 간에 제도 구성에서의 체계적 차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 또는 국가가 새로운 사회적 제도를 구성하는 방식이 이전에 존재하는 다른 사회적 제도의 구성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 혹은 특이한 종류의 제도적 발전은 제도적 동형태(institutional isomorphism)의 복제를 통해 이뤄진다(DiMaggio & Powell, 1983: : 안상훈, 2005. 재인용).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총체적인 매커니즘이 국가 간 체계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유지한다. 즉, 사회발전의 매커니즘은 어떤 특정 형태로의 수렴이 아니라 제도적 유형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의 질 접근에서도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전 수준이 선형적이지 않고, 국가별로 그리고 복지체제 유형별로 다른 발전 수준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의 질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 역시 유형의 존재를 보여준다. Yee and Chang(2009)은 시스템과 생활세계의 차원으로 사회의 질을 구성하여, 유형화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존재를 확인한다. 시스템의 수준도 낮고 생활세계의 수준도 낮은 국가 유형(남유럽의 국

---

적 측면을 지닐 수 있다. 또한 제도는 안전성을 지니며, 일단 형성된 제도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하연섭, 2002: 340).

가, 한국, 터키 등), 시스템의 수준은 낮지만 생활세계의 수준은 높은 국가 유형(대륙유럽 국가, 영국, 미국 등), 시스템의 수준도 높고 생활세계의 수준도 높은 국가 유형(사민주의 복지국가, 호주 등)이 그것이다.[29] 만약 시스템과 생활세계의 발전이 선형적 관계라고 한다면, 시스템의 수준은 낮지만 생활세계의 수준은 높은 국가 유형은 존재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에 대한 제도주의적 설명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가, 특히 제도적 수준에서의 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뤄지는지 살펴본다. 복지국가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체제 유형은 바로 보수주의 복지체제이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급여의 자격이 고용지위에 따라 결정되고, 급여는 대체로 현금급여 중심이며 기여비례의 형태이며, 복지재원은 주로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충당되며, 대체로 복지행정의 주체로 준공공기관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보수주의 복지체제에서는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Palier, 2010), 여전히 앞의 세 요소의 특징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형태에서의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예컨데 고용정책은 활성화 정책[30] 중심으로 변화하고, 노인 고용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보호에서는 보편주의 논리와 시장논리를 접목하려는 개혁 등이 실시되고 있다. 가족주의와 성별 분업이 급격하게 달라지면서 공적 돌봄 시설이 만들어지고, 부모휴가가 도입되는 등 돌봄 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제도의 변화 결과 보수주의 체제 국가에서, 제도 수준에서, 그리고 발전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이끌어 내었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보수주의 복지체제 유형에서는 지난 시기동안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확인되며, 그 결과로 보수주의 복지체제 내에서의 이질성도 확인되는데, 노동시장 정책과 가족 정책의 영역이 특징적이다. 김교성·김성욱(2010)은 복지국가의 주요 제도를 이전 양식(old type)과 새로운 양식(new type)으로 구분하고 각각 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 책임성의 범주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은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이념형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대륙 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변화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그 수준이 낮은 상태

---

29) 한편, 이들의 연구에서도 네 하위분면 간에 순환적 발전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협조에 대한 주어진 경향을 가진 사회(사회적 응집이 높은 사회)는 제도, 규범과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고, 이것이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다. 경제, 교육, 보장, 건강,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결과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다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0)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노동시장에서 분리 또는 이탈된 채 살아가는 비활성인구(inactive population)를 노동시장에 (재)편입하기 위한, 즉 일하는 인구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김종일, 2010: 255-6).

에서 혼재된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대륙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혼재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의룡·양재진(2012)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관대성, 적극성,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념형을 구분한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는 관대성에서만 높은 수준이고,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는 관대성과 가족지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노동시장 정책에만 집중해 볼 때에도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복지 체제에서는 제도적 일관성이 확인된다. Vis(2007)가 1985년, 1995년 그리고 2002년의 세 시점에서, 활성화, 관대성, 고용보호 수준으로 측정한 16개 복지국가의 이념형 변화에서도 영국, 미국, 호주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성격을,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성격,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이에 비해서 벨기에, 네덜란드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성격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성격으로 이동하였다. 김종일(2010)은 대륙유럽의 네 국가를 대상으로 활성화 정책의 이념형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용보호의 엄격성에서는 네 국가가 모두 그 성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정책의 적극성 측면에서는 대륙복지국가의 동질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체로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제도적 변화의 맥락이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지향해왔던 정책 대안의 형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성은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 목표를 이미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공적지출의 압박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OECD 국가들은 점점 공적프로그램보다는 대안적인 방안을 활용하여 사회목표를 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OECD(2005b)는 그들이 '적극적 사회정책'(Active Social Policy)이라고 명명하는, 개개인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반응적·보상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인간에 투자하고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31]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대안은 사회투자 전략으로써,

31) 이에 따른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가족정책으로서 아동에 대한 투자,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의 증가, 일과 가족 책임의 조화, 자녀에 대한 양육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제시한다. 둘째,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감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지급 정책, 개인 및 가족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정책, 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의 재정자립을 돕기 위한 노동시장 재통합정책을 제시한다. 셋째, 근로연령의 마지막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

‘생산적 사회정책’(productivist social policy)을 구실로 삼아 인적자본투자를 강조해왔던 스웨덴식 복지모델의 한 형태였다(Esping-Andersen, 1996). OECD(2005b)가 자신들이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정책성과로 제시하는 것들은 이미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모성고용률과 아동빈곤의 관계에서,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GDP 대비 공적지출과 빈곤율의 관계에서, 북구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OECD, 2005b).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 시장 주도 전략을 채택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노동시장과 임금 유연성으로 경제 퇴조와 국내 실업을 해결하려 노력하였다(Esping-Andersen, 1996: 39). 즉 이들 국가는 고용 증가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 대안의 부작용도 존재한다. Pontusson(2005)의 연구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이들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소득불평등 정도와 고용의 증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는데, 이들 국가는 높은 소득불평등과 높은 고용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둘째, 고용보호 수준과 실업률은 정적 상관관계를, 고용보호 수준과 고용증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들 국가는 낮은 고용보호 수준-즉,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셋째, 사회지출 수준과 고용의 증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들 국가는 낮은 사회지출과 높은 고용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고용의 증가에만 주목하면서, 높은 소득불평등과 낮은 사회지출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Esping-Andersen(1996)은 미국식의 저임금 접근법은 실업을 최소화시키고 청년과 이민자를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저생산기업에 대한 보조라는 점과 거대한 불평등을 창출시켰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족정책은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데, 빈곤층 부모의 노동참여를 위한 잔여주의적 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일가족 양립을 위한 휴가도 국가가 아닌 노동시장이나 기업의 고용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윤홍식 외, 2011: 307).

복지국가의 변화는 비록 총지출의 차원에서(Castles, 2004), 또는 복지급여의 관대성 측면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Scruggs, 2007), 개별 제도적 수준에서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Kangas & Palme, 2007). 변화의 수준에서 그리고 변화의 맥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영역은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책과 가족정책이다. 이들 정책 영역은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

---

으로 하여,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출을 연기하도록 하며, 은퇴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기능장애가 올 경우에도 계속하여 자율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을 제안한다.

(Esping-Andersen, 1999)이라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또 이 변화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영역은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주요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와도 연결된다.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면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재진입하도록 하는 일련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시장의 접근에 대한 참여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배제, 특히 노동시장에의 배제를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정책의 영역에서도 일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형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배제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은 사회투자전략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 같은 인적자본 투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의 해석에 있어 이들 정책 영역에 집중하고자 한다.

### 3) 복지국가와 사회의 질

이제부터는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제도변화의 상황에서, 복지국가와 사회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한다.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은 이론적 기반 하에 구축되어, 각 하위 분면은 사회의 질에 대해서 서로 독립적인 차원 영역에서, 전체 사회의 질의 조건요인(conditional factor)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한 사회가 구성되는 방식이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이 네 하위분면 영역은 상호 간에 조건 요인이 된다(Beck et al., 2001c). 복지국가 유형론, 그리고 발전과 변화의 제도주의적 설명을 따르면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상황 하에서 구성되는 사회의 질 수준도 특정한 유형을 띠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분배에 있어 국가보다 시장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보여 왔으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사회의 질 양상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공적자원의 영역으로 표상되는 하위영역에서는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일 것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주로 공적자원의 영역으로 주로 구성되는데,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특히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낮은 공적 규제에 따라 '일' 하위영역에서의 안전성 수준은 낮을 것이다. 둘째, 고용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위기 대처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접근성은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시장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특징은 개인의 자조능력을 강조할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 지식기반의 하위 영역에

서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역능성 자체는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노동시장에 대한 집단의 통제도 낮고,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함에 있어 주로 고용연계-사회보험의 제도를 중심에 두었으며, 근로활동 시기의 지위가 유지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국가 유형에서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변화의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그 본질적 속성에서 사회의 질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이들 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편일 것이다. 고용지위가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소득대체율은 높다. 또한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고용보호는 이들 국가에서 높은 편이다. 둘째,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포용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위기 상황을 '노동감축'으로 대응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많은 계층-특히 청년, 여성과 노인-이 존재하며,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돌봄의 역할을 여성에게 할당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포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는 남유럽의 국가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셋째,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역능성은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활성화 정책으로의 변화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관대한 사회보장급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고용증가, 사회투자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들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보편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포괄적이고 관대한 급여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갖췄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수준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결과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Kumlin and Rothstein(2005b)은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는 사람들에게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셋째, 노동시장에서의 완전고용, 여성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족지원정책의 결과는 높은 사회적 포용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생산주의는 교육과 기술에 대한 강조로 특징되며,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적 역능성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제외하면, 복지국가와 사회의 질의 관계를 주로 공적 제도 영역을 표상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영역을 중심으로 예상한 결과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와 사회적 응집성의 관계는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

다. 제도가 행위자의 인식과 선택을 결정한다는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질의 다른 세 요소-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와 개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총합으로 측정하는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적 배제가 상당하며, 사회적 역능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사회적 응집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질 이론틀에서도 수평축(본문의 [그림 1-2])에서 제도와 공동체의 갈등관계를 설정하는데, 제도의 발전과 공동체의 기능의 발전에는 긴장이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영합(negative-sum)의 관계로 보지 않고, 발전의 변증법적 관계를 가정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복지국가의 양적인 발달이 사회적 자본을 축소하는 '구축효과' (crowding out)가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구축(crowding out)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사회적 자본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Paraskevopoulos, 2010; Rothstein, 2001; Woolcock & Narayan, 2000). 만약 복지국가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특히 지출 수준으로 확인되는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복지국가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면, 사회지출과 포괄적인 사회프로그램이 비공식적 보호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 자조와 호혜성의 발달과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van Oorschot & Arts, 2005). 복지국가, 복지제도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구축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실증 연구들에서는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 사회적 자본의 맥락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Scheepers, Grotenhuis and Gelissen(2002)은 유럽 13개국의 60세 이상 노인들에서 복지국가 체제 유형이 친구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구축효과 가설은 지지되는데, 왜냐하면 포괄적인 스칸디나비안 복지국가에서 노인들이 가족과 친구와의 사회적 접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회보장의 저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지중해의 복지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접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수준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구축효과는 나타난다. Stadelmann-Steffen(2011)은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GDP 대비 사회지출과 자원봉사 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는 복지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효과 가설이 지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구축효과는 유럽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Koster and Bruggeman(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구축효과는 사회적 자본을 어떤 형태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 자원봉사 참여와 더불어 신뢰, 정치적 참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박희봉, 2009; Lin, 2001). van Oorschot and Arts(2005)는 EU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신뢰, 정치적 참여,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라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오히려 발달된 복지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향은 특히 신뢰와 적극적 참여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복지지출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스웨덴의 경우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신뢰수준, 정치적 참여, 자원봉사 조직에의 활동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Rothstein, 2001). 이런 연구결과는 구축효과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향은 연금수급자와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Tamilina(2008)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응집의 차원을 살펴봄에 있어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구축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국가에서는 복지지출이 높은 국가들에서 오히려 신뢰, 정치적 참여, 자원봉사의 참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에 비유럽 국가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자원봉사의 참여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Stadelmann-Steffen, 2011: 142). 결국 사회자본을 특정한 형태로 축약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구축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지만, 포괄적인 형태의 사회적 자본과 복지국가의 관계에서 구축효과의 존재 여부는 추가적인 분석의 과제로 남는다. 본 논문에서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자본 논의의 주요한 지표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질 수준에서 사회적 응집성을 통한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이다.

## 3. 행복수준에 대한 연구[32]

사회의 질 이론이 유럽의 사회모델로 제시된 목적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의 제시였다. 새로운 사회적 기준,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32) 행복(happiness)과 안녕(well-being) 그리고 복지(welfare)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기덕(2009)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행복과 안녕, 그리고 복지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 논문의 1장의 '행복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체적인 서술에서 이와 같이 세 개념을 동일개념으로 사용한다. 다만, 주관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행복을 행복감(happiness)과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으로 구분할 것이다.

사람들의 안녕(well-being)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질은 사람들에게 안녕을 제공하는 사회, 또는 사회제도의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Therborn, 2001: 23). 따라 정책목표로서, 측정의 결과로서 사회의 질 수준은 사람들의 안녕의 수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33)]

사람들이 안녕한 삶을 사는 것, 즉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와 이런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사회정책의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런 이유로 행복을 정의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접근의 핵심에 '삶의 질'(quality of life) 접근이 놓여있다. 지금까지 삶의 질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Veenhoven, 1996a; Berger-Schmitt & Noll, 2000). 하나는 스칸디나비안 국가에서 주로 사용한 '삶의 수준'(level of living) 접근으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북미의 국가에서 주로 접근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

스칸디나비안의 삶의 수준 접근에서는 복지를 '삶의 조건을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에 대한 각 개인의 통제 수준'으로 정의한다(Erikson, 1993: 72-73). 이 접근법에서는 기초적으로 객관적인 자원의 양과 수준에 주목하고, 보다 확장된 개념에서는 각 개인을 둘러싼 삶의 환경도 고려한다. 확장된 객관적 조건으로서 삶의 환경은 그 개인이 가지는 자원의 효용을 결정하고, 각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이 스칸디나비안 접근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고 그를 둘러싼, 객관적인 사회적 사실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접근에서는 생활 여건이 '좋은 생활을 위한 관찰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소득보장, 안전, 건강 보호, 교육 등의 생활 조건을 살펴본다. 이 접근은 좋은 생활여건은 높은 삶의 만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가정한다.

아메리칸 접근은 복지를 '욕구 만족'(need satisfaction)으로 정의한다(Berger-Schmitt & Noll, 2000: 10). 이 접근법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질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만족이나 행복과 같은 개념의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이다. 주관적 접근의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고, 이들 조건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삶의 질 접근에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안녕을 동시에 고려하는

33) 이때 사회의 질은 사회적 차원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녕 수준 역시 사회적 차원으로 치환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람들의 안녕 수준의 총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유럽연합과 OECD에서 제시하는 사회지표들은 이와 같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안녕을 동시에 측정하는 접근법을 이용하고 있다(Noll, 2002; OECD, 2011a). 각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각 개인이 판단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은 물질적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물질적 자원의 결핍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원과 주관적 인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그 개인의 안녕을 측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Zapf(1984)는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안녕 간의 네 가지 복지 상황(welfare positions)을 상정하는데, 이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복지상황(welfare positions)의 구분

| 객관적 삶의 조건 (Objective Living Conditions) |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 |
|---|---|---|
| | 좋음(Good) | 나쁨(Bad) |
| 좋음(Good) | 안녕(Well-being) | 부조화(Dissonance) |
| 나쁨(Bad) | 수용(Adaptation) | 박탈(Deprivation) |

자료: Zapf (1984), p. 25: Regina Berger-Schmitt & Noll (2000), p. 11 재인용.

한 개인의 객관적 삶의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그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의 상태 역시 좋은 경우는, 안녕의 복지상황에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객관적 삶의 조건도 열악하고 주관적 안녕의 인식 역시 나쁜 상태는 박탈의 복지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 두 상황은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안녕의 상태가 일치한다. 그러나 인식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주관적 안녕의 상태가 항상 객관적 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 가지는 객관적 삶의 조건은 좋은 상태이지만, 그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의 상태는 열악한 경우는 부조화의 복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삶의 조건은 열악하지만 주관적 안녕의 상태는 좋은 경우는 주어진 객관적 삶의 조건을 수용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주관적 안녕의 인식이 사회적 차원을 고려할 때 더 쉽게 이해됨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가지는 객관적 삶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주위의 사회환경 역시 열악할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수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의 질에 주목한다. 따라서 각 개인들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다차원적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 하에서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에 주목한다. 즉, 국민행복 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조건을

사회의 질로 상정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논의와 어떤 조건들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주관적 삶의 질 접근을 살펴보고, 이어 객관적 삶의 질 접근에서 주목하는 삶의 조건이 되는 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의 질과 한 사회 내 각 개인의 행복의 총합으로 표상되는 국민행복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

### 1) 주관적 삶의 질 접근-행복의 측정과 결정요인

(1) 행복의 측정

주관적 삶의 질 접근에서 핵심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있다. 왜냐하면,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개인적 요인의 탐색을 위해서는 주관적 인식의 반영인 '행복'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Bok, 2010). 행복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공리주의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제레미 벤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34] 그러나 꽤 오랜 기간 행복의 측정은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졌고, 1940년대 후반 들어서야 행복을 개념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다(Veenhoven, 1996a).

행복의 측정은 각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와 같은 사회조사의 특성 상, 행복의 측정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것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제기되어 왔다. 많은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도 '행복의 측정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시작하며,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행복의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의 행복감, 행복, 만족 등의 용어를 혼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행복의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적 논쟁을 정리하고 있는데(Veenhoven, 1993;1996a; Frey & Stutzer, 2002; Bok, 2010), 이중에서 대체로 베인호벤(Veenhoven)의 정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법론적 논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행복의 정도는 단지 주관적인 질문을 통해서만 측정가능한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

34) 벤담은 일찍이 '정부의 정책은, 그 정책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크면 그만큼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또는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정식(역), 2011: 30).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며, 이때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가리킨다(이창식(역), 2010: 55). 벤담의 공리주의 주장에는 행복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실제로 그가 쾌락과 고통의 종류를 일일이 언급한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자기보고(self-report)식 설문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방법이 각 개인의 실제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추정의 값인가? 셋째, 사람들이 그들이 삶을 향유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진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문에 대한 그들의 응답이 그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가? 방법론적 논쟁의 과정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지표들은 제한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 행복감(happiness)은 심리 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측정은 주관적 인식에 따라 이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 지표를 통한 측정의 방법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적극적이며, 외향적이고, 우호적인 행위를 얼마나 자주하는지에 대한 것이 그 하나이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더 자주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응답자에게 직접 그들의 행복 정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 인물이 응답자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주변 인물의 판단기준이 반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지표로 자살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국가에서 자살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자살이 불행한 상태를 반영하는 극단적 결과인 것은 사실이나, 불행에 대처하는 다양한 문화적·종교적 관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의 정도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객관적 지표들은 제한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

둘째, 설문은 실제의 행복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받기 이전까지는 그들의 삶을 평가해 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행복'이라는 용어가 서구적 개념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이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응답 편향이나 '잘 모르겠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인 열 명 중 여덟 명은 1주일에 1회 이상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며(Veenhoven, 1993: 33), 행복의 정도에 대한 설문의 무응답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며,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에서 무응답률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Veenhoven, 1993: 66-67).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다르게 응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반복 측정을 해보았을 때 행복의 정도에 대한 응답의 신뢰성은 확인된다(Easterlin, 1974: 96).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 정도를 대체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의 자기보고식 행복의 정도와 행복의 정도를 시사할 만한 지표들-예를 들어, 건강상태-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Easterlin, 1974: 97).

셋째, 설문의 응답은 대체로 그들의 실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들은 낯선 설문자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의 편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결론은 행복수준을 보고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편향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실패하였으며, 체계적 왜곡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Veenhoven, 1993: 57-61).[35] 한편, 설문 문장의 구성과 관련된 언어의 효과도 국가 간 비교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인데, 언어의 효과는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Veenhoven, 1993: 52-56). 마지막으로, 가치관 또는 문화적 편견이 반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Diener, Suh, Smith & Shao, 1995; Frey & Stutzer, 2002). 일본과 같이 집합적 가치관을 가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균적'인 시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 행복의 정도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36], 실제로 일본인들이 중간 값을 선택하는 경향은 발견된다(Veenhoven, 1993: 61-65). 문화적 차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무의미하게 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Frey & Stutzer, 2002: 34; Veenhoven, 1996a: 30)

정리하자면,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려는 지난 30~40년간의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주관적 인식의 결과인 행복수준을 설문조사를 측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반증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을 통해서 측정한 행복 수준을 국가 간 비교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 행복의 결정 요인

행복의 수준을 설문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각 개인의 주관적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인들은 크게 혼인, 사회적 관계, 고용, 인식된 건강상태, 종교, 정부의 질로 구분될 수 있거나(Bok, 2010: 16-23),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Frey & Stutzer, 2002: 10-11).

가) 개인적 요인: 자존감, 자기통제, 낙관주의, 외향성, 신경과민 등

35) 오히려, 다양한 상황적 변인들, 인터뷰 장소, 조사자, 날씨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무작위 오류로 간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Veenhoven, 1993).

36)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중간값을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평균 이상에 위치한다. 하지만 집합적 가치관의 사회에서는 척도의 중간 값을 선택함으로써 실제보다 낮은 국민행복 수준을 보이게 된다.

나)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교육 등
다) 경제적 요인: 개인소득, 총소득, 실업, 물가상승 등
라) 맥락적·상황적 요인: 특정 고용조건 및 근로 조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직장동료·친척·친구·배우자와의 인간관계, 생활환경과 건강 등
마) 제도적 요인: 정치의 탈집중화,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정도 등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비교국가 차원보다는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분석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이들 미시적 변수 값을 총합하였을 때 사회적 조건으로 행복수준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을 상정할 수 있다. Frey and Stutzer(2002)가 제시한 요인들 중에서 경제적 요인에서의 실업, 물가상승은 하나의 거시지표로서 사회적 조건에 해당한다. 개인차원에서의 변수를 총괄하였을 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사회적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들도 존재하는데, 한 사회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제적 요인, 맥락적·상황적 요인, 제도적 요인은 사회적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제부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복의 결정 요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며 동시에 논란이 되는 것은 소득인데, 행복에 대한 소득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행복에 대한 소득의 효과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용이론'(Absolute utility theory)과 '상대적 효용이론'(Relative utility theory)이 존재한다(Diener & Oishi, 2000).

절대적 효용이론은 Maslow의 욕구단계이론(Maslow, 1954)에 기반하여,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행복의 정도는 높아진다고 본다. 즉, 사람들의 타고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한 행복수준은 높아진다고 본다(Veenhoven, 1991; Veenhoven & Ouweneel, 1995; Hagerty, 2000; Hagerty & Veenhoven, 2003).[37]

상대적 효용이론은 행복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본다. 이 이론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Duesenberry(1949)의 상대소득가설을 바탕으로 하며, 높은 국민소득 국가가 낮은 국민소득 국가에 비해서 행복 정도가 뚜렷하게 높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은

37) 절대적 효용이론은 행복의 증가가 비선형의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본다(Veenhoven, 1991). 즉, 부유한 국가는 이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가 모든 국민에게 충분히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 행복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절대적 효용이론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소득의 증가를 위한 반대급부들–환경 오염 등–로 인해 행복의 증가가 정체된다고 보기도 한다(Inkeles, 1993).

사회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을 평가하는 물질적 규범으로서의 사회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Easterlin, 1974;1995;2001;2007; Blanchflower & Oswald, 2000; van Praag & Ferrer-i-Carbonell, 2008). 이들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하다고 여길 물질적 조건을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으로 요구한다(Cantril, 1965: 202: Easterlin, 1995 재인용).

국민소득과 행복수준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국가, 측정도구, 그리고 분석의 시기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38] 이런 이유로 국민 소득과 국민 행복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국민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행복 수준이 다른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소득과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Inkeles, 1993). 따라서 소득 뿐 아니라 복지국가 수준, 노동조건, 환경, 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게 될 때, 소득과 행복수준의 관계는 더 많이 설명될 수 있다(Di Tella & MacCulloch, 2008).

국가 간 행복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복지국가의 정책적 개입수준을 이용하기도 한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재분배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인다. 복지급여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부의 평등한 분배를 가져온다.

먼저, 복지국가의 정책적 개입으로서 소득재분배 수준을 살펴본다. 상대적 효용이론의 입장을 받아들여 살펴볼 때, 높은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행복의 수준을 낮춘다. 왜냐하면 소득분포는 정적편포(positively skewed)를 보이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평균 소득 이하의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서 행복의 비교기준은 평균 소득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들에서 불평등한 사회, 소득불평이 높은 사회에서 행복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Hagerty, 2000; 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39]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은 불평등을 축소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입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Rottiers(2008)는 주관적 행복이 상대적 개념이라고 할

38) 한편 소득의 효과는 처음에는 크게 나타나지만, 이내 수용(adaptation)된다는 설명도 있다(Oswald & Powdthavee, 2006).

39) Alesina et al.(2004)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럽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과 정치적으로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등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미국에서는 이들 집단이 불평등으로 인해서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불평등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여긴다. 저자들은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를 사회 이동성이 높은 사회(mobile society)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때, 불평등의 역설(Inequality paradox)[40]이 존재하게 되는데, 복지국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복지국가는 불평등의 하위 집단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자신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이끌어 내고, 재분배 정책은 소득 상위집단 내의 상대적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보다는 소득 하위집단 내의 상대적 소득격차를 줄인다. 따라서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소득분포 상의 지위는 재분배 정책의 실시 이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이런 이유로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사회 전체의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다.

복지국가는 경제적 안전성의 보장을 통해 삶의 만족을 이끌어낸다. 여러 연구에서 탈상품화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cek & Radcliff, 2008a;2008b; Stefansson, 2008). 한편, Haller and Hadler(2006)는 공평한 소득 분배,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와 같이 거시적 사회조건과 제도가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이런 이유로 이런 거시적 사회조건과 제도의 개선은 곧 행복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41] 이와 같이 복지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탈상품화와 행복수준 간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확인된다.

특정수준을 넘어서는 복지국가 지출 수준은 더 이상의 행복 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는 분석, 사회보장의 지출 감소나 증가가 사람들의 건강수준이나 행복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일부의 반박을 고려하면(Veenhoven, 1996b;2000a; Veenhoven & Ouweneel, 1995),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의 관계는 결국 어떤 복지국가냐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Rothstein, 2010).

행복에 대한 셋째 설명요인은 고용상태와 고용의 질과 관련된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실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 낮은 수준의 정신적 안녕 상태를 보이며(Clark & Oswald, 1994)[42],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실업률이 낮은 시기에 사람들은 더 행복해하고 있

---

40) 불평등의 역설은 분배구조에서 하위 집단은 불평등으로 인해서 냉대와 긍정적 인식의 결핍을 경험하지만, 상위 집단은 자존감과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ottiers, 2008: 28).

41) 복지국가가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가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된다. Veenhoven and Ouweneel(1995)은 사회보장 지출과 국민행복 수준, 그리고 기대수명의 관계 분석을 통해 복지지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런 경향이 특히 부유한 국가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빈곤한 국가에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복지국가의 최저한의 수준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지만,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복지국가의 노력은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본 것인데, 이들은 대략 국민소득의 10% 수준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42) 이들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효용(disutility)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의 상대적 효

는 것으로 나타났다(Tella, MacCulloch & Oswald, 2001). 고용수준의 문제와 더불어 근로조건, 고용보장, 직장에서의 신체적 안전 등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y & Stutzer, 2002).

한편, 고용에서 일자리의 특성은 여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가용한 시간 중 많은 시간이 일을 수행하는 데에만 투입되면, 여가를 즐길 시간과 자원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자원봉사나 자선사업은 강렬한 만족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Frey & Stutzer, 2002: 105-06), 여가의 문제는 국가별 삶의 만족도 차이를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통제능력, 즉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undelach & Kreiner, 2004; Minkov, 2009).[43] 이와 같이 여가시간은 그 자체로 행복과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에 덧붙여서 스포츠 활동 등은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며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rgyle, 1996: : Frey & Stutzer, 2002, 재인용).

이상에서 설명한 복지국가 수준과 고용상태와 고용의 질은 주로 경제적 안전성 보장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제적 안전성 보장 외의 사회적 환경 또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중 하나가 바로 신뢰수준이다. 신뢰수준은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 언급되는데(Knack & Keefer, 1997; Oswald, 1997; Bjørnskov, 2006;2009; Dincer & Uslaner, 2007; 이병기, 2008), 신뢰와 행복수준 간의 유의한 관계는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Frey & Stutzer, 2002; Helliwell & Putnam, 2004; Hudson, 2006; Bjørnskov, 2006; Dolan, Peasgood & White, 2008; Leung, Kier, Fung, Fung & Sproule, 2011).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것 역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의 여가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빈번한 접촉, 이웃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은 행복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undelach & Kreiner, 2004; Lelkes, 2006; Powdthavee, 2008; Leung et al., 2011). 한편,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역시 행복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Leung et al.,

---

용이론이 실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43) Minkov(2009)는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여가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행복의 쾌락적 측면(hedonic facet)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설명은 '왜 부유하지 않은 국가에서 높은 삶의 만족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2011). 이 외에도 정치참여(Frey & Stutzer, 2002), 건강(Dolan et al., 2008), 경제적·정치적·개인적 자유(Veenhoven, 2000b)와 행복 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Bok, 2010).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행복은 개인이 얼마나 물질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가 물질적 기대를 충족시켜주느냐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가 가지는 자체 속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좋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사회, 문화적인 자원과 고양이 풍부한 사회, 공정한 제도가 성립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Thin(2012)은 행복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의 탐색이 여전히 지극히 개인적인 수준과 거시적 수준-예를 들어, 조세제도, 고용, 부의 재분배-에만 머물러 있음을 비판한다. 그는 중범위 수준-예를 들어 가족, 집단, 공동체, 직장,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이유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은 개인 수준 또는 단지 사회적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 이론의 네 하위분면은 다양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들 사회적 조건의 상당수는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예를 들어, 고용상태와 고용의 질에 있어서는 장기실업자의 비율, 노동시간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적 응집성은 신뢰, 다양한 네트워크에의 참여를, 사회적 역능성은 '삶에 대한 통제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는 삶의 만족, 행복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질의 어떤 하위분면이 더 중요한 요소인가를 밝히는 것, 그리고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이 구성되는 어떤 형태에서 보다 높은 행복 수준을 가져오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 2) 객관적 삶의 질(Quality of life) 접근

앞서 살펴본 주관적 삶의 질 접근은 행복수준을 측정하고,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는데 주목한다. 반면에 삶의 질 접근의 또 다른 분파인 객관적 삶의 질 접근은 주어진 자원의 양에 주목한다.

이 때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을 찾기 위한 논의의 흐름에서 '실현능력 접근'(capability approach)을 찾아볼 수 있다. 실현능력(capability)이란 '다양한 가치있는 기능들(functionings)을 달성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실질적 능력(actual ability)'을 말한다(Sen,

1993). 가치 있는 기능은 적절한 영양상태, 좋은 건강상태와 같이 매우 기초적인 것들부터, 자존감(self-respect)의 달성, 사회에 통합되는 것과 같이 개념적 형태도 제시되었다.[44] 이런 센(Sen)의 '실현능력' 접근은 삶의 질 수준을 지표화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이다.[45]

한편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일련의 지표틀을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측정의 목표는 국가간 비교이며, 따라서 측정의 기준도 대체로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시된다. 다양한 국제기구, 국가들이 이런 지표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OECD(2011a)는 『How's life?』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표틀을 소개하고 있다.[46] 여기서는 이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보고서는 Stiglitz et al.(2009)의 보고서 내용에 바탕을 두고,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삶의 질'(Quality of Life), '안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Well-being)의 세 차원을 바탕으로 11개의 측정영역, 23개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차원은 개념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지표와 각 지표에서 한국의 순위는 〈부록표 2-1〉에 첨부하였다.

첫째, 물질적 삶의 조건의 측정영역은 수입과 자산(wealth), 직업과 소득, 그리고 주거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수입과 자산은 각 개인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비가능성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과 주로 소득수준으로 측정하는 일자리의 질은 물질적 안녕과 관련이 있으며, 또 일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의 자존

---

44) 하지만 센(Sen)의 실현능력 접근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Cohen, 1993; Nussbaum, 1993;2006). 구체성의 결여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판에 대응하여 센(Sen)도 도구적 자유(instrumental freedoms)의 유형을 5가지-정치적 자유, 경제 기능, 사회 기회, 투명성의 보장, 보호적 보장(protective security)로 제시하였다(Sen, 1999: 38).

45) 삶의 질 지수는 이외에도 '불평등조정인간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 '다차원빈곤지수', 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신경제재단의 행복한 지구지수(The Happy Planet Index: HPI) 등이 있다. 이들 지표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첨부한다).

46) OECD의 『How's life?』 보고서는 'GDP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Beyond GDP)' 목적에 걸맞게 각 개인의 삶의 수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조사자료(예를 들어, 갤럽세계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미시적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도 상당수의 변수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는 기본적 욕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사생활 등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삶의 질의 측정영역은 건강 상태, 일과 삶의 조화,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적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안녕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은 한 개인의 활동,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원이다. 일과 삶의 조화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참여와 거버넌스의 질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이며, 또한 다른 많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다. 깨끗한 환경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되며, 또 다른 많은 필수적 활동의 수행가능성을 결정짓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주어진 환경과 각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와 감정이다.

OECD는 『How's life?』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도연구'(Better Life Initiative)라는 주제 하에 지표와 순위를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이를 발전시켜서 'Better Life Index'를 제시하고 있다(oecdbetterlifeindex.org). 'Better Life Index'에서는 모두 11개의 범주(소득, 직업, 주거, 일가족양립, 건강, 교육, 공동체, 공공참여, 환경, 안전, 삶의 만족)에서 24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지표틀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은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지표의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소개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김영미·최영준·안상훈, 2010; 김용하·윤강재·김계연, 2009; 이희길·심수진, 2009).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각각의 사회정책적 목표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지수(노대명 외, 2009), 사회통합지표(노대명 외, 2010)를 제시하기도 하고, 통합사회지표(장용석 외, 2010), 사회위기점수(김승권·장경섭·김호기, 2009)를 제시하고 있다. 지수화 작업을 시도하는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수준을 진단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정책적 차원의 변수를 찾기 위한 노력 하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사회적 수준의 변수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삶의 질'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

### 3) 사회의 질과 행복 수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구성

여기서는 사회의 질 이론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를 상정하고자 한다. 삶의 질 접근에서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의 관계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삶의 질 접근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객관적, 주관적 평가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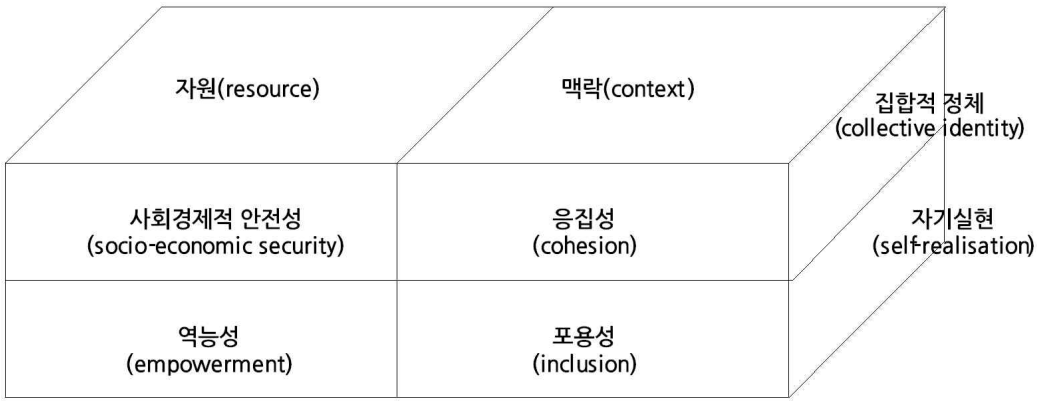
| | 객관적(objective) | 주관적(subjective) |
|---|---|---|
| 사회적 수준<br>(societal level) | 사회의 질적 측면<br>(Quality of Society)<br>(예. 소득 분배) |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br>(perceived quality of society)<br>(예.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의 정도) |
| 개인 수준<br>(individual level) | 객관적 삶의 조건<br>(objective living conditions)<br>(예. 소득) | 주관적 안녕<br>(subjective well-being)<br>(예, 소득 만족) |

자료: Beck et al.(2001b), p. 15을 바탕으로, 개인 수준과 사회적 수준의 위치를 변경함.

삶의 질 접근에서는 소득분배 수준과 같은 사회의 질적 측면과 각 개인이 인식하는 부자와 빈자 간의 갈등의 정도와 같은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을 사회적 수준의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이며 개인적인 수준을 객관적 삶의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소득만족과 같은 주관적 안녕을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수준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이 삶의 질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사회적 차원에 보다 주목하는 '사회의 질' 논의에서는 개인수준의 차원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대신에 위와 같은 개인수준/사회적 수준, 객관적 차원/주관적 차원을 자원(resource)의 영역과 맥락(context)의 영역으로 구분한다(Beck et al., 2001b). 이때 자원 영역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역능성의 분면의 성격을, 맥락 영역은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의 분면의 성격을 가진다.

[그림 1-4] 사회의 질 접근의 차원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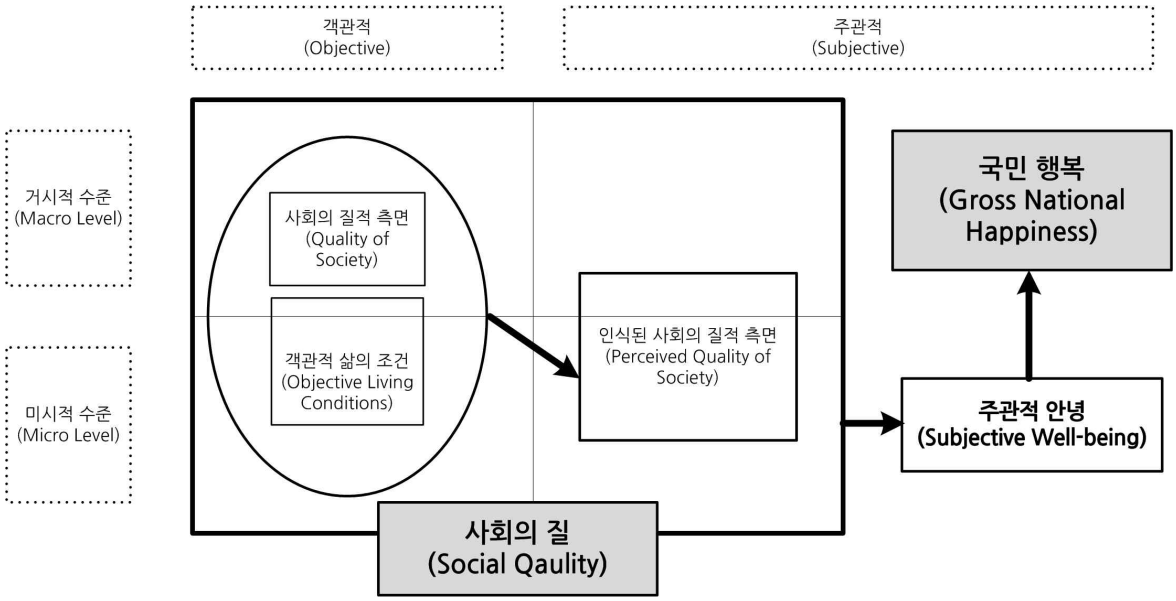

자료: Beck et al.(2001b: 15-16)을 이용하여 재구성.

이제 위 〈표 1-7〉과 [그림 1-4]를 하나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람들이 생애기간 동안의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사회가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가의 측면으로 사회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객관적 자원의 영역이며, 사회의 질적 측면을 표상한다. 사회적 역능성 역시 객관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인간역량과 실현능력을 현실화하는 것의 측면으로, 각 개인의 수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객관적 자원의 영역이다. 사람들이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제도와의 관계 맥락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객관적 자원의 영역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정체성, 가치와 규범이 공유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사회적 응집성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맺음 속에서 결정되는 주관적 조건에 해당한다. 즉,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의 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역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은 미시적 수준에서 객관적 지표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응집성은 미시적 수준에서 확인되는 주관적 지표로 확인된다. 제도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사회 제도가 인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사회의 질 이론도 수평축을 제도와 집단, 공동체의 갈등 관계의 긴장으로 보면서, 이 둘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가정하였다. 즉, 제도가 행위를 결정하지만 또한 동시에 행위자들이 제도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개인의 인식 차원이 주로 반영되는 영역인 사회적 응집성은 미시적 차원의 영역이면서 주관적 인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와 같은 행위의 차원도 결국은 인식이 행위로 반영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때, 주관적 인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질은 사회적 조건에 주목한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을 거시적 수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이 보이고 있는 역능성, 포용성은 객관적 지표이며 따라서 이의 총합을 통해서 사회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사회의 질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그림 1-5]와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47]

47) 그림은 Coleman(1986: 1322)과 Ahn(2000: 20)의 '거시-미시-거시 관계틀'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는 거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미시적 행위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가치 또는 이해가 개인의 경제적 행위 또는 정치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이런 행위 또는 행동은 다시금 거시적 체계를 결정한다.




[그림 1-5] 사회의 질과 주관적 안녕, 그리고 국민행복의 관계

첫째, 사회의 질적 측면(예를 들어, 소득분배의 수준)은 객관적이고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의 상황을 묘사한다. 둘째, 객관적 삶의 조건(예를 들어, 소득수준, 고용조건, 환경조건, 교육수준 등)은 미시적 수준이지만 그 총합은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두 측면은 사회의 질에서 각각 사회적 포용성,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역능성의 영역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예를 들어,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미시적 차원이지만, 그 총합으로서는 거시적 차원으로 한 사회의 속성을 구성하며 사회적 응집성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 네 영역은 '사회의 질'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개인의 주관적 안녕-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주관적 안녕을 총합하였을 때, 한 국가의 국민행복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이 각 국가의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론적 논의틀을 바탕으로 실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이 국민행복의 유의미한 조건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이론 논의를 실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어떤 조건조합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특정한 발달형태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특정국가에서 행복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사회의 질의 어떤 부분이 더 발달해야 하는지와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제 3절. 연구문제

본 논문은 경제적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측정하고, 이를 복지국가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는데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질 접근이 가지는 분석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가진다.

첫째, 경제적 선진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국가별 사회의 질 수준을 비교한다. 둘째,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복지국가 수준을 설명하는 다양한 사회지표와 사회의 질 수준을 비교하고, 다음으로 사회의 질 수준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를 통해서 복지국가 체제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회의 질이 복지국가 수준을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도구틀이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각각을 사회적 조건 요인으로 상정하여, 조건요인으로써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첫째 연구문제는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을 실측하는 것은 이 연구의 시작이다. 사회의 질 이론이 제시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 측정이 부재한 것은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측정지표와 측정 가능한 실제 지표와의 불일치에 기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구성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을, 이를 구성하는 각 하위 영역(sub-domain)을 중심으로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각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네 하위분면의 지수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사회의 질 수준을 비교할 것이다. 〈연구문제 1〉과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영역의 측정과 지수 구성, 국가간 비교**

1.1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하위영역에 포함되는 지표의 선정과 지수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1.2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은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연구문제는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해왔던 주요 지표와 각국의 사회의 질 수준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양적 발달이 사회의 질 수준을 담보하는 지를 확인하여 사회의 질 접근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의 질 수준을 유형화하

여, 개별 복지국가가 지향해온 제도적 맥락과 사회의 질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해석할 것이다. 복지국가가 지향해온 제도적 맥락,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회·정치·경제적 수준을 포함하는 총체적 구조는 사회의 질 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왜냐하면, 측정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들 각각은 현대 복지국가가 지향해온 다양한 정책적 대응의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질 수준이 복지국가 유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유형을 구성하는지를 다시금 복지국가 논의를 끄집어내어 설명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회의 질 수준을 통한 접근이 복지국가의 수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방법임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2〉와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사회의 질' 구성형태와 복지체제 유형의 관계 확인**

2.1 복지국가의 노력과 성과 지표는 사회의 질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가?

2.2 각 국가의 사회의 질 구성형태는 복지체제 유형과 같은가?

2.3 '사회의 질' 구성형태의 차이를 가져오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성형태는 무엇인가?

셋째 연구문제는 조건요인으로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지,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의 어떤 결합이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질이 상정하는 좋은 사회 역시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이다. 따라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질의 분석적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회의 질을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한다. 사회의 질이 여러 사회적 조건 수준을 반영하고 있지만,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분석은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의 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다음으로 국민소득 수준을 조건요인으로 추가하여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조건요인으로써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확인**

3.1 '사회의 질'은 국민행복의 유의미한 조건인가?

3.2 '사회의 질'의 어떠한 조건조합이 국민행복을 설명하는가?

3.3 '사회의 질', 국민소득 수준의 어떠한 조건조합이 국민행복을 설명하는가?

## 제 4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과 분석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 1. 분석방법

#### 1) 사회의 질: 측정과 지수화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사회의 질을 측정하고 지수화한다. '사회의 질' 이론은 4개의 하위분면과, 18개의 하위영역, 그리고 95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측정과 지수화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은 '사회의 질' 이론에 입각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가능한 이론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사용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지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하위분면의 성격에 입각한 지표로 대체한다.

둘째, 측정과 지수화, 가중치의 부여는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즉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에 입각한 지표의 측정이 아니라, 네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제시하고 측정한다. 이에 따라 지수화도 네 하위분면의 각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형태를 취한다. 즉, 각 하위분면의 지수는 각 하위영역의 지수를 산술평균한다. 이는 사회의 질 이론틀에서 네 하위분면이 각각 독립적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표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

셋째, 정규화의 방법은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Min-Max Normalization Methods)을 이용한다. 통합지수의 구성을 위해서는 각 지표의 정규화가 필수적인데,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은 지표 간 간극이 적은 경우 통합지수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OECD & EC Joint Research Centre, 2008: 28).

마지막으로, 가중치 부여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하위영역 각각에 동일한 가중치(equal weight)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 2) 사회의 질 구성형태와 복지국가의 관계 분석

제 3장에서는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복지국가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양적지표와 사회의 질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

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중심으로 한 국가 유형화를 실시하고, 이 유형과 복지체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제 3장에서는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수준을 이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다. 군집분석을 통해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이 각 국가를 구분하는 유의한 기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복지국가와 연결하여 해석할 것이다.

### 3)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의 관계 분석

제 4장에서는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을 조건요인으로 상정하여, 사회의 질 수준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지를 분석한다.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과 국민행복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실시한다. 질적비교분석은 사회의 질의 개별차원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유의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양적분석(Qauntatative Analysis)의 개념과는 다르게, 국민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네 차원영역의 결합에 주목한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서 어떤 하위 차원이 높은 국민행복의 유의한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결합형태 중 어떤 결합형태가 국민행복 수준의 국가별 차이를 설명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 2. 분석자료

### 1) 분석대상과 분석시기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OECD 24개국으로 호주(AUS), 오스트리아(AUT), 벨기에(BEL), 캐나다(CAN), 덴마크(DNK), 핀란드(FIN), 프랑스(FRA), 독일(DEU), 그리스(GRC), 헝가리(HUN), 아일랜드(IRL), 이탈리아(ITA), 일본(JPN), 한국(KOR), 룩셈부르크(LUX), 네덜란드(NLD), 뉴질랜드(NZL), 노르웨이(NOR), 포르투갈(PRT), 스페인(ESP), 스웨덴(SWE), 스위스(CHE), 영국(GBR), 미국(USA)이다.[48] 이들은 OECD 국가 중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사회발전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사회적 수준의 질적 차이를 주목하고자 할 때, 경제력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분석기간은 2008년을 중심으로 한다. 본 논문의 제 4장에서는 측정한 각 국가

48) OECD 국가 중 칠레, 체코, 아이슬란드, 멕시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측정 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 데이터의 부족으로 제외하였다.

의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 행복의 관계를 파악한다. 국민 행복 수준에 대한 자료는 Veenhoven(2012a)의 '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서 '삶의 만족' 정도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며, 각국의 2008년 기준값을 사용한다.[49)]

따라서 사회의 질 측정변수는 2004년부터 2008년의 5년 평균값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평균값을 이용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사회의 질은 양적으로 측정하지만, 그 국가의 질적 차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어느 특정 시점의 값을 이용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된다. 둘째, 시간적 결측 또는 측정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논문에서 사용한 다양한 사회지표들은 시간적 결측이 없는 밸런스가 완전히 맞는 자료가 아니다. 즉, 일부 자료는 시계열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또 몇 년을 주기로 조사가 이뤄지는 국제사회조사의 값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기를 일치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자료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의 측정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평균값을 이용한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영역으로 등장한 사회적 관계 또는 주거조건의 자료는 2008년 이후의 최근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를 이용하면 원인변수의 시간적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위배하는 것이지만, 이 변수들(주거의 조건, 가족·이웃·친구로부터의 사적 지원)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 분석자료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OECD의 각종 자료들이 대표적인데, 사회지출 통계(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국민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건강 통계(Health Statistics),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가족 통계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교육 통계(Education Statistics) 등을 이용한다.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 at a Glance)',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 '한 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등의 보고서 자료도 이용한다. 이 외에 Eurostat,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을 위해서는 국제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와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tudy)의 자료를 이용한다. 보다 자세한 자료출처는 2장에서 제시한다.

---

49) 이 때 캐나다, 그리스, 일본, 한국은 2007년 조사자료이며, 룩셈부르크는 2009년 조사자료이다. 독일, 네덜란드는 2008년 조사자료의 평균값이다. 이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대상 다수의 국가에서 삶의 만족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값이다.

본 논문에서 국민행복 수준 정도는 베인호벤(Veenhoven, 2012a)의 '행복에 대한 국제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 자료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행복'에 대해 두 가지 측정 범주-'행복감(happiness)'과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에 대한 국가 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논문에서는 사회적 조건 하의 개인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 값을 사용한다.

## 제 5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이 논문의 목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의 질' 이론이 제기되는 배경 그리고 이론이 제시하는 사회의 질의 각 하위분면의 속성 및 제시하는 지표를 살펴보고, 측정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복지국가와 사회의 질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복지국가 논의를 살펴보았다. 사회의 질은 사회정책 목표로 제시되는데, 복지국가의 위기론 이후 각 복지국가 유형은 나름의 위기 대처방안을 제시하였고,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행복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질과 행복 수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2장에서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하위분면 발달수준을 지수화한다. 그리고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을 바탕으로 국가 간 사회의 질 발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측정한 지수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국가 지표와 '사회의 질'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복지국가 지표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의 질 접근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사회의 질 발달 수준의 유형과 복지국가 유형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형적 차이를 가져오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열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다. 국민행복 수준과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구성 간의 결합인과구조에 주목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국민행복 수준의 유의한 조건으로서의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그리고 네 하위분면의 결합을 분석한다. 분석과정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 행복의 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경제력 수준을 추가하여 국민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5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먼저,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이론적·정책적 수준에서 본 논문이 갖는 함의를 논할 것이다.

# 제 2장. 사회의 질(SQ): 측정과 지수화, 국가 간 비교

## 제 1절. 문제제기

한 사회가 어느 정도의 발전 수준을 보이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와 지표틀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를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라고 하는데, Bauer(1966)는 현재의 위치와 미래의 방향을 사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라고 이를 정의하고 있으며, OECD(1976)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의 수준과 변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용한 통계적 측정으로 정의하고 있다(wikiprogress.org: 재인용).

사회지표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관심의 변화에 따라 사회발전의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Hall, 2008). 첫째 단계는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물질적 단계(Material Stage)이다. 대공황을 경험한 이후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였던 이 시기에 쿠즈네츠(Kuznets)는 GDP 개념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사회적 단계(Social Stage)이다. Mahbub ul Haq에 의해 개발된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개발이 이 시기 지표 발달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OECD는 사회지표틀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 이외의 사회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단계는 앞서의 두 개념에 더불어서 환경적 차원, 지속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지는 지구적 단계(Global Stage)이다.

물질적 단계에서 사회적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 발전으로부터 질적 발전 수준으로 사회적 관심사의 변화가 있었다. 즉, '얼마나 많은'에서 '얼마나 좋은'이라는 것으로 관심사가 변한 것이다(Bauer, 1966: preface, 12). 한편, 사회적 단계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전체 사회를 하나의 통일된 구성체로 보는 것에서 그 안에서의 내부적 역동과 분배구조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UNDP는 HDI가 해당 국가에서 각 지수의 분배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평등조정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DI: IHDI)를 2010년부터 제시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으로 인해 인간잠재력의 발현이 저해되는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GII)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지표의 발달단계는 사회지표의 속성[50] 중 '사회적 관심'의 반영의 결과를 보여준다. 2000년대 후반의 사회지표 논의에서 'GDP를 넘어서'는 이제 익숙한 슬로건이 되어 가고

있다. 사실 GDP가 사람들의 안녕(well-being)이나 행복감(happiness)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주제이다. 그럼에도 2000년대 들어와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득세가 그것이 표방하였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경제정책에 경도된 발전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GDP를 넘어서'의 대표적인 결과가 프랑스의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보고서이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성과의 측정에서 사람들의 안녕(people's well-being)을 측정하는 것으로 관점을 옮겨야 하며, 안녕의 측정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tiglitz et al., 2009). OECD도 2011년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51], 이 역시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조건에 대한 진정한 측정에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는 'GDP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발전의 수준을 경제적 성과의 측정에서 사람들의 안녕 수준에 주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된 접근방법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접근이었다. 이와 같은 삶의 질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Berger-Schmitt & Noll, 2000; Veenhoven, 1996a). 하나는 스칸디나비안의 '삶의 수준'(level of living) 접근으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아메리칸 접근으로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초점을 두는 접근방법이다. 객관적 접근의 대표적인 것이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이며, 그 외에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삶의 질 지수 등이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삶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안녕(well-being)', '행복(happiness)'의 상황을 묘사하고, 그것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방대한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Bok, 2010; Dolan et al., 2008; Frey & Stutzer, 2002). 이와 같은 삶의 질 접근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을 동시에 고려하는 '삶의 질' 측정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Berger-Schmitt & Noll, 2000; Noll, 2002).

---

50) Bauer(1966: 24)는 사회지표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사회지표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사용가능한 지표가 있어야 하며 셋째, 관련된 현상이 측정가능해야 한다.

51) 이 보고서는 세 차례에 걸친 OECD 세계 포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세계 포럼은 '1) GDP에 근거한 경제 중심의 발전 개념을 뛰어 넘어, 새로운 사회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2)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개발 및 이를 정책과 연계시켜야 할 필요성을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통계청, 2009).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회통계의 발달에 따라 사회수준의 발전 정도와 발전의 목표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응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제도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 만연하고, 공유된 정체성과 규범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획하기 힘들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이 핵심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사회발전을 위한 조건과 결과로서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노대명 외, 2009; 노대명 외, 2010; 장용석 외, 2010).[52] Berger-Schmitt(2002)는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이 정치적 관심을 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사회적 응집이 정치적 안정과 보장의 조건이 되며, 경제적 부와 성장의 근원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응집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압축적 성장의 결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 수준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통합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접근을 통한 사회발전 수준의 측정을 제안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질 접근은 사회정책의 목표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제시되는 다양한 개념들-대표적으로 사회적 배제, 사회적 응집-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전체 사회의 질을 규정하는 조건요인(conditional factor)으로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들 네 하위분면은 사회수준의 발전-개인수준의 발전, 체계·제도-공동체·집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제시되는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의 목표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람들이 생애기간 동안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사회적 응집성은 공유된 정체성, 가치와 규범이 공유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통합되어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사회적 역능성은 구성원들이 충분한 실현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van

52)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을 대체로 '사회통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서 사회적 응집의 규정은 다양하다. Berger-Schmitt(2000: 21-22)의 사회적 응집은 부정적 차원으로서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서 사회적 배제와 긍정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동시에 반영한다. 반면에 Chan et al.(2006)은 주관적인 인식으로서의 신뢰 수준과 객관적인 행위로서의 사회참여, 자원봉사, 기부, 투표율과 같은 정치참여로 사회적 응집을 제한하고 있다.

der Maesen et al., 2005). 이들 각각은 복지국가의 경제적 보장, 그리고 불평등의 축소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 경제적·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시민능력의 고취와 같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차원에서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개인의 안녕(well-being)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되게 이용되어왔던 삶의 질 접근은 주로 개인적 수준을 중심으로 하며, 비록 사회적 조건이 고려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된 질적 수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비해서 사회의 질 접근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사회의 질적 측면을 결정한다고 보며(Walker & Maesen, 2003: 16), 따라서 개인적 수준에서의 접근을 피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53]

넷째, 삶의 질 접근은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서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를 끝없이 제시할 수밖에 없지만(Yee & Chang, 2009), 사회의 질은 질적 수준의 측정을 네 개의 하위분면, 18개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삶의 질 접근은 비록 생활수준의 시간적 변화를 측정하지만 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의 질 접근은 네 하위분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변화의 발생 이유와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4]

제 2장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에서 복지국가 수준을 측정하고, 이 수준의 국가 간 차이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의 질 이론은 현대 복지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발전방향이 됨과 동시에 이런 정책 대안의 실제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의 국가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곧 현대 복지국가가 복지국가의 내·외적 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제 2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사회의 질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네 개의 하위분면으로 구성된다(van der Maesen et al., 2005).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한 개인이 생애기간 동안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53) 이런 관점은 특히 사회적 응집성의 하위 분면에서 두드러지며,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에서도 드러난다.

54) 사회의 질에 대한 자료가 시계열적 자료로 구축되었을 때, 사회적 변화에 대한 보다 많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후반의 횡단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응집성은 공유된 정체성, 가치와 규범이 공유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의 각 개인이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통합되고,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역능성은 사회의 각 개인이 실현능력(capabilities)과 사회적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네 하위분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의 질 이론틀은 각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하위영역(sub-domain) 차원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95개의 지표를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사회의 질 수준은 4개의 하위분면, 18개의 하위영역, 50개의 세부영역, 95개의 지표로 측정할 것이 제안되었다.

## 1. 분석방법

### 1) 지표의 선정

본 논문에서는 이론에서 제시하는 95개지표를 모두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4개의 하위분면과 18개의 하위 영역에 주목한다. '사회의 질' 이론은 유럽 사회모델의 제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표들 중 일부는 유럽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가치가 반영된 것이 존재한다. 또한, 유럽의 사회조사에서는 측정가능한 지표가 다른 국가에서는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 국가들을 '사회의 질' 이론틀에 입각하여 측정할 때에는 제외되는 지표가 존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표들은 개별 국가의 상황은 묘사할 수 있으나 국가 간 비교가 불가능한 구조로 제시된다. 따라서 이들 지표 역시 제외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노동시장통계와 교육통계 등 비교가능한 자료가 풍부한 사회지표 영역은 많은 지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영역에서는 지표가 적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개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측정할 것을 목적하여 각 하위 영역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되도록 한다.

지표의 선정은 가능한 사회의 질 이론틀에 입각하며,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지표와 동일한 지표가 부재할 경우, 이론적 속성에 근접하는 대체지표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지표를 선정한다.

### 2) 지수화

다음으로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바탕으로 각 하위영역, 하위분면의 통합지수(composite indicators)를 구성한다.[55] OECD and EC Joint Research Centre(2008)는 통합지수를 구

성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선택하며, 결측치를 대체하고,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통해서 데이터셋의 전반적 구조를 파악하고[56], 정규화와 가중치의 부여를 통해 지수를 구성하며, 민감도 분석을 통해 통합지수의 강건성을 확인할 것, 결과의 시각화가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구성하며, 각각의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측정지표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각 하위영역을 통합지수로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하위분면의 구성값을 확인한다. 따라서 지표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파악하여 통합지수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은 본 논문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다변량분석의 목적은 지수화의 과정에서 정책적 보완 관계에 있는 지표를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논문에서 네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은 서로 정책적 보완을 이루는 관계에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수들이 구성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하위영역 값들이 하위분면 값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준으로 지표를 제한할 것이다.

측정지표의 정규화 방법은 여러 정규화의 방법 중에서 최소-최대 전환(Min-Max Normalisation Methods)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극단값이나 이상값이 존재할 경우에 전환된 지표의 값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표간 간극이 적은 경우 통합지수의 영향력을 Z-score 전환보다 높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OECD & EC Joint Research Centre, 2008: 28). 본 논문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측정값들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극단값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최소-최대 전환을 사용한다.

최소-최대 전환의 기본적인 식은 〈수식 2-1〉과 같다. 모든 지표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지표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경우에는 전환과정에서 정적인 값을 보이도록 조치한다. 각 지표가 가지는 방향성은 지수화를 위한 변수 성격에 제시한다.

---

55) 통합지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Saisana & Tarantola, 2002). 통합지수 사용의장점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이슈를 축약함으로써, 정책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잘 구성되지 못한 통합지수는 잘못된 정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지수 구성에서의 투명성과 통계적, 개념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OECD & EC Joint Research Centre, 2008).

56) 이 과정은 요인분석 등을 통해 변수를 축약하고, 변수 간 가중치 부여를 위한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변수를 하위영역 차원에 배치하기 때문에 변수의 축약 가능성은 제약된다. 한편, 변수의 축약은 각 변수가 하위분면을 구성하는데 있어 함의를 제약한다. 예를 들어 HDI의 경우에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축약할 경우에, 기대수명만으로도 다른 정보를 손실하지 않고 지수를 구성할 수 있다(Ogwang and Abdou, 2000: Saisana and Tarantola, 2002. 재인용).

〈수식 2-1〉 최소-최대 전환식

1) 지표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경우: $T_X = \frac{X - \min(X)}{\max(X) - \min(X)}$

2) 지표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경우: $T_X = \frac{\max(X) - X}{\max(X) - \min(X)}$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변수를 중심으로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하위영역 각각에 동일한 가중치(equal weight)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동일 가중치 부여는 많은 통합 지수화 과정에서 이용되는 방식이지만, 하나의 차원에 다수의 변수가 속할 경우 통합지수의 불균형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단점이 있다(OECD & EC Joint Research Centre, 2008: 31). 본 논문에서도 특정 하위영역에 보다 많은 측정지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지수화를 하고, 각 하위영역의 지수를 다시 정규화하여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하위분면 지수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각 하위영역과 하위분면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받는다.[57]

## 2. 분석자료

2장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 사회의 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의 질 이론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유럽 국가들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바탕으로 조사되고 있는 지표가 주로 제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의 질 수준을 OECD 국가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연금·사회·교육 관련 보고서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는 모든 국가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Eurostat의 자료를 통해 보완한다. 이에 더불어서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ILO)등의 자료도 이용한다. 마지

57) 대부분의 행복지표는 구성지표를 가중 합산하여 단일 수치를 얻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에 대비되는 방식의 하나가 HDI이다. HDI는 세 하위영역-삶, 교육, 소득의 기하평균(geometric mean) 값을 이용하여 지수를 계산한다(UNDP, 2011).

막으로,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을 위해서는 국제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와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tudy)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들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 이론틀에 기반한 변수 선정을 시도하며,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변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변수를 제시하며,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한다.

## 제 3절. 사회의 질 하위분면의 측정과 지수화[58]

### 1.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측정과 지수화

#### 1)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측정

(1) 재정적 자원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첫째 하위 영역은 재정적 자원에 관한 것으로, 이 영역은 다시 소득충분성(income sufficiency), 소득보장성(income security)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소득충분성은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소득보장성은 질병, 실업, 퇴직 등 소득상실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각각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장하는 정도에 대한 것이다.

첫째, 소득충분성의 세부 영역은 건강, 음식, 주거, 피복과 같은 필수적인 재화의 소비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다. 사회구성원의 소득 대부분이 필수적 생활을 영위하는데만 지출되면, 사회성원은 자기실현을 할 자원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소득에서 필수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을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필수 소비지출 수준은 가구소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van der Maesen(2009)은 소득 하위 60%의 집단을 대상으로 필수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서는 대체로 가구지출 수준에 대한 자료는 각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는데, UN의 목적별 개인 소비 분류(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COICOP) 체계에 따른 값을 이용하고자 하였다.[59]

---

58) 제 3절에서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각각에 대한 측정과 지수화를 다룬다. 본문에서는 측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주로 논하고, 세부영역과 측정지표의 구체적인 출처 그리고 측정연도는 〈부록 3-1~4〉에, 이를 통한 측정값은 〈부록 4-1~4〉에 제시한다. 다만, 여러 출처에서 종합한 자료와 논의가 필요한 자료는 본문에 측정값을 제시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의 자료는 가구소득수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고 총소비지출 중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제공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소득 3분위 집단에서 가구소비지출 대비 필수소비지출 비율을 이용하고, 필수소비지출 영역은 보건, 음식, 주거(광열 포함), 피복에 대한 지출을 측정하였다.[60]

〈표 2-1〉 소득1분위, 3분위 집단의 필수소비지출 비중(가구소비지출 대비)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1분위 | 49.80 | 47.20 | 58.20 | 67.00 | 57.01 | 55.01 | 57.64 | 58.40 | 60.04 | 65.30 | 53.85 | 59.97 |
| 3분위 | 45.72 | 45.60 | 49.45 | 58.29 | 49.25 | 48.60 | 50.95 | 51.00 | 54.49 | 54.85 | 45.00 | 57.17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1분위 | 50.91 | 50.76 | 62.60 | 47.19 | 52.12 | 52.00 | 66.90 | 61.80 | 55.33 | 55.41 | 58.76 | 67.40 |
| 3분위 | 44.17 | 38.28 | 52.35 | 44.14 | 51.20 | 46.49 | 55.40 | 57.00 | 52.17 | 48.82 | 47.50 | 57.80 |

자료: 각 국가들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유럽연합 국가(스위스 제외): Eurostat, Household Budget Survey(2005년)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탈리아는 1999년 값을 이용하였음.
2) 호주: 호주통계청, Australia Household Expenditure Survey(2003~4)을 이용함.
3) 캐나다: 캐나다통계청, Spending patterns in Canada(2005) 보고서를 이용함.
4) 일본: 총무성 통계국 통계조사부 소비통계과, 가계조사연보, 2004년을 이용함.
5) 한국: 통계청,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전국, 2인이상), 2005년 4분기 자료를 이용함.
6) 뉴질랜드: Household Economic Survey(2004)을 이용함. 1분위는 소득10분위 중 1분위와 2분위의 평균값이며, 3분위는 5분위와 6분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음.
7) 스위스: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2006~2008)를 이용함.
8) 미국: Consumer Expenditure Survey(2005)를 이용함.

둘째, 소득보장성 세부 영역은 생애주기 사건이 가구수준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자격조건부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다. 이 세부영역은 실업, 장애, 노령연금, 사회부조, 유족급여 등의 사회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어느 정도인지가 관심사이다(Keizer, 2004).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소득 중단, 실업, 퇴직, 아동출산에 따른 휴직과 같은 생애주기적 사건(biographical events)은 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빈곤에 처할 위험을 높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생애주기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각각의 사회

59) COICOP의 세부지출 분류는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l=5&Lg=1를 참고.

60) 전체 지출 중에서 필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통과 통신관련 지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한국의 소득3분위 집단에서 교통과 통신 관련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보장제도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빈곤 위험의 확률을 일부 대리할 수 있다.[61] 소득대체율 만을 이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 급여의 기간, 급여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여기간, 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등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62] 생애주기 사건에 대해서는 실업과 퇴직을 빈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생애주기적 사건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고, 공적연금제도와 실업급여제도의 소득대체율 자료를 이용한다.

먼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2005c: 52; 2007b: 35; 2009a: 121)의 평균소득자의 순소득대체율을 이용하여, 3개 년도의 평균값을 계산한다.[63] 많은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중후반에 연금개혁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간 평균값을 이용한다.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OECD의 Benefits and Wages 자료에서 순소득대체율 자료를 이용한다(OECD, 2011b).[64] 이 자료는 순소득대체율과 총소득대체율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순소득대체율의 경우 조세-급여 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순소득대체율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는 60개월의 실업 기간에 걸친 소득대체율의 평균치이며, 여기서는 네 가지 가구 유형의 사회부조 급여를 포함한 평균소득대체율 자료를 이용한다.

소득보장성 세부영역의 둘째 지표는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조건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이는 사회보장 급여의 지급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급여가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 및 세제 이전 전후 빈곤율 감소 수준을 통해서 각

---

61) 예를 들어 Zaidi, Grech and Fuchs(2006)는 각국의 중위소득자의 연금급여 수준을 '연금제도의 관대성'으로 정의하고, 연금제도의 관대성과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62) Scruggs and Allan(2006)는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급여의 관대성과 빈곤수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면서, Esping-Andersen(1990)의 탈상품화 지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급여관대성에 대한 지표를 구성하고, 세 가지 종류의 급여(실업급여, 상병급여, 연금급여)와 빈곤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02년까지만 구성되어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63) 남녀 소득대체율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는 남성 소득대체율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이에 해당한다.

64) 이 자료는 총소득대체율과 순소득대체율의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순소득대체율의 자료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연구에서는 순소득대체율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는 총소득대체율 자료가 국가마다 다른 조세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종 사회이전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OECD의 사회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Statistics)의 2000년대 후반 이전전후 빈곤율을 바탕으로(OECD, 2010a), 사회보장이전의 빈곤감소율을 계산하였다.

〈표 2-2〉 2000년대 후반 빈곤율(중위소득 60% 기준)과 빈곤감소율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이전전 빈곤율 | 31.71 | 32.31 | 34.12 | 29.53 | 24.51 | 33.79 | 37.60 | 35.56 | 38.58 | 30.79 | 33.90 | 37.70 |
| 이전후 빈곤율 | 21.73 | 12.84 | 16.29 | 19.38 | 13.38 | 15.60 | 13.50 | 14.79 | 17.75 | 12.21 | 23.30 | 19.90 |
| 빈곤감소율 | 31.47 | 60.26 | 52.27 | 34.37 | 45.41 | 53.83 | 64.10 | 58.41 | 53.98 | 60.35 | 31.27 | 47.21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이전전 빈곤율 | 32.63 | 23.08 | 30.97 | 28.13 | 25.50 | 27.39 | 32.53 | 31.04 | 29.59 | 22.11 | 34.91 | 31.73 |
| 이전후 빈곤율 | 21.70 | 20.59 | 15.59 | 13.11 | 19.00 | 13.32 | 18.52 | 20.61 | 16.41 | 16.07 | 18.39 | 24.40 |
| 빈곤감소율 | 33.50 | 10.79 | 49.67 | 53.39 | 25.49 | 51.37 | 43.07 | 33.60 | 44.55 | 27.32 | 47.32 | 23.10 |

자료: OECD(2010a),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2000년대 후반).
주: 아일랜드는 2000년대 중반임.

(2) 주거와 환경

주거와 환경의 영역은 주거안정성, 주거조건, 그리고 사회적·자연적 환경조건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주거안정성 세부 영역은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한 사람의 비율과 감춰진 가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이론 논의의 초반에는 주거안전성의 세부영역은 주택보조(housing allowance)를 받는 사람의 비율과 공공주택(social housing)의 대기자 비율로 측정할 것이 제안되었다(Keizer, 2004). 주거안전성의 영역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사회의 질의 지표 설정에서도 논란거리의 하나이다(van der Maesen, 2009: 16).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자가소유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자가소유(home ownership)는 개인의 안녕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차원으로 기능하고, 임대료의 변동으로부터 소유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주택의 자산가치는 가구의 부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OECD, 2011a). 그러나 단순히 자가소유비율 만을 이용하는 것은 각국의 다양한 주거정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OECD 국가에서의 상이한 자가소유비율은 주택임대료에 대한 보조,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 주택임대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자가소유비율은 복지국가의 주거정책의 방향이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Kemeny, 1981;2006; Bergh & Bjørnskov, 2011). 심지어

자가소유비율은 인구고령화의 영향도 받는다(Andrews & Sánchez, 2011). 따라서 주거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가소유비율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이용자의 비율, 민간임대주택 이용자의 비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van der Maesen(2009)은 주거비용의 부담 가능성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과다한 주거비용은 가구가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고, 높은 주거비용은 가구의 물질적 안녕과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한다. 따라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가구지출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제로 OECD(2007a)는 주거비용을 평등지표(equity indicators)의 하나로 보고, 가구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OECD의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를 이용하여, 가구 총소비지출에서 주거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한다(OECD, 2010b). 이 때 주거관련 지출은 실질임대료와 귀속임대료(imputed rents), 주택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 수도 및 광열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표 2-3〉 자가소유비율과 가구소비지출 중 주거관련지출비율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자가소유비율[1)] | 69.50 | 58.45 | 72.98 | 68.90 | 66.90 | 72.98 | 61.73 | 53.30 | 76.15 | 88.30 | 77.90 | 72.75 |
| 주거관련지출비율[2)] | 19.24 | 21.01 | 23.60 | 23.19 | 27.14 | 25.01 | 24.18 | 24.17 | 19.49 | 18.93 | 20.44 | 20.42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자가소유비율 | 60.90 | 55.60 | 74.15 | 65.85 | 49.93 | 84.08 | 74.65 | 83.40 | 68.80 | 44.30 | 71.80 | 68.70 |
| 주거관련지출비율 | 24.57 | 17.59 | 22.53 | 22.19 | 20.38 | 20.20 | 14.36 | 16.71 | 26.74 | 23.57 | 19.93 | 18.71 |

자료: 1) Eurostat(2012), 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tenure status, type of household and income group (Source: SILC) [ilc_lvho02] 외 각국 통계자료.

2) OECD(2010b),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주: 1) 유럽연합 국가: Eurostat(2012)의 (2005-8년 평균값을 이용함.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2007-8년 평균값, 독일: 2005년, 스위스: 2010년).

2) 호주와 캐나다: Andrews and Sánchez(2011: 9). 호주: 2003년, 캐나다: 2004년.

3) 일본: Japan Statistical Yearbook-> Chapter 18 Housing and Estate를 이용함 (http://www.stat.go.jp/english/data/nenkan/1431-18.htm)

4) 한국: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년의 자가점유비율을 이용함.

5) 미국: Census Bureau, Housing Vacancies and Homeownership 자료를 이용함(2004-7년 평균값).

6) 뉴질랜드: Statistics New Zealand, Home ownership 자료를 이용함(2006년)

둘째, 주거조건 세부영역은 가구구성원 1인당 사용하는 면적과 불충분한 생활여건에 처한 가구비율로 측정한다. 기본적인 위생과 주거기능의 결핍, 과밀거주와 같은 열악한 주거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OECD, 2011c). 또한 열악한 주거의 질은 가구 내 폭력이나 아동의 낮은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09b). 열악한 주거의 질은 민주주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 영향도 미친다(Glaeser & Sacerdote, 2000).

주거조건의 변수는 가구구성원당 주거면적의 변수를 OECD(2011a)의 1인당 방의 수 자료로 대체하여 이용한다.[65] 다음으로 불충분한 생활여건에 처한 가구의 비율은 OECD, Better Life Index의 주거조건 지표를 이용하는데, 이 자료는 집안 내에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다(OECD, 2011d).

셋째, 사회적·자연적 환경 조건 세부영역에서 사회적 환경 조건은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자연적 환경 조건은 오염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한다. 지표로는 1만명당 범죄 공격을 당한 사람의 수와 평균 이상의 오염률을 보이는 보이는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이용한다.

범죄 공격을 당한 사람의 수와 관련하여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의 범죄통계 자료를 이용한다(UNODC, 2011). 이 자료에서 10만명당 범죄피해율과 10만명당 범죄사망률의 두 지표를 이용한다. 범죄피해율은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가져오는 공격을 당한 사람의 수를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추행/성폭력, 위협, 범죄로 인한 사망 등은 제외된다.[66] 이 지표가 범죄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10만명당 범죄로 인한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범죄사망률의 지표를 추가한다.

환경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주거조건과 비슷하게 Eurostat에서는 소음, 오염과 같은 조건에 처한 사람의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67] 그러나 지역적 제한으로 인해 이 자료를 사

---

65)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ion)의 Eurostat에서는 '소득, 사회적 포용과 생활조건'에서 주거조건 등을 포함한 생활조건과 거주환경 등을 포함한 물질적 결핍의 정도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소득과 주거조건에 대한 통계틀(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의 질 이론이 유럽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표들 중에서는 이와 같이 유럽연합 내에서는 활용가능한 지표들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속성을 가진 지표로 대체한다.

66)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의 자료에서 범죄피해율(Assault ratio)은 경찰에 신고된 사건수이다. 성적 폭력(sexual violence), 강도, 납치 등의 범죄는 별도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가별 편차가 지나치게 큰 관계로 이용하지 않는다. 한편, 범죄율과 관련하여 영국은 세 개 지역(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계산값이다.

67) Eurostat에서는 '이웃이나 도로로부터 소음을 경험하는 비율'과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험자의 비율'을 보고하고 있다

용하기 곤란하다. 이렇듯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자료가 산재되어 있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OECD(2011a)는 $PM^{10}$오염도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건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대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68]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세계은행의 $PM^{10}$ 오염도 자료를 이용한다(The World Bank, 2011).[69] 이 자료는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측정한 값으로, 거주인구수를 반영한 값이다.

(3) 건강과 돌봄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세 번째 하위영역은 건강과 돌봄에 관한 것으로, 건강급여의 보장성, 건강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돌봄서비스의 적절성을 세부 영역으로 두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안전성 세부 영역은 법정 또는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여기서는 OECD의 보건통계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민간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포괄성을 측정한다(OECD, 2011e).[70]

둘째, 건강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세부영역은 건강서비스가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1만명당 의사수, 병원까지의 평균적인 이동시간, 응급차량의 평균 도착시간의 지표를 이용한다. 인구당 의사수는 OECD의 보건통계에서 1천명당 의사수를 이용한다(OECD, 2011f).[71]

---

68) PM-10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69) OECD(2011a)는 PM 오염도가 국가 간 비교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자료는 대기 오염 자료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염에 동등하게 노출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거주하거나 일하는 공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생활습관 등에 따라서 대기오염에 다르게 노출될 수 있다.

70) 사회경제적 안전성에서 자원의 적절성을 측정할 때에는 사회적 자원의 제공자를 어디까지로 보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자원의 제공자를 국가, 자선을 포함한 민간제도(Private institutions), 가족과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들(social networks)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eizer, 2004). 자원의 제공자를 순수하게 국가로만 보는 것은 사회 전체의 자원 흐름의 일부만을 본다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비공식적 지원까지를 포함할 때에는 자원 제공의 비연속성 문제가 대두된다. 건강보험의 포괄성 측정에서 자원제공자의 범위 문제는 더 크게 대두된다. 예들 들어, 건강급여의 제공자를 공공영역 또는 공공보험으로만 한정할 경우에 미국의 건강보험 포괄성은 28.5%에 그치지만, 민간보험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85.2%로 상승하게 된다(2008년 기준).

71) OECD의 보건통계에서 활동의사(Practising physicians)의 수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Professionally active physicians의 수이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의 수이다. Professionally active physicians에는 인턴 등이 포함되며, 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에는 해외 취업 중인 의사수가 포함된다(OECD, Health Data 2011, 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 참고).

두 번째 지표와 세 번째 지표는 보건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값이다. 병원까지의 평균적인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European Commission(2011)은 보건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개념을 많이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수용능력을 측정하는 변수가 통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서비스 수용능력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 인구 1천명당 병상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자료는 OECD의 보건통계에서 1천명당 병상수를 이용한다(OECD, 2011f).[72]

셋째, 보호서비스의 적절성 세부 영역은 돌봄활동에 이용되는 평균시간으로 측정한다. 돌봄서비스는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급주체, 돌봄서비스를 받는 집단,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돌봄서비스의 주된 수행자 등은 돌봄서비스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장치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Keizer, 2004). 이 맥락에서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OECD의 사회지출통계에서 GDP 대비 노령·장애·가족관련 서비스 급여 지출 비중을 이용한다(OECD, 2010c).

(4) 일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네 번째 하위영역은 일에 관한 것으로, '고용안전성'과 '노동조건'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고용안전성 세부 영역의 측정지표는 모두 네 개가 제시되는데(van der Maesen et al., 2005),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고용조건의 변화에 대한 사전 고지기간의 길이와 같은 고용보호 수준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비정규직이나, 불법적 고용의 비율과 같은 고용형태에 대한 것이다.

고용보호 수준과 관련된 첫째 지표는 노동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변경하기 전 사전 고지기간이며, 둘째 지표는 노동계약의 종료 전 고지기간이다. 사회의 질 논의에서 고용보호는 고용보호의 경직성에 주목하기보다는 해고과정에서 사전 대처할 여지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가에 더 주목한다. 사전 통지는 재취업 시의 임금 감소를 예방할 수 있고, 실업의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Nord & Ting, 1991). 그러나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하기에 곤란하므로, 여기서는 OECD의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Employment and Labour Market

72) 병상수는 의료체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1.53배이지만, 의료 인력은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이미 병상수에서는 공급과잉이 확인된다(이진석, 2012).

Statistics)의 고용보호입법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EPL) 중 2단계 값을 이용한다(OECD, 2010d). 이는 정규고용자에 대한 해고과정의 엄격함, 비정규고용자에 대한 해고 과정의 엄격함과 집단 해고(collective dismissals)의 엄격함의 세 가지 항목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것이다.[73]

〈표 2-4〉 근로시간 형태와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국가별 정규직 비율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정규직비율 (근로시간)[1)] | 76.04 | 84.11 | 81.58 | 81.53 | 82.85 | 88.61 | 86.82 | 79.01 | 93.42 | 96.96 | 80.75 | 85.75 |
| 정규직비율 (고용계약)[2)] | 95.26 | 91.03 | 91.35 | 87.15 | 90.93 | 83.94 | 85.44 | 85.95 | 88.64 | 92.84 | 93.94 | 87.25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정규직비율 (근로시간) | 81.73 | 91.46 | 86.78 | 64.72 | 78.22 | 79.13 | 90.37 | 90.27 | 86.04 | 74.81 | 76.77 | 87.12 |
| 정규직비율 (고용계약) | 86.14 | 71.69 | 94.16 | 83.38 | 90.60 | 90.38 | 78.98 | 67.85 | 83.77 | 87.10 | 94.29 | 95.79 |

자료: 1) OECD(2010f), Labour Market Statistics: Full-time part-time employment - common definition: incidence.
2) OECD(2010e), Labour Market Statistics: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 incidence.

주 1) 근로시간 기준은 총고용자 중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을 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고용계약 기준은 고용계약의 형태가 무기계약인 비율을 의미한다.
2) 고용계약에 따른 정규직 비율에서 호주는 2004, 2006년의 평균값임. 미국은 2005년 값임.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노동부(2009), A profile of temporary workers and their employment outcomes(2008년)를 이용함.

고용형태와 관련하여 셋째 지표는 비정규고용계약에 기반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넷째 지표는 불법적인 근로자의 비율을 이용한다. 이 중에서 불법적 고용의 비율은 값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비정규 고용고용계약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표는 긍정적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규직 비율을 이용한다. OECD의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를 이용하여 고용계약의 영속성(permanency)을 기준으로 한 지속고용과 단기고용(temporary

73)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는 해고과정의 복잡함, 사전고지기간과 해고수당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으로(Venn, 2009), 고용보호 수준의 측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호입법지수는 해고 조건을 기준으로 0부터 6까지의 값을 부여하고 있으며, 값이 클수록 해고 조건이 엄격하다. 1단계는 정규고용자에 대한 해고 과정의 엄격함과 비정규고용자에 대한 해고 과정의 엄격함을 단순 합산한 값이며, 2단계는 여기에 집단 해고의 엄격함을 추가하고 각각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다. 정규고용자 5/12, 비정규고용자 5/12, 집단해고 2/12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employment)의 비율을 이용한다(OECD, 2010e).[74] 이때 단기고용은 기간제 근로(fixed-term contracts), 계절 근로(seasonal workers), 파견 근로(temporary agency jobs)를 포함한다.

둘째, 노동조건에 관한 세부 영역은 사회의 노동조건이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세부 영역의 첫째 지표는 부모휴가·간병휴가·상병휴가 등으로 인해서 근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이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다. 지표의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제도의 존재와 이의 실질 이용가능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 가지 제도 각각의 실질 이용 빈도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모휴가에만 집중하면서, 부모휴가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Keizer(2004)는 이용한 제도의 소득대체율 역시 실제로 제도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휴가 기간과 이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OECD의 가족통계 데이터베이스의 부모휴가급여(FRE paid parental leave)의 값을 이용한다(OECD, 2011g). 이 값은 2007/8년 기준으로 부모휴가 기간과 이 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모두 고려하여 '부모휴가 급여의 상근 상당 임금 비율(full-time equivalent)'을 제시한 것이다.

근로조건 세부 영역의 둘째 지표는 피용자 10만 인당 산재사고 발생률이다. 산재사고 발생률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는 대체로 10만 인당 사고사망률과 부상인률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는 사고사망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산업재해관련 자료는 국가별로 다양한 보고형태를 띄고 있어 즉각적인 비교를 곤란하게 한다(김수근·안홍엽·이은희, 2009). 여기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고사망률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유럽연합국가들은 Eurostat(2011a)의 Health and safety at work에서 'Fatal accidents at work' 자료를 이용하고, 호주, 캐나다, 미국은 ILO(2011a)의 Labostat에서 'Rates of occupational injuries'를 이용하고, 한국, 일본, 뉴질랜드는 ILO(2011b)의 Labostat에서 'Cases of injury with lost workdays'를 이용하여 산재사망자수를 임금근로자수로 나눠서 계산하였다.

근로조건 세부 영역의 셋째 지표는 정규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이다. 이는 근로조건이 얼마나 개인의 자기실현이 가능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개인은 자기개발의 시간을 줄일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정규근로자의 주당 근

74) OECD는 정규/비정규고용자(full-time/ part-time worker)의 수와 비율도 보고하고 있는데(OECD, 2010f), 주된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인 경우를 정규근로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로시간 자료의 일부 한계로 말미암아 OECD의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의 연간근로시간 자료를 이용하였다(OECD, 2010g).[75]

(5) 교육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다섯째 영역은 교육에 관한 것으로, 교육의 안전성과 교육의 질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육과 기술 습득은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육의 효과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사회에 있어서는 산업 재구조화의 과정을 원할하게 하는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진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높은 교육수준은 높은 소득과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며(Boarini & Strauss, 2010),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기술은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이라는 형태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온다(Sianesi & Reenen, 2003). 교육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교육수준에 대한 통계는 매우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한 사회의 전반적 교육수준에 주목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 주로 다룬다. 이에 비해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는 교육의 안전성과 질에 주목한다.

첫째, '교육의 안전성' 세부 영역은 학업중단율(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비율)과 교육비 부담 수준(평균 순 임금 대비 수업료의 비율)으로 측정한다.

학업중단률은 특정 연령대 인구 중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이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Eurostat(2011b), Education and training에서는 'early school leaver'의 비율을 보고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18~24세 인구 중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을 말한다. 한편, OECD(2010i)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20~24세 연령대 중에서 고등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school drop-out의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자의 자료를 이용하며, 이 데이터셋에 한국은 값을 보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조사(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이용한다.[76]

---

75) 지표의 원래적 의미를 따지자면 OECD(2010h)의 정규근로자(full-time employee)의 주당근로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캐나다, 일본, 미국의 자료가 부재하다.

76)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20세에서 24세 연령대에서 고등학교 졸업 미만 학력이면서, 현재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사람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계산값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업중단율과 대체로 유사하다. 한국교육개발원(2012)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자의 비율로 계산되는 학업중단율 중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07~9년 기간 동안 1.8이다.

교육비 부담 수준은 국가 평균순임금 대비 수업료의 비중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van der Maesen et al., 2005). 이 지표는 수업료가 가구 소득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각 교육과정의 수업료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교육분야의 공공성을 확인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GDP 대비 공적교육지출 비율을 이용한다. 하지만, 사회의 질 접근에서는 교육비지출이 사회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져오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OECD 교육통계(Education Statistics)에서 가구교육지출 값을 이용하여(OECD, 2011h), GDP 대비 가구교육지출 값을 계산한다. 한편, 이 자료에는 룩셈부르크의 값이 제외되어 있는데, 룩셈부르크는 OECD의 '한 눈에 보는 교육' 보고서(OECD, 2011i)에서 2008년 GDP 대비 교육지출 중 사적지출의 값을 이용하였다.

둘째, '교육의 질' 세부 영역은 졸업 및 수료 후 1년 이내 취업한 학생의 비율을 지표로 이용한다. 여기서는 OECD의 '한 눈에 보는 교육' 보고서(OECD, 2011i)에서 20~24세의 미취학 미취업자 비율을 이용한다(일본의 경우는 15~24세 연령대의 자료이다). 한편, 이 자료에는 한국의 자료가 부재하므로 한국의 자료는 남재량(2011)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 2)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지수화와 결과

이상에서는 사회의 질 이론틀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다음 〈표 2-5〉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각 하위영역과 분면 전체의 지수화를 위한 계산식이다. 제시된 측정지표는 모두 23개이며, 동일한 개념적 지표 속에 측정지표가 2개 존재하는 경우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자가소유비율과 주거관련지출 비율, 범죄피해자수와 피살자수이다. 따라서 각 하위영역의 지수를 구성할 때 이를 고려한다. 한편, 자가소유비율과 주거관련지출 비율, 범죄피해자수와 피살자수는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지수화에서 제외한다.

〈표 2-5〉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지수화 계산

| 하위 영역 | 측정지표 | 변수명 | 변수 성격 | 지수화식 |
|---|---|---|---|---|
| 재정적 자원 | 필수소비지출 비중 | HouSpenD3 | - | Finance= |
|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 NRRPension | + | [T_HouSpenD3 + |
| | 실업급여소득대체율 | NRRUnemp | + | (T_ NRRPension + T_ NRRUnemp)/2 |
| | 빈곤감소율 | PovRedR60 | + | +T_ PovRedR60]/3 |
| 주거와 환경 | 자가소유비율 | HownR | + | HouEnv= |
| | 주거관련지출비율 | HSpenH | - | (T_RoomPP + T_WithoutBP + |
| | 1인당 방의 수 | RoomPP | + | T_PM10)/3 |
| | 기본적 주거조건 미비 | WithoutBP | - | |
| | 범죄피해자수 | Assault | - | |
| | 피살자수 | Homicide | - | |
| | 환경오염 | PM10 | - | |
| 건강과 돌봄 | 건강보험 포괄성 | HCCov | + | HealthCare= |
| | 인구 당 의사수 | Doctor | + | (T_HCCov + T_Doctor + |
| | 인구 당 병상수 | HosBeds | + | T_HosBeds + |
| | 서비스관련 급여 지출 비중 | CareRelateExp | + | T_CareRelateExp)/4 |
| 일 | 고용보호입법지수 | EPL | + | Work= |
| | 정규고용자비율 | PermanencyR | + | (T_EPL + T_PermanencyR + |
| | 부모휴가 급여의 상근 상당 임금 비율 | FREParentalL | + | T_FREParentalL + T_RateofFC + T_WorkingH)/5 |
| | 산업재해 사고사망률 | RateofFC | - | |
| | 연간근로시간 | WorkingH | - | |
| 교육 | 학업중단률 | Dropout | - | Edu= |
| | 가구교육지출비율 | HExpE | - | (T_Dropout + T_HExpE + |
| | NEET 비율 | NEET2024 | - | T_NEET2024)/3 |
|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지수화 | | | | SES= (T_Finance + T_HouEnv + T_HealthCare + T_Work + T_Edu) /5 |

본 분석에서 자가소유비율과 주거관련지출 비율, 범죄피해자수와 피살자수를 지수화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77]

77) 주거와 환경 하위영역의 지표를 모두 고려한 지수화식은 다음과 같다. HouEnv5= [(T_HownR + T_HSpenH)/2 + T_RoomPP + T_WithoutBP + (T_Assault + T_Homicide)/2 + T_PM10]/5. SES5=(T_Finance + T_HouEnv5 + T_HealthCare + T_Work + T_Edu)/5.
자가소유비율, 주거관련 지출 비율, 범죄피해자수와 피살자수는 '주거와 환경' 하위영역 지수(T_HouEnv5)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r=.243, −.108, −.095, −.025). 따라서 이 네 지표를 제외한 '주거와 환경 하위영역 지수(T_HouEnv)'를 구성하고, 변경된 지수를 반영한 '사회경제적 안전성 하위영역 지수(SES)를 구성하여 지표 사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각 하위영역과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지수화의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측정값

| | 재정적 자원 | | 주거와 환경 | | 건강과 돌봄 | | 일 | | 교육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
|---|---|---|---|---|---|---|---|---|---|---|---|---|
| | T_Finance | 순위 | T_HouEnv | 순위 | T_HealthCare | 순위 | T_Work | 순위 | T_Edu | 순위 | SES | 순위 |
| AUS | 0.54 | 15 | 0.95 | 2 | 0.56 | 19 | 0.64 | 13 | 0.52 | 13 | 0.6419 | 13 |
| AUT | 0.99 | 2 | 0.47 | 20 | 0.85 | 5 | 0.7 | 11 | 0.89 | 8 | 0.7791 | 6 |
| BEL | 0.69 | 10 | 0.82 | 12 | 0.69 | 12 | 0.76 | 8 | 0.56 | 12 | 0.7041 | 11 |
| CAN | 0.21 | 23 | 0.93 | 3 | 0.42 | 23 | 0.57 | 17 | 0.7 | 10 | 0.567 | 17 |
| DNK | 0.76 | 6 | 0.83 | 10 | 0.92 | 3 | 0.81 | 7 | 0.52 | 13 | 0.7687 | 8 |
| FIN | 0.79 | 4 | 0.81 | 13 | 0.75 | 10 | 0.73 | 10 | 0.95 | 3 | 0.807 | 4 |
| FRA | 0.73 | 7 | 0.83 | 10 | 0.78 | 8 | 0.88 | 4 | 0.46 | 16 | 0.7378 | 9 |
| DEU | 0.71 | 8 | 0.72 | 14 | 0.79 | 7 | 0.96 | 3 | 0.71 | 9 | 0.7772 | 7 |
| GRC | 0.62 | 11 | 0.26 | 22 | 0.88 | 4 | 0.57 | 17 | 0.11 | 22 | 0.4873 | 19 |
| HUN | 0.71 | 8 | 0.23 | 23 | 0.76 | 9 | 0.82 | 6 | 0.52 | 13 | 0.6071 | 15 |
| IRL | 0.53 | 16 | 0.92 | 4 | 0.59 | 16 | 0.63 | 16 | 0.92 | 6 | 0.7196 | 10 |
| ITA | 0.31 | 21 | 0.55 | 18 | 0.69 | 12 | 0.64 | 13 | 0 | 24 | 0.4377 | 21 |
| JPN | 0.61 | 12 | 0.27 | 21 | 0.93 | 2 | 0.66 | 12 | 0.64 | 11 | 0.6208 | 14 |
| KOR | 0.42 | 19 | 0 | 24 | 0.52 | 21 | 0 | 24 | 0.45 | 17 | 0.2796 | 24 |
| LUX | 0.77 | 5 | 0.86 | 7 | 0.61 | 15 | 0.97 | 2 | 1 | 1 | 0.8407 | 3 |
| NLD | 1 | 1 | 0.6 | 17 | 0.63 | 14 | 0.76 | 8 | 0.92 | 6 | 0.7822 | 5 |
| NZL | 0.29 | 22 | 1 | 1 | 0.44 | 22 | 0.4 | 23 | 0.31 | 19 | 0.4876 | 18 |
| NOR | 0.83 | 3 | 0.86 | 7 | 0.84 | 6 | 1 | 1 | 0.98 | 2 | 0.9015 | 1 |
| PRT | 0.43 | 18 | 0.5 | 19 | 0.59 | 16 | 0.48 | 21 | 0.25 | 20 | 0.4519 | 20 |
| ESP | 0.33 | 20 | 0.61 | 16 | 0.56 | 19 | 0.49 | 20 | 0.09 | 23 | 0.416 | 22 |
| SWE | 0.58 | 14 | 0.91 | 5 | 1 | 1 | 0.86 | 5 | 0.95 | 3 | 0.8608 | 2 |
| CHE | 0.5 | 17 | 0.68 | 15 | 0.74 | 11 | 0.54 | 19 | 0.94 | 5 | 0.6782 | 12 |
| GBR | 0.61 | 12 | 0.84 | 9 | 0.59 | 16 | 0.64 | 13 | 0.21 | 21 | 0.5779 | 16 |
| USA | 0 | 24 | 0.88 | 6 | 0 | 24 | 0.44 | 22 | 0.33 | 18 | 0.331 | 23 |

아래 표와 같이, 이 네 지표를 포함한 주거와 환경 하위영역 지수(T_HouEnv5)와 제외한 하위영역 지수(T_HouEnv) 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r=.917). 하지만, 네 지표를 제외한 하위영역 지수(T_HouEnv)를 이용할 경우에만 이를 반영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지수(SES)와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된다. 따라서 이하 논문에서는 이 네 지표를 제외한다.

〈표〉 주거와 환경 하위영역의 지표 변경과 사회경제적 안전성 지수의 상관관계

| | T_HouEnv5 | T_HouEnv | SES5 | SES |
|---|---|---|---|---|
| T_HouEnv5 | 1 | .917(**) | 0.325 | 0.323 |
| T_HouEnv | .917(**) | 1 | 0.376 | .422(*) |
| SES5 | 0.325 | 0.376 | 1 | .993(**) |
| SES | 0.323 | .422(*) | .993(**) | 1 |

주: ** = p <.01, * = p <.05

재정적 자원의 하위 영역은 필수소비지출 비중, 공적연금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빈곤감소율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소득이 어느 정도로 충분한가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보장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반면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탈리아는 낮은 점수를 보인다.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사회보장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높은 국가들이 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주거와 환경의 하위 영역에서는 자가소유비율, 주거관련지출비율과 같은 주거안전성의측면과[78] 범죄피해자수, 피살자수와 같은 사회적 환경 조건은 최종적인 지수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주거의 조건과 환경적 조건이 이 하위영역을 대표한다. 즉, 적절한 주거의 조건이 확보되고 있는가와 환경적 상태가 양호한가에 주목한다. 이런 이유로 기본적 주거조건이 갖춰진 가구의 비율이 높고,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국가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한국, 헝가리, 그리스, 일본은 낮은 점수를 보인다.

건강과 돌봄의 하위 영역은 한 사회가 어느 정도 건강과 돌봄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포괄성, 인구당 의사수와 병상수, 서비스관련 급여지출 비중을 이용하였다. 스웨덴, 일본, 덴마크, 그리스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은 낮은 점수를 보인다. 순위가 높은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는 인구당 의사수가, 일본은 인구당 병상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순위가 낮은 국가들에서 미국은 건강보험의 포괄성, 캐나다는 서비스 관련 급여지출 비중, 뉴질랜드는 인구당 병상수, 한국은 인구당 의사수가 각각 가장 낮은 국가이다.

일의 하위 영역은 고용안전성과 근로의 조건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한 사회에서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고용보호입법지수, 정규고용자비율, 부모휴가 급여의 상근 상당 임금비율, 산업재해 사고사망률, 연간근로시간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이 하위영역에서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가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한국, 뉴질랜드, 미국, 포르투갈은 낮은 점수를 보인다. 대체로 이 영역의 측정지표가 모두 양호한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반대로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높고, 긴 노동시간을 보이는 국가들이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 순위가 낮은 국가들 중 한국은 고용보호지수만 중간 정도이고 정규고용자비율, 중대재해율, 연간근로시간은 최하위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휴가 급여 비율 역시 낮은 편이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고용보호지수에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휴가 급여 역

78) 자가소유비율, 주거관련지출비율은 재정적 자원의 필수소비지출 비중에서도 그 성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시 가장 낮은 편이다. 포르투갈은 부모휴가 급여 비율과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의 하위 영역은 교육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학업중단률, 가구교육지출비율, 20-24세 인구 중 NEET 비율을 이용하였다. 이 하위영역에서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반면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영국은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국가들은 이 하위영역의 측정지표에서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탈리아는 청년인구의 낮은 활성화가 특징적이며, 스페인, 그리스, 영국은 이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는 국가이다.

각 하위영역의 지수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지수는 한 사회의 재정적 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돌봄, 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가 높은 순위를 보인다. 반대로, 한국,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낮은 순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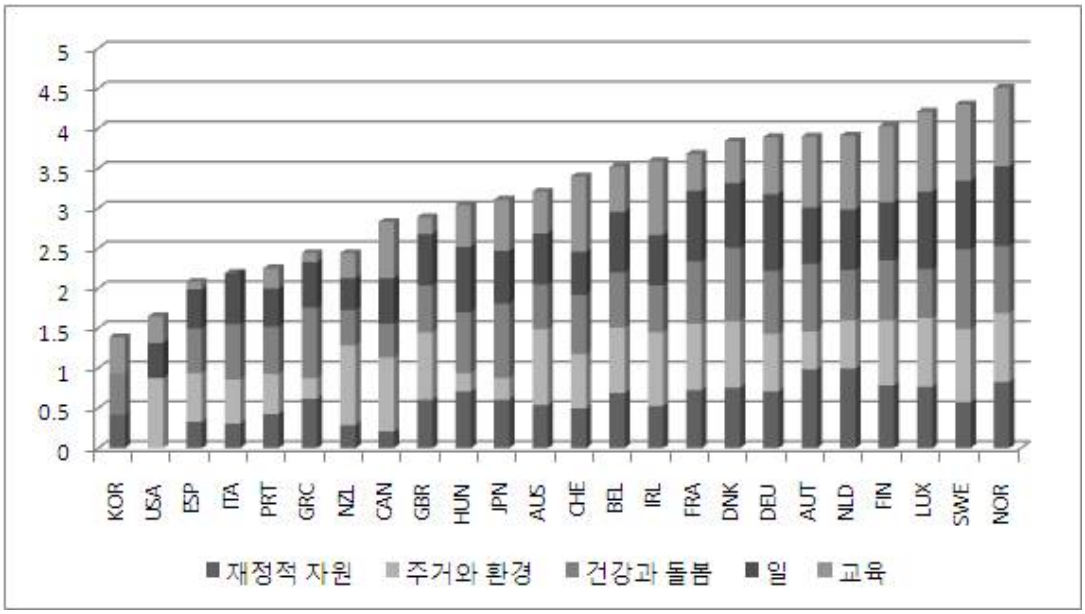
〈표 2-7〉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지수와 각 하위영역지수 간의 상관관계

| | T_Finance | T_HouEnv | T_HealthCare | T_Work | T_Edu | SES |
|---|---|---|---|---|---|---|
| T_Finance | 1 | -0.104 | .696(**) | .628(**) | .546(**) | .775(**) |
| T_HouEnv | -0.104 | 1 | -0.236 | 0.396 | 0.264 | .422(*) |
| T_HealthCare | .696(**) | -0.236 | 1 | .527(**) | 0.297 | .606(**) |
| T_Work | .628(**) | 0.396 | .527(**) | 1 | .467(*) | .851(**) |
| T_Edu | .546(**) | 0.264 | 0.297 | .467(*) | 1 | .791(**) |
| SES | .775(**) | .422(*) | .606(**) | .851(**) | .791(**) | 1 |

주: ** = p <.01, * = p <.05

다음 그림 [2-1]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지수를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별 지수를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는 국가들-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는 다섯 하위영역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낮은 순위를 보이는 국가들은 특정 하위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더라도, 다른 하위 영역이 잘 발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거와 환경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재정적 자원 하위영역과 건강과 돌봄 하위영역은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한국은 주거와 환경, 일의 하위영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지수의 하위영역별 분해

## 2.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과 지수화[79)]

### 1) 사회적 응집성의 측정

#### (1) 신뢰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첫째 영역은 신뢰이다. 신뢰의 영역은 일반신뢰와 특별신뢰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국가 간 신뢰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사회인지 아닌지, 역사적으로 갈등이 심한 국가였는지, 공산주의를 경험하였거나 독재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van der Maesen et al., 2005: 70). 여기서 일반신뢰는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에 대한 정도로 측정한다.

한편, 신뢰와 부패인식 간에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Uslaner, 2001). 제도적 신뢰가 높고

79) 응집성 분면 지표들의 상당수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것이다. 주관적 인식에 대한 국제조사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제사회조사(WVS)의 2005년 wave 자료(조사시기 2005~2008년)이며, 다른 하나는 유럽가치연구(EVS)의 2008년 wave 자료(조사시기 2008~2009년)이다. 두 조사는 주요 설문 문항에 동일한 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 EVS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은 WV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두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하며, 가중치가 부여된 값이다.

부패가 낮은 사회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 경제 성장, 법에 대한 존중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2)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역시 변수로 사용한다.[80]

〈표 2-8〉 국가별 일반신뢰 수준과 부패인식지수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일반신뢰수준 | 46.15 | 36.36 | 34.76 | 42.78 | 76.13 | 65.11 | 27.18 | 38.90 | 21.68 | 20.97 | 38.45 | 30.91 |
| 부패인식지수 | 8.72 | 8.38 | 7.32 | 8.56 | 9.44 | 9.46 | 7.24 | 8.02 | 4.46 | 5.08 | 7.50 | 4.94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일반신뢰수준 | 39.08 | 28.26 | 33.03 | 62.93 | 51.16 | 74.23 | 19.72 | 34.53 | 70.09 | 55.40 | 40.12 | 39.37 |
| 부패인식지수 | 7.32 | 5.06 | 8.44 | 8.78 | 9.50 | 8.64 | 6.40 | 6.82 | 9.24 | 9.06 | 8.38 | 7.38 |

자료: 부패인식지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2),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04-2008).

다음으로, 특별 신뢰 세부 영역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사건의 수, 가족·친구·여가·정치의 중요성/부모에 대한 존경/아동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81]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는 각 사회의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한 국가 또는 둘 이상의 국가 간의 신뢰의 유형을 비교하는데 주로 이용된다(박희봉·이희창, 2009). 따라서 여러 제도의 신뢰수준을 단순 평균하는 것은 제도 신뢰의 측정이 보여주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놓치게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방법을 이용한다. 제도 신뢰의 측정 분야는 정부, 의회, 정당, 군대, 사법체계, 언론, 노동조합, 경찰의 8개 제도 영역으로 한다.

특별 신뢰에 대한 또 다른 지표는 대인 신뢰인데, 주로 인적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은 가능하지만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표 구성에서 제외하였다.[82]

---

80) CPI는 여러종류의 사회조사에서 공적 영역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추출하여 평균을 낸 것으로, 0(높은 부패 수준)부터 10(높은 청렴 수준)의 값을 가진다.

81)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U법과 기본 조약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wikipedia: 검색어 '유럽사법재판소').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보고서에서는 이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이 지표의 타당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van der Maesen et al., 2005: 71).

82) 인적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삶에서 가족과 친구가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여 보았다. 대체로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일본, 한국, 미국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값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낮은 값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타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두 번째 영역은 기타 통합적 규범과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 영역은 이타주의, 관용, 사회적 계약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통합적 규범과 가치의 영역은 사회지표 논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이지만, 비교적 최근 들어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응집성의 한 영역으로서 통합적 규범과 가치의 영역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노대명 외, 2010; Chan et al., 2006; Jenson, 1998).

첫째 세부영역인 이타주의의 측정지표는 주당 자원봉사 시간과 헌혈률이다. 자원봉사의 참여빈도와 참여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당 자원봉사 시간이 가장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OECD(2011a: 177)는 Time Use Surveys database를 이용하여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일평균 시간(분단위 측정)을 제시하고 있다(p. 177). 그러나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가 적고, 또 조사시점이 매우 다양하여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ECD(2009c)의 자원봉사 경험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는데,[83] 이는 갤럽세계사회조사(Gallup world survey)에서 "지난 달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값이다. 이 자료는 자원봉사의 경험에 대해 묻는 것으로 자원봉사의 참여강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대안적 지표가 부재하여 이를 사용한다.

다음 지표는 헌혈률이다. 사회적 응집성의 많은 지표들이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헌혈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는 다른 지표의 측정의 적정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Healy, 2002).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헌혈률에 대한 지표는 개괄적인 수준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사용에 한계가 있다.[84]

둘째 세부 영역은 관용에 대한 것이다. 사회의 질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살펴보면, 많은 국가들에서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van der Maesen et al., 2005: 72). 관용에 대한 첫째 지표는 이민, 다원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을 묻는 것으로 구성한다. 여기서는 “이웃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 ‘다른 인종’과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평균값을 이용한다.[85] 관용에 대한 두 번째 지표는 타인의 정체성·신념·행동·선호에 대한 관용이다. 여기서는 타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며, 동성연애(homosexuality), 이혼(divorce), 남용(abortion)의 세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한다.[86]

---

83) 룩셈부르크는 해당 문항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OECD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84) WHO의 Global database on blood safety에서는 인구1천명당 헌혈자의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85) 일본은 WVS wave 5에 해당내용이 부재하여, wave2(1989-1993)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86) 설문지는 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물으며, ‘전혀 안된다(1)’ ~ ‘항상 된다

셋째 세부 영역은 사회계약에 대한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빈곤에 대한 귀인 인식: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 빈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노인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의 동의여부', ' 소속된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체적 활동을 수행할 의지의 정도' '남녀 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의 실제 측정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본 논문에서 사회적 응집성의 측정에 사용한 두 국제조사에서는 이들 영역에 대한 설문이 없거나 서로 중복되지 않아 비교가 곤란하다. 둘째, 이 영역은 해석에서의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빈자와 노인에 대해서 충분한, 혹은 과도한 사회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사회와 세금 증액 자체에 대한 거부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 즉, 제도에 대한 국민부담 수준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87] 따라서 이 영역은 해석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3)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세 번째 영역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정치활동·자원봉사·자선단체·스포츠단체에 대한 참여 정도', '가족·이웃·친구로부터의 지원', '친구·동료와의 접촉 빈도'를 지표로 이용한다.

〈표 2-9〉 국가별 사회단체 가입률 및 평균참여단체수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가입률 | 67.40 | 24.67 | 50.66 | 59.57 | 77.38 | 54.14 | 29.51 | 26.35 | 13.87 | 10.52 | 38.88 | 20.34 |
| 평균참여개수 | 1.10 | 0.36 | 0.68 | 1.13 | 1.26 | 0.73 | 0.37 | 0.33 | 0.18 | 0.12 | 0.52 | 0.27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가입률 | 44.08 | 49.46 | 48.88 | 68.91 | 73.12 | 62.84 | 9.30 | 13.52 | 46.76 | 39.84 | 26.49 | 69.77 |
| 평균참여개수 | 0.59 | 0.80 | 0.69 | 1.17 | 1.27 | 0.89 | 0.14 | 0.16 | 0.64 | 0.52 | 0.33 | 1.22 |

주: 가입률은 1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평균참여개수는 1인당 평균 참여 개수를 의미함.

첫째, 단체에의 참여 정도는 '예술, 음악, 교육 단체', '노동조합', '정치정당'과 '체육과 여가활동' 단체에의 참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다.[88] 가입률은 최소한 1개 이상의

(10)'로 구성되어 있다.

87) 안상훈(2011)은 사회보장의 주요 세 분야에 대한 정부역할 증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바탕으로 '조세저항'을 측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민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영미형의 조세저항이 오히려 높으며, 이는 조세저항에 국민부담 수준 뿐만 아니라 복지의 수준도 함께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평균참여개수는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평균적인 개수를 의미한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참여의 강도를 고려할 수 있는 평균참여개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둘째, 가족·이웃·친척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OECD(2011a)의 사회적 지원관계(social network support)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지표는 사회적 포용성의 지표로 구성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친구·동료와의 접촉 빈도는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제외하기로 한다.

(4) 정체성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네 번째 영역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 영역은 국가정체성, 지역정체성, 개인간 정체성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가정체성 세부 영역은 국가자긍심과 국기 등 국가 상징에 대한 자긍심의 두 지표로 구성된다. 국가자긍심은 "(응답자의 국가)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한다.[89]

국가 상징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지표는 해당하는 설문 문항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정체성의 다른 두 세부 영역인 지역정체성과 대인관계 정체성에 대한 지표 역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 2)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지수화와 결과

이상에서는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측정지표는 모두 8개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사회적 응집성 분면은 대체로 국제조사를 통해서 이뤄진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그 수준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도 존재한다.

다음 〈표 2-10〉은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하위 영역과 전체 분면의 지수화를 위한 계산식이다. 일반신뢰와 부패인식지수는 동일한 측정지표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고려하였다. 하위영역 중에서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정체성은 단일지표로 구성하였다.

---

88) WVS에서는 적극적 활동 구성원(active member)과 소극적 활동 구성원(inactive member)를 모두 고려하였다.

89) 응답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1='대단히 자랑스럽다', 2='대체로 자랑스럽다', 3='거의 자랑스럽지 않다', 4='전혀 자랑스럽지 않다'이다.

〈표 2-10〉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지수화 계산

| 하위 영역 | 측정지표 | 변수명 | 변수성격 | 지수화식 |
|---|---|---|---|---|
| 신뢰 | 일반신뢰 | GTrust | + | Trust=[(T_GTrust + T_CPI)/2 + T_SPtrust]/2 |
| | 부패인식지수 | CPI | + | |
| | 제도신뢰 | SPtrust | - | |
| 통합적 규범과 가치 | 자원봉사참여율 | Volunteer | + | INorm=(T_Volunteer + T_Tolerance + T_TOthers)/3 |
| | 타인종과 이민자/외국인에 대한 관용 | Tolerance | + | |
| |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용 | TOthers | + | |
|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 단체참여 | Membership | + | SNet=T_Membership |
| 정체성 | 국가자긍심 | NPride | - | Iden=T_NPride |
|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지수화 | | | | SC=(T_Trust + T_INorm + T_SNet + T_Iden)/4 |

최종적으로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각 하위영역과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지수화의 결과는 다음의 〈표 2-11〉과 같다.

신뢰 하위영역은 일반신뢰, 부패인식지수, 제도신뢰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하위영역은 전반적인 사회신뢰 수준을 의미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은 낮은 점수를 보인다. 후자의 국가들은 특히 일반신뢰와 제도신뢰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통합적 규범과 가치 하위 영역은 자원봉사 참여율, 타인종과 이민자/외국인에 대한 관용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용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하위영역 수준은 한 사회가 보여주는 이타주의와 관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스위스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한국,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가 낮은 점수를 보인다. 한국은 사회적 관용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리스, 헝가리는 자원봉사 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와 정체성 하위 영역은 단일지표로 측정하였다. 단체참여의 개수로 측정한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는 높은 값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가 높은 순서를 보인다. 대체로 북유럽 국가와 비유럽의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헝가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낮은 값을 보인다.

국가자긍심으로 측정한 정체성 영역에서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가 높은 값을 보이고, 한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가 낮은 값을 보인다.

사회적 응집성 분면은 공유된 정체성, 가치와 규범이 공유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뢰와 부패인식, 이타주의와 관용

〈표 2-11〉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값

| | 신뢰 | | 통합적 규범과 가치 | |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 | 정체성 | | 사회적 응집성 | |
|---|---|---|---|---|---|---|---|---|---|---|
| | T_Trust | 순위 | T_INorm | 순위 | T_SNet | 순위 | T_Iden | 순위 | SC | 순위 |
| AUS | 0.62 | 10 | 0.91 | 3 | 0.85 | 6 | 0.86 | 4 | 0.8128 | 5 |
| AUT | 0.41 | 15 | 0.53 | 19 | 0.21 | 17 | 0.55 | 14 | 0.4248 | 17 |
| BEL | 0.41 | 15 | 0.66 | 12 | 0.49 | 11 | 0.36 | 20 | 0.4813 | 14 |
| CAN | 0.65 | 9 | 0.87 | 4 | 0.88 | 5 | 0.9 | 3 | 0.8236 | 3 |
| DNK | 1 | 1 | 0.82 | 7 | 0.99 | 2 | 0.61 | 13 | 0.8575 | 2 |
| FIN | 0.79 | 3 | 0.77 | 10 | 0.53 | 9 | 0.72 | 9 | 0.7034 | 7 |
| FRA | 0.4 | 18 | 0.81 | 8 | 0.22 | 16 | 0.48 | 18 | 0.4745 | 15 |
| DEU | 0.41 | 15 | 0.61 | 15 | 0.18 | 18 | 0.1 | 23 | 0.3284 | 20 |
| GRC | 0.07 | 23 | 0.25 | 22 | 0.05 | 21 | 0.84 | 5 | 0.3036 | 21 |
| HUN | 0 | 24 | 0.24 | 23 | 0 | 24 | 0.41 | 19 | 0.1626 | 24 |
| IRL | 0.54 | 12 | 0.59 | 17 | 0.35 | 14 | 1 | 1 | 0.6203 | 10 |
| ITA | 0.2 | 22 | 0.32 | 21 | 0.13 | 20 | 0.53 | 16 | 0.2952 | 22 |
| JPN | 0.56 | 11 | 0.54 | 18 | 0.41 | 13 | 0 | 24 | 0.3773 | 18 |
| KOR | 0.33 | 20 | 0 | 24 | 0.59 | 8 | 0.26 | 22 | 0.2949 | 23 |
| LUX | 0.69 | 7 | 0.62 | 14 | 0.5 | 10 | 0.63 | 12 | 0.6081 | 12 |
| NLD | 0.73 | 5 | 0.84 | 6 | 0.91 | 4 | 0.33 | 21 | 0.7031 | 8 |
| NZL | 0.66 | 8 | 0.92 | 2 | 1 | 1 | 0.91 | 2 | 0.8719 | 1 |
| NOR | 0.87 | 2 | 1 | 1 | 0.67 | 7 | 0.73 | 8 | 0.8177 | 4 |
| PRT | 0.33 | 20 | 0.34 | 20 | 0.02 | 23 | 0.82 | 6 | 0.3767 | 19 |
| ESP | 0.38 | 19 | 0.6 | 16 | 0.03 | 22 | 0.7 | 10 | 0.4287 | 16 |
| SWE | 0.76 | 4 | 0.77 | 10 | 0.45 | 12 | 0.54 | 15 | 0.6297 | 9 |
| CHE | 0.73 | 5 | 0.87 | 4 | 0.35 | 14 | 0.52 | 17 | 0.616 | 11 |
| GBR | 0.44 | 14 | 0.65 | 13 | 0.18 | 18 | 0.66 | 11 | 0.4814 | 13 |
| USA | 0.53 | 13 | 0.79 | 9 | 0.96 | 3 | 0.81 | 7 | 0.7726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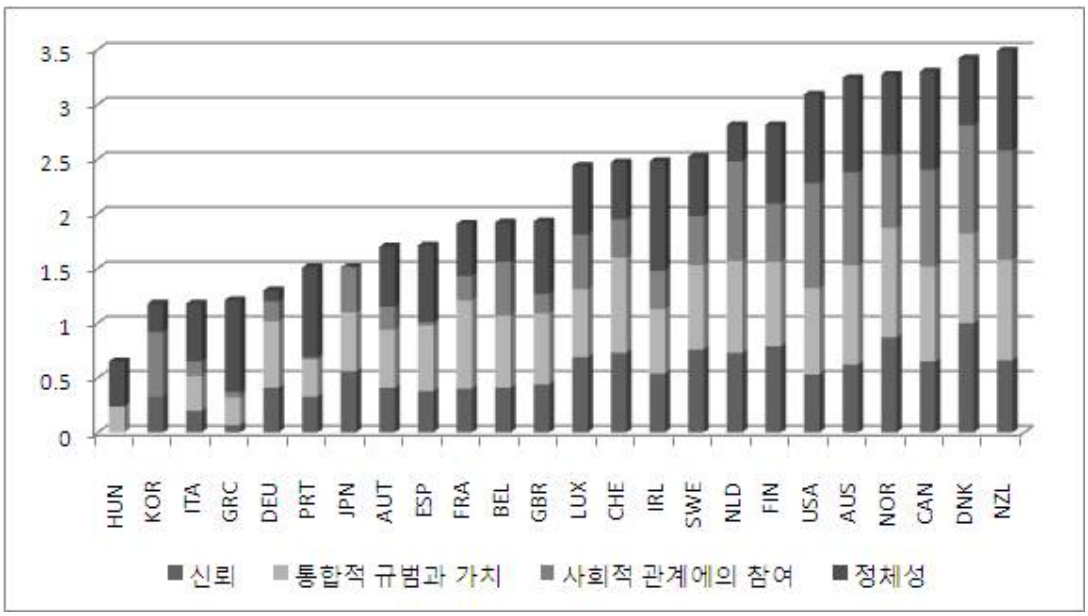
의 정도, 국가정체성의 유지와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로 이 하위영역을 측정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지수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사회적 응집성 분면 지수는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가 높은 순위를 보인다. 반면에 헝가리,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는 낮은 순위를 보인다.

〈표 2-12〉 사회적 응집성 분면 지수와 각 하위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

| | T_Trust | T_INorm | T_SNet | T_Iden | SC |
|---|---|---|---|---|---|
| T_Trust | 1 | .785(**) | .714(**) | 0.145 | .854(**) |
| T_INorm | .785(**) | 1 | .608(**) | 0.287 | .858(**) |
| T_SNet | .714(**) | .608(**) | 1 | 0.202 | .849(**) |
| T_Iden | 0.145 | 0.287 | 0.202 | 1 | .514(*) |
| SC | .854(**) | .858(**) | .849(**) | .514(*) | 1 |

주: ** = p <.01, * = p <.05

사회적 응집성 분면 지수(SC)는 각 하위영역의 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가 사회적 응집성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긍심으로 측정한 국가 정체성은 다른 하위영역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자긍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아일랜드는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에서 국가자긍심은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이와는 반대로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다른 하위영역 수준에 비해서 국가자긍심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사회적 응집성 분면 지수의 하위영역별 분해

위 [그림 2-2]는 사회적 응집성 분면 지수를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별 지수를 보여준다. 여기서도 대체로 높은 사회적 응집성을 보이는 국가들에서 네 하위영역이 고른 발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사회적 응집성을 보이는 국가들 중 헝가리는 신뢰와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국은 이타주의와 관용으로 측정한 통합적 규범과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신뢰와 통합적 규범과 가치가 낮은 수준이며, 그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대적으로 독일, 일본은 국가자긍심이 낮은 편이다.

## 3.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측정과 지수화

### 1) 사회적 포용성의 측정

#### (1) 시민권

사회적 포용성의 첫째 하위 영역은 시민권에 대한 것이다. 이 영역은 다시 정치권, 사회권, 공민권, 경제적 정치적 관계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정치권에 대한 세부 영역은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과 투표율을 통해 측정한다. 첫째 지표인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측정 가능하지 않다. 둘째 지표인 투표율의 자료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의 자료를 이용한다(IDEA, 2011). IDEA는 두 가지의 투표율 자료를 제공하는데, 선거권을 가진 연령대의 사람 대비 투표한 사람의 비율(Voting Age Population Turnout)과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 대비 투표한 사람의 비율(Voter Turnout)이다. 전자의 모수에는 시민권이 없어서 투표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후자가 보다 더 투표율의 정의에 부합한다(OECD, 2011a: 189).[90] 투표율 자료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뤄진 의회 선거의 투표율 평균값을 이용한다.

사회권에 관한 세부 영역은 공적연금 수급률과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이 측정변수로 제시된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각 국가의 연금제도가 연금수급연령 이상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체로 보편적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100%의 수급률을 보인다. 공적연금 수급률에 관한 자료는 ILO(2010)의 세계사회보장보고서(World Social Security Report) 자료를 이용한다(p. 260).[91] 이 자료는 연금수급률을 계산함에 있어 각국의 공적연금수급연령을 고려하고, 실질적

90) 투표율은 국가 간 비교의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OECD, 2011a: 190). 첫째, 투표가 강제성을 가지는 국가가 존재한다(호주, 벨기에의 경우). 둘째, 선거인명부 등록과정에서의 불편함 등이 투표율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91) 이 자료에는 영국과 스위스에 대한 값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연금수급률을 100%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연금수급자가 810만 가구(단독 445만, 부부 365만)이므로, 대부분의 노인들

으로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이 공적연금 수급연령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사회권 세부 영역의 두 번째 지표는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이다. 이 지표의 수준은 돌봄에 대한 역할과 보육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는 대체로 저임금의 서비스 직종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노동시장참가율이 높은 경우 남녀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남녀 임금격차는 OECD(2010j)의 자료를 이용하며, 여기에 자료가 부재한 룩셈부르크는 Eurostat(2011c)의 자료를 이용한다.[92)]

공민권 세부 영역은 무료변론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과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할 것이 제안되었다(van der Maesen et al., 2005). 그러나 첫째 지표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둘째 지표는 대체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주로 남녀 임금격차, 장기실업 등을 이용하는데 이들 각각은 사회권의 세부영역, 노동시장에의 포용 하위영역에 포함되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정치적 관계 세부 영역은 '의회에 임명된 인종적 소수자의 비율'과 '의회, 사적 기업이나 재단의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구성에서 제외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UNData(2011a)의 여성의원 비율 자료를 이용하거나, UNData(2011b)의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 자료를 이용한다. 전자는 의회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의회 및 민간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후자의 자료를 이용한다.[93)] 〈표 2-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자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북유럽 국가는 여성의원비율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은 낮고, 영미권 국가들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

이 어떤 형태든 공적연금을 수급한다고 할 수 있다(Mold & Semmence, 2007). 스위스의 경우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100%로 설정하였다.

92) 그리스, 헝가리의 경우 여성들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을 고려할 때,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피고용자들의 높은 자격수준(high qualified women)의 영향을 받아서 임금격차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11j). 한편, 이탈리아는 2008년에는 1.31%의 임금격차를 보이지만, 2009년에는 11.8%의 남녀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93) 룩셈부르크는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에 대한 값이 부재하여, 여성의원비율 값을 이용하였다.

〈표 2-13〉 여성의원 비율과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여성의원비율 | 25.22 | 33.34 | 34.94 | 20.92 | 37.56 | 38.40 | 13.40 | 32.00 | 12.68 | 9.90 | 13.30 | 13.82 |
|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 | 37.13 | 27.80 | 31.10 | 36.20 | 24.87 | 29.13 | 37.05 | 36.73 | 26.07 | 35.30 | 30.00 | 32.63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여성의원비율 | 8.40 | 11.94 | 21.98 | 37.22 | 30.82 | 37.30 | 21.82 | 34.58 | 46.04 | 25.70 | 18.98 | 15.50 |
|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 | 10.17 | 7.63 | | 25.40 | 37.27 | 30.93 | 33.17 | 31.93 | 31.20 | 28.60 | 33.80 | 42.13 |

자료: 여성의원 비율은 UNdata(2011a),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은 UNdata(2011b).

(2) 노동시장에의 포용

사회적 포용성의 두 번째 하위영역인 노동시장에의 포용 영역은 유급 근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측정한다. 이에 대한 세부 지표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일시적 실업의 비율을 이용한다.

첫째,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이다. 이 지표는 한 번 실업에 빠지게 되는 경우,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OECD(2010k)의 실업 기간에 따른 실업 구분(Unemployment by duration)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실업자 중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였다.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일시적 실업의 비율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에 주목하는 것은 비정규고용의 선택은 각 개인의 선택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OECD(2010l)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자료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총고용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였다. 한국은 김유선(2010)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서비스

사회적 포용성의 세 번째 하위영역은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를 확인한다.

첫째 세부 영역인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는 공공 1차 의료보호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과 이용률을 이용할 것이 제안되었다(van der Maesen et al., 2005). 이미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 건강서비스의 적절성 지표를 이용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접근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이 지표는 사회계급, 성, 인종의 하위 집단에 따라서 접근성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van der Maesen, 2009). 따라서 건강보장의 포괄성 지표보다는 접근성의 개념에 강조를 두고자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총지출 중에서 본인부담의 비율을 이용한

다. 본인부담의 비용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인구집단에 따른 접근성의 정도는 차이가 난다(OECD, 2004: 43). 그러나 국가별로 본인부담률의 차이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전체 의료비 지출 중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2011k)의 건강통계에서 전체 현 의료비 지출 중에서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보건에 대한 경상 공공지출 중에서 일반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한다.

둘째,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세부 영역은 홈리스의 비율, 공공임대주택의 대기기간 등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해당하는 지표를 구성할 수 없어 제외하기로 한다.

셋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이다. 앞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측면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지표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의 교육지표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학교교육 참가율과 고등교육 참가율을 이용한다. OECD(2011i: 41)의 자료에서 25-64세 인구 중에서 3차 교육 이상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을 이용한다.

넷째 세부 영역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다섯째 세부 영역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관련 지표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한다.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돌봄의 욕구 영역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서비스의 제공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된다. 이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역도 대체로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 하위영역에서 접근성의 측면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회의 질 주창자들의 생각이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83).

여섯째 세부 영역은 교통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이다. 이 세부 영역은 공공교통체계에 접근 가능한 사람의 비율과 공공교통체계의 밀집도와 도로의 밀집도에 대한 지표로 구성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접근성의 측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공공교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공공교통체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동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들(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지원(personal transport service)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지표를 비교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The World Bank(2008)의 세계발전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도로집중도(Road density) 자료를 이용한다.

일곱째는 공공/문화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이다. 이 세부 영역의 측정을 위해서 1만명당 공공 체육시설의 수, 1만명당 공공/문화 시설의 수의 지표 사용이 제시된 바 있다(van der Maesen et al., 2005). 이 중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인구당 영화스크린의 수이다. UNESCO(2011)의 Cinema infrastructure 자료를 통해서 10만명당 스크린 수를 이용하며, 여기에 자료가 부재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2011)의 자료를 이용한다.

(4)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네 번째 하위영역은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에 관한 것이다. 이 하위 영역에 대한 값은 각종 사회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영역에 자료는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에서만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사회적 관계의 한 지표로 OECD(2011a)의 사회적 지원 관계(social network support)의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 2)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지수화와 결과

이상에서는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측정지표는 모두 11개이다.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는 각종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영역에서는 국가 간 비교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아래 〈표 2-14〉는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하위 영역과 전체 분면의 지수화를 위한 계산식이다. 서비스 영역에서 도로밀집도와 스크린수의 경우는 교통과 공공/문화서비스의 접근성의 측면을 제시하는데, 이 지표들이 그 성격을 대변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1/2 역가중치를 부여한다.

〈표 2-14〉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지수화 계산

| 하위 영역 | 측정지표 | 변수명 | 변수 성격 | 지수화식 |
|---|---|---|---|---|
| 시민권 | 투표율 | VoterTO | + | Citizenship=(T_VoterTO + T_PensionCoverage + T_GenderPayGap + T_WomenPow)/4 |
| | 공적연금수급률 | PensionCoverage | + | |
| | 남녀임금격차 | GenderPayGap | - | |
| |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 | WomenPow | + | |
| 노동시장에의 포용 | 12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율 | LUnemple | - | LabourMarket=(T_LUnemple + InvolPartW)/2 |
| |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 InvolPartW | - | |
| 서비스 | 일반정부 건강지출 비율 | GovHE | + | Service=[T_GovHE + T_TetiaryEdu + (T_RoadDen +T_Screen)/2]/3 |
| | 고등교육참가율 | TetiaryEdu | + | |
| | 도로밀집도 | RoadDen | + | |
| | 스크린수 | Screen | + | |
|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 사적 도움의 가능성 | SocialNet | + | Network=SocialNet |
|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지수화 | | | | SI=(T_Citizenship + T_LabourMarket + T_Service + T_Network)/4 |

〈표 2-15〉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측정값

| | 시민권 | | 노동시장에의 포용 | | 서비스 | |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 | 사회적 포용성 | |
|---|---|---|---|---|---|---|---|---|---|---|
| | T_Citizenship | 순위 | T_LabourMarket | 순위 | T_Service | 순위 | T_Network | 순위 | SI | 순위 |
| AUS | 0.98 | 2 | 0.17 | 22 | 0.58 | 15 | 0.89 | 5 | 0.6558 | 15 |
| AUT | 0.78 | 15 | 0.7 | 7 | 0.42 | 18 | 0.85 | 10 | 0.6863 | 11 |
| BEL | 0.92 | 4 | 0.18 | 21 | 0.9 | 6 | 0.73 | 17 | 0.6819 | 12 |
| CAN | 0.72 | 18 | 0.62 | 11 | 0.91 | 5 | 0.89 | 5 | 0.7842 | 7 |
| DNK | 0.89 | 7 | 0.75 | 4 | 0.96 | 2 | 0.97 | 3 | 0.8913 | 2 |
| FIN | 0.72 | 18 | 0.56 | 12 | 0.65 | 13 | 0.78 | 13 | 0.6776 | 13 |
| FRA | 0.83 | 11 | 0.24 | 19 | 0.74 | 10 | 0.81 | 12 | 0.6557 | 16 |
| DEU | 0.84 | 10 | 0 | 24 | 0.57 | 16 | 0.78 | 13 | 0.5477 | 18 |
| GRC | 0.73 | 17 | 0.26 | 18 | 0.08 | 23 | 0.36 | 21 | 0.3575 | 22 |
| HUN | 0.86 | 9 | 0.53 | 15 | 0.25 | 21 | 0.5 | 20 | 0.5357 | 19 |
| IRL | 0.62 | 21 | 0.67 | 10 | 0.82 | 8 | 1 | 1 | 0.7767 | 8 |
| ITA | 0.95 | 3 | 0.04 | 23 | 0.3 | 20 | 0.35 | 22 | 0.4119 | 21 |
| JPN | 0.34 | 23 | 0.21 | 20 | 1 | 1 | 0.57 | 19 | 0.5301 | 20 |
| KOR | 0 | 24 | 0.74 | 6 | 0.21 | 22 | 0 | 24 | 0.2371 | 24 |
| LUX | 0.9 | 5 | 0.76 | 3 | 0.73 | 12 | 0.87 | 7 | 0.8162 | 5 |
| NLD | 0.83 | 11 | 0.54 | 14 | 0.74 | 10 | 0.86 | 8 | 0.7421 | 9 |
| NZL | 1 | 1 | 0.69 | 9 | 0.92 | 3 | 0.99 | 2 | 0.9005 | 1 |
| NOR | 0.89 | 7 | 0.97 | 2 | 0.92 | 3 | 0.76 | 16 | 0.884 | 3 |
| PRT | 0.8 | 14 | 0.28 | 17 | 0 | 24 | 0.2 | 23 | 0.3203 | 23 |
| ESP | 0.82 | 13 | 0.43 | 16 | 0.63 | 14 | 0.82 | 11 | 0.6762 | 14 |
| SWE | 0.9 | 5 | 0.7 | 7 | 0.89 | 7 | 0.94 | 4 | 0.857 | 4 |
| CHE | 0.62 | 21 | 0.55 | 13 | 0.38 | 19 | 0.77 | 15 | 0.5784 | 17 |
| GBR | 0.74 | 16 | 0.75 | 4 | 0.8 | 9 | 0.86 | 8 | 0.7877 | 6 |
| USA | 0.69 | 20 | 1 | 1 | 0.46 | 17 | 0.71 | 18 | 0.7159 | 10 |

최종적으로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각 하위영역과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지수화의 결과는 위의 〈표 2-15〉와 같다.

시민권 하위영역에서는 투표참가율로 측정한 정치권,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과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로 측정한 사회권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뉴질랜드,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한국, 일본, 스위스, 아일랜드가 낮은 순위를 보인다. 전자의 국가들은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적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국가들이며, 호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 후자의 국가들은 남녀임금격차가 매우 높고 여성의 정치참여도 낮은 편이다. 더불어 공적연금수급률도 낮은 국가들이다.

시민권의 하위영역은 지표를 제시하면서 이미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남녀 임금격차는 이탈리아가 적은 편인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피고용자들의 높은 자격수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OECD, 2011j). 다음으로 투표율의 경우에는 투표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호주와 벨기에가 이런 경우이다.

노동시장에의 포용 하위영역은 12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의 비율과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는 곧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하위영역에서는 미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독일, 이탈리아, 호주, 벨기에가 낮은 점수를 보인다. 전자의 국가들은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낮고,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도 낮은 특징을 보인다. 후자의 국가들 중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는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높고, 호주는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노동시장에의 포용 하위영역에서도 지표 선정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예컨데,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은 높지만 1년 이상의 장기실업률은 낮은 편이다. 이는 곧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실업률을 중심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포용성 영역의 값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하위영역에서는 일반정부의 건강지출 비율을 통해서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 고등교육참가율을 통해서 교육에의 접근성의 정도, 그리고 도로밀집도와 인구당 스크린 수를 이용하여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확인하였다. 이 하위영역은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실제적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높은 점수를 보이고, 포르투갈, 그리스, 한국, 헝가리가 낮은 점수를 보인다. 높은 순위를 보이는 국가들 중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은 건강지출 중 일반정부 부담비율이 높고, 일본은 고등교육참가율 역시 높은 편이다. 반대로 낮은 순위를 보이는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과 그리스, 헝가리는 고등교육참가율이 낮고, 한국은 건강지출 중 일반정부 부담비율이 낮은 편이다.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하위 영역은 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단일지표로 측정하였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이 높은 값을 보이며, 한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가 낮은 값을 보인다. 이들 국가는 사적 도움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포용성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관계에 포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지수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는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높은 순위를 보인다. 반면에 한국,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는 낮은 순위를 보인다.

〈표 2-16〉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와 각 하위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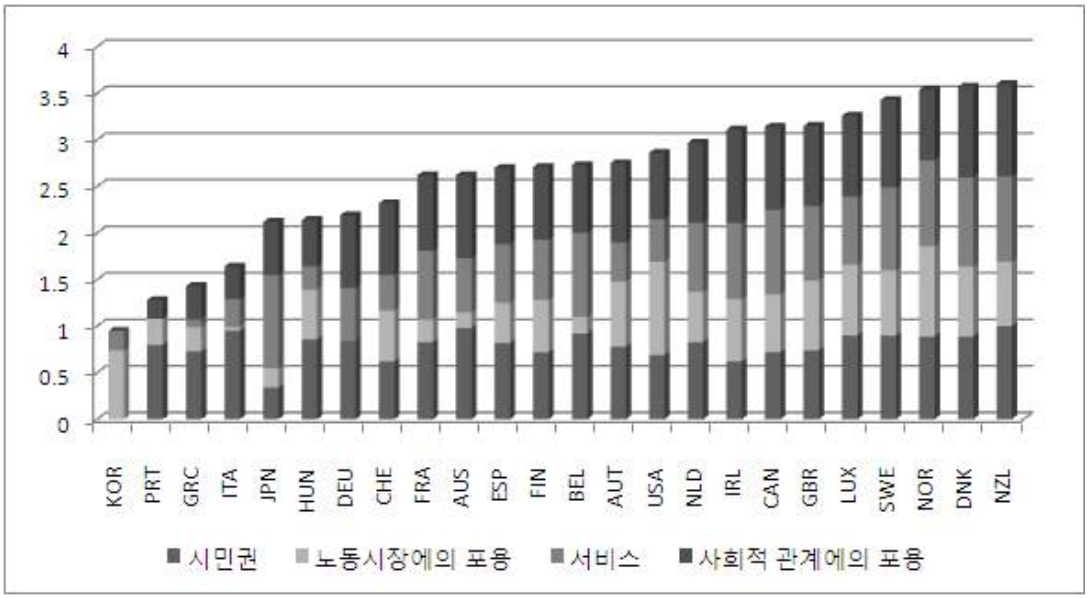
| | T_Citizenship | T_LabourMarket | T_Service | T_Network | SI |
|---|---|---|---|---|---|
| T_Citizenship | 1 | -0.137 | 0.210 | .528(**) | .511(*) |
| T_LabourMarket | -0.137 | 1 | 0.238 | 0.277 | .532(**) |
| T_Service | 0.210 | 0.238 | 1 | .752(**) | .817(**) |
| T_Network | .528(**) | 0.277 | .752(**) | 1 | .913(**) |
| SI | .511(*) | .532(**) | .817(**) | .913(**) | 1 |

주: ** = p <.01, * = p <.05

위 〈표 2-16〉은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SI)와 각 하위영역 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의 하위영역과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하위영역은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권의 하위영역과 노동시장에의 포용 하위영역은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한편, 각 하위영역 지수들 간의 상관관계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는 다양한 사회제도에의 포용의 정도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정한 영역에서는 높은 포용성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노동시장에의 포용에서 두드러진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의 포용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반해서, 다른 하위영역에서의 포용은 낮은 수준이다.[94]

다음의 [그림 2-3]은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를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별 지수를 보여준다. 사회적 포용성 분면도 다른 하위영역과 마찬가지로 네 하위영역에서 골고루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에서 높은 값을 보인다. 한편, 비록 일부 지표가 가지는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특정 하위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더라도 다른 하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은 사회적 포용성 분면 전체에서 낮은 순위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노동시장에의 포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민권 하위영역과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하위영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는 시민권 영역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였으나, 다른 하위영역의 발달은 저조한 결과 낮은 사회적 포용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서비스 영역은 잘 발달하였지만, 다른 하위 영역-특히, 노동시장에의 포용 영역의 발달은 저조한 편이다.

94) 이 부분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률 작성 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장기실업률은 1.25%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업률 계산에 있어, 특히 장기실업률의 경우에는 실업자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한 결과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실업자 중에서 1~3개월의 단기 실업자의 비율이 60.68%(2004년~2008년 평균)로 나타나, 단기실업자의 비율은 매우 높고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2-3] 사회적 포용성 분면 지수의 하위영역별 분해

## 4.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측정과 지수화

### 1) 사회적 역능성의 측정

(1) 지식기반

사회적 역능성의 첫째 하위 영역은 지식기반에 관한 것으로, 이 영역은 다시 지식의 응용, 정보의 이용가능성, 정보이용의 사용자 친화성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세부영역을 통해서 한 사회가 어느 정도 지식기반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첫째 세부 영역은 지식의 응용에 관한 것이다. 이 세부영역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이동이 지식기반에 의해 이뤄지는 정도이며, 이에 대해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을 중심으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집단 간의 관계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지표틀에서의 제안이다(van der Maesen, 2009: 50).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를 변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방향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95]

95) OECD(2010m)는 중등 및 고등교육 수준의 사람들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3차교육 이상의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값은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은 고학력노동자를 많이 요구하는데 비해 교육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임금 프리미엄은 매우 높게 형성된다. 반대로 교육체계가 이미 충분한 고학력자를 공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노동인구가 어느 정도의 교육성취를 보이고 있는가를 통해 그 사회의 지식기반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ILO(2011c)의 노동시장 주요 지표 중 노동인구 중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을 이용한다.[96]

둘째 세부 영역은 정보의 이용가능성이다. 정보의 이용가능성 세부 영역은 문해율, 미디어의 자유로운 이용가능성, 인터넷 이용률로 측정한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 국가는 대부분 문해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97], 정보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측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제성인문해조사(IALS)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van der Maesen, 2009). 그러나 IALS의 조사는 조사시기가 최근이 아니며, 조사대상 국가에서 많은 한계가 있어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98] 따라서 OECD(2010n)의 자료를 이용하여 25~64세 인구 중에서 최소한 중등교육을 마친 사람의 비율을 이용하기로 한다.[99]

〈표 2-17〉 국제성인문해조사 1단계 해당자의 비율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17.0 | | 15.3 | 18.2 | 7.8 | 12.6 | 36.0 | 9.0 | | 32.9 | 25.3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 38.0 | | 10.1 | 21.4 | 8.6 | 49.1 | | 6.2 | 17.3 | 23.3 | 23.7 |

---

급할 경우 임금 프리미엄은 수요공급의 균형에 따라 낮아진다. 한편, 이 변수는 해당국가의 다양한 외부적 변인에 의해서 제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저임금규제, 노동조합의 영향, 집합적 임금협상, 그리고 고학력노동자의 공급구조에 영향을 받는다(OECD, 2011i: 118).

96) 전체 노동인구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5~64세 노동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경우, 25~74세 노동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경우, 30세 이상 노동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97) 문해율과 관련하여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UIS)는 15세 이상 인구의 문해율을 보고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문해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보고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해율은 대체로 읽고 쓰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98) 국제성인문해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뤄진 국제조사로 1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성인문해율을 5단계에 걸쳐서 측정하였다(OECD & Canada, 2000). 보통 전체 성인 중에서 1단계-문해에서 매우 취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을 이용한다. 1단계는 의약품의 설명에서 나타난 정보로부터 아이에게 투약할 약의 양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제시된 값에서 프랑스는 Murray, Kirsch and Jenkins(1998)을 참고하였으며, 한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같은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2001년 조사한 결과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99) 일본의 경우 관련된 통계의 추출방식이 상이하여 값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한 자료를 참고한 결과 분석대상 국가의 최대값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2)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

사회적 역능성의 두 번째 하위 영역은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에 관한 것으로, 이는 다시 고용계약에 대한 통제, 직업 이동의 가능성,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첫째 세부 영역인 고용계약에 대한 통제는 고용계약의 집단적 통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노조조직률과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를 이용한다. 노조조직률은 OECD의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의 노동조합조직률 자료를 이용한다(OECD, 2010o).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는 Venn(2009)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는 주로 2007년을 중심으로 고용보호에 대한 단체 협약의 적용범위와 기본적인 협상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 자료가 부재한 아일랜드는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2011)를 이용한다.

둘째 세부 영역은 직업이동의 가능성이다. 이 영역의 측정지표들은 주로 직업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직업훈련 및 재취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이용한다. OECD(2010p)의 고용과 노동시장 통계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하위 프로그램별로 지출규모와 참가자를 보고하고 있으나, 호주, 일본, 한국,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같은 자료에서 GDP 대비 노동시장 프로그램 중 훈련 관련 지출을 이용한다.

셋째 세부 영역은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일가족 양립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취학 연령대(6~14세) 아동을 둔 여성의 취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OECD(2011l)의 가족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성고용률을 이용하며, 자료가 없는 한국과 노르웨이는 OECD(2011d)의 Better Life Index에서의 모성고용률 값을 이용하는데, 이 값은 25~64세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과 그 값이 유사하다.

(3)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정도

사회적 역능성의 셋째 하위 영역은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 정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다시 정치제도의 개방성과 지원체계, 경제제도의 개방성, 조직의 개방성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세부 영역의 측정지표는 협의(consultation)과정과 직접민주주의(예를 들어, 국민투표)의 존재여부, 주요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대중참여의 사례수, 직장협의회가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의 비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하위 영역의 지표들은 국가 간 비교가 힘들다. 따라서 공공참여의 가능성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 구성에 관한 내용인 이 하위영역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공공참여(civic engagement)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표현하고, 사

회의 정치적 기능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정치적 목소리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하나로, 모든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en, 1999).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는 OECD(2011a)에서 사용한 입법과정에서 협의(consultation on rule-making) 변수이다. OECD는 1998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국가 규제관리체계(regulatory management systems)에 대한 조사를 각국의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의 협의 변수는 조사의 9번 문항에 해당한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고 공개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며, 전체 12.2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사용한 값은 2008년 조사의 결과이다.[100]

(4) 공적 공간

사회적 역능성의 넷째 하위 영역은 역능성 고양을 위한 공적공간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집합행동에 대한 지원 체계와 문화적 고양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집합행동에 대한 지원 체계는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회 및 시위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비교가능한 자료가 부재하다.

문화적 고양의 세부 영역은 모든 문화활동을 위해 배정된 지방 및 전국 수준의 예산 비율, 자발적으로 조직된 문화단체와 활동 숫자, 다양한 형태의 사적인 문화고양 활동을 정기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구성한다. 각 세부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를 구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활동 영역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와 가구지출 중에서 문화활동 지출의 비율을 통해서 측정한다. 문화영역의 지출수준을 이용할 때에는 자료가 어떤 영역까지 문화영역으로 보고 제시되느냐가 중요하다(양혜원, 2011: 18). 여기에서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OECD와 Eurostat, IMF의 세 국제기구에서 문화영역에 대한 지출 자료인데, 세 기구는 모두 국제적인 재정통계 체제에 해당하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를 따르고 있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101]

---

100) 이 변수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가 정부관료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노조, 고용주연합, 지역공동체의 대표, 소비자집단-을 포함한 경우에 대체로 평가가 낮게 나타난다(벨기에, 독일). 둘째, 이 지표는 공식적이고 공개된 협의과정 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로 이것이 잘 기능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한다. 셋째, 해당국가의 문화적, 제도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서로 다른 협의도구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OECD, 2011a: 192).

101) COFOG에서 문화영역에 대한 지출은 모두 여섯가지의 하위 범주를 가진다. 오락 및 스포츠, 문화적 서비스, 방송 및 출판서비스, 종교관련 문화서비스, 오락.문화.종교에 대한 연구개발, 오락. 문화.종교 등에 관한 지출이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문화영역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은 OECD의 국민계정통계에서 문화영역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 규모(GDP 대비)를 이용한다(OECD, 2011m). 여기에는 호주, 그리스의 자료가 부재한데, 이들 국가는 IMF(2011)의 정부재정통계에서 같은 값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문화영역에 대한 가구지출 비율은 OECD의 국민계정통계에서 가구최종소비지출 항목 중 여가와 문화 항목에 대한 지출값 비중을 이용한다(OECD, 2010b). 이 항목은 여가활동비용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도구의 구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5) 대인관계 지원

사회적 역능성의 마지막 하위 영역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세부 영역은 신체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개인 지원 서비스,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지원으로 구성되며, 측정지표는 장애관련 예산 비율, 취학 전/후 아동보호/보육 수준, 주거 및 환경설계의 포용성(인구 대비 만남의 공간 수 등으로 측정)이다.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비율은 OECD의 사회지출통계에서 장애관련 지출(% of GDP) 값을 이용한다(OECD, 2010q).

다음으로, 취학 전후 아동보호 및 보육 수준은 OECD의 가족데이터베이스에서아동보호 및 취학전 교육등록률 자료를 이용한다(OECD, 2011n). 여기에는 0~2세 아동 보호에 관한 스위스 자료가 부재한데, 이는 Eurostat(2011d)의 공식적 아동보호 관련 자료를 이용한다. 등록률은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값과 3세부터 5세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되는데, 여기서는 두 값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및 환경설계의 포용성 세부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간 비교가능한 자료가 부재하다.

### 2)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수화와 결과

이상에서는 사회의 질 이론틀에 입각하여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모두 12개의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다음 〈표 2-14〉는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하위 영역과 전체 분면의 지수화를 위한 계산식이다.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정도 하위영역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의 개방성을 측정하며, 이는 주어진 사회제도로의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이 하위영역에서는 하나의 지표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8〉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수화 계산

| 하위 영역 | 측정지표 | 변수명 | 변수 성격 | 지수화식 |
|---|---|---|---|---|
| 지식기반 | 노동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율 | LFwithTEdu | + | Knowledge=(T_LFwithTEdu + T_PwithSEdu + T_InternetUsers)/3 |
| | 중등교육이상 수료자 비율 | PwithSEdu | + | |
| | 인터넷 이용자 비율 | InternetUsers | + | |
|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 | 노조조직률 | TUdensity | + | LMarket=(T_TUdensity + T_ColAgreCov + T_ALMPtrainEXP + T_MaternalER)/4 |
| | 단체협약 적용률 | ColAgreCov | + | |
| | 노동시장훈련관련 지출 비율 | ALMPtrainEXP | + | |
| | 아동양육여성 노동시장참가율 | MaternalER | + | |
|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 | 입법과정에서의 협의 | OpenCS | + | OSInstitution=T_OpenCS |
| 공적공간 | 문화영역 정부지출 | GovExpCul | + | PSpace=(T_GovExpCul + T_HousExpCul)/2 |
| | 문화영역 가구지출 | HousExpCul | + | |
| 대인관계 지원 | 장애관련 지출 | PubExpIC | + | PRelationships=(T_PubExpIC +T_ERChildCare)/2 |
| | 공식적 아동보호 및 보육수준 | ERChildCare | + | |
|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수화 | | | | SE=(T_Knowledge + T_LMarket + T_OSInstitution + T_PSpace + T_PRelationships)/5 |

최종적으로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각 하위영역과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수화의 결과는 다음의 〈표 2-19〉와 같다.

지식기반 하위영역은 노동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율, 중등교육 이상 수료자의 비율과 같이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인터넷 이용률과 같이 정보에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하위영역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지식기반과 정보에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가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높은 교육수준을 특징으로 하며, 뒤의 네 국가는 중등교육 이상 수료자의 비율과 인터넷 이용자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 반면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들 국가는 교육영역과 인터넷 이용률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 하위 영역은 노조조직률, 단체협약적용률과 같이 노동시장의 통제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와 노동시장훈련관련 지출, 아동양육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각 개인의 역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하위영역은 노동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시민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노동시장을 통해서 각 개인의 역능성을 얼마나 발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덴마크,

〈표 2-19〉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측정값

| | 지식기반 | |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 | | 제도의 개방 및 지원 | | 공적공간 | | 대인관계 지원 | | 사회적 역능성 | |
|---|---|---|---|---|---|---|---|---|---|---|---|---|
| | T_Knowledge | 순위 | T_LMarket | 순위 | T_OSInstitution | 순위 | T_PSpace | 순위 | T_PRelationships | 순위 | SE | 순위 |
| AUS | 0.67 | 12 | 0.3 | 17 | 0.88 | 3 | 0.7 | 12 | 0.3 | 19 | 0.5673 | 8 |
| AUT | 0.58 | 17 | 0.77 | 5 | 0.45 | 15 | 0.66 | 13 | 0.36 | 16 | 0.5633 | 9 |
| BEL | 0.63 | 16 | 0.61 | 6 | 0.13 | 22 | 0.66 | 13 | 0.7 | 4 | 0.5457 | 11 |
| CAN | 0.91 | 2 | 0.3 | 17 | 0.88 | 3 | 0.61 | 15 | 0.12 | 23 | 0.5605 | 10 |
| DNK | 0.8 | 6 | 1 | 1 | 0.44 | 16 | 1 | 1 | 0.99 | 2 | 0.8453 | 2 |
| FIN | 0.83 | 5 | 1 | 1 | 0.69 | 7 | 0.83 | 4 | 0.59 | 10 | 0.7889 | 4 |
| FRA | 0.49 | 19 | 0.54 | 7 | 0 | 24 | 0.71 | 10 | 0.59 | 10 | 0.4665 | 15 |
| DEU | 0.72 | 11 | 0.49 | 9 | 0.13 | 22 | 0.43 | 17 | 0.43 | 14 | 0.4368 | 19 |
| GRC | 0.25 | 22 | 0.25 | 19 | 0.38 | 17 | 0 | 24 | 0 | 24 | 0.1752 | 24 |
| HUN | 0.44 | 20 | 0.11 | 22 | 0.55 | 12 | 0.71 | 10 | 0.43 | 14 | 0.446 | 18 |
| IRL | 0.51 | 18 | 0.35 | 13 | 0.69 | 7 | 0.27 | 23 | 0.24 | 21 | 0.4115 | 21 |
| ITA | 0.18 | 23 | 0.35 | 13 | 0.19 | 21 | 0.3 | 22 | 0.49 | 13 | 0.3025 | 23 |
| JPN | 0.79 | 7 | 0.11 | 22 | 0.48 | 13 | 0.37 | 19 | 0.32 | 18 | 0.4139 | 20 |
| KOR | 0.73 | 10 | 0 | 24 | 0.86 | 5 | 0.35 | 20 | 0.29 | 20 | 0.4463 | 17 |
| LUX | 0.64 | 15 | 0.32 | 15 | 0.31 | 20 | 0.78 | 8 | 0.65 | 6 | 0.5392 | 12 |
| NLD | 0.75 | 9 | 0.5 | 8 | 0.33 | 19 | 0.82 | 5 | 0.66 | 5 | 0.6099 | 7 |
| NZL | 0.65 | 14 | 0.37 | 12 | 0.85 | 6 | 0.96 | 2 | 0.65 | 6 | 0.6965 | 5 |
| NOR | 0.85 | 3 | 0.81 | 4 | 0.58 | 11 | 0.92 | 3 | 0.94 | 3 | 0.8185 | 3 |
| PRT | 0 | 24 | 0.46 | 11 | 0.38 | 17 | 0.44 | 16 | 0.55 | 12 | 0.3648 | 22 |
| ESP | 0.39 | 21 | 0.32 | 15 | 0.48 | 13 | 0.73 | 9 | 0.64 | 8 | 0.511 | 14 |
| SWE | 0.85 | 3 | 0.91 | 3 | 0.93 | 2 | 0.79 | 6 | 1 | 1 | 0.8935 | 1 |
| CHE | 0.79 | 7 | 0.49 | 9 | 0.61 | 9 | 0.43 | 17 | 0.35 | 17 | 0.5338 | 13 |
| GBR | 0.66 | 13 | 0.22 | 20 | 1 | 1 | 0.79 | 6 | 0.61 | 9 | 0.657 | 6 |
| USA | 1 | 1 | 0.15 | 21 | 0.6 | 10 | 0.34 | 21 | 0.2 | 22 | 0.458 | 16 |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이 하위영역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는 특히 노동시장의 통제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덴마크와 핀란드는 노동시장 훈련관련 지출 비율도 높다. 반면에 한국, 헝가리, 일본, 미국은 이 하위영역에서 낮은 값을 보이는데, 동시장 하위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낮은 값을 보인다.

제도의 개방 및 지원은 입법과정에서의 협의 단일지표로 측정하였는데, 영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가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는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 지표는 설문조사의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일부 반영되는데 벨기에와

독일과 같이 정부관료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을 포함한 경우에 평가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OECD, 2011a).

공적공간의 하위영역은 문화영역의 정부지출 수준과 문화영역의 가구지출 수준으로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문화적 고양 수준을 의미한다. 이 하위영역에 포함되는 집합행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변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대체로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미국은 낮은 값을 보인다.

대인관계 지원의 하위영역은 개인의 역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장애관련 사회지출과 공적 아동보호 및 보육수준을 측정하였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그리스,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는 낮은 점수를 보인다. 전자의 국가들은 장애관련 사회지출이 높은 국가, 후자의 국가들은 공식적 아동보호 및 보육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각 하위영역의 지수값을 바탕으로 계산한 사회적 역능성 분면 지수는 한 사회에서 각 개인이 역능성을 발휘할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사회제도가 이를 지원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높은 순위를 보이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낮은 순위를 보인다.

〈표 2-20〉 사회적 역능성 분면 지수와 각 하위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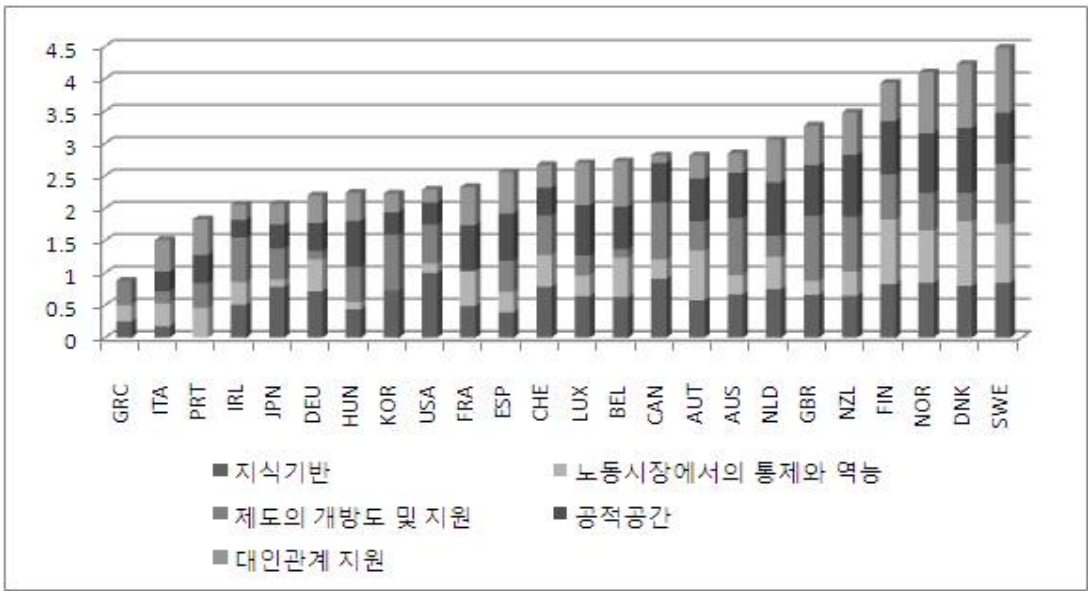
| | T_Knowledge | T_LMarket | T_OSInstitution | T_PSpace | T_PRelationships | SE |
|---|---|---|---|---|---|---|
| T_Knowledge | 1 | 0.208 | 0.402 | 0.362 | 0.133 | .618(**) |
| T_LMarket | 0.208 | 1 | -0.135 | .536(**) | .660(**) | .691(**) |
| T_OSInstitution | 0.402 | -0.135 | 1 | 0.179 | -0.083 | .415(*) |
| T_PSpace | 0.362 | .536(**) | 0.179 | 1 | .775(**) | .854(**) |
| T_PRelationships | 0.133 | .660(**) | -0.083 | .775(**) | 1 | .749(**) |
| SE | .618(**) | .691(**) | .415(*) | .854(**) | .749(**) | 1 |

주: ** = p <.01, * = p <.05

위 〈표 2-20〉은 사회적 역능성 분면지수(SE)와 각 하위영역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분면지수(SE)와 단일지표로 측정한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r=.415)를 보이고 있고, 다른 하위영역 지수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각 하위영역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볼 때, 지식기반의 하위영역,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정도의 하위영역은 다른 하위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두 하위영역이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서 독특한 발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높은 교육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그다지 높은 발달 수준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시장의 통제와 역능의 하위 영역과 제도의 개방도 및 지원정도 하위영역, 대인관계 지원의 하위영역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이들 하위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발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사회적 역능성 분면 지수의 하위영역별 분해

위 [그림 2-4]는 사회적 역능성 분면 지수를 각 하위영역별로 분해한 것이다. 앞의 세 하위분면과 마찬가지로 높은 순위를 보이는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는 다섯 하위영역 값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대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 하위 영역, 제도의 개방 및 지원에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확인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이, 지식기반과 제도의 개방 및 지원에서 높은 값을 보임에 따라 사회의 질의 다른 하위분면과는 달리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제 4절. 소결

### 1. 측정결과의 종합

〈표 2-21〉 국가별 사회의 질 점수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 사회적 응집성 | | 사회적 포용성 | | 사회적 역능성 | | 종합: 사회의 질 | |
|---|---|---|---|---|---|---|---|---|---|---|
|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 노르웨이 | 0.9015 | 1 | 0.8177 | 4 | 0.884 | 3 | 0.8185 | 3 | 3.4217 | 1 |
| 덴마크 | 0.7687 | 8 | 0.8575 | 2 | 0.8913 | 2 | 0.8453 | 2 | 3.3628 | 2 |
| 스웨덴 | 0.8608 | 2 | 0.6297 | 9 | 0.857 | 4 | 0.8935 | 1 | 3.241 | 3 |
| 핀란드 | 0.807 | 4 | 0.7034 | 7 | 0.6776 | 13 | 0.7889 | 4 | 2.9769 | 4 |
| 뉴질랜드 | 0.4876 | 18 | 0.8719 | 1 | 0.9005 | 1 | 0.6965 | 5 | 2.9565 | 5 |
| 네덜란드 | 0.7822 | 5 | 0.7031 | 8 | 0.7421 | 9 | 0.6099 | 7 | 2.8373 | 6 |
| 룩셈부르크 | 0.8407 | 3 | 0.6081 | 12 | 0.8162 | 5 | 0.5392 | 12 | 2.8042 | 7 |
| 캐나다 | 0.567 | 17 | 0.8236 | 3 | 0.7842 | 7 | 0.5605 | 10 | 2.7353 | 8 |
| 호주 | 0.6419 | 13 | 0.8128 | 5 | 0.6558 | 15 | 0.5673 | 8 | 2.6778 | 9 |
| 아일랜드 | 0.7196 | 10 | 0.6203 | 10 | 0.7767 | 8 | 0.4115 | 21 | 2.5281 | 10 |
| 영국 | 0.5779 | 16 | 0.4814 | 13 | 0.7877 | 6 | 0.657 | 6 | 2.504 | 11 |
| 오스트리아 | 0.7791 | 6 | 0.4248 | 17 | 0.6863 | 11 | 0.5633 | 9 | 2.4535 | 12 |
| 벨기에 | 0.6782 | 12 | 0.616 | 11 | 0.5784 | 17 | 0.5338 | 13 | 2.4064 | 13 |
| 스위스 | 0.7041 | 11 | 0.4813 | 14 | 0.6819 | 12 | 0.5457 | 11 | 2.413 | 13 |
| 프랑스 | 0.7378 | 9 | 0.4745 | 15 | 0.6557 | 16 | 0.4665 | 15 | 2.3345 | 15 |
| 미국 | 0.331 | 23 | 0.7726 | 6 | 0.7159 | 10 | 0.458 | 16 | 2.2775 | 16 |
| 독일 | 0.7772 | 7 | 0.3284 | 20 | 0.5477 | 18 | 0.4368 | 19 | 2.0901 | 17 |
| 스페인 | 0.416 | 22 | 0.4287 | 16 | 0.6762 | 14 | 0.511 | 14 | 2.0319 | 18 |
| 일본 | 0.6208 | 14 | 0.3773 | 18 | 0.5301 | 20 | 0.4139 | 20 | 1.9421 | 19 |
| 헝가리 | 0.6071 | 15 | 0.1626 | 24 | 0.5357 | 19 | 0.446 | 18 | 1.7514 | 20 |
| 포르투갈 | 0.4519 | 20 | 0.3767 | 19 | 0.3203 | 23 | 0.3648 | 22 | 1.5137 | 21 |
| 이탈리아 | 0.4377 | 21 | 0.2952 | 22 | 0.4119 | 21 | 0.3025 | 23 | 1.4473 | 22 |
| 그리스 | 0.4873 | 19 | 0.3036 | 21 | 0.3575 | 22 | 0.1752 | 24 | 1.3236 | 23 |
| 한국 | 0.2796 | 24 | 0.2949 | 23 | 0.2371 | 24 | 0.4463 | 17 | 1.2579 | 24 |

2장에서는 사회의 질 이론틀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을 중심으로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 하위분면 별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 19개의 측정지표를,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서 8개의 측정지표를,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 11개의 측정지표를,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 12개의 측정지표를 이용하였으며, 각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18개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먼저 지수화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면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수화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틀이 제안하는 각 하위분면, 하위영역의 규정과 성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가중치 부여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위영역, 하위분면 간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네 하위분면 지수값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회의 질(SQ) 수준을 계산한 결과는 위의 〈표 2-21〉과 같다. 종합적인 사회의 질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네 하위분면 값을 평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첫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에서 사회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는 핀란드가 사회적 포용성에서 평균 수준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네 하위분면에서 대체로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둘째,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영국이 높은 사회의 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앵글로-색슨 국가들 중 상당수가 스칸디나비안 국가 다음으로 높은 사회의 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뉴질랜드는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 높은 사회의 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호주도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는 많은 연구들에서 북유럽 국가와 유사한 복지국가 발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의 질 수준에서도 대체로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미국,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대체로 대륙유럽의 국가들인데, 미국이 낮은 사회의 질 수준을 보이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다른 하위분면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가 대체적으로 중간 수준의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스페인, 일본, 헝가리,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한국이 낮은 사회의 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 헝가리, 한국을 제외하면, 남유럽 국가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일본과 헝가리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다른 하위분면에서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은 이와 반대로 다른 하위분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낮은 수준이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한국은 대체적으로 모든 하위분면에서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네 하위분면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2-22〉와 같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지수

와 사회적 응집성 분면 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r=.308). 그러나 이 두 하위분면 지수는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분면지수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2-22〉 각 하위분면 지수의 상관관계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사회적 응집성 | 사회적 포용성 | 사회적 역능성 |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1 | 0.308 | .569(**) | .561(**) |
| 사회적 응집성 | 0.308 | 1 | .763(**) | .668(**) |
| 사회적 포용성 | .569(**) | .763(**) | 1 | .757(**) |
| 사회적 역능성 | .561(**) | .668(**) | .757(**) | 1 |

주: ** = p <.01, * = p <.05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발달 수준은 북유럽 국가, 대륙유럽 국가, 앵글로 색슨 국가 그리고 남유럽 국가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응집성의 발달 수준은 앵글로 색슨 국가, 북유럽 국가, 대륙유럽 국가 그리고 남유럽 국가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의 발달 수준은 북유럽 국가, 앵글로 색슨 국가, 대륙유럽 국가 그리고 남유럽 국가의 순서를 보인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이 모두 낮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회의 질 발달 수준은 하나의 선형적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사회의 질 수준으로 측정한 사회발달 수준을 그 하위분면 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 개별 국가, 그리고 복지체제에 따라서 상이한 발달 수준이 확인된다.

## 2. 연구의 함의와 한계

2장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을 구체적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간 사회의 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사회지표 운동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삶의 질' 접근이다. 그러나 삶의 질 접근은 무수히 많은 지표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질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한 지수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사회의 질은 복지국가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제시하는 다양한 사회정책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이 복지국가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질은 이론틀로 제시되

었을 뿐 구체적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선진 24개국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의 구체적 측정지표를 제시하고, 그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구체적 측정지표를 제시함에 있어서 지표가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투표율, 남녀임금격차, 장기실업률, 입법과정에서의 협의와 같은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들은 각 국가의 독특한 제도 특성이 반영되는 것들이며, 지표 계산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지표는 많은 국제비교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고, 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지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들에 대한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가중치 부여의 문제가 남는다. 가중치를 부여할 때에는 지표들의 복잡성, 지표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aisana & Tarantola, 2002). 본 논문에서는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하기 위한 가중치 부여 방식을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는 이론틀이 제시하는 각 하위분면과 하위영역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특정 하위영역은 한 개의 단일변수로 측정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위분면 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가중치 부여의 방식을 변경할 필요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본 논문의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남는다.

# 제 3장. 복지국가와 사회의 질

앞서 2장에서는 질적 개념인 사회의 질을 구체적 측정을 통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양적 자료로 전환하였다. 이제부터는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복지국가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의 질이 복지국가의 다양한 맥락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밝히고자 한다.

## 제 1절. 문제제기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은 포괄적 사회발전을 측정하는 개념틀이면서, 동시에 정책 목표로 기능한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각각은 복지국가의 내·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되는 사회정책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좁게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 사회서비스의 확장에서부터, 넓게는 사회투자전략, 사회적 배제에의 대응, 사회적 응집의 제고와 같은 여러 정책 목표를 포괄하고 있으며,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국가가 보여주는 사회의 질 수준은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지국가 수준을 이해함에 있어 사회의 질 접근이 복지국가의 전체적인 수준을 조망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에 그쳤던 사회의 질 수준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지수화하였다. 이제부터는 측정한 사회의 질이 복지국가 수준을 이해하는데 타당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단계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질 발전 수준은 양적 복지국가 수준과 일치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 안전성 보장 수준으로 복지국가를 접근해왔으며, 그 가능성으로서 복지투입과 복지성과를 복지국가 발달 지표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양적 발달은 사회의 질 전반의 발전 수준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의 양적 발달을 표상하는 사회지표들과 2장에서 측정한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지수값을 비교하고, 복지국가의 양적 발달과 사회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다.

둘째, 각 국가별로 사회의 질 발전수준에 유사성과 차별성이 나타나는가? 유사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질 발전수준의 유형은 복지국가 유형론의 구분과 일치하는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각 복지체제는 각기 다른 방향의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여왔다. 정책적

대응의 수단과 방법은 각 복지체제가 보여주었던 발전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Esping-Andersen, 1996: 30-48). 이런 정책적 대응이 각각 고유한 사회의 질 발전수준으로 나타난다면, 사회의 질 발전 수준에 있어서도 복지국가 유형의 구분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수준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이를 복지국가 유형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이 경제적 안전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는 기존 복지국가 접근이 놓치고 있는 한계를 밝히고, 복지국가의 다양한 맥락의 발전 수준을 살펴보는데 있어 타당한 도구틀이 됨을 밝히고자 한다.

복지 투입, 성과 수준과 사회의 질의 관계를 분석함에 앞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구성에는 복지지출 변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공적 자원의 제공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지출 변수의 포함은 당연한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는 건강과 보건 관련 정부지출 비율을 포함하였는데,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회적 역능성 분면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 중 직업훈련 관련 지출과 장애관련 사회지출 비율을 포함하였다. 이런 이유로 복지국가의 양적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각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 간의 관계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일부 복지국가 성과지표들은 사회의 질 측정지표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 성과지표로서 실업률과 고용률은 사회적 포용성 하위분면에서 측정하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r=.498, -.568).

앞서 2장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을 각 하위분면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하위분면 차원에서에 복지국가 지출변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적 영향력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각 하위분면 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하위분면 전체의 속성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제 2절. 분석 방법과 분석자료

### 1. 분석방법

사회의 질 발전 수준의 유형과 복지국가 유형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회

의 질 네 하위분면 수준으로 사회의 질 유형화를 실시한다. 유형화 연구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 방법은 군집분석으로, 이는 명확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체들의 집단을 분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안상훈, 2002). 앞선 2장의 분석에서 각 국가의 사회의 질의 발달수준은 선형적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을 놓고 보았을 때 네 하위분면이 모두 높은 국가와 모두 낮은 국가라는 하나의 선 위에 각 국가들이 위치하지 않는다. 이에 국가별로 네 하위분면이 구성되는 방식에서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서 각 국가가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수준에서 어떤 유형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한다.

군집분석의 방법으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방법론적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Kim, 2004).

첫째, K-평균 군집분석은 연구자가 미리 군집의 개수(K)를 설정하는데, 초기의 군집중앙은 각 사례를 가장 가까운 군집중앙으로 할당함으로써 형성되고, 모든 사례가 분류되어 더 이상 군집중앙이 변하지 않을 때가지 계속된다.

둘째, 위계적 군집분석은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하여 가장 유사한 사례끼리 묶고, 묶은 사례들 중에서 유사한 사례 묶음을 만들어나가면서 결국 하나의 군집으로 묶일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 단계는 위계그림(Dendrogram)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는 유형 분류의 증거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이 구성하는 군집의 개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군집의 구분 및 구분된 군집 간 차이의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의 수를 추정한다. 위계적 군집분석에서는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군집의 수를 추정하거나, Ward's Method를 이용한 fusion coefficient(또는 amalgam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여 급격한 값의 변화 지점에서 군집의 수를 추정한다(Aldenderfer & Blashfield, 1984).

둘째, 군집 구분의 유의함을 확인한다. 확인된 군집에 속한 국가들의 변수 값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의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를 비교하여 유의성을 검증한다.

셋째, 다중비교표를 통해 각 측정변수에서 각 군집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측정변수는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지수이며, 각 군집별로 각각의 하위분면의 발전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한다.

## 2. 분석자료

3장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 지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수준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이 때 사회의 질 수준은 제 2장에서 확인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를 이용한다.

복지국가와 사회의 질 수준과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복지국가 양적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첫째, 복지국가의 투입(input)으로서 사회지출 변수를 이용한다. 둘째, 복지국가의 성과(output)로서 실업률, 고용률, 소득분배율(Gini 계수), 빈곤율을 이용한다.

사회지출 변수는 GDP 대비 사회지출(Socx), 구매력 지수로 전환한 1인당 사회지출(PCSocx)을 이용한다. 다음으로 사회지출의 성격을 구분하여 복지국가 지출 수준을 비교할 것을 제안한 Castles(2002)의 견해를 차용하여, 급여방식으로 현금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을 구분한다. 각각 GDP 대비 현금 사회지출(CashSocx), GDP 대비 현물 사회지출(InkindSocx)을 이용한다. 적극적 사회지출을 강조하는 최근의 정책경향(OECD, 2005b)에서 서비스 지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투자국가 논의에서도 사회서비스 수준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Esping-Andersen et al., 2002; Lister, 2003). 또한 사회서비스에의 지출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인적자본을 고양하고, 예방적 가치재의 선택을 촉진하는 등 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안상훈, 2011). 따라서 복지국가 지출을 현금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지출 데이터는 정책적 개입수준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공적, 그리고 의무적 민간(mandatory private) 지출을 모두 고려한다.

복지성과 변수는 실업률(UER), 고용률(ER), 소득분배율(Gini), 빈곤율(Poverty Rate)의 지표를 이용한다. 복지국가는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때문에 실업률과 고용률은 복지성과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의 분배를 조정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율과 빈곤율 또한 복지국가 개입의 성과를 나타낸다.

다음 〈표 3-1〉은 각 국가의 복지지표 값이다. 앞서 2장에서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들을 2004년에서 2008년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음을 고려하여, 복지지표들도 2004년에서 2008년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사회지출 변수는 2007년까지 자료가 구축되었으므로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의 값을 이용한다. 소득분배율과 빈곤율은 각 년도별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을 중심으로 측정한 값을 이용한다.

〈표 3-1〉 복지지표 측정값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Socx | 16.84 | 27.96 | 26.42 | 16.97 | 27.12 | 25.65 | 29.11 | 27.53 | 20.86 | 22.51 | 15.95 | 26.40 |
| PCSocx | 6081 | 9788 | 8781 | 6139 | 9394 | 8315 | 8931 | 8967 | 5427 | 3985 | 6489 | 7759 |
| CashSocx | 8.15 | 19.11 | 16.13 | 6.81 | 13.52 | 14.98 | 17.63 | 16.78 | 13.59 | 13.78 | 8.50 | 18.20 |
| InkindSocx | 8.34 | 8.20 | 9.16 | 9.84 | 12.08 | 9.76 | 10.57 | 9.87 | 7.13 | 8.42 | 6.81 | 7.66 |
| 실업률 | 4.77 | 4.61 | 7.90 | 6.47 | 4.27 | 7.59 | 8.38 | 9.58 | 9.03 | 7.19 | 4.82 | 7.08 |
| 고용률 | 72.01 | 70.01 | 61.37 | 72.95 | 76.80 | 69.52 | 64.09 | 67.38 | 60.74 | 56.99 | 67.84 | 58.14 |
| 소득분배율 | 0.336 | 0.261 | 0.259 | 0.324 | 0.248 | 0.259 | 0.293 | 0.295 | 0.307 | 0.272 | 0.293 | 0.337 |
| 빈곤율 | 21.73 | 12.84 | 16.29 | 19.38 | 13.38 | 15.60 | 13.50 | 14.79 | 17.75 | 12.21 | 16.85 | 19.90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Socx | 19.04 | 7.43 | 22.59 | 21.22 | 18.29 | 22.89 | 23.05 | 21.39 | 29.02 | 26.80 | 21.28 | 16.31 |
| PCSocx | 5995 | 1774 | 16649 | 7795 | 4863 | 11259 | 5070 | 6201 | 10087 | 10152 | 7276 | 6998 |
| CashSocx | 10.77 | 3.00 | 13.60 | 11.42 | 9.58 | 12.05 | 14.93 | 13.14 | 14.28 | 18.65 | 10.77 | 8.10 |
| InkindSocx | 8.05 | 4.32 | 8.52 | 8.56 | 8.34 | 10.17 | 7.51 | 7.52 | 13.52 | 7.46 | 10.13 | 8.08 |
| 실업률 | 4.21 | 3.45 | 4.69 | 4.24 | 3.90 | 3.50 | 7.50 | 9.65 | 6.66 | 3.95 | 5.02 | 5.13 |
| 고용률 | 69.87 | 63.76 | 63.44 | 73.07 | 74.45 | 76.25 | 67.83 | 64.78 | 74.77 | 78.12 | 72.56 | 71.48 |
| 소득분배율 | 0.329 | 0.315 | 0.288 | 0.294 | 0.33 | 0.25 | 0.353 | 0.317 | 0.259 | 0.303 | 0.342 | 0.378 |
| 빈곤율 | 21.70 | 20.59 | 15.59 | 13.11 | 19.00 | 13.32 | 18.52 | 20.61 | 16.41 | 16.07 | 18.39 | 24.40 |

자료: 1) Socx 관련: OECD(2010c).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2004-2007), public and mandatory private.

2) 실업률, 고용률: OECD(2010r). Labour Market Statistics(2004-8).

3) 소득분배율(Gini): OECD(2010s).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2000년대 후반)

4) 빈곤율: OECD(2010a). Income Distribution: Income distribution: poverty(2000년대 후반), 빈곤율과 Gini 계수는 2000년대 후반의 측정값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8년 측정치이다(단, 호주, 영국: 2007/8년, 덴마크, 헝가리: 2007년, 일본: 2006년, 뉴질랜드: 2008/9년).

주: 현금사회지출(CashSocx)과 현물사회지출(InkindSocx)의 합이 Socx와 불일치하는 것은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지출은 이 두 구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제 3절. 복지국가 지표와 사회의 질의 비교

복지국가의 발전과 성과를 구분 짓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다양한 유형화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화에 사용되는 지표는 멀리는 Wilensky(1976)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양적, 질적 구분점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복지지출 만이 아니라 제도의 구성형태 등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득대체율을 이용하는 것이다(Esping-Andersen, 1990; Allan & Scruggs, 2004). 그러

나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질적 수준을 제외하고 양적 수준에 주목하기로 하는데, 사회의 질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사회의 총괄적 질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3-2〉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와 복지국가 투입으로서 사회지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사회지출 변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사회적 응집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 사회지출 수준과 사회의 질의 상관관계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사회적 응집성 | 사회적 포용성 | 사회적 역능성 | GDP 대비 사회지출 (Socx) | 1인당 사회지출 (PCSocx) | GDP 대비 현금사회지출 (CashSocx) | GDP 대비 현물사회지출 (InkindSocx) |
|---|---|---|---|---|---|---|---|---|
| Socx | .605(**) | -0.085 | 0.219 | 0.258 | 1 | | | |
| PCSocx | .726(**) | 0.295 | .518(**) | 0.376 | .596(**) | 1 | | |
| CashSocx | .424(*) | -0.313 | -0.052 | -0.036 | .926(**) | .502(*) | 1 | |
| InkindSocx | .643(**) | 0.398 | .650(**) | .695(**) | .643(**) | .483(*) | 0.311 | 1 |

주: ** = p <.01, * = p <.05

먼저 사회지출 수준(Socx)과 현금사회지출(CashSocx)은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유의한 관계만이 확인되었다. 사회지출 수준이 높은 대륙 복지국가(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와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안전성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남유럽의 국가들은 사회지출은 높은 편이지만,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1인당 사회지출(PCSocx)은 경제력 수준을 반영한 결과이다. 대체로 앞서의 사회지출 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남유럽의 국가들에서 1인당 사회지출은 높은 편이 아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사회지출이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726). 1인당 사회지출은 사회적 포용성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518).

현물사회지출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각각 r=.643, .650, .695). 현물사회지출(InkindSocx)은 OECD의 사회지출통계에서 건강, 가족, 주거, 노령 관련 지출에서 확인된다.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현물서비스는 사회서비스로 명명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는 업종의 특정상 많은 고용을 요구하므로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통해 양육과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한다. 사회서비스 지출이 높은 국가에서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사회서비스 강화와 활성화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되기도 한다(안상훈 외,

2007). 현물사회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는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고, 낮은 국가는 한국과 남유럽의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다. 현물사회지출은 다른 복지국가 지출 변수에 비해서 사회의 질로 측정한 복지국가의 다양한 맥락과 비교적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지출, 현물사회지출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오히려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응집성의 발달 수준은 복지국가를 통한 경제적 자원의 풍부함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2]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성과지표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 3-3〉은 실업률, 빈곤율, 소득분배율과 같은 복지국가의 성과지표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표 3-3〉 복지 성과와 사회의 질의 상관관계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사회적 응집성 | 사회적 포용성 | 사회적 역능성 | 실업률 | 고용률 | 빈곤율 | 소득분배율 |
|---|---|---|---|---|---|---|---|---|
| 실업률 | -0.095 | -.477(*) | -0.310 | -0.362 | 1 | | | |
| 고용률 | 0.323 | .767(**) | .583(**) | .679(**) | -.561(**) | 1 | | |
| 빈곤율 | -.742(**) | 0.049 | -0.265 | -0.327 | -0.047 | -0.012 | 1 | |
| 소득분배율 | -.770(**) | -0.069 | -0.349 | -.515(*) | -0.020 | -0.044 | .819(**) | 1 |

주: ** = p <.01, * = p <.05

실업률은 사회적 응집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77).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스페인, 그리스, 독일 등은 신뢰영역과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고, 전체적 사회적 응집성도 낮은 수준이었다. 높은 실업률은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헝가리, 이탈리아와 같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용률은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각각 r=.767, .583, .679).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국가들은 대체로 스칸디나비안 국가와 영미권 국가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수준은 주로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의 차원에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률과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유

102) 상관관계 분석만으로는 사회지출 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구축효과의 존재 유무는 판단할 수 없다.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본 논문의 분석자료에서 사회지출 수준과 사회적 응집성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정도에만 해석을 그친다.

의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빈곤율, 소득분배율과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770). 미국과 남유럽의 국가들에서 대체로 빈곤율과 소득분배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들 국가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상에서는 복지지표로 측정한 복지국가 수준과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지출 변수, 빈곤율과 소득분배율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보장 수준에 주목해왔던 복지국가 논의를 통해서는 사회의 질의 다양한 수준을 해석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적 차원에서 확인한 복지국가 수준은 사회의 질의 다른 세 하위분면-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발전 수준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들 영역은 복지국가의 경제적 보장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에서 기존의 복지국가가 추구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정책 영역의 발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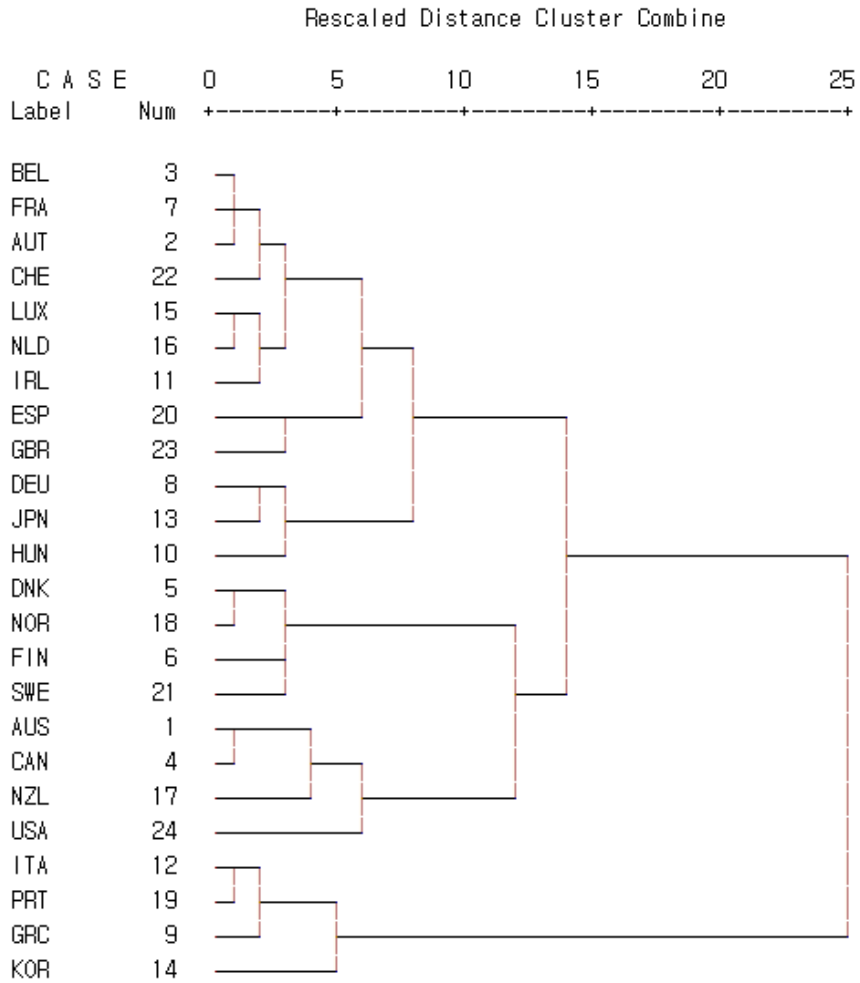
## 제 4절. 사회의 질 유형화

여기서는 국가별로 사회의 질 구성 형태가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띄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국가들을 사회의 질 사분면의 발전수준을 중심으로 유형화한다. 한 국가의 사회의 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유사성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한 유형화를 통해서, 한 국가가 어떤 사회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먼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확인된 사회의 질 유형이 복지국가 체제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질 유형과 복지국가 체제 유형이 보여주는 맥락을 해석한다.

### 1. 군집분석

다음 [그림 3-1]은 군집 간 결합방식(Between-Group Linkage Method)를 이용하여 작성한 덴드로그램(Dendrogram)이다.




[그림 3-1] 덴드로그램

덴드로그램과 Ward's Method를 이용한 분석 결과, 군집의 수를 4개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03] 다음 〈표 3-4〉는 확인된 네 개의 군집에 대한 기초분석표이며, 〈표 3-5〉는 네 개의 군집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이다. 분산분석 결과 각 군집의 평균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네 하위분면 변수가 네 군집을 유의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103) 위계적 군집분석에서는 연구자가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군집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점에서 군집의 수를 확정하는데 있어 연구자의 자의성이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Ward's Method를 이용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는 것이다(Aldenderfer & Blashfield, 1984: 57). Ward's Method를 이용하여 각 군집의 계수를 측정하였는데, 군집이 1개 일 때 91.968, 2개 일 때 55.423, 3개 일 때 36.880, 4개 일 때 24.671, 5개 일 때 18.707, 6개 일 때 14.812이다. 계수의 감소폭이 군집의 개수가 4개에서 5개로 줄어들 때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4개의 군집이 타당하다.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바탕으로 군집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4〉 군집별 기초분석표

| | 군집분류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표준오차 | 최소값 | 최대값 |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1 | 4 | 0.5069 | 0.1331 | 0.0665 | 0.3310 | 0.6419 |
| | 2 | 12 | 0.6867 | 0.1166 | 0.0336 | 0.4160 | 0.8407 |
| | 3 | 4 | 0.8345 | 0.0585 | 0.0292 | 0.7687 | 0.9015 |
| | 4 | 4 | 0.4141 | 0.0921 | 0.0460 | 0.2796 | 0.4873 |
| | Total | 24 | 0.6359 | 0.1733 | 0.0354 | 0.2796 | 0.9015 |
| 사회적 응집성 | 1 | 4 | 0.8202 | 0.0409 | 0.0204 | 0.7726 | 0.8719 |
| | 2 | 12 | 0.4755 | 0.1490 | 0.0430 | 0.1626 | 0.7031 |
| | 3 | 4 | 0.7521 | 0.1045 | 0.0523 | 0.6297 | 0.8575 |
| | 4 | 4 | 0.3176 | 0.0396 | 0.0198 | 0.2949 | 0.3767 |
| | Total | 24 | 0.5528 | 0.2110 | 0.0431 | 0.1626 | 0.8719 |
| 사회적 포용성 | 1 | 4 | 0.7641 | 0.1050 | 0.0525 | 0.6558 | 0.9005 |
| | 2 | 12 | 0.6679 | 0.1015 | 0.0293 | 0.5301 | 0.8162 |
| | 3 | 4 | 0.8275 | 0.1010 | 0.0505 | 0.6776 | 0.8913 |
| | 4 | 4 | 0.3317 | 0.0734 | 0.0367 | 0.2371 | 0.4119 |
| | Total | 24 | 0.6545 | 0.1841 | 0.0376 | 0.2371 | 0.9005 |
| 사회적 역능성 | 1 | 4 | 0.5706 | 0.0977 | 0.0489 | 0.4580 | 0.6965 |
| | 2 | 12 | 0.5112 | 0.0783 | 0.0226 | 0.4115 | 0.6570 |
| | 3 | 4 | 0.8366 | 0.0444 | 0.0222 | 0.7889 | 0.8935 |
| | 4 | 4 | 0.3222 | 0.1144 | 0.0572 | 0.1752 | 0.4463 |
| | Total | 24 | 0.5438 | 0.1740 | 0.0355 | 0.1752 | 0.8935 |

〈표 3-5〉 분산분석 결과

| |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유의확률 |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Between Groups | 0.452 | 3 | 0.151 | 12.649 | 0.000 |
| | Within Groups | 0.238 | 20 | 0.012 | | |
| | Total | 0.690 | 23 | | | |
| 사회적 응집성 | Between Groups | 0.738 | 3 | 0.246 | 17.166 | 0.000 |
| | Within Groups | 0.287 | 20 | 0.014 | | |
| | Total | 1.024 | 23 | | | |
| 사회적 포용성 | Between Groups | 0.587 | 3 | 0.196 | 20.247 | 0.000 |
| | Within Groups | 0.193 | 20 | 0.010 | | |
| | Total | 0.780 | 23 | | | |
| 사회적 역능성 | Between Groups | 0.555 | 3 | 0.185 | 26.195 | 0.000 |
| | Within Groups | 0.141 | 20 | 0.007 | | |
| | Total | 0.696 | 23 | | | |

〈표 3-6〉 사후검증 결과, Tukey HSD

| 변수 | (I) 군집 | (J) 군집 | 평균차 (I-J) | 표준오차 | 유의확률 | 95% 신뢰구간 | |
|---|---|---|---|---|---|---|---|
| | | | | | | 하한값 | 상한값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1 | 2 | -.1798425(*) | 0.0630 | 0.045 | -0.3562 | -0.0035 |
| | | 3 | -.3276129(*) | 0.0772 | 0.002 | -0.5436 | -0.1116 |
| | | 4 | 0.092767 | 0.0772 | 0.633 | -0.1233 | 0.3088 |
| | 2 | 1 | .1798425(*) | 0.0630 | 0.045 | 0.0035 | 0.3562 |
| | | 3 | -0.14777 | 0.0630 | 0.121 | -0.3242 | 0.0286 |
| | | 4 | .2726090(*) | 0.0630 | 0.002 | 0.0962 | 0.4490 |
| | 3 | 1 | .3276129(*) | 0.0772 | 0.002 | 0.1116 | 0.5436 |
| | | 2 | 0.147771 | 0.0630 | 0.121 | -0.0286 | 0.3242 |
| | | 4 | .4203795(*) | 0.0772 | 0.000 | 0.2044 | 0.6364 |
| | 4 | 1 | -0.09277 | 0.0772 | 0.633 | -0.3088 | 0.1233 |
| | | 2 | -.2726090(*) | 0.0630 | 0.002 | -0.4490 | -0.0962 |
| | | 3 | -.4203795(*) | 0.0772 | 0.000 | -0.6364 | -0.2044 |
| 사회적 응집성 | 1 | 2 | .3446713(*) | 0.0691 | 0.000 | 0.1512 | 0.5381 |
| | | 3 | 0.068114 | 0.0846 | 0.851 | -0.1688 | 0.3050 |
| | | 4 | .5026193(*) | 0.0846 | 0.000 | 0.2657 | 0.7395 |
| | 2 | 1 | -.3446713(*) | 0.0691 | 0.000 | -0.5381 | -0.1512 |
| | | 3 | -.2765576(*) | 0.0691 | 0.004 | -0.4700 | -0.0831 |
| | | 4 | 0.157948 | 0.0691 | 0.135 | -0.0355 | 0.3514 |
| | 3 | 1 | -0.06811 | 0.0846 | 0.851 | -0.3050 | 0.1688 |
| | | 2 | .2765576(*) | 0.0691 | 0.004 | 0.0831 | 0.4700 |
| | | 4 | .4345057(*) | 0.0846 | 0.000 | 0.1976 | 0.6714 |
| | 4 | 1 | -.5026193(*) | 0.0846 | 0.000 | -0.7395 | -0.2657 |
| | | 2 | -0.15795 | 0.0691 | 0.135 | -0.3514 | 0.0355 |
| | | 3 | -.4345057(*) | 0.0846 | 0.000 | -0.6714 | -0.1976 |
| 사회적 포용성 | 1 | 2 | 0.096184 | 0.0567 | 0.352 | -0.0626 | 0.2550 |
| | | 3 | -0.06342 | 0.0695 | 0.798 | -0.2579 | 0.1311 |
| | | 4 | .4323754(*) | 0.0695 | 0.000 | 0.2379 | 0.6269 |
| | 2 | 1 | -0.09618 | 0.0567 | 0.352 | -0.2550 | 0.0626 |
| | | 3 | -.1596024(*) | 0.0567 | 0.049 | -0.3184 | -0.0008 |
| | | 4 | .3361920(*) | 0.0567 | 0.000 | 0.1774 | 0.4950 |
| | 3 | 1 | 0.063419 | 0.0695 | 0.798 | -0.1311 | 0.2579 |
| | | 2 | .1596024(*) | 0.0567 | 0.049 | 0.0008 | 0.3184 |
| | | 4 | .4957944(*) | 0.0695 | 0.000 | 0.3013 | 0.6903 |
| | 4 | 1 | -.4323754(*) | 0.0695 | 0.000 | -0.6269 | -0.2379 |
| | | 2 | -.3361920(*) | 0.0567 | 0.000 | -0.4950 | -0.1774 |
| | | 3 | -.4957944(*) | 0.0695 | 0.000 | -0.6903 | -0.3013 |
| 사회적 역능성 | 1 | 2 | 0.059379 | 0.0485 | 0.619 | -0.0764 | 0.1952 |
| | | 3 | -.2659732(*) | 0.0594 | 0.001 | -0.4323 | -0.0997 |
| | | 4 | .2483848(*) | 0.0594 | 0.002 | 0.0821 | 0.4147 |
| | 2 | 1 | -0.05938 | 0.0485 | 0.619 | -0.1952 | 0.0764 |
| | | 3 | -.3253526(*) | 0.0485 | 0.000 | -0.4611 | -0.1896 |
| | | 4 | .1890054(*) | 0.0485 | 0.005 | 0.0532 | 0.3248 |
| | 3 | 1 | .2659732(*) | 0.0594 | 0.001 | 0.0997 | 0.4323 |
| | | 2 | .3253526(*) | 0.0485 | 0.000 | 0.1896 | 0.4611 |
| | | 4 | .5143580(*) | 0.0594 | 0.000 | 0.3481 | 0.6807 |
| | 4 | 1 | -.2483848(*) | 0.0594 | 0.002 | -0.4147 | -0.0821 |
| | | 2 | -.1890054(*) | 0.0485 | 0.005 | -0.3248 | -0.0532 |
| | | 3 | -.5143580(*) | 0.0594 | 0.000 | -0.6807 | -0.3481 |

주: *= p< .5

각 군집에 속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비유럽의 앵글로-색슨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군집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12개 국가로 구성되는데 아일랜드, 일본, 영국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륙 유럽 국가들이다. 셋째 군집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4개 국가로 구성되는데 모두 노르딕 국가이다. 넷째 군집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남유럽 국가와 한국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질 하위분면 요인별로 집단 간 차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의 방법으로는 투키의 Hone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HSD) 방식을 이용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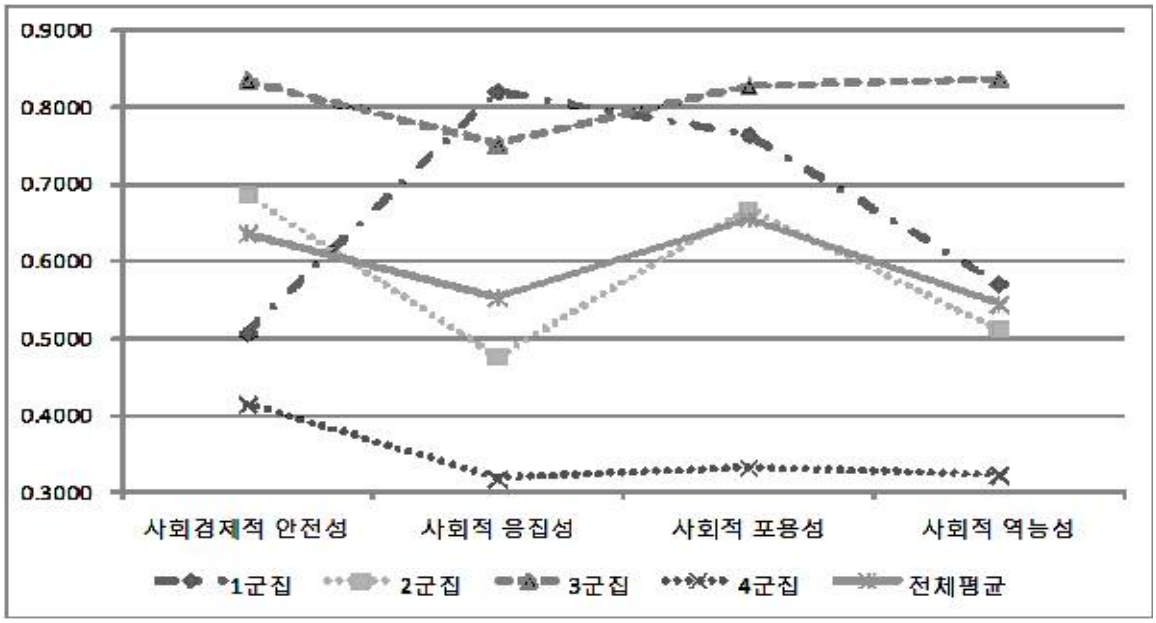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1) 비유럽의 앵글로-색슨 국가군집과 (4) 남유럽 국가와 한국 군집 간, (2) 대륙 유럽 국가들과 (3) 노르딕 국가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적 응집성은 (1) 군집과 (3)군집, (2)군집과 (4)군집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적 포용성은 (1)군집과 (2)군집, (1)군집과 (3)군집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적 역능성은 (1)군집과 (2)군집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 2. 사회의 질 유형의 해석

이제부터는 군집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집의 특성과 군집에 속한 국가들을 복지국가 체제 유형과 관련지어 해석을 시도한다. [그림 3-2]는 각 군집의 전체적인 수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위 〈표 3-4〉에서 확인된 각 군집의 평균을 이용하여 작성한 꺾은선형 도표이다.

첫째 군집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특성을 보이는 군집이다. 이 군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적 응집성은 가장 높으며, 사회적 포용성은 평균보다 높고, 사회적 역능성은 평균에 근접하였다. 요약하자면, 이 군집은 사회적 응집성의 두드러진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이다.

자유주의 복지 체제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며,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제기된 이후 임금과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 전략을 채택해왔다.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적 자원 영역의 발달은 저조한 편으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재정적 자원, 건강과 돌봄, 일, 교육의 하위 영역에서 대체로 낮은 보장 수준을 보였다. 특히, 건강과 돌봄의 하위 영역에서 상




[그림 3-2]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군집 평균값

당히 낮은 발전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주거와 환경 하위영역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노동시장의 탈규제 전략은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노동시장에의 포용 하위영역에서 독특한 결과를 낳는다. 미국은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비율,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노동시장에의 포용 하위영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호주는 이 하위영역에서 22위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포용성 분면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호주는 15위, 캐나다는 7위, 뉴질랜드는 1위, 미국은 10위의 순위를 나타냈다.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시장 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로 사회적 지원도 이와 같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식기반 하위영역에서 미국은 1위, 캐나다는 2위의 높은 순위를 보였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족정책에서도 낮은 발달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대인관계 지원 하위영역은 장애관련 지출과 공식적 아동보호 및 보육수준으로 측정하였는데, 호주는 19위, 캐나다는 23위, 미국은 22위를 보여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군집에 속한 뉴질랜드는 6위의 순위를 보였다.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노동시장훈련관련 지출 비율, 아동양육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로 측정한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 하위영역에서도 이들 국가는 대체로 낮은 순위

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사회적 역능성 분면 수준은 각각 8위, 10위, 5위, 16위의 순위를 나타냈다.

이들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보이는데, 각각 5위, 3위, 1위, 6위의 순위를 보였다. 이들 국가는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정체성의 하위영역에서 각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뢰수준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어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공식적 지원의 미발달에 따라 비공식적 연대에 대한 강조가 이뤄지기 때문일 수 있다(Koster & Bruggeman, 2008). 부족한 공적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사적지원 체계가 발달했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높은 소득수준의 영향일 수 있다. van Oorschot and Arts(2005)에 의하면 복지노력(welfare effort)이 사회적 자본을 구축(crowding-out)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부유한 국가에서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가 두드러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자원봉사와 같은 경우에는 자원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셋째, 부의 수준의 결과로 다른 사회적 조건에 대해 그다지 비우호적일 필요가 없는 결과일 수 있다. 국가 간 비교에서 국가의 부의 수준이 높으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비판적이지 않은데(Hadler, 2005), 이들 국가는 모두 소득분배율(Gini)이 .33 이상으로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은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적 안전성 보장에 주목하여 분석할 때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지칭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을 다양한 맥락에서 확인하여 볼 때, 즉 사회의 질 수준에서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군집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군집이다. 주로 대륙 유럽의 보수주의 복지국가 특성을 보이는 군집이지만, 일반적으로 남유럽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스페인과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아일랜드, 영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본도 이 군집에 속한다.[104]

이 군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사회적 응집성 분면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 사회적 포용성 분면과 사회적 역능성 분면은 평균적인 수준이다. 이 군집은 가장 많은 국가들이 속해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이 군집은 전체 국가의 평균 수준을 반영하는데 그럼에도 사회적 응집성 수준은 첫째 군집과 셋째 군집과 비교해서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이 군집은 낮은 사회적 응집성과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104) 일본은 그 특성이 보수주의 복지 체제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유교주의 전통이라는 것이 보수주의 복지 체제의 카톨릭 가족주의와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이며, 일본의 사회보장이 매우 조합주의적이라는 것이다(ibid. p. 82).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경제적 보장에 노력하지만, 그것이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지위의 분절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수준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사회적 포용성은 평균 수준을 보였다. 지위의 분절을 특징으로 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적 포용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가족주의적 성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낮기 때문에 시민권 하위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이지 않았다. 비록 최근 들어와서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 활성화는 낮은 수준이다. 교육, 적극적 고용이나 훈련 정책의 발전이 낮았던 특징,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낮았던 전통적 경험 등은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역능성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한다.

셋째 군집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특성을 보이는 군집이다. 이 군집의 특징은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이 모두 골고루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역능성은 다른 군집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보편주의를 특징으로 다양한 위험에 포괄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완전고용을 지향하고, 생산주의(productivism)의 목적 하에 시민들의 잠재적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회지출과 사회적 자본의 구축효과가 존재한다면,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속한 국가들은 사회적 응집성이 낮게 나타나야 한다. 측정 결과,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응집성은 첫째 군집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이들 두 군집에 속한 국가를 놓고 보았을 때 구축효과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제도를 경험한 사람은 사회적 신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욕구조사 사회 프로그램은 사회적 신뢰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Kumlin and Rothstein(2005a)의 주장은 보편주의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하는 이들 국가에서 높은 신뢰수준을 일정부분 설명한다. 한편,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r=.763), 다양한 사회제도와 관계에 많은 사람이 포괄되어 있는 상황에서 높은 사회적 응집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이들 국가의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군집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의 군집이다. 앞의 세 국가는 남유럽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국가들이다. 이 군집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의 발달

정도를 보인다는 특징을 보였다.

대체로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설명이 이들 국가에도 적합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두드러진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교육 하위영역,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식기반 하위영역 등 교육과 관련된 영역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업을 당했을 때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할 위험이 커서 노동자들이 고용보호의 유지에 주력하는데(Ochel & Rohwer, 2009), 이런 결과로 비록 고용보호 수준은 높지만 정규고용자의 비율은 낮은 상황이며, 일 하위영역에서 낮은 발전 수준을 보였다. 한 번 실업에 처하게 되면 실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노동시장에의 포용도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이 높다는 사실 때문에 감춰지지만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 하위영역의 세부 지표-노동시장 훈련관련 지출, 아동양육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에서도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이런 결과로 이들 국가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한국은 일부 지표들에서 이들 국가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 낮은 사회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동질성을 보였다.

남유럽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후견주의(clientelism)'(Ferrera, 1996)는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화 경험이 일천하고 장려자본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치경제적 발달은 대륙유럽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수준이었다(신현중, 2010). 이들 남유럽 국가의 전후 정치적 발달은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군부의 집권, 좌우의 대립 등의 특징을 보였으며(Judt, 2005: ch. 16), 한국도 이런 정치적 과정을 거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낮은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 그리고 정치적 발전의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낮은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7〉 각 군집의 평균값

| 군집 | 해당국가 | SES | SC | SI | SE |
|---|---|---|---|---|---|
| 1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 0.5069 | 0.8202 | 0.7641 | 0.5706 |
| 2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 0.6867 | 0.4755 | 0.6679 | 0.5112 |
| 3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0.8345 | 0.7521 | 0.8275 | 0.8366 |
| 4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 0.4141 | 0.3176 | 0.3317 | 0.3222 |
| 개별국가 확인 | 영국 | 0.5779 | 0.4814 | 0.7877 | 0.657 |
| | 아일랜드 | 0.7196 | 0.6203 | 0.7767 | 0.4115 |
| | 스페인 | 0.416 | 0.4287 | 0.6762 | 0.511 |

위 〈표 3-7〉은 군집분석에서 확인된 각 군집에 해당하는 국가와, 각 군집의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군집분석 결과에서 영국,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는 일반적인 복지국가 유형 구분의 틀에 부합하지 않고 모두 보수주의 복지국가 군집에 속하고 있었다.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군집은 높은 사회적 응집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영국과 아일랜드는 다른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사회적 응집성이 낮게 나타났다. 영국은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가 낮은 편이며, 통합적 규범과 가치의 하위 영역에서도 평균적인 수준을 보였다. 아일랜드도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가 다른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며, 통합적 규범과 가치도 평균적인 수준이었다. 아일랜드는 또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군집보다 높은 편이었지만, 사회적 역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남유럽 복지국가와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은 대체로 보수주의 복지국가 군집의 평균에 근접하였다. 이런 이유로 보수주의 복지국가 체제 유형에 위치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각 국가는 사회의 질 발전 수준에서도 복지국가의 유형구분을 대체로 따르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각 복지국가 체제가 지향해온 일련의 정책적 기조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그리고 다양한 하위영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 있는 발전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복지국가의 보다 다양한 맥락을 측정하고자 하는 대안 도구로써 사회의 질도 결국은 복지국가 유형론의 동어반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지표와 사회의 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주로 경제적 안전성 보장 수준을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 논의의 틀은 사회의 질 발전 수준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즉, 사회의 질 유형은 복지국가 유형과 관련하여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에서는 복지국가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각 군집 또는 유형은 사회의 질 수준이 네 하위분면 모두에서 각각 발달과 저발달의 선형적 관계에 위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구분되는 첫째 군집은 높은 사회적 응집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사회의 질의 다른 세 분면에서는 그다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반대로 보수주의 복지국가 유형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더 발달되어 있었고, 사회적 포용성 역시 상대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역능성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각 국가, 각 유형은 발전의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개입을 하였고 그 결과 사회의 질 발전 수준에서 특정 영역에서는 높은 발전 수준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의 발전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 제 5절. 소결

3장의 분석에서는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수준과 복지국가 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의 질 수준에서의 유형화를 시도한 후 이를 복지국가 체제 논의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분석의 주된 목적은 사회의 질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도구틀이 되는가를 밝히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한 분석과정과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의 양적 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안되는 일련의 복지국가 지표들과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복지국가 지출수준 변수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출수준 변수는 사회의 질의 다른 세 하위분면-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과는 대체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어떤 지출 수준 관련 변수도 사회적 응집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지금까지 복지국가 접근에서 주목해왔던 복지국가 노력이 사회경제적 안전성과는 관련이 있지만, 복지국가를 보다 포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수준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과 여러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유일한 복지국가 지출 변수는 'GDP 대비 현물 사회지출'이었다. 현물사회지출은 사회서비스 지출을 의미하는데, 사회서비스의 강화와 활성화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된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발전수준은 현대 복지국가가 당면하는 내·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의 결과인데, 비교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이 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와 관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성과 수준의 변수는 복지지출 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사회적 응집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사회적 응집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고용률은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역시 사회의 질 수준의 발전과 상당한 관계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군집분석을 통해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이를 복지국가 체제론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유형화의 결과, 네 개의 군집이 확인되었다. 첫째 군집은 높은 사회적 응집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이 위치하였다. 둘째 군집은 대체로 전체 국가 평균과 유사한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발달을 보이는 군집으로, 주로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이 위치하였다. 셋째 군집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이 고루 높은 수준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이 위치하였다. 넷째 군집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이 모두 낮은 수준을 특징으로 하며, 남유럽의 복지국가와 한국이 포함되었다.

사회의 질 유형화의 결과는 복지국가 체제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회의 질이 구성되는 맥락이 각 복지체제가 유사한 제도적 배열을 통해 발전해왔던 경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국가 지표와 사회의 질의 관계 분석에서 복지국가의 양적 수준은 사회경제적 안전성만을 설명하였음을 고려할 때, 복지국가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회의 질 수준으로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에 대한 접근에서는 경제적 보장 수준에 주목해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지출 수준과 그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선호와 정책대안으로서의 위계를 갖춘 것이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보수주의 복지국가가 유지해왔던 경로들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들 국가가 선택의 대안에서 차츰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의 질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외에도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사회적 응집성, 다양한 제도와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적은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포용성,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잘 발휘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역능성이 이런 것들이다. 이들 지점은 기존 복지국가가 추구해왔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한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점을 모두 고려할 때 전통적인 복지국가 접근과는 다른 수준의 위계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높은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보이고 경제적 보장의 수준도 낮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선호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보여주는 사회의 질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이들 국가에서 확인되는 독특한 발전의 경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사회적 응집성이 그러하다.

# 제 4장.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4장에서는 측정한 사회의 질을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한다. 이는 측정한 사회의 질이 사회수준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적용의 가능성을 보다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사회의 질을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함으로써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론의 추가적 발전을 위한 이론적 함의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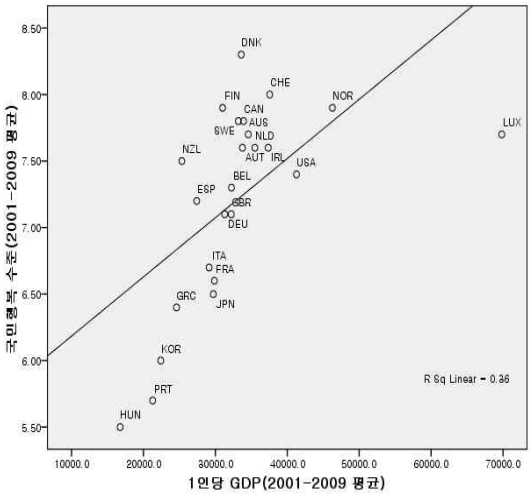
## 제 1절. 문제제기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입각하여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측정한 사회의 질이 타당한 수준인지, 분석적 유용성을 가지는지와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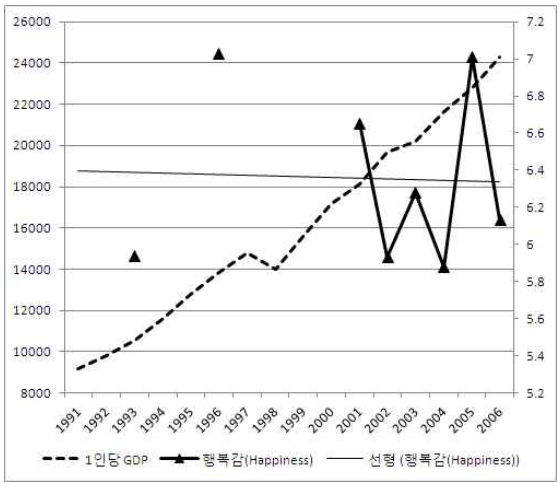
사회의 질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의 발전 수준이며, 사회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사회의 질 이론은 한 사회가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충족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네 하위분면 차원에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van der Maesen & Walker, 2005: 13). 사회경제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에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 자신을 실현할 역능을 충분히 갖춘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 자신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으며, 삶에 만족할 것이다. 즉, 사회의 질은 사람들에게 안녕을 제공하는 사회 또는 사회 제도의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Therborn, 2001: 23).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을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함으로써 사회의 질 접근의 분석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사회적 조건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것은 경제성장, 경제적 성취였다. 사람들이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또한 재화 사용과 서비스의 선택과정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행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믿어 왔던 것이다.

[그림 4-1]은 논문의 분석대상인 OECD 24개국의 국민행복 수준[105]과 '구매력 지수로 환




[그림 4-1] 국민소득과 국민행복




[그림 4-2] 한국의 국민소득과 행복감

자료: Veenhoven(2012b), Happiness in Nations. OECD(2011o), OECD Health Data: Economic references.

주: [그림 4-1]은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에 대한 설문 값이다. [그림 4-2]에서 한국의 행복수준에 대한 자료는 같은 자료에서 '행복감'(happiness)에 대한 여러 척도의 설문 값을 10점 척도로 변환한 값을 이용하였다. '삶의 만족'에 대한 설문 값을 추가할 경우에는 더 많은 연도값을 측정할 수 있으나, 다른 개념인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Veenhoven(1996a: 15)의 주장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

산한 1인당 GDP(이하 1인당 GDP)'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106] 본 논문의 분석대상 24개국에서 국민행복 수준과 1인당 GDP의 상관관계는 .600(p=.0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07] 비교 국가 차원에서 위 [그림 4-1]은 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질적 부의 증가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위치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국가의 물질적 부의 증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절대적 양을 증가시킨다. 사람들은 증가한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행복하다고 여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 행복 수준에 물질적 부의 수준이 아닌 다른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105) 본 논문에서는 '국민행복'을 한 사회 각 개인의 '삶의 만족' 정도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4장에서는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구분해서 사용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절에서 한다.

106) 한국은 이 기간 중 국민행복 수준의 평균값이 6.0으로 분석대상 24개 국가 중 22위다. 한국보다 더 낮은 국민행복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포르투갈(5.7)과 헝가리(5.5) 뿐이다. 한편,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덴마크(8.3), 스위스(8.0), 핀란드(7.9)와 노르웨이(7.9)이다.

107) 분석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시기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슷한 결과를 가진다. Hagerty & Veenhoven(2003: 2)에 따르면, 많은 연구들에서 1인당 GDP와 삶의 만족의 관계는 대체로 r=.6의 관계를 가진다. 한편, 저소득 국가를 포함할 때 소득수준과 행복수준의 상관관계는 보다 높아지는데, 65개국을 대상으로 할 때 r=.70으로 나타난다(inglehart & Klingemann, p. 168).

정책의 우선순위는 변경되어야 한다. 다시 [그림 4-1]을 살펴보자. 국민행복 수준과 1인당 GDP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만, 독립변수로서 1인당 GDP가 종속변수인 국민행복의 수준을 설명하는 것은 33.1%(Adj. $R^2$) 정도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력의 설명력은 제약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경제력이 아닌 다른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취 이후에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최근 사회지표를 'GDP를 넘어서는(beyond GDP)' 방향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런 맥락에 위치한다(Stiglitz et al., 2009).

경제적 성장과 행복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민행복 수준을 비교한 [그림 4-2]에서 나타나듯이 이 기간 동안 국민행복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108] 각국의 구매력지수로 전환한 1인당 국내총생산과 행복수준의 관계를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1만 3천 달러 수준을 넘으면 소득수준과 행복수준의 관계는 매우 약해진다(Inglehart & Klingemann, 2000: 171). 이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발전인가?' 또는 '어떤 사회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때 늦은 감이 있다.[109]

이제 한국 사회에서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장을 더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권 등(2008: 24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행복 수준에 미치는 경제적 능력의 영향력은 낮은 편이다.[110] 이제 한국 사회에

108) 한국의 국민행복 수준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 시기는 매우 짧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늘어났다거나 줄어들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행복수준에 관한 자료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Veenhoven(2012c)은 주요 국가들의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행복수준의 변화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등은 이 기간 중 행복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르투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행복수준의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에, 스페인, 일본, 아일랜드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09) 한국은 1996년 구매력지수로 전환한 1인당 GDP가 13,853달러로 이 기준을 넘어섰다(OECD, 2011o). 그러나 곧이어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는 하락하였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일정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달성하였음에도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한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어떤 발전인가'에 대한 고민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고, 삶의 질 향상이 정책 목표로 제시된바 있다(김상균 외, 1996;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하지만 이념적 가치 제시가 구체적 정책 수준으로 현실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10) 한국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21개 행복지표 중에서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득(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서 개인의 행복 수준에 소득을 포함한 객관적 삶의 여건이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구재선·서은국, 201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포함하여, 각 개인이 느끼는 행복한 삶의 표상으로서 행복감,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111]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맥락적·상황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을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Frey & Stutzer, 2002; Diener, 2009; Bok, 2010).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행복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Inkeles, 1993; Di Tella & MacCulloch, 2008; Thin, 2012). 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개입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런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중요하다.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성, 연령, 혼인상태와 같이 순수하게 개인적 수준의 요인을 제외하면[112], 대체로 한 개인이 가지고 있고 경험하는 조건들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업은 개인의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가지는데(Clark & Oswald, 1994),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은 사회에서는 행복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각 개인의 신뢰수준, 여가활동, 친구와의 접촉, 정치참여, 교육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행복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 조건의 사회적 수준과 행복수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조건 각각을 확인하는 것은 한 사회의 질적 수준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의 질은 그 네 하위분면에 사회적 차원에서 행복 수준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질 수준을 통해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지와 같은 사회의 총체적인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나열하는 삶의 질 접근에 비해서 사회의 질은

---

만족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전체 행복 수준에 주는 영향력은 다른 행복지표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111) 한국 사회는 행복순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Helliwell, Layard and Sachs(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56개 국가 중 56위의 행복수준을 보이고 있다.

112) Diener(2009)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들은 연령과 행복의 관계 등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행복 수준의 변량 자체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행복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네 개의 하위분면 수준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집약한다는 장점을 가진다(Walker & van der Maesen, 2003). 사회의 질 접근이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삶의 질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사회의 질 이론틀을 적용하여 행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에서는 여전히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한다.[113]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 인식의 여러 지표를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차원에 배치하여, 각 개인의 행복 수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EU,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김승권 외, 2008 재인용; Abobott & Wallace, 2011).[114]

사회의 질과 행복수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미시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회의 질 수준의 구체적 측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OECD 24개국의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사회의 질 수준을 통해서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4장에서는 2장에서 측정한 사회의 질이 구성원의 삶의 만족의 총합으로서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지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발전 수준을 거시적 차원의 사회적 조건요인(원인변수)으로 상정하고, 결과변수인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사회의 질 조건조합을 분석할 것이다. 사회의 질의 각 하위분면의 발전이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이 구성하는 어떠한 조건조합이 높은 국민행복 수준의 충분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이 사회발전 수준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 수준과 같이 사회발전의 결과 역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한편,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사회의 질의 조건조합을 확인하는 것은 비교국가 차원에서

113) 이와는 달리 복지국가, 복지제도의 지출 수준 등의 사회적 수준을 고려하는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거시적 수준을 비교연구에 이용하고 있다. 사회적 수준을 거시자료로 확보하여 거시적 수준의 국민행복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한 방법이며(Veenhoven & Ouweneel, 1995; Veenhoven, 1996b; Stefansson, 2008; Tov & Diener, 2009), 각 개인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복지국가, 복지국가 지출 수준 등의 국가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Radcliff, 2001; Di Tella, MacCulloch & Oswald, 2003; Alesina et al., 2004; Helliwell & Putnam, 2004; Drobnic, Beham & Prag, 2010; Requena, 2010; Stavrova, Schlosser & Fetchenhauer, 2011).

114) 한편, 비교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별 국가, 도시의 사회의 질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질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에 부합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이들 지표의 시간적 변화 자료를 통한 해석을 시도하거나(정진성 외, 2010; 조권중·변미리, 2009), 사회의 질 이론틀을 지표틀로 이용하여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기도 한다(이태진 & 박은영, 2009).

한국 사회의 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 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분석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질 이론틀의 추가적 발전을 위한 이론적 함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제 2절.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전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을 실시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fsQCA의 특징과 방법을 소개하고,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분석에 사용하는 통계프로그램은 Stata 10.0 Fuzzy 모듈이다(Longest & Vaisey, 2008).[115] 다음으로 분석에 포함된 원인조건과 결과 변수들의 특징과 자료 출처를 설명한다.

### 1.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분석을 위해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은 일반화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발전에서 양적·질적 전통을 통합하려는 시도이다(안상훈, 2002: 62).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 비교를 위한 연구방법은 사례중심전략(case-oriented strategy)과 변수중심전략(variable-orientied strategy)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116], 두 접근 방법 간의 간극을 줄이고, 통합하려는 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Ragin(1987;2000;2008)이 제안한 불리언대수(Boolean Algebra)를 이용한 질적비교분석이다.

사례중심전략과 변수중심전략, 두 전략의 통합으로서 질적비교분석은 각 사례-일반적인 비교연구에서는 주로 국가-가 가지는 맥락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사례중심전략의 기본 가정을 수용하면서[117], 사례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분

115) fsQCA를 위한 대표적 프로그램은 Ragin(2012)의 fsQCA software 2.0 version을 들 수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Inclusion Algorism'(일관성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수정발전 중에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다(최영준, 2009: 328).

116) 사례중심전략은 소수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특정한 역사적 결과를 해석하거나, 사례들의 집합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반면에 변수중심전략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의 일반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117) 사례중심전략은 비교되는 사례수(numbers of cases)에 따라 연구방법을 구분한다(안상훈, 2002:

석의 사례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질적비교분석은 또한 변수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Ragin, 2000). 질적비교분석은 변수중심전략에서 가정하고 있는 부가성(additivity), 획일적 인과관계에 대한 설정, 모든 사례가 동질하다고 가정하는 것, 순효과(net effect)에 가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Rihoux & Ragin, 2009:최영준, 2009, 재인용). 질적비교분석은 결합된 원인(combinational cause)에 관심을 두면서 여러 원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특정한 결과를 낳는 현상에 주목하여, 변수중심전략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런 이유로 질적비교분석은 공공정책의 효과 평가나 비교연구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Ragin & Rihoux, 2004; Rihoux, Rezsöhazy & Bol, 2011).

본 논문에서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사회의 질의 조건조합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행복 수준의 정도는 각 국가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제도적 측면에 주목하며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전수준은 각 국가가 지금까지 거쳐 온 발전의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그 결과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이 구성되는 각국의 독특한 조합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조건조합에 관심을 가지며, 한 개의 변수가 얼마나 개별 국가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가에 대한 관심과 구분하고자 한다. 질적비교분석의 과정을 통해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어떤 조합(원인조건조합) 하에서 높은 국민행복수준이 나타나는 가와 같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원인조건조합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양적 연구에서와 같은 일반화도 가능하여,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

질적비교분석은 자료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crisp-set(집합에의 소속점수가 0과 1의 값을 가짐)과 fuzzy-set(집합에의 소속점수가 0에서 1의 값을 가짐)으로 구분할 수 있다. crisp-set에 비해서 퍼지셋의 장점은 원자료가 가지는 변량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질적비교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crisp-set과 같이 하나의 사회적 맥락을 0과 1로 이분화하는 것은 폭 넓은 사회적 현상을 단순화함으로서 변량이 가지는 유의미한 내용을 잃게 하는 문제를 가진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높은 국가 집합이라고 할 때, 이 집합에 소속되지 않는 A 국가와 소속되는 B 국가 사이의 실질적인 변량 차이는

55-57). 단일국가 사례연구에서는 사례의 특이한 맥락을 정리해낸다는 점에서 주로 질적·역사적 분석방법이 채용된다. 전략적 사례비교연구는 Esping-Andersen(1990) 이후의 제도주의 경향을 반영하여, 관련된 체제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 몇 개를 추출하여 체제들 사이의 역사·제도적 상황차이를 설명하려는 맥락중심의 분류를 지향한다.

1 미만일 수 있다. 퍼지셋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0과 1 사이의 소속점수(membership scores)를 이용하여 변량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 때 집합에의 소속점수가 1이라면 완전한 소속(full in)을 의미하고, 0이라면 완전한 비소속(full out)을 의미한다(Ragin, 2000: 6).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agin, 2000: Ch. 10; Ragin & Rihoux, 2004; 김영미, 2007; Schneider & Wagemann, 2010).

첫째,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변수와 원인변수를 선정한다. 이때 각 변수는 개념으로서의 집합을 구성한다.

둘째, 각 집합에의 소속점수(membership scores)를 계산한다. 집합에의 소속점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는 퍼지소속점수(fuzzy membership scores)로 전환한다. 이 전환의 과정에 대해서 Ragin(2008)은 그의 이전 저작(Ragin, 2000)과는 달리 '측정'(Calibration)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측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셋째, 각 집합에의 소속점수를 바탕으로 원인조건 집합의 조합에 대한 소속점수를 계산한다.[118] 이때 조건 집합의 조합을 일반적으로 배열(configuration)이라고 칭한다. 구성 가능한 배열은 2^n(n=조건집합의 수)이다.

넷째, 각 원인조건이 결과조건에 대해 필요적인지, 혹인 원인배열이 결과조건에 대해 충분한지 검증하고, 유의한 배열들을 결과로 제시한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할 때에는 하위집합의 원칙(the subset principle)을 적용하는데, 이는 '집합 X의 소속점수가 집합 Y의 소속점수보다 낮거나 같다면 집합 X는 집합 Y의 하위집합'이라는 것이다. 결과집합이 원인집합의 하위집합일 때, 원인조건은 결과조건의 필요조건이 된다. 반대로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의 하위집합일 때, 원인조건은 결과조건의 충분조건이 된다.

### 1) 퍼지소속점수 변환: 측정(Calibration)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변수 값을 각 집합에의 소속점수 즉, 퍼지소속점수로 변환해야 한다. 퍼지소속점수의 변환방법은 간접방법(indirect method)과 직접방법(direct method)이 있다. 직접방법의 퍼지소속점수 변환 과정에서는 기준선(thresholds)과 기준점(benchmarks)을 설정한다. 이때 기준선은 소속의 정도를 설명하는 방법이며, 기준점은 소속과 비소속의 전환점을 말한다. 간접방법의 퍼지소속점수의 변화는 각 사례의 분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설정한다.

---

118) 논문에서는 원인조건 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서술에서 배열은 원인조건 조합을 칭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결과조건 또한 조합을 이룰 수 있다.

〈표 4-1〉 언어적 표현의 수학적 전환(Mathematical translations of verbal labels)

| 언어적 표현 (Verbal Label) | 소속의 로그-오즈 (Log odds of full membership) | 소속 정도 (Degree of membership) | 소속의 공산 (Associated odds) |
|---|---|---|---|
| 완전한 소속 (Full membership) | 5.0 | 0.993 | 148.41 |
| 완전한 소속의 기준 이상 소속 (Threshold of full membership) | 3.0 | 0.953 | 20.09 |
| 거의 소속 (Mostly in) | 2.0 | 0.881 | 7.39 |
| 비소속보다는 소속 (More in than out) | 0.5 | 0.622 | 1.65 |
| 전환점 (Crossover point) | 0.0 | 0.500 | 1.00 |
| 소속보다는 비소속 (More out than in) | -0.5 | 0.378 | 0.61 |
| 거의 비소속 (Mostly out) | -2.0 | 0.119 | 0.14 |
|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 이하 소속 (Threshold of full nonmembership) | -3.0 | 0.047 | 0.05 |
| 완전한 비소속 (Full nonmembership) | -5.0 | 0.007 | 0.01 |

자료: Ragin(2008: 88)을 바탕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열의 순서를 변경함.
주: 소속의 정도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제시되어 있지만, 공산을 계산할 때는 소속 정도의 완전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측정의 직접방법은 로그-오즈(log odds)를 이용하여 소속점수를 계산한다. 위 〈표 4-1〉은 측정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만약 소속정도의 표현을 완전한 소속(full membership)이라고 할 때, 소속의 로그-오즈는 5로 설정한다. 소속의 정도는 'exp(log odds)/[1+exp(log odds)]'로 계산되며, 소속의 공산은 '소속의 정도/(1-소속의 정도)'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소속의 공산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다시 소속의 로그-오즈가 계산된다.[119]

한편, 측정의 방법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소속의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Ragin(2008: 88)은 이에 대해서 완전한 소속 정도는 .95 수준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위 〈표 4-1〉의 언어적 표현에서 '완전한 소속의 기준점 이상'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완전한 소속으로 보자는 것이다. 반대로,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점 이하'로 소속되어 있으면 완전한 비소속으로 보자는 것이다.

### 2) 퍼지소속점수의 계산

질적비교분석에서는 불리언대수(Boolean Algebra)를 이용하여, 몇 가지 기본적 원칙에 의

119) 등간척도로 구성된 변수를 퍼지소속점수를 직접방법(direct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소속의 정도를 완벽하게 0과 1의 값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 조합에의 소속점수를 계산한다(Ragin, 2000: 171-76).

첫째, 부정의 원리(negation)이다. 부정의 원리는 1부터 0으로 구성된 퍼지소속점수를 0부터 1로 변경한다. 부정의 원리는 각각의 집합에 대한 소속점수를 집합에 대한 비소속의 점수로 변환하는 것으로, 소속 점수는 '1-해당 집합의 퍼지소속점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120]

둘째, 최소값의 원리(logical and)이다. 퍼지셋질적비교분석에서 배열(configuration)에의 소속점수는 배열을 구성하는 각 집합에의 최소소속점수를 통해 구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집합에 소속점수가 .7이고, 가난한 국가라는 집합에의 소속점수가 .9라면 '민주주의적이고(and) 가난한 국가' 배열에의 소속점수는 .7이 된다.

셋째, 최대값의 원리(logical or)이다. 이는 최소값의 원리와 반대로, 각 집합에의 최대 소속점수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앞서의 예에서, '민주적이거나 또는(or) 가난한 국가' 배열에의 소속점수는 .9가 된다. 최대값의 원리는 여러 배열 중에서 각 사례를 설명하는 최적의 배열(best fit)을 선택할 때에 이용한다. 한 국가는 조건조합이 구성하는 여러 배열에 각각 소속점수를 가진다. 이 때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배열이 그 국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배열이 된다.

### 3)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검증

질적비교분석은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론을 구성한다. 결과조건 집합과 원인배열 또는 원인조건 집합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 관계의 유효성은 두 기준을 통해 검증한다(Ragin, 2008: Ch. 3).[121] 첫째, 개념적 집합의 일관성(consistency)이다. 일관성은 원인조건 집합이 결과조건 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는 집합 간의 관계가 이론적 진술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 개념적 집합의 설명력(coverage)이다. 설명력은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의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각 사례들이 이론적 진술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122]

---

120) 부정의 원리에 따른 결과는 '~ A'로 표현하는데, 간단히 소문자를 이용하여 표현하기도 하며 본 논문에서도 소문자를 이용한다.

121) 여기서 설명하는 일관성과 설명력 값은 사례수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Ragin(2000)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론적 진술이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122) 설명력은 일관성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학교 성적이 높고, 시험점수가 높으며, 대학졸업을 한 부모를 두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이 높고,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사람'이

일관성의 검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Y-일관성 검증으로, X 집합이 Y 집합의 하위 집합이 되는 일관성 기준(Benchmark Point)을 설정하고, 이 기준과 실제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이다. 둘째, N-일관성 검증으로, X 집합이 Y 집합의 하위 집합이 되는 일관성과 X 집합이 Y집합의 여집합의 하위집합이 될 일관성 차이의 유의성을 바탕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관대한 복지국가 집합의 소속점수가 강한 좌파정당을 가지는 국가 집합에의 소속점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강한 좌파정당을 가지는 것이 관대한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사례를 구성하는 여러 국가에서 강한 좌파정당을 가지는 국가 집합에의 소속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복지국가 집합에의 소속점수가 낮다면, 강한 좌파정당이 관대한 복지국가를 이끌어낸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볼 수 있다. N-일관성은 이와 같이 두 소속점수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이제부터는 필요조건 검증과 충분조건 검증을 각각 살펴본다.

(1) 필요조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 결과조건 집합이 원인조건 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 원인조건 집합을 필요조건이라고 말한다. 비교연구에서 일치법과 차이법을 가지고 설명하자면(안상훈, 2002), 결과 Y가 나타나는 모든 사례에서 특정한 조건 X가 항상 발견된다면, 우리는 이 X를 Y의 필요조건이라고 칭한다. 여러 국가들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높은 국가집합에의 소속점수가 높은 국민행복을 보이는 국가집합에의 소속점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높은 사회적 응집성을 가지는 것이 높은 국민행복을 이루는데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요조건의 일관성 값(consistent score)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Ragin, 2008: 53).

$$Consistency(Y_i \leq X_i) = \sum \min(X_i, Y_i) / \sum Y_i$$

X는 원인 배열(만약, 원인조건 집합이 1개일 경우에는 원인집합)을 의미하며, Y는 결과 배열(만약, 결과조건 집합이 1개일 경우에는 결과집합)이다. Xi는 각 사례들의 X 배열에의 소속점수를 말하고, Yi는 각 사례들의 Y 배열에의 소속점수를 말한다. 만약 모든 사례에서 Xi가 Yi보다 크거나 같다면, 일관성 값은 1이 된다. 이 경우에 배열 Y가 배열 X의 하위집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배열 X는 배열 Y의 필요집합이 된다.

---

빈곤을 벗어날 확률은 매우 높다(='일관성이 높다'). 하지만 이 원인조합은 빈곤을 벗어난 사람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의 사례만을 설명할 뿐이다(='설명력이 낮다')(Ragin, 2008).

필요조건의 설명력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Ragin, 2008: 53). 필요조건 검증에서 설명력은 결과집합 Y에 의해서 설명되는 원인집합 X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Coverage(Y_i \leq X_i) = \sum \min(X_i, Y_{i,}) / \sum X_i$$

(2) 충분조건

충분조건은 필요조건과 반대로, 원인조건 집합이 결과조건 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서 국민행복 집합에의 소속점수가 사회적 응집성 집합에의 소속점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높은 사회적 응집성을 가지는 것이 높은 국민행복을 이루는데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충분조건의 일관성 값(consistent score)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Ragin, 2008: 52).

$$Consistency(X_i \leq Y_i) = \sum \min(X_i, Y_{i,}) / \sum X_i$$

충분조건의 설명력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Ragin, 2008: 52). 충분조건 검증에서 설명력은 원인조건조합 X에 의해서 설명되는 Y가 얼마 정도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Coverage(X_i \leq Y_i) = \sum \min(X_i, Y_{i,}) / \sum Y_i$$

(3) 검증기준

비교연구의 연구 주제에서 모든 국가 사례가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즉 높은 일관성 값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 두 개의 사례는 예외적일 수 있는 것이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는 이런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는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일관성 값의 기준(Benchmark Point)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이 기준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Schneider & Wagemann, 2010). 예를 들어 Ragin(2000)은 그의 책 전반에서 일관성 값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usually, benchmark=.65)', '거의 항상(Almost Always, benchmark=.80)'이라는 표현을 두루 쓰고 있다. 한편, Epstein, Duerr, Kenworthy and Ragin(2008)은 일관성 값이 최소한 .75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 일관성 값의 기준으로 .80으로 설정하고 있다(Ochel & Rohwer, 2009). 이에 본 논문에서도 일관성 값의 기준을 .80으로 설정한다.

### 4) 축약

다음으로 여러 원인조건 배열이 결과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면, 즉 충분조건으로 확인이 되면 불리언 대수(Boolean Algebra)를 이용하여 배열을 보다 간명한 형태로 축소할 수 있다(Ragin, 1987). 이 과정은 주어진 여러 배열을 보다 축약된 형태의 배열로 변환하여 공통된 요인을 축약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이해를 쉽게 한다.

## 2. 분석자료

### 1) 결과변수: 국민행복 수준

본 논문에서 결과변수인 국민행복 수준은 각 국가 개별 국민들의 '삶의 만족' 정도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이용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행복'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다. Diener(1984)는 주관적 안녕은 인식적인 삶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행복 수준의 측정을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다.[123] 이들 연구와 측정도구를 따르자면, 주관적 수준의 행복의 측정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주관적 안녕이고, 이를 결정하는 하위 요인으로 만족감,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 중 만족감은 인지적, 인식적 요소이며, 후자의 두 요소는 정서적 요소이다(서은국 외, 2010). 행복에 대한 Helliwell et al.(2012)의 『World Happiness Report』에서는 삶의 평가(life-evaluation),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세 측정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중에서 하나의 요인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OECD(2011a)는 주관적 안녕의 측정 영역에 삶의 만족과 긍정적 감정(affect balance)의 두 측정지표를 이용하고 있다.[124]

---

123) 행복의 정도를 설문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는 단일 문항으로 전반적인 행복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행복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다양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Diener(1984)의 다양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척도의 제시 및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Diener, Emmons, Larsen and Griffin(1985)는 삶의 만족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개발하였다. 현재 주관적 안녕의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SWLS와 Watson, Clark and Tellegen(1988)의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의 두 척도이다(서은국 외, 2010). 서은국 등(2010)은 이 두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서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행복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전체 조사대상자의 행복지수 평균은 62.22점으로 나타났다.

124)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비교 국가 차원에서 이용하는 행복 설문은 대체로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을 묻는 질문과 '행복감'(happiness)을 묻는 두 질문을 이용한다. 다음 〈표 4-2〉는 다양한 국제사회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복 설문문항이다. 제시된 설문문항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주관적 안녕의 측정 도구이다. 단일 문항 설문의 보다 많은 예는 Veenhoven(2012d)의 "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4-2〉 행복 설문 문항

| 설문영역 | 설문문항 | 척도 | 주요 설문 프로그램 |
|---|---|---|---|
| 삶의 만족 (life-satisfaction) |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즈음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대단히 불만족한다(1)~매우 만족한다(10)'의 10점 척도 | World Value Survey |
| |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일반적으로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1), 다소 만족한다(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의 4점 척도 | Euro Barometer |
| 행복감 (Happiness) |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매우 행복하다(1), 행복한 편이다(2),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3), 전혀 행복하지 않다(4)'의 4점 척도 | World Value Survey |
| | "귀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행복하다(1), 다소 행복하다(2), 별로 행복하지 않다(3), 전혀 행복하지 않다(4)'의 4점 척도 | ISSP |

비교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행복감'의 측정값은 연구자에 따라서 혼합하거나 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Inglehart & Klingemann, 2000; Pacek & Radcliff, 2008a; Tov & Diener, 2009),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Bradshaw, 2008; Helliwell et al., 2012). 두 설문 측정값을 혼합하는 것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회조사 자료의 특성상 적은 사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두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한 상관관계가 확인되기도 한다(Veenhoven, 1996a; Gundelach & Kreiner, 2004).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둘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행복감은 정서적인 측면에 보다 방점을 두지만, 만족은 기대(aspiration)와 성과(achievement)의 차이에 기반하는 인식적이고 평가적인 측면이 강하다(서은국 외, 2010; Gundelach & Kreiner, 2004; Haller & Hadler, 2006; Stefansson, 2008).[125]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구재선·서은국, 2011).

125) Minkov(2009)는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행복과 불만족으로서의 불행(unhappiness)을 구분할 것을

각 개인의 평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행복의 측정도구로 '삶의 만족' 값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국민행복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각 개인의 삶의 만족 수준을 평균한 것이다. 각 개인이 단일 문항을 통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개인의 행복감의 평균을 총국민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보고(Veenhoven, 2004),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요소의 측정값 평균을 국가 간 비교에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Pacek & Radcliff, 2008a; Veenhoven, 1996a).

국민행복에 관한 자료는 Veenhoven(2012a)의 '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서 삶의 만족에 대한 10점 척도로 구성된 자료 중 각 국의 2008년 기준 값을 사용한다.[126] 이에 해당하는 자료가 부재한 캐나다, 그리스, 일본, 한국은 2007년 조사자료이며, 룩셈부르크는 2009년 조사자료이다. 독일, 네덜란드는 2008년 실시된 여러 조사 자료의 평균값이다. 원인변수 중 사회의 질이 2008년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고려하면, 모든 자료는 2008년 또는 이후의 값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삶의 만족 수준에 대한 조사가 매해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이 값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127]

### 2) 원인변수: 사회의 질 하위분면 지수와 국민소득 수준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는 원인변수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를 이용한다. 앞서 2장에서는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의 하위분면 지수를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한다.

원인변수에는 각 국가에서 국민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구매력지수로 전환된 1인당 GDP를 추가한다. 사회의 질이 여러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지만,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과 행복수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Easterlin, 1995;2005; Veenhoven & Ouweneel, 1995; Hagerty, 2000; Veenhoven, 2000a). 따라서 국민소득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OECD 건강통계의 경제기준지표 자료에서(OECD, 2011o),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한다.

---

제안하였다. 국가 간 비교를 할 경우에 행복을 설명하는 요인과 불행을 설명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126) World Happiness Database에서 사용한 Happiness measure code는 'O-SLW-c-sq-n-11-a'이다. 척도는 0점(불만족), 1-10(만족)의 값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점 척도와 동일하다.

127) 2008년 값은 본 논문의 분석대상 중 다수의 국가에서 삶의 만족에 관한 가장 최근 값이다.

국민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순가처분소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사회의 질 수준에 반영되는 사회보장 이전소득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공적 사회보장 수준이 반영되지 않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국가 간 비교에서 사용하는 국민소득의 수준 반영지표로서 1인당 GDP를 이용한다.

### 3) 결과변수와 원인변수의 기초통계

다음 〈표 4-3〉은 본 논문에서 결과변수인 국가별 삶의 만족 수준과 국민소득 수준에 대한 자료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분석대상 국가 중 삶의 만족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헝가리이다. 국민소득 수준은 1인당 GDP로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고, 헝가리가 가장 낮다.

〈표 4-3〉 각국의 삶의 만족 정도와 국민소득 수준

| | AUS | AUT | BEL | CAN | DNK | FIN | FRA | DEU | GRC | HUN | IRL | ITA |
|---|---|---|---|---|---|---|---|---|---|---|---|---|
| 삶의 만족 | 7.88 | 7.80 | 7.33 | 7.97 | 8.23 | 8.02 | 7.06 | 7.10 | 6.84 | 5.29 | 8.14 | 6.73 |
| 국민소득 수준 | 37054 | 35985 | 33973 | 36410 | 35767 | 33515 | 31491 | 33553 | 26816 | 18296 | 41309 | 30303 |
| | JPN | KOR | LUX | NLD | NZL | NOR | PRT | ESP | SWE | CHE | GBR | USA |
| 삶의 만족 | 6.75 | 6.31 | 7.66 | 7.74 | 7.81 | 8.09 | 5.85 | 7.56 | 7.90 | 7.93 | 7.42 | 7.85 |
| 국민소득 수준 | 31731 | 24353 | 77366 | 38021 | 26952 | 51697 | 22624 | 29822 | 35773 | 39831 | 34805 | 44200 |

위 자료를 포함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 이용한 결과변수와 원인변수의 기초통계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결과변수와 원인변수의 기초통계

| | 결과변수 | 원인변수 | | | | |
|---|---|---|---|---|---|---|
| | | 사회의 질 하위분면 | | | | 국민소득 |
| | 삶의 만족 | 사회경제적 안전성 | 사회적 응집성 | 사회적 포용성 | 사회적 역능성 | 1인당 GDP(PPP), 2004-2008 |
| 평균 | 7.3856 | 0.6359 | 0.5528 | 0.6545 | 0.5438 | 35485 |
| 중위값 | 7.6975 | 0.6601 | 0.5448 | 0.6798 | 0.5365 | 34389 |
| 표준편차 | 0.7619 | 0.1733 | 0.2110 | 0.1841 | 0.1740 | 11398 |
| 최소값 | 5.29 | 0.2796 | 0.1626 | 0.2371 | 0.1752 | 18296 |
| 최대값 | 8.23 | 0.9015 | 0.8719 | 0.9005 | 0.8935 | 77366 |

다음 〈표 4-5〉는 원인조건과 결과조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이다. 결과조건인 삶의 만족도는 모든 원인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응집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r=.826)를 보이고, 사회적 포용성(r=.768), 사회적 역능성(r=.602), 1인당 GDP(r=.555), 사회경제적 안전성(r=.449)의 순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원인조건들 간에는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간에 높은 상관관계(r=.763)가 나타나며,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도 높은 상관관계(r=.757)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 간의 상관관계(r=.308)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표 4-5〉 변수들 간 상관관계(N=24)

| | 삶의 만족도, 2008 | 사회경제적 안전성 | 사회적 응집성 | 사회적 포용성 | 사회적 역능성 | 1인당 GDP(PPP) (2004-8년 평균) |
|---|---|---|---|---|---|---|
| 삶의 만족도, 2008 | 1 | | | | |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449(*) | 1 | | | | |
| 사회적 응집성 | .826(**) | 0.308 | 1 | | | |
| 사회적 포용성 | .768(**) | .569(**) | .763(**) | 1 | | |
| 사회적 역능성 | .602(**) | .561(**) | .668(**) | .757(**) | 1 | |
| 1인당 GDP(PPP) (2004-8년 평균) | .555(**) | .485(*) | .449(*) | .518(**) | 0.262 | 1 |

주: 유의수준, **= <.01, *= <.05.

## 제 3절. 국민행복 수준에 대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 1. 모델 특정화

국가 간 행복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원인변수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와 국민소득 수준의 다섯 요인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분석은 두 단계로 나눠서 실시한다. 먼저, 행복수준을 설명하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 분면 조건조합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국민소득 수준을 동일한 모델에 추가로 투입하여 조건조합을 확인한다.

첫째 분석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발전수준이 국가별 행복수준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둘째 분석은 이에 덧붙여 국민소득 수준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행복수준을 설명하는 원인 배열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상의 분석 목적에 맞춰,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모델은 다음의 2가지로 구성한다.[128)]

**분석모형 1: FLS= FSES + FSC + FSI + FSE**
**분석모형 2: FLS= FSES + FSC + FSI + FSE + FTGDPPPP**

주: 각각 다음에의 소속점수를 의미한다. FLS= '국민행복 수준' 집합, FSES= '사회경제적 안전성' 집합, FSC= '사회적 응집성' 집합, FSI= '사회적 포용성' 집합, FSE= '사회적 역능성' 집합, FTGDPPPP= '높은 국민소득' 집합

## 2. 퍼지소속점수로의 변환: 측정

fsQCA를 위해서는 각 조건 변수의 값들을 집합의 퍼지소속점수로 변환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퍼지소속점수로의 전환은 직접전환(direct method)의 측정(Calibration)의 방법을 이용한다. 측정에는 세 가지 기준점(anchors)을 이용하는데, 각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완전한 소속의 기준점'은 퍼지값을 .95로 설정하며, 각 변수에서 최대값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점'은 퍼지값을 .05로 설정하며, 각 변수에서 최소값이 이에 해당한다.[129] 셋째, 분기점(crossover point), 즉 퍼지값이 .5가 되는 값은 중위값(median)을 사용한다. 중위값을 사용하는 것은 집합에의 소속과 비소속의 사례가 50/50이 되게 하는 것으로(Ragin, 2008: 87), 평균값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변량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다른 변수와는 달리 국민소득 수준은 완전한 소속의 값을 45,000 US$로 하였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77,366 US$), 노르웨이(51,697 US$)가 있다. 본 논문에서 완전한 소속의 기준 값을 룩셈부르크의 높은 국민소득 수준으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기점 이상의 국가들은 대부분 .5에 근접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국민소득'의 완전한 소속의 기준점은 '중위값 + 1 표준편차 단위'로 설정하였다. 국민소득 집합의 기준점을 45,000 US$로 하였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의 퍼지소속점수는 .95를 초과한다.

---

128) 측정의 방법을 통해서 전환을 한 조건변수는 개념적 집합으로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국가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높은 국가' 집합에 높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모든 원인조건 변수는 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원인조건 집합을 표현할 때 '높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국가' 집합이라는 표현보다는 간결하게 '사회경제적 안전성' 집합 등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129) 앞서 측정방법의 설명과 같이 '완전한 소속'의 기준을 .993으로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을 .003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결과는 〈부록 5-1〉에 첨부한다.

〈표 4-6〉 조건 집합에의 퍼지소속점수(95% level)

| 국가 | 결과조건 집합 | 원인조건 집합 | | | | |
|---|---|---|---|---|---|---|
| | FLS | FSES | FSC | FSI | FSE | FGDPPPP |
| | 국민행복 (삶의 만족) | 사회경제적 안전성 | 사회적 응집성 | 사회적 포용성 | 사회적 역능성 | 국민소득 (1인당 GDP) |
| AUS | 0.7348 | 0.4643 | 0.9211 | 0.4595 | 0.5643 | 0.6799 |
| AUT | 0.6378 | 0.8144 | 0.2806 | 0.5222 | 0.5561 | 0.6109 |
| BEL | 0.3868 | 0.6335 | 0.3780 | 0.5073 | 0.5193 | 0.4806 |
| CAN | 0.8218 | 0.3244 | 0.9280 | 0.8053 | 0.5502 | 0.6391 |
| DNK | 0.9526 | 0.7941 | 0.9462 | 0.9466 | 0.9305 | 0.5962 |
| FIN | 0.8595 | 0.8613 | 0.8107 | 0.4964 | 0.8929 | 0.4594 |
| FRA | 0.3107 | 0.7243 | 0.3655 | 0.4593 | 0.3586 | 0.3681 |
| DEU | 0.3215 | 0.8109 | 0.1547 | 0.2901 | 0.3041 | 0.4611 |
| GRC | 0.2553 | 0.2039 | 0.1309 | 0.1012 | 0.0474 | 0.1960 |
| HUN | 0.0474 | 0.3971 | 0.0474 | 0.2736 | 0.3205 | 0.0474 |
| IRL | 0.9235 | 0.6770 | 0.6666 | 0.7888 | 0.2616 | 0.8761 |
| ITA | 0.2301 | 0.1476 | 0.1236 | 0.1400 | 0.1253 | 0.3183 |
| JPN | 0.2346 | 0.4232 | 0.2117 | 0.2662 | 0.2654 | 0.3786 |
| KOR | 0.1506 | 0.0474 | 0.1233 | 0.0474 | 0.3210 | 0.1334 |
| LUX | 0.4876 | 0.9042 | 0.6413 | 0.8646 | 0.5057 | 1.0000 |
| NLD | 0.5564 | 0.8202 | 0.8103 | 0.7000 | 0.6495 | 0.7363 |
| NZL | 0.6508 | 0.2043 | 0.9526 | 0.9526 | 0.7932 | 0.2000 |
| NOR | 0.9009 | 0.9526 | 0.9244 | 0.9414 | 0.9145 | 0.9926 |
| PRT | 0.0909 | 0.1623 | 0.2109 | 0.0805 | 0.1938 | 0.1004 |
| ESP | 0.4565 | 0.1274 | 0.2868 | 0.4940 | 0.4473 | 0.2991 |
| SWE | 0.7562 | 0.9237 | 0.6855 | 0.9175 | 0.9526 | 0.5966 |
| CHE | 0.7862 | 0.5561 | 0.6578 | 0.3347 | 0.4944 | 0.8233 |
| GBR | 0.4137 | 0.3435 | 0.3782 | 0.8126 | 0.7335 | 0.5294 |
| USA | 0.7004 | 0.0695 | 0.8899 | 0.6204 | 0.3426 | 0.9412 |

위 〈표 4-6〉은 전환된 각 개념적 집합에의 퍼지소속점수이다. 결과 조건인 국가별 삶의 만족 수준의 퍼지소속점수로의 전환 결과, 행복수준 집합에 소속점수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행복수준 집합에 소속점수가 낮은 국가들은 헝가리, 포르투갈, 한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전환점의 근처에 있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는 .5점을 중심으로 위치하며, 전환점보다 약간 낮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국가들은 스페인, 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이다. 대체로 '높은 행복수준' 집합에 대한 소속점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남유럽 복지국가와 일본, 한국, 헝

가리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집합에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이며, 낮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다.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집합에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며, 일부 남유럽 복지국가와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낮은 소속 점수를 보인다.

사회적 응집성 집합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은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반면, 한국, 헝가리, 일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는 낮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일부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에서 사회적 응집성 집합 소속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뒤를 이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높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반면에 보수주의 복지국가(남유럽 복지국가를 포함)와 한국, 일본, 헝가리 등은 낮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사회적 포용성 집합에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이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반면, 한국,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등은 낮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사회적 포용성 집합에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높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사회적 역능성 집합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낮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사회적 역능성 집합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주로 남유럽 국가가 낮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국민소득 집합에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아일랜드가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반면, 헝가리, 포르투갈, 한국, 뉴질랜드, 그리스 등은 낮은 소속점수를 보인다.

## 3.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 1)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의 진실표

모델 특정화와 측정의 단계 이후에는 진실표(truth table)를 통해 원인조건의 논리적으로 가능한 조합, 즉 배열을 확인해야 한다(Schneider & Wagemann, 2010). 진실표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배열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데, 이를 통해서 각 사례와 조건 집합을 살펴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원인 배열은 2^n(n=원인조건의 수)이며, 여기서는 먼저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만을 분석에 사용하므로 가능한 배열은 모두 16개이다.

다음 〈표 4-7〉은 결과집합 즉, '높은 국민행복' 집합을 구성하는 원인집합의 진실표이다.

가능한 배열은 모두 16개였으나,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성하므로 두 11개의 배열이 존재한다.[130] 사례가 존재하고, 일관성 값이 .90을 넘는 경우에는 국민행복 집합에의 소속을 1로 표현하였다.[131]

〈표 4-7〉 결과집합에 대한 원인집합의 진실표

| 배열 | 원인집합 | | | | 결과집합 | 사례수 | 일관성값 (Consist) | 최적 사례 해당 국가 |
|---|---|---|---|---|---|---|---|---|
| | 사회경제적 안전성 (S=FSES) | 사회적 응집성 (C=FSC) | 사회적 포용성 (I=FSI) | 사회적 역능성 (E=FSE) | 국민행복 | | | |
| sCIe | 0 | 1 | 1 | 0 | 1 | 1 | 1 | USA |
| SCIe | 1 | 1 | 1 | 0 | 1 | 1 | 0.989 | IRL |
| SCIE | 1 | 1 | 1 | 1 | 1 | 5 | 0.978 | DNK, LUX, NLD, NOR, SWE |
| sCiE | 0 | 1 | 0 | 1 | 1 | 1 | 0.977 | AUS |
| sCIE | 0 | 1 | 1 | 1 | 1 | 2 | 0.975 | CAN, NZL |
| SCiE | 1 | 1 | 0 | 1 | 1 | 1 | 0.975 | FIN |
| SCie | 1 | 1 | 0 | 0 | 1 | 1 | 0.971 | CHE |
| ScIE | 1 | 0 | 1 | 1 | 1 | 2 | 0.916 | AUT, BEL |
| sclE | 0 | 0 | 1 | 1 | 0 | 1 | 0.895 | GBR |
| Scie | 1 | 0 | 0 | 0 | 0 | 2 | 0.752 | FRA, DEU |
| scie | 0 | 0 | 0 | 0 | 0 | 7 | 0.549 | GRC, HUN, ITA, JPN, KOR, PRT, ESP |

주: 배열을 구성하는 집합은 다음과 같이 축약하였다. S = 사회경제적 안전성, C= 사회적 응집성, I= 사회적 포용성, E= 사회적 역능성 집합을 의미하며, 대문자는 각 집합에 소속점수가 분기점보다 큰 경우를 말하고 소문자는 분기점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가장 많은 사례가 포함되는 두 배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네 조건이 모두 높은 배열은 국민행복 집합의 하위집합이 될 일관성이 높다(일관성 값= .978). 이 배열에 소속점수가 분기점 이상인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5개 국가이다.[132] 둘째, 네 조건이 모두

130) 여기서는 사례수가 1개 이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다. 만약 분석대상 국가가 많은 경우(Large N)에는 보다 큰 사례 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131) 〈표 4-7〉에서 제시하는 최적 사례 해당 국가에 대한 것은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중심으로 한 모든 원인 배열에의 퍼지소속점수를 바탕으로 한다. 이 결과는 〈부록 5-2〉에 첨부하였다. 한편, 일관성 값의 기준을 .80으로 설정할 경우,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행복 집합에 대한 소속점수는 .5 미만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이 존재한다(예, 영국=.4137).

132)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핀란드는 사회적 포용성이 소속점수의 분기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지수화의 단계에서 살펴볼 때 핀란드는 시민권 하

낮은 배열은 국민행복 집합의 하위 집합이 될 일관성이 낮다(일관성 값= .549). 이 배열에 소속점수가 분기점 이상인 국가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의 7개 국가이다.

이상의 진실표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은 일관성 값에서 기준 이상을 보이는 모든 배열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일관성 값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이들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높은 국민행복' 집합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네 하위분면 집합 두 개 이상에서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고 있다. 세 개 이상의 원인조건 집합에서 낮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배열은 국민 집합에 소속되는 일관성이 낮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안전성만 높은 경우(Scie)가 그러하다.

### 2)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검증

#### (1) 필요조건 검증

결과조건이 존재할 때 항상 어떤 조건이 존재하면 그 조건을 필요조건이라고 칭한다. 다음 〈표 4-8〉은 네 원인조건 집합의 결과 집합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의 결과이다.[133] 검증기준은 N-일관성(N-Cons)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검증 통과여부를 .05 유의수준에서 제시하였다. 만약 검증기준으로 Y-일관성을 적용하고, 일관성 기준(Benchmark point)을 .80으로, 유의수준을 .05 수준으로 설정하면 필요조건 검증을 통과하는 원인조건 집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8〉 국민행복에 대한 사회의 질의 필요조건 검증 결과

| 집합 | Y-일관성 | N-일관성 | F | 이항확률 | 설명력 | 검증통과여부 1) Ycons〉=.Ncons, p 〈.05 | 검증통과여부 2) Ycons〉=.Ncons, p 〈.10 |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0.754 | 0.55 | 2.14 | 0.157 | 0.771 | | |
| 사회적 응집성 | 0.879 | 0.45 | 15.53 | 0.001 | 0.889 | 통과 | 통과 |
| 사회적 포용성 | 0.855 | 0.499 | 10.23 | 0.004 | 0.845 | 통과 | 통과 |
| 사회적 역능성 | 0.827 | 0.579 | 4.01 | 0.057 | 0.869 | | 통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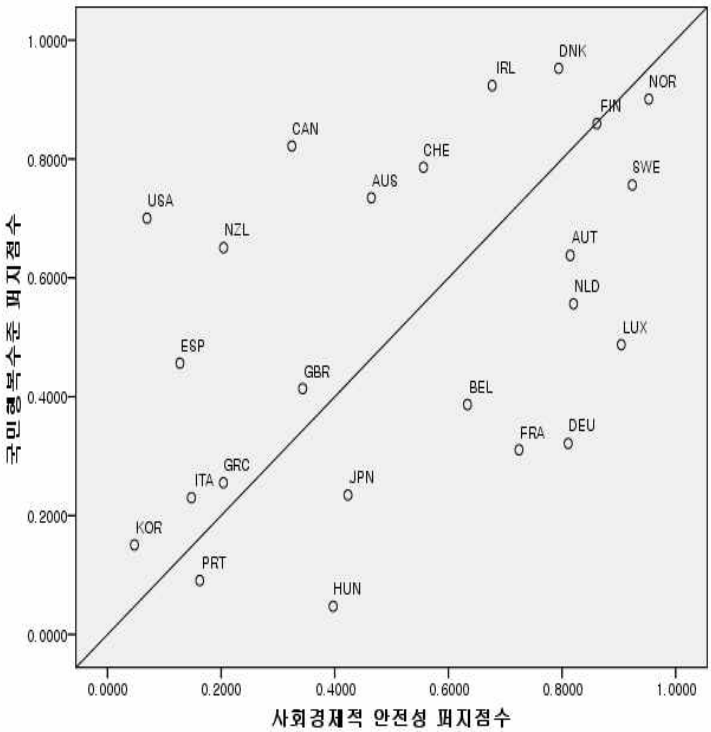
위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인 사회적 포용성 지수는 .6776으로 나타난다. 둘째, 측정(calibration)의 단계에서 전환의 기준점(anchors)에서 중위값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적 포용성의 중위값은 .680, 평균은 .654로 확인된다.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핀란드는 사회적 포용성의 소속점수가 .5 이상이다.

133) 검증값의 작성은 Stata - Fuzzy 모듈을 이용하였는데, 이의 계산방법은 〈부록 5-3〉에 첨부하였다.

필요조건 검증 결과, ‘높은 국민행복’ 집합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거의 항상(almost always)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높은 국민행복’이 나타나는 국가들에서는 거의 항상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된다. 필요조건의 개념에 맞춰보면 ‘‘높은 국민행복’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 ‘‘높은 국민행복’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성이 높아야 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필요조건의 검증 기준에서 유의수준을 .10 수준으로 낮추면, 사회적 역능성 또한 거의 항상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정리하면, ‘높은 국민행복’을 보이기 위해서는 거의 항상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아야 한다.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필요조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필요조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앞서 다음 [그림 4-3]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4-3]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국민행복

위 그림에서 좌상단에 위치한 국가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집합에의 소속점수는 낮지만, ‘높은 국민행복’ 집합에의 소속점수는 높은 국가들이다. 여기에 위치한 국가들-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비유럽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낮은 것에 비해서 국민행복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나타내는데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측면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탈물질주의 가치관'(Inglehart, 1990)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본 논문의 분석 의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삶을 살아가는 제반 조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차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의 질 이론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발전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서 비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자원 제공의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Lin, Ward & Van der Maesen, 2009; van der Maesen & Verkleij, 2009).[134]

사회의 질 이론 하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개념과 측정지표의 제시에서 공식적 제도 영역의 자원수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 경제적 안전성 보장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은 공적으로 제공되는 자원과 사적으로 확보가능한 자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정해식·안상훈, 2011).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은 국가-가족-시장의 기능에서 시장의 기능을 특히 강조하며, 아시아 국가는 가족의 기능을 강조한다(Jacobs, 2000).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고려하기 위해서 비유럽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주로 공식적 제도 수준에서 제공되는 자원 수준을 측정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외에 사적으로 확보가능한 자원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국민소득 수준을 분석에 추가하고자 하며, 이는 2단계 분석과 관련된다.

(2) 충분조건 검증

원인조건 집합이 결과조건 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경우를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을 설명하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으로 구성된 원인조건이 배열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결과조건에 대한 충분조건으로서의 배열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일 수 있다(Wagemann & Schneider, 2010). 즉,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라는 사회현상의 한 결과에 주목할 때, 비교국가 차원에서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인경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충분조건의 검증기준은 필요조건 검증보다 강화하여 Y-일관성과 N-일관성

134) 예를 들어, Walker(2009)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고용과 사회보장이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족이 그 역할의 상당부분을 담당한다고 본다.

을 같이 적용한다. 첫째, Y-일관성은 일관성 값의 기준을 .80으로 설정하고 유의수준 .05 이하로 유의한 배열을 선정한다. 둘째, N-일관성은 유의수준 .05 이하로 유의한 배열을 선정한다. 셋째, 이 두 기준에서 공통된 배열을 선정한다.

〈표 4-9〉는 이와 같은 두 검증기준에 따른 각 원인 배열의 충분조건 검증의 결과와 최적 사례수를 보여준다. 검증기준을 모두 통과한 공통 원인 배열은 모두 3개로 나타났다.

〈표 4-9〉 국민행복에 대한 사회의 질의 충분조건 검증 결과

| 배열 | 검증기준 benchmark, cosist >= .80, p <.05 | | | | 검증기준 Y-일관성 >= N-일관성, p <.05 | | | 사례수 |
|---|---|---|---|---|---|---|---|---|
| | Y-일관성 | 검증기준 설정값 | F | 이항 확률 | N-일관성 | F | 이항 확률 | 최적 사례수 |
| scIe | 0.929 | 0.8 | 6.05 | 0.022 | | | | 0 |
| sCie | 0.974 | 0.8 | 42.98 | 0.000 | | | | 0 |
| sCiE | 0.977 | 0.8 | 61.06 | 0.000 | | | | 1 |
| sCIE | 0.975 | 0.8 | 59.58 | 0.000 | 0.733 | 12.66 | 0.002 | 2 |
| ScIE | 0.916 | 0.8 | 5.9 | 0.023 | | | | 2 |
| SCie | 0.971 | 0.8 | 74.16 | 0.000 | | | | 1 |
| SCiE | 0.975 | 0.8 | 96.03 | 0.000 | 0.789 | 4.35 | 0.048 | 1 |
| SCIe | 0.989 | 0.8 | 357.23 | 0.000 | | | | 1 |
| SCIE | 0.978 | 0.8 | 209.97 | 0.000 | 0.593 | 13.91 | 0.001 | 5 |
| sCIe | 1 | 0.8 | | | 0.772 | 9.85 | 0.005 | 1 |

1) sCIE: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낮고, 사회적 응집성과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배열

2) SCiE: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은 높고, 사회적 포용성이 낮은 배열

3) SCIE: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모두 높은 배열

충분조건 검증을 통과한 세 배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배열(sCIE)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낮지만,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배열이다. 이 배열을 대표하는 국가는 캐나다와 뉴질랜드이다(앞의 〈표 4-7〉 진실표 참조).

두 번째 배열(SCiE)은 사회적 포용성은 낮지만,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배열이다. 이 배열을 대표하는 국가는 핀란드이다.

세 번째 배열(SCIE)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이 모두 높은 배열이며, 이 배열을 대표하

는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다.

축약의 과정을 거쳐서 세 배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원인경로로 정리할 수 있으며, 두 원인경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합식(solution)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한다.

〈수식 4-1〉 국민행복에 대한 결합식(분석모델1)

**LFS('높은 국민행복')=**
**FSC*FSI*FSE(높은 사회적 응집성*높은 사회적 포용성*높은 사회적 역능성) +**
**FSES*FSC*FSE(높은 사회경제적 안전성*높은 사회적 응집성*높은 사회적 역능성)**

〈표 4-10〉 국민행복의 두 원인경로(causal pathways)[분석모델 1]

| 원인경로 | 개별설명력 (Raw Coverage) | 구분설명력 (Unique Coverage) | 일관성 (Consistency) |
|---|---|---|---|
| 가) FSC*FSI*FSE | 0.711 | 0.101 | 0.966 |
| 나) FSES*FSC*FSE | 0.649 | 0.039 | 0.971 |

총설명력(TotalCoverage)=0.749
결합식의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 = 0.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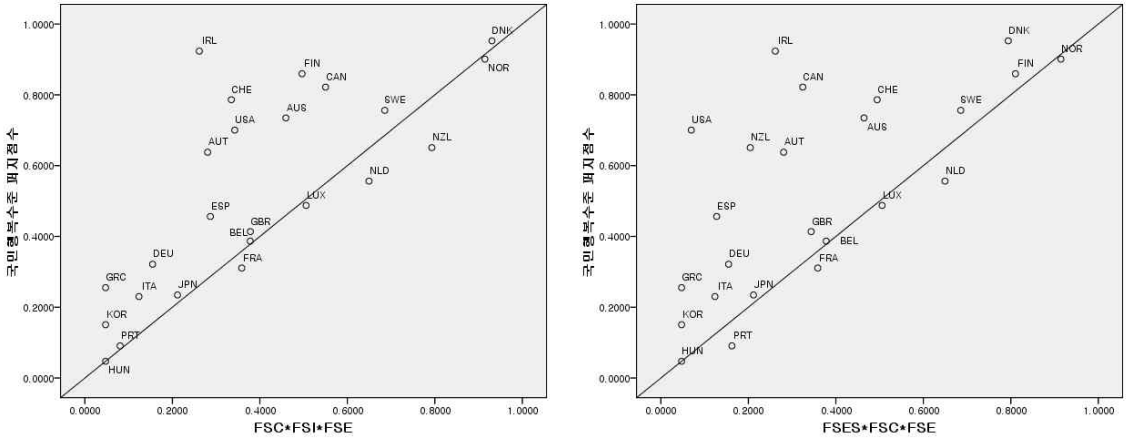
〈표 4-10〉의 위의 두 행은 두 원인경로 각각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인 설명력, 다른 원인경로와 구분되는 각 원인경로 독자의 설명력의 범위를 의미하는 구분설명력, 그리고 각 결합식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두 원인경로가 결합한 결합식의 총설명력과 일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원인경로(causal pathway)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국가는 '높은 국민행복'을 보인다(일관성= .966). 이 원인경로의 설명력은 .711이다. 둘째 원인경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국가는 '높은 국민행복'을 보인다(일관성= .971). 이 원인경로의 설명력은 .649이다.

전체적으로 두 원인경로의 결합식을 통해서 '높은 국민행복'을 설명하는 일관성은 .961이며, 이 결합식의 설명력은 .749이다. 각 원인경로에 의해서 전체 사례는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결합식의 설명력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 3) 사례의 해석

이제부터는 각 원인경로별로 '높은 국민행복'과의 관계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아래 [그림 4-4]는 국민행복 정도를 Y축에, 위에서 확인된 두 결합식을 X축에 놓은 산점도이다.




일관성 값=.966, 설명력 값=.711　　일관성 값=.971, 설명력 값=.649

[그림 4-4] 원인경로에 따른 '높은 국민행복'(분석모델1)

두 원인경로에서 대부분의 사례들은 대각선 축의 위에 위치하며, 높은 일관성을 보인다. 만약 각 원인경로가 모든 사례를 설명한다면, 즉 배열이 모든 사례에서 충분하다면 모든 사례는 대각선의 위에 위치하고, 일관성은 1이 된다.

본 분석에서는 원인경로 가)와 나)에서 일부의 사례들이 대각선 축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인경로 가)에서 이런 사례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이며, 원인경로 나)에서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포르투갈이 해당한다. 이들 사례는 '국민행복 수준은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세 조건결합의 수준을 반영한다', '국민행복 수준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의 세 조건결합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이론적 진술보다 그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이들 사례는 대각선 축에서 상당히 떨어진 아래에 위치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이론적 진술과 크게 배치되는 사례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원인경로는 결과집합에 대해서 충분조건이 되는 일관성이 높다.

이제부터는 각 국가들이 보이는 행복수준이 어떤 원인경로에 의해서 더 설명되는지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두 원인 경로의 소속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불리언대수의 'OR' 방법을 이용한다. 각 원인경로는 모든 사례를 설명하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 분석을 통해서 특

정 국가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배열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을 설명하는 첫번째 원인 경로-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세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는 국가는 덴마크,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이다. 덴마크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높은 국민행복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조건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 원인경로-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의 세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는 국가는 핀란드, 스위스, 포르투갈이다. 이들 국가는 사회적 포용성이 높은 국민행복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조건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외의 국가들은 두 원인경로에의 소속점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4. 사회의 질 수준, 국민소득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발전수준으로 구성한 원인 배열 중 '높은 국민행복'을 이루는데 충분한 것으로 검증된 배열을 확인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 일관성과 설명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인배열과 결과배열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만약 원인배열의 소속점수보다 결과배열의 소속점수가 높은 사례가 많다면 일관성은 높더라도 설명력은 낮아진다.

앞의 [그림 4-4]에서 좌상단에 위치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자. 첫째 원인경로에서는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호주, 미국, 오스트리아가, 둘째 원인경로에서는 아일랜드, 캐나다, 스위스, 호주,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리아가 원인배열 소속점수보다 결과집합 소속점수가 상당히 높다.[135] 원인배열 소속점수보다 결과집합 소속점수가 높은 것은 제시된 원인배열 이외의 대안적인 원인조건이나 원인배열이 존재함을 의미한다(Rihoux & Ragin, 2009).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이외의 원인 조건이 이들 국가에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단계 분석모델에서는 국민행복 수준에 대한 원인조건으로 국민소득 수준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2단계 분석모델의 일반적인 설명은 앞의 분석모델 1과 같다.

---

135) 이 중에서 핀란드는 둘째 원인경로에 의해서,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첫째 원인경로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되는 국가이므로 논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뒤 이을 분석에서는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 1) 사회의 질, 국민소득 수준과 국민행복수준의 진실표

〈표 4-11〉은 모두 5개의 원인집합 상황에서 '높은 국민행복' 결과집합을 구성하는 각 배열의 진실표이다. 가능한 배열은 모두 2^5의 32개이지만, 사례가 존재하고 일관성 값이 .90을 넘는 경우에만 결과집합의 하위집합으로 판단할 때 13개의 배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1〉 결과집합에 대한 원인집합의 진실표

| 배열 | 원인집합 | | | | | 결과집합 | 사례수 | 일관성값 (Consist) | 최적 사례 해당 국가 |
|---|---|---|---|---|---|---|---|---|---|
| | 사회경제적 안전성 (S=FSES) | 사회적 응집성 (C=FSC) | 사회적 포용성 (I=FSI) | 사회적 역능성 (E=FSE) | 국민소득 (1인당 GDP) (W=FGDPPPP) | 국민행복 | | | |
| sCIeW | 0 | 1 | 1 | 0 | 1 | 1 | 1 | 1 | USA |
| sCIEW | 0 | 1 | 1 | 1 | 1 | 1 | 1 | 1 | CAN |
| sCiEW | 0 | 1 | 0 | 1 | 1 | 1 | 1 | 0.998 | AUS |
| SCIeW | 1 | 1 | 1 | 0 | 1 | 1 | 1 | 0.989 | IRL |
| SCieW | 1 | 1 | 0 | 0 | 1 | 1 | 1 | 0.985 | CHE |
| SCIEW | 1 | 1 | 1 | 1 | 1 | 1 | 5 | 0.977 | DNK, LUX, NLD, NOR, SWE |
| SCiEw | 1 | 1 | 0 | 1 | 0 | 1 | 1 | 0.97 | FIN |
| sCIEw | 0 | 1 | 1 | 1 | 0 | 1 | 1 | 0.969 | NZL |
| ScIEW | 1 | 0 | 1 | 1 | 1 | 1 | 1 | 0.964 | AUT |
| scIEW | 0 | 0 | 1 | 1 | 1 | 1 | 1 | 0.963 | GBR |
| ScIEw | 1 | 0 | 1 | 1 | 0 | 0 | 1 | 0.898 | BEL |
| Sciew | 1 | 0 | 0 | 0 | 0 | 0 | 2 | 0.75 | FRA, DEU |
| sciew | 0 | 0 | 0 | 0 | 0 | 0 | 7 | 0.534 | GRC, HUN, ITA, JPN, KOR, PRT, ESP |

1단계 분석에서 원인배열 소속점수보다 결과집합 소속점수가 높았던 국가들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국민소득 집합에 대한 소속점수가 분기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핀란드와 뉴질랜드는 예외적이다. 따라서 대체로 이들 국가에서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는 원인경로를 설명함에 있어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된다.

### 2)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검증

이제부터는 각 조건집합에 대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하도록 한다. 〈표 4-12〉는

원인조건 집합의 필요조건 검증 결과이다. 검증 기준은 앞서와 같이 Y-일관성과 N-일관성을 비교하여 검증 통과여부를 판단하였다. 1단계 분석모델에서 나타난 사회의 질 세 조건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높은 국민행복을 보이기 위해서 '거의 항상' 필요조건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4-12〉 국민행복에 대한 사회의 질, 국민소득 수준의 필요조건 검증 결과

| 집합 | Y-일관성 | N-일관성 | F | 이항확률 | 설명력 | 검증통과여부 1) Ycons>=.Ncons, p <.05 | 검증통과여부 2) Ycons>=.Ncons, p <.10 |
|---|---|---|---|---|---|---|---|
| 사회경제적 안전성 | 0.754 | 0.55 | 2.14 | 0.157 | 0.771 | | |
| 사회적 응집성 | 0.879 | 0.45 | 15.53 | 0.001 | 0.889 | 통과 | 통과 |
| 사회적 포용성 | 0.855 | 0.499 | 10.23 | 0.004 | 0.845 | 통과 | 통과 |
| 사회적 역능성 | 0.827 | 0.579 | 4.01 | 0.057 | 0.869 | | 통과 |
| 국민소득 | 0.849 | 0.521 | 9.38 | 0.006 | 0.863 | 통과 | 통과 |

다음 〈표 4-13〉은 충분조건 검증 결과이다. 검증기준은 분석모델 1과 같이 두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여 공통된 배열을 확인하였다. 검증기준을 통과한 원인 배열은 모두 6개이다.

〈표 4-13〉 국민행복에 대한 사회의 질, 국민소득 수준의 충분조건 검증 결과

| 배열 | 검증기준 cosist >= benchmark .80, p <.05 | | | | 검증기준 cosist >= .Ncons, p <.05 | | | |
|---|---|---|---|---|---|---|---|---|
| | Y-일관성 | 검증기준, 설정값 | F | 유의 확률 | N-일관성 | F | 유의 확률 | 최적 사례수 |
| sCieW | 0.998 | 0.8 | 8072.27 | 0.000 | 0.855 | 5.71 | 0.025 | 0 |
| sCiEW | 0.998 | 0.8 | 8198.33 | 0.000 | 0.831 | 6.3 | 0.02 | 1 |
| SCIEw | 0.99 | 0.8 | 409.89 | 0.000 | 0.775 | 5.83 | 0.024 | 0 |
| SCiEW | 0.988 | 0.8 | 337.46 | 0.000 | 0.797 | 5.39 | 0.029 | 0 |
| SCIEW | 0.977 | 0.8 | 196.07 | 0.000 | 0.619 | 13.1 | 0.001 | 5 |
| sCIEw | 0.969 | 0.8 | 40.01 | 0.000 | 0.798 | 7.82 | 0.01 | 1 |

주: 두 검증 기준을 통과한 배열 중에서 공통된 배열만 제시하였다.

모두 여섯 개의 원인 배열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세 개의 배열(sCieW, SCIEw, SCiEW)은 최적의 사례가 부재한다. 원칙적으로 이 배열은 충분조건의 최종분석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Ragin(2000: 198-202)은 fsQCA 과정에서 '단순화 가정'(simplifying assumption)을 설명하면서, 다양성이 제약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조건 조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sQCA에서는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기준점 이상인 국가가 부재한 상황이라도 소속점수가 기준점에 근접하는 국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표의 네번째 배열(SCiEW)에 소속점수가 분기점인 .5를 넘는 국가는 부재하지만, 스위스는 이 배열 소속점수가 .4944, 호주는 .4643, 프랑스는 .4594로 나타나 기준점에 근접한다. 따라서 해석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배열을 배제하지 않고 최종분석에 포함한다.

축약의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세 원인경로가 확인되며,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결합식(solution)은 다음과 같다.

〈수식 4-2〉 국민행복에 대한 결합식(분석모델 2)

**LFS('높은 국민행복')=**
**fses*FSC*fsi*FTGDPPPP**
**(낮은 사회경제적 안전성*높은 사회적 응집성*낮은 사회적 포용성*높은 국민소득)**
**+ FSC*FSI*FSE*ftgdpppp**
**(높은 사회적 응집성*높은 사회적 포용성*높은 사회적 역능성*낮은 국민소득)**
**+ FSES*FSC*FSE*FTGDPPPP**
**(높은 사회경제적 안전성*높은 사회적 응집성*높은 사회적역능성*높은 국민소득)**

〈표 4-14〉 국민행복의 세 원인경로[분석모델2]

| 원인경로 | 개별설명력 (Raw Coverage) | 구분설명력 (Unique Coverage) | 일관성 (Consistency) |
|---|---|---|---|
| 다) fses*FSC*fsi*FTGDPPPP | 0.362 | 0.043 | 0.998 |
| 라) FSC*FSI*FSE*ftgdpppp | 0.443 | 0.044 | 0.967 |
| 마) FSES*FSC*FSE*FTGDPPPP | 0.598 | 0.16 | 0.977 |
| 총설명력(Total Coverage) = 0.697<br>결합식의 일관성(Solution Consistency) = 0.965 | | | |

〈표 4-14〉는 분석모델 2에서 국민행복에 대한 세 원인경로 각각의 개별설명력, 구분설명력, 일관성과 결합식의 총설명력, 일관성을 제시한다.

최종 결합식을 구성하는 각 원인경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상대적 수준에서 그 설명력이 낮은 첫째 원인경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은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응집성이 높으며,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보인다(일관성= .998). 이 원인경로의 설명력은 .36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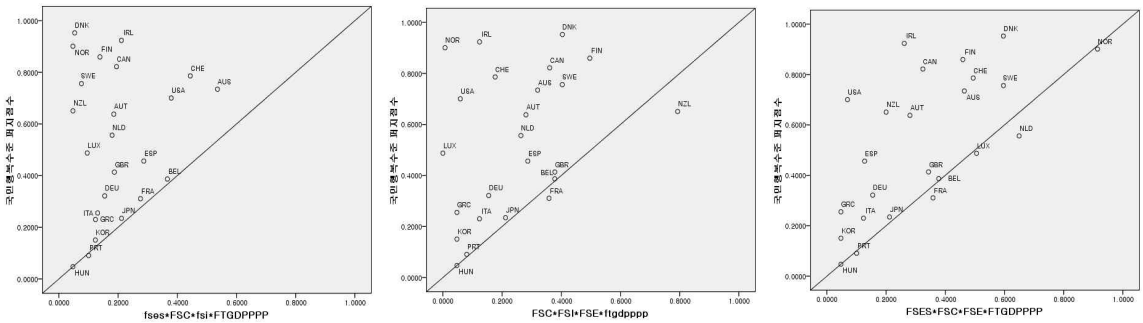
둘째 원인경로는 국민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국가는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보인다(일관성= .967). 이 원인경로의 설명력은 .443이다.

셋째 원인경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높은 국민행복을 보인다(일관성= .977). 이 원인경로의 설명력은 .598이다.

세 원인경로의 결합식이 국민행복의 하위집합이 되는 일관성은 .965로 나타나며, 결합식의 총설명력은 .697로 나타난다. 두 원인경로 각각이 상당한 설명력을 가졌던 분석모델 1과는 달리 분석모델 2에서 원인경로 다)와 라)의 개별설명력은 낮은 편이다. 이는 국민소득 수준이 추가된 분석모델 2에서 각 원인경로가 상정하는 논리적 진술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이 존재함을 말하며, 이는 각 원인경로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는 국가들이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인경로 마)의 개별설명력은 분석모델 1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사례의 해석

[그림 4-5]는 국민행복 정도를 Y축에, 분석모델 2에서 확인한 세 원인경로를 X축에 놓은 산점도로, 이를 통해서 각 원인경로가 설명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관성 값=.998, 설명력 값=.362　　일관성 값=.967, 설명력 값=.443　　일관성 값=.977, 설명력 값=.598

[그림 4-5] 원인경로에 따른 '높은 국민행복'(분석모델2)

국민소득 소득 수준을 추가함으로써 앞서 분석모델 1에서 설명력이 낮았던 국가들의 사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모델 2에서는 분석모델1과는 달리 부(-)적 진술이 원인경로에 포함되는데, 각 사례를 세 원인경로의 비교 차원에서 해석할 때에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첫 번째 원인 경로(causal pathways)에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보이는 국가는 호주와 미국이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응집성과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

에 높은 국민행복이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은 이들 국가에서 행복수준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원인경로에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국가는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드이다. 이들 국가는 앞서 분석모델 1에서도 충분히 설명되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국민소득 수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이들 국가에서 국민소득 수준은 국민행복을 설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보인다.

세 번째 원인경로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국가는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이다. 이들 국가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고, 국민소득이 높기 때문에 국민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원인조건에 국민소득 수준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의 질 수준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일부국가들의 국민행복 수준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의 질 이론은 네 하위분면의 발달이 이뤄진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가정하였지만,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국민행복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추가한 국민소득 수준은 일부 국가들에서 왜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회의 질 이론이 사회발전의 결과로서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성격규정과 지표 선정에 있어 추가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 4절. 소결

4장에서는 측정한 사회의 질의 분석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의 질 수준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적 조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적 조건을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으로 상정한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수준 각각이 가지는 독립적 영향력을 확인하기보다는 네 하위분면 발달수준이라는 원인조건 조합 중 어떠한 조건조합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은 2장에서 확인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국민행복 수준의 삶의 만족 정도에 대한 각 국가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째는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높은 국민행복을 보이는 원인조건으로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발달 수준을 상정하였다. 둘째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발달 수준과 더불어 각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사적 자원의 양을 표상할 수 있는 국민소득 수준을 원인조건으로 투입하였다. 둘째 분석에서 국민소득 수준을 투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의 질이 유럽적 가치를 반영한 측정틀로 비유럽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징인 국가를 통한 공적 자원 제공의 취약함을 고려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분석적 차원에서도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비유럽 국가, 특히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사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만을 고려한 분석모델 1에서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국민행복을 보이기 위해 거의 항상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조건이 결합한 높은 국민행복의 원인경로는 두 개로 나타났다. 첫째는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원인경로이다. 둘째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원인경로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포함되지 않은 첫째 원인경로에 의해서 국민행복 수준이 더 잘 설명되는 국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회적 포용성이 포함되지 않은 둘째 원인경로에 의해서 국민행복 수준이 더 잘 설명되는 국가는 핀란드, 스위스, 포르투갈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포용성은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질 하위분면 만을 원인조건으로 반영한 분석모델 1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높은 국민행복이 나타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들의 행복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주로 공식적 제도 영역에서의 자원 제공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국민행복에 미치는 경제적 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이유로 판단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국가에서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적 자원의 표상으로 국민소득 수준을 원인조건에 추가하였다.

추가한 국민소득 수준은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항상 필요조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소득 수준을 포함한 조건조합에서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는 원인경로는 세 가지가 확인되었다. 첫째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낮고, 사회적 포용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 응집성과 국민소득이 높은 경우였다. 둘째는 국민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경우였다. 셋째는 사회경

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 국민소득이 높은 경우였다. 분석모델 1과 비교하여 주목할 만한 원인경로는 첫 번째 원인경로로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낮더라도, 국민소득과 사회적 응집성이 높은 경우에 국민행복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이다. 이의 대표적인 국가는 호주와 미국이었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발달 수준을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이용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갖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질은 사회수준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도구틀로 기능하였다. 사회의 질이 사회발전 수준의 측정 지표틀로서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이를 적용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사회의 질 수준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이 분석적 유용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중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은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조건인 것으로, 그리고 네 하위분면은 조건결합을 통해서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의 질 이론이 네 하위분면을 통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데, 이런 정책성과 수준의 특정 조합이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의 질 이론이 보다 많은 국가의 사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은 성격 규정에서 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발달 수준은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위한 필요조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낮으면서도 국민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비유럽의 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유럽의 사회모델로 제시된 사회의 질 이론이 비유럽의 국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범세계적 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이론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가별로 그리고 국가유형별로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는 경로는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행복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에서는 특정 원인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인조건의 결합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높은 국민행복이 나타나는 경로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별로 높은 국민행복수준이 나타나는 경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의 질의 네 하위 분면만을 중심으로 국민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낮더라도 국민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일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국민행복은 단일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이 결합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가별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각각이 발달하는 수준은 차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 하위분면만이 발달한 경우에는 높은 국민행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높은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질의 전반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조건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이 특히 강조됨을 확인하였다.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모든 원인경로에는 사회적 응집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 자본 논의의 주요한 측정지표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사회적 자본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자본 수준과 행복 간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발달한 복지국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본 논문에서도 사회적 응집성과 행복 간의 중요한 관계가 확인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제도적 발전을 이룬 사회에서도 사회적 응집성의 제고는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사회적 응집성은 사회적이며 주관적인 측정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Perceived Quality of Society)을 표상한다. 사회적 응집성이라는 주관적 영역은 객관적 제도 영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응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객관적 제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수준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교국가 차원에서 확인되는 높은 국민 행복의 경로를 제시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한국 복지국가가 발전의 경로 상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발전의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발달일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발달은 높은 국민행복 수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국민행복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발전의 경로를 상정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식의 발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응집성의 제고는 이런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제 5장. 결론

## 제 1절. 연구 요약

본 논문은 경제적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측정하고, 이를 복지국가 발전수준의 다양한 맥락을 확인하고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연구과정을 거쳤다. 첫째, 경제적 선진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제까지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경제적 안전성 보장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보장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한 정책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사회의 질 이론은 이런 정책 목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제시하는 정책틀이면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측정틀로 기능한다. 그러나 사회의 질 이론이 제시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측정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측정을 목표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각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측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Min-Max Normalization Methods)을 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각 하위영역 지수를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하위분면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과정에서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과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에 입각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을 복지국가 논의와 연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질이 복지국가를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도구틀이 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경제적 안전성 보장에 주목하여 왔던 복지국가 수준이 사회의 질 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지국가 투입(input)으로써의 사회지출 변수, 복지성과(output)를 보여주는 여러 변수들과 사회의 질 하위분면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발전 수준에 따라 국가를 유형화하고 이를 복지국가 체제와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셋째, 사회적 조건요인으로써 사회의 질 수준이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접근이 가지는 분석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하여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이 높은 국민행복의 필요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네 하위분면의 어떠한 조건결합이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충분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덧붙여 국민소득을 조건요인으로 추가하였는데,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주로 공식적 제도 영역의 자원 수준을 대표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회의 질을 조건요인으로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고자 한 것은 사회의 질 접근의 분석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 실제 사례의 적용을 통해서 이론적 논의의 개선 여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발전의 목표를 설정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국민행복 수준은 삶의 만족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사람들이 생애기간 동안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재정적 자원, 주거와 환경, 건강과 돌봄, 일, 교육의 다섯 하위 영역에서 19개 측정지표를 확인하였다. 이를 지수화한 결과,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높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수준을 나타냈다. 반대로 한국,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낮은 사회경제적 안전성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 응집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 정체성의 네 하위 영역에서 8개 측정지표를 확인하였다. 지수화의 결과,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의 순서로 높은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에 헝가리,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포르투갈, 일본은 낮은 사회적 응집성 수준을 나타냈다.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와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시민권, 노동시장에의 포용, 서비스,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의 네 하위영역에서 11개 측정지표를 확인하였다. 지수화의 결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의 순서로 높은 사회적 포용성 수준을 보였고, 한국,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은 낮은 사회적 포용성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능성은 시민들이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간역량과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식기반,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 제도의 개방 및 지원, 공적 공간, 대인관계 지원의 다섯 하위영역에서 12개 측정지표를 확인하였다. 지수화의 결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높은 사회적 역능성을 보였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일본은 낮은 사회적 역능성을 보였다.

측정한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을 바탕으로 총괄적인 사회의 질 수준을 확인하였는데, 일부 편차는 존재하지만 스칸디나비안 국가–앵글로 색슨 국가들–대륙유럽 국가들–남유럽국가들의 순으로 높은 사회의 질을 보였다. 한편,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 수준이 모두 낮은 그리

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회의 질 발달 수준에서는 그 하위분면별로 개별 국가에 따라서 상이한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측정한 사회의 질과 복지국가 지표, 체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복지국가 지표와 사회의 질 하위분면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복지국가 투입으로서 사회지출 변수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안전성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회지출 변수는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과도 관련되지만, 어떤 사회지출 변수도 사회적 응집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경제적 안정 보장 능력만으로는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안전성 보장 수준으로 복지국가를 이해하여왔던 맥락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이 해석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복지국가를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의 질 접근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다른 지출 변수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지출 수준은 사회의 질의 보다 다양한 맥락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비교국가 차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사회서비스 지출의 활성화는 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와 관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복지성과 수준의 변수와 사회의 질 하위분면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역시 사회의 질 수준의 발전과 상당한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의 결과 네 개의 군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Esping-Andersen(1990;1999)의 세 가지 복지체제 유형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남유럽 복지국가들의 독특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높은 사회적 응집성을 특징으로 한 군집에 속했으며, 주로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평균적인 사회의 질 발전수준을 보이는 군집에 속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이 고르게 발달한 군집에 속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을 제외한 남유럽 국가와 한국은 사회의 질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군집에 속했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의 결과가 복지국가 체제유형과 비슷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사회의 질이 구성되는 방식도 복지국가의 제도적 배열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기존의 복지국가 수준이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만을 설명하는 것을 고려하면, 사회의 질을 통한 복지국가 접근이 복지국가를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틀이 됨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조건 요인으로써 사회의 질 수준과 국민행복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분석에서는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만을 조

건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분석에서는 이에 더하여 국민소득 수준을 조건요인에 추가하였다.

첫째 분석의 결과,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국민행복을 위해서 거의 항상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국민행복이 나타나는 사회의 질의 조건결합은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원인경로와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역능성이 높은 원인경로 두 가지가 확인되었다. 즉, 높은 국민행복은 사회의 질의 어느 특정한 하위분면이 발달한다고 하여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각 하위분면 조건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분석에서는, 공적자원 영역으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국민행복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사적자원 영역을 표상하는 국민소득 수준을 조건요인에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소득 역시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추가한 국민행복의 원인경로는 세 가지가 확인되었으며, 국민소득 수준을 포함함으로써 사회의 질 수준의 원인경로로는 국민행복 수준의 설명력이 낮았던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높은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할 수 있었다.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요조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수준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반면에 사회의 질, 국민소득과 국민행복의 관계에서는 어떤 원인경로에서든 사회적 응집성이 높은 국민행복 수준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에 항상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응집성은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일관성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질이 구성되는 맥락을 살펴볼 때 사회적 응집성이 높은 국가는 대체적으로 다른 하위분면의 발전 수준 또한 높은 편이다. 결국 사회의 질의 전반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제 2절. 연구의 함의

### 1. 이론적 함의

이 논문은 다음의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의 단계로 확장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매우 드물었고, 측정을 하더라도 지표를 중심으로 하위분면을 재배치하거나(Yee

& Chang, 2009), 하위분면 만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장덕진, 2010). 이 연구에서는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구성요소(conditional factors)로서 18개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배치함으로써, 사회의 질 네 하위분면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더라도, 기본적인 구성틀은 변경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사회의 질 수준에 대한 본 논문의 측정은 향후 사회의 질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회의 질의 이론적 맥락에서 네 하위분면 차원을 측정하였을 때, 이 네 하위분면으로 복지국가 수준을 이해하는 것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안전성 보장에 주력하였던,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바라보아왔던 관점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국가 또는 사회투자국가(Lister, 2003), 빈곤과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으로서 사회적 배제(Levitas, 1998; Pierson, 2002; Room, 1995;1999), 사회적 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응집(Gough & Olofsson, 1999) 등의 개념은 복지국가의 전략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측정한 사회의 질을 바탕으로 복지국가 수준을 논의하였으며, 현대 복지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복지국가 논의가 주로 주목해왔던 사회경제적 안전성 이외에 다른 사회적 맥락-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셋째, 사회의 질을 통한 접근으로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행복수준을 설명하는 삶의 질 접근에 비해서, 사회의 질 접근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질 수준의 실측이 부재하여 이 접근의 실재적 유용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의 질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이론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의 질의 사회경제적 안전성 하위분면은 비유럽국가들에서는 국민행복 수준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의 질 이론틀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책의 발전 목표를 상정한 이유일 때문일 수 있다(Lin et al., 2009; van der Maesen & Verkleij, 2009). 사회의 질 논의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측정 차원을 주로 공적 제도 영역의 자원에 주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적 자원 영역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행복 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확인하였고, 사회의 질 논의가 외연을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 보다 다각화된 개념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사회의 질과 인식차원으로서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의 질 논의에서는 사회(the social)가 인간관계의 맥락으로 해석되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현실화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건요인(conditional factors), 구성요인(constitutional factors), 규범요인(normative factors)의 세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Beck et al., 2001b; Herrmann & van der Maesen, 2008). 이때 구성요인은 한 사회구성원이 인식하는 평가의 도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틀에서 제시하는 구성요인은 아니지만, 사회구성원들이 느끼는 인식차원으로서 행복 수준과 사회의 조건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구성원들이 요구하는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즉 행복에 필요한 조건요인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사회는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136]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조건요인에 주목하여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지만, 구성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행복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이 연구가 향후 사회의 질 연구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틀을 구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포괄하고 있는 사회의 질 이론틀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정한 사회의 질 수준과 복지국가, 그리고 국민행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측정의 단계, 그리고 측정의 결과를 적용한 분석의 결과에서 확인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은 어느 한 지표차원, 또는 하위영역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하여, 총체로서의 질적 수준 고양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의 질의 하위분면 수준은 한 두 개의 변수나 하위영역으로 그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 보다 질적인 차원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사회적 포용성 분면에서 노동시장에의 포용 하위영역 수준이 6위로 나타나는데 이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비율과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지표 수준에서의 문제를 차치하고, 이 하위영역에서의 발달 수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포용성에서 한국은 24위를 보인다. 반면에 각 하위분면 수준에서 높은 발전 수준을 보

136) 조건요인과 구성요인의 관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사례는 '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음에도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에서 행복에 필요한 물질적 기대가 낮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행복이 사회정의, 연대, 동등한 가치, 인간존엄과 같이 모든 사회가 공히 특정한 수준을 지향해야 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기대하는 행복의 기준이 낮고, 이를 보장하는 조건요인이 낮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국가들은 하위분면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에서도 고른 발달 수준을 보였다. 이는 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설정함에 있어 어느 한 지표의 개선에만 주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전반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복지국가의 경제적 보장 능력은 사회의 질의 일부분 만 설명할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질은 주로 경제적 안전성 보장 능력과 관계되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 외에도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측면을 통해 복지국가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세 하위분면은 대체로 복지국가 지출 수준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들 영역을 보다 잘 설명하는 복지국가 변수는 'GDP 대비 현물 사회지출'의 사회서비스 지출이 있었고, 실업률, 고용률과 같은 일자리 관련 정책 성과였다.

현 시기 한국 복지국가는 발전의 경로에 서 있음은 분명하다. 복지정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욕구의 분출의 결과 복지지출의 증가가 이뤄질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은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양적 확대가 무의미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여러 정책 차원이 존재함을 밝혔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OECD 24개국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경제적 성장과 복지국가의 성장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회발전의 목표들이 부각된다.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수준에서도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비교국가 차원에서 사회의 질과 국민행복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발전의 경로를 상정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높은 국민행복이 나타나기 위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런 경로에는 항상 사회적 응집성이 포함된다. 즉, 사회적 응집성 수준이 국민행복 수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국민행복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에 사회적 응집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원인과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비교국가 차원에서 높은 국민행복을 위한 원인경로에서 사회적 응집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사회는 측정한 사회적 응집성의 수준이 23위였다. 한국보다 낮은 사회적 응집성을 보이는 국가는 헝가리뿐이었다.

사회적 응집성의 하위 영역 중 일반신뢰, 부패인식지수와 제도신뢰로 측정한 신뢰수준은 20위, 자원봉사참여율과 관용으로 측정한 통합적 규범과 가치는 24위, 단체참여는 8위, 국

가자긍심은 22위를 나타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을 주로 인식된 사회의 질적 측면으로 상정하였으며, 이는 주로 사회의 객관적 제도 영역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사회적 응집성의 한 영역인 신뢰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들에서도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다(박병진, 2007; 박종민·김왕식, 2006). 하지만 신뢰수준을 포함한 사회적 응집성 영역은 그것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다른 하위 영역의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상훈·정해식(2010)은 사회의 질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충족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며, Yee and Chang(2009)은 체계(system) 차원의 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사회적 응집성의 차원을 반영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장기적 전망 하에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각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제도에 포함되고, 각 개인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의 정도를 반영하는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 분면은 이런 제도 영역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한국 사회는 각각 24위와 17위로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에서 한국은 시민권 하위 영역과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매우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늦은 발달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비교대상 국가 중 공적연금의 수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며, 남녀 간의 임금격차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민권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려할 만하다.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사적 도움의 가능성'으로 측정한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역능성에서는 노동시장 하위영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고용계약의 집단적 통제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환경의 통제 가능성으로서 역량수준을 보여주는 데, 한국은 이 수준에서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수준 역시 낮은 편이다. 다만 지식기반의 하위영역에서는 비교적 발달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제도영역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에서도 24위로 매우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동시간, 산재사망률, 정규고용자 비율 등이 크게 낮은 편으로, 이들을 포함한 일 영역에서의 발전 수준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각 하위분면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한국 사회는 주거와 환경, 일, 통합적 규범과 가치, 시민권, 사회적 관계에의 포용, 노동시장에서의 통제와 역능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그 현상을 정확히 보고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에의 포용도 실제 수준에서는 결코 양호한 편이 아닐 것이다. 대체로 노동시장과

관련한 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성장일변도의 발전의 과정 이면에 놓여 있었던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제는 국민행복의 제고를 위해서 성장의 가능성 뿐 아니라 지속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이들 영역에 정책적 개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질 수준의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행복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제도 영역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서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의 수준은 사회적 응집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적 포용성이 낮고, 사회적 역능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사회적 응집성 또한 높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현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발달에 대한 요구도 분명 중요하지만, 사회적 포용성과 역능성 수준의 발달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발전의 결과 행복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응집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문헌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정식(역). (2011).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Jeremy Bentham, 1970,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나남출판.

구재선·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25(2), 143-66.

김교성·김성욱. (2010).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사회복지학*, 62(1), 5-30.

김기덕. (2009). 사회복지적 행복론에 대한 탐색적연구.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심포지움(행복사회와 문화정책의 방향) 논문집, (pp. 293-305). 한국사회학회.

김상균·권태환·이문웅·이정전·김태성·조흥식. (1996).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수근·안홍엽·이은희. (2009).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승권·장경섭·김호기. (2009).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장영식·조흥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안나. (2007).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1), 351-79.

김영미·최영준·안상훈. (2010). 한국의 복지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19-53.

김영미. (2007). 복지국가와 여성노동권: 제도적 지원과 보장수준 관계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용하·윤강재·김계연. (2009).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선. (2010).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종일. (2010). 대륙복지국가의 활성화정책 추이에 관한 퍼지 집합 이념형 분석, 2000-2007. *사회보장연구*, 26(2), 253-84.

남재량. (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29-40.

노대명·강신욱·전지현. (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노대명·이현주·강신욱·강은정·전지현·이은혜. (2009).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2002). 『생산적 복지,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문진영. (2010).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87-107.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박종민, & 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69.
박희봉·이희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105-28.
박희봉. (2009).『사회자본-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백승호. (2005).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백승호. (2006).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척도 구성과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사회복지연구*, 29, 71-105.
서은국·구재선·이동귀·정태연·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213-32).
신현중. (2010). 남유럽국가들의 복지국가로의 발전 양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239-68.
안상훈·김영미·최영준. (2010).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안상훈. (2002). 비교사회정책 연구방법론의 서설적(序說的) 이해. *비판사회정책*, 13, 47-71.
안상훈. (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205-30.
안상훈·정해식. (2010). 복지지위와 '사회의 질(SQ)'. *한국사회정책*, 17(3), 93-121.
안상훈. (2011).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 *경제논집*, 50(3), 263-93.
안상훈·강상경·권문일·김진욱·김찬우·류연규·백승호·이상은·정연택·정익중·주은선·최용준·황보람. (2007). 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양혜원. (2011). OECD 주요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공편역). (2003).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그린.
윤홍식·송다영·김인숙. (2011).『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고양: 공동체.
이병기. (2008). 사회적 신뢰와 경제성장 : 이론과 실증. *제도와 경제*, 4(1), 123-52.
이진석. (2012).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강화 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21).
이창식(역). (2010).『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2009. Justice. 김영사.
이태진·박은영. (2009). '사회의질'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보건복지포럼*, 2008(4), 48-56.
이태진·김태완·권소현·김성철·김문길·우선희·박은영. (2008).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이희길,·신지성. (2010). 사회지표 개편 기초연구 Ⅰ. 통계개발원.
이희길·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장덕진. (2010).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 현황. In 곽금주·김대일·이봉주·임혜란·장덕진 (Eds.),『자유기업 경제 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 (pp. 1-28).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장용석·박명호·강상인·오완근·이영섭·한상범·박찬열·정명은·박나라. (2010).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I)- 통합사회지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의룡·양재진. (2012).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한국정치학회보*, 46(1), 309-36.
정진성·박경숙·이재열·장덕진·장상철·고형면·장진호·이원재·안정옥. (2010). 『사회의 질 동향 2009』.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정해식·안상훈. (2011). 사회의 질 하위 영역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안전성과 사회적 응집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205-33.
조권중·변미리. (2009). 서울 도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영훈. (2001). 유럽통합과 복지국가-복지지출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206-26.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307-37.
통계청. (2009).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통계청.
하연섭. (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한국행정학보*, 36(4), 339-59.
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6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2. 국외 문헌

Adelle, C., & Pallemaerts, M. (2009).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uropean Communities.
Ahn, S.-H.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niversity.
Aldenderfer, M. S., & Blashfield, R. K. (1984). *Cluster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s.
Alesina, A., Di Tella, R., &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10), 2009-42.
Alkire, S., & Santos, M. E. (2010). Acute Multidimensional Poverty: A New Index for Developing Countries.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per(No, 2010/11). UNDP.
Allan, J. P., & Scruggs, L. (2004). Political Partisanship and Welfare State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3), 496-512.
Andres, H.-J.,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la Review*, 17(4), 337-56.
Andrews, D., & Sánchez, A. C. (2011). Drivers of Homeownership Rat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No, 849). OECD.
Argyle, M. (1996).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London: Penguin.
Atkinson, R., & Davoudi, S. (2000).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427-48.

Bauer, R. A. (Ed.). (1966). *Social Indicator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Beck, W., van der Maesen, L. J. G., & Walker, A. (1997a).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Bristol: The Policy Press.

Beck, W., van der Maesen, L. J. G., & Walker, A. (1997b). Social quality: from issue to concept. In W. Beck, van der Maesen, L.G.D., & A. Walker (Eds.),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pp.301-40). Bristol: The Policy Press.

Beck, W., van der Maesen, L. J. G., & Walker, A. (2001a). Theorizing Social Quality: The Concept's Validity. In W. Beck, van der Maesen, L. J. G., F. Thomése & A. Walker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pp. 305-51).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Beck, W., Keizer, M., van der Maesen, L. J. G., & Phillips, D. (2001b). General paper on behalf of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the network 'Indicators social qualit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Amsterdam.

Beck, W., van der Maesen, L. J. G., Thomese, F., & Walker, A. (2001c).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Berger-Schmitt, R. (2000).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aulity of Societies: Concept and Measurement. Eureporting Working Paper(No, 14). Mannheim: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

Berger-Schmitt, R. (2002). Considering social cohesion in quality of life assessments: Concept and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3), 403-28.

Berger-Schmitt, R., & Noll, H.-H. (2000). Conceptual Framework and Structure of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Eureporting Working Paper(No, 9). Mannheim: Centre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ZUMA).

Bergh, A., & Bjørnskov, C. (2011). Historical Trust Levels Predict the Current Size of the Welfare State. *Kyklos*, 64(1), 1-19.

Berman, Y., & Phillips, D. (2000).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at National and Community Lev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3), 329-50.

Berman, Y., & Phillips, D. (2004). Indicators for Social Cohes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msterdam. June 2004.

Beugelsdijk, S., & van Schaik, T. (2005). Social capital and growth in European regions: an empirical tes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1(2), 301-24.

Bhalla, A., & Lapeyre, F. (1997). Social exclusion: Towards an analytical and operational framework. *Development and Change*, 28(3), 413-33.

Bjørnskov, C.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1), 22-40.

Bjørnskov, C. (2009). How Does Social Trust Affect Economic Growth? Aarhus Economics Working Paper(No, 06-2).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0).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No, 7487).

Boarini, R., & Strauss, H. (2010). What is the private return to tertiary education? New evidence from 21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2010(4), 1-25.

Bok, D.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onoli, G. (2007a). Too Narrow and Too Wide at Once: The 'Welfare State' as Dependent Variable in Policy Analysis. In J. Clasen & N. A. Siegel (Eds.),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pp. 24-39).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Bonoli, G. (2007b).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495-520.

Bonoli, G., & Palier, B. (1998). Changing the Politics of Social Programmes: Innovative Change in British and French Welfare Reform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8(4), 317-30.

Bouget, D. (2006). Convergence in Social Welfare Systems: From Evidence to Explan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6(1), 109-26.

Bradshaw, J. (Ed.). (2008). *Social Security, Happiness and Well-being*. Antwerp: Intersentia.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Jersey: Ruters University Press.

Castles, F. G. (2002). Developing new measures of welfare state change and refor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1(5), 613-41.

Castles, F. G. (2004).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stles, F. G., & Mitchell, D. (1992). Identifying Welfare State Regimes: The Links Between Politics, Instruments and Outcomes. *Governance*, 5(1), 1-26.

Chan, J., To, H.-P., &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273-302.

Clark, A. E., &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104(424), 648-59.

Cohen, G. A. (1993). Equality of What? On Welfare, Goods, and Capabilities. In M. Nussbaum &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pp. 9-2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leman, J. S. (1986). Social Theory, Social Research, and a Theory of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6), 1309-35.

Di Tella, R., & MacCulloch, R. (2008). Gross national happiness as an answer to the Easterlin Paradox?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6(1), 22-42.

Di Tella, R.,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27.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75.

Diener, E. (2009). Subjective Well-Being. In E. Diener (Ed.), *The Science of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pp. 11-58). London: Springer.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85-218). Cambridge: The MIT Press.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1), 7-32.
DiMaggio, P. J., & Powell, W. W.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60.
Dincer, O. C., & Uslaner, E. M. (2007). Trust and Growth FEEM Working Paper(No, 73).
Dolan, P., Peasgood, T., & White, M. (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94-122.
Dowding, K. M., & King, D. S. (Eds.). (1995). *Preference, Institutions, and Ratioal Choice*. Oxford: Clarendon Press.
Drobnic, S., Beham, B., & Prag, P. (2010). Good Job, Good Life? Working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in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2), 205-25.
Duesenberry, J. S. (1949). *Income, Savings,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u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uffy, K. (1995). *Social exclusion and human dignity in Europe*.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 M.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Easterlin, R.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1), 35-47.
Easterlin, R. A.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473), 465-84.
Easterlin, R. A.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29-43.
Easterlin, R. A. (2007). Building a Better Theory of Well-being. In L. Bruni & P. L. Porta (Eds.), *Economics and Happiness* (pp. 29-64). Oxford: Oxford Universtiy Press.
EIU.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of-life index from. http://www.economist.com/media/pdf/QUALITY_OF_LIFE.pdf.
Epstein, J., Duerr, D., Kenworthy, L., & Ragin, C. (2008). Comparative Employment

Performance: A Fuzzy-Set Analysis. In L. Kenworthy & A. Hicks (Eds.), *Method and Substance in Macrocomparative Analysis* (pp.67-90). New York: PalgraveMacMillan.

Erikson, R. (1993). Descriptions of Inequality: The Swedish Approach to Welfare Research. In M. Nussbaum &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pp.67-83). Oxford: Oxford Universtiy Press.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 (Ed.).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역), 『변화하는 복지국가』. 서울: 인간과복지.

Esping-Andersen, G., Gallie, D., Hemerijk, A., & Myers, J.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uropean Commission. (2011). Future cohesion polic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High Level Group reflecting on future Cohesion Policy, 9th meeting, Brussels, 7 Apr 2011.

Farrell, F., & Demeyer, B. (2005). Social Quality: The EAPN Report. European Anti Poverty Network (EAPN).

Ferrera, M. (1996). The 'Southern Model' of Welfare in Social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1), 17-37.

Frey, B. S., & Stutzer, A. (2002). *Happiness and economics :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Fukuda-Parr, S. (2003). The human development paradigm: operationalizing Sen's ideas on capabilities. *Feminist Economics*, 9(2/3), 301-317.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Giddens, A., Diamond, P., & Liddle, R. (Eds.). (2006). *Global Europe, Social Europe*. Cambridge: Polity Press.

Glaeser, E. L., & Sacerdote, B. (2000). The Social Consequences of Housing. NBER Working Papers(No, 8034).

Gough, I. (1999). Social Welfare and Competitiveness: Social versus System Integration? In I. Gough & G. Olofsson (Eds.), *Capitalism and Social Cohesion* (pp.85-106). Hampshire: Macmillan Press.

Gough, I., & Olofsson, G. (Eds.). (1999). *Capitalism and Social Cohesion*. Hampshire: Macmillan Press.

Green-Pedersen, C. (2004).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within the Study of Welfare State Retrenchment: Defining the Problem and Looking for Solutions.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6(1), 3-14.

Green-Pedersen, C. (2007). More than data questions and methodological issues: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the study of welfare reform. In J. Clasen & N. A. Siegel (Eds.),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Gundelach, P., &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 359-86.

Hadler, M. (2005). Why Do People Accept Different Income Ratios? A Multi-Level Comparison of Thirty Countries. *Acta Sociologica*, 48(2), 131-54.

Hagerty, M. R. (2000). Social comparisons of income in one's community: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of income and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64-71.

Hagerty, M. R., & Veenhoven, R. (2003). Wealth and Happiness Revisited - Growing National Income Does Go with Greater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1), 1-27.

Hall, J. (2008). The Global Project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CSDI(International Workshop on Comparative Survey Design & Implementation), 2008 3mc Conference.

Hall, P. A. (1986).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ller, M., & Hadler, M.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7 5(2), 169-216.

Healy, T. (2002).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at international level.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Social Capital: The Challenge of International Measurement, London, UK. September, 25-27.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46.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2). *World Happiness Report*. UN.

Herrmann, P. (2004). Empowerment- processing the processed.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msterdam. February 2004.

Herrmann, P. (2005). Empowerment: The Core of Social Qu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1/2), 289-99.

Herrmann, P., & van der Maesen, L. (2008). Social Quality and Precarity: Approaching New Patterns of Societal (Dis) Integration.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Working Papers(No, 1).

Hills, J., Grand, J. L., & Piachaud, D. (Eds.). (2002).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tiy Press.

Huber, E., & Stephens, J. (2006). Combating New Social Risks. In K. Armingeon & G. Bonoli

(Eds.),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pp. 143-68). Oxon: Routledge.

Huber, E., & Stephens, J. D. (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udson, J.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1), 43-62.

ILO. (2010). World Social Security Report 2010/2011: Providing coverage in times of crisis and beyond. Geneva: ILO.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 & Klingemann, H.-D.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Diener & E. M. Suh (Eds.),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pp. 165-83). Cambridge: MIT Press.

Inkeles, A. (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4(1/2), 1-23.

Jacobs, D. (2000). Low public expenditures on social welfare: do East Asian countries have a secre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1), 2-16.

Jaeger, M. M. (2006). Welfare regimes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The regime hypothesis revisit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2), 157-70.

Jenson, J.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CPRN Study(No, 03).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Inc.

Jenson, J., & Saint-Martin, D. (2003). New Routes to Social Cohesion? Citizenship and the Social Investment Stat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8(1), 77-99.

Jessop, B. (2002).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Jordan, B. (1996). *A Theor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Judt, T. (2005).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New York: The Penguin Press.

Kangas, O., & Palme, J. (2007). Social rights, structural needs and social expenditure: a comparative study of 18 OECD countries 1960-2000. In J. Clasen & N. A. Siegel (Eds.),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pp. 133-65).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Keizer, M. (2004). Social Quality and the Component of Socio-economic security-Fourth draft.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msterdam, February 2004.

Kemeny, J. (1981). *The Myth of Home-Ownership: Private Versus Public Choices in Housing Ten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Kemeny, J. (2006). Corporatism and Housing Regimes. *Housing, Theory and Society*, 23(1), 1-18.

Kim, S. (2004). Women's Pension Right and Economic Welfare: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women's social righ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88.

Koster, F., & Bruggeman, J. (2008). The institutional embeddedness of social capital: a multi-level investigation across 24 European countries. *Policy and Politics*, 36(3), 397-412.

Kumlin, S., & Rothstein, B. (2005a). Making and breaking social capital: The impact of welfare-state institu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4), 339-65.

Kumlin, S., & Rothstein, B. (2005b). Making and Breaking Social Capital.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4), 339-65.

Lelkes, O. (2006). Knowing what is good for you: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 preferences and the "objective good". *Journal of Socio-Economics*, 35(2), 285-307.

Leung, A., Kier, C., Fung, T., Fung, L., & Sproule, R. (2011).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3), 443-62.

Levitas, R. (1998).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Basingstoke: Macmillan.

Lin, K., Ward, P., & Van der Maesen, L. J. G. (2009). Social Quality Theory in Perspective.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01-08.

Lin, K., Xu, Y., Huang, T., & Zhang, J. (2012). Social Exclusion and Its Causes in East Asian Societies: Evidences from SQSQ Survey Data. *Social Indicators Research*, (OnlineFirst).

Lin, N. (2001). Social Capital. 김동윤 & 오소현(역). 『사회자본』. 서울: 커뮤니케이션스북스.

Lister, R. (2003). Investing in the citizen-workers of the future: Transformations in citizenship and the state under New Labour.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7(5), 427-43.

Lockwood, D. (1999). Civic Integration and Social Cohesion. In I. Gough & G. Olofsson (Eds.), *Capitalism and Social Cohesion* (pp. 63-84). Hampshire: Macmillan Press.

Longest, K. C., & Vaisey, S. (2008). fuzzy: A program for perform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in *Stata*. *The Stata Journal*, 8(1), 79-104.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Midgley, J. (1999). Growth, Redistribution, and Welfare: Toward Social Investment. *Social Service Review*, 73(1), 3-21.

Minkov, M. (2009). Predictors of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97 Nations. *Cross-Cultural Research*, 43(2), 152-79.

Mishra, R. (1999). *Globaliazation and the Welfare State*. 이혁구·박시종(역),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자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Mold, S., & Semmence, J. (Eds.). (2007). The Pensioners' Incomes Series 2005/6(Revised).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Murray, T. S., Kirsch, I. S., & Jenkins, L. B. (1998). Adult Literacy in OECD Countries: Technical Report on the First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oll, H.-H. (2002).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 47-87.
Nord, S., & Ting, Y. (1991). The Impact of Advance Notice of Plant Closings on Earnings and the Probability of Unemploymen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4(4), 681-91.
Nussbaum, M. (1993). Non-Relative Virtues: An Aristotelian Approach. In M. Nussbaum &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pp. 242-6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 (2006). Poverty and Human Functioning. In D. B. Grusky & R. Kanbur (Eds.), *Poverty and Inequality* (pp. 47-76).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Ochel, W., & Rohwer, A. (2009). Reduc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in Europe: A Comparative Fuzzy-Set Analysis. CESifo Working Paper(No, 2828).
OECD, & Canada, S. (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 EC Joint Research Centre.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1976).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4). *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OECD Publications.
OECD. (2005a). *Society at a Glance 2005: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5b). *Extending Opportunities: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5c). *Pensions at a Glance 2005: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7a).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6 edition*.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7b). *Pensions at a Glance 2007: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9a).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9b). *Doing better for children*.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9c).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09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10i).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10j).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10m).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11a).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11c).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cations.
OECD. (2011i).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cations.
Olson, M.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Orloff, A.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03-28.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07(445), 1815-31.
Oswald, A. J., & Powdthavee, N. (2006). Does Happiness Adapt? A Longitudinal Study of Disability with Implications for Economists and Judges. SSRN Paper(No, 2208).
Pacek, A., & Radcliff, B. (2008a). Assessing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of Happiness. *Perspectives on Politics*, 6(2), 267-77.
Pacek, A., & Radcliff, B. (2008b).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179-91.
Palier, B. (2001). Beyond retrenchment. Center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 Series(No, 77).
Palier, B. (2010). *A Long Goodbye to Bismarck? The Politics of Welfare Reforms in Continental Eur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araskevopoulos, C. J. (2010). Social capital: Summing up the debate on a conceptual tool of comparative politics and public policy. *Comparative Politics*, 42(4), 475-94.
Perkins, D., Nelms, L., & Smyth, P. (2004). Beyond neo-liberalism: the social investment state? Social Policy Working Paper (No, 3). The Center for Public Policy.
Phillips, D. (2006). Social Quality, Values, Convergence and the European Social Mod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6(1), 1-7.
Pierson, C. (2007).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Pierson, P.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박시종(역).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ierson, P. (Ed.). (2001).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tiy Press.
Pontusson, J. (2005). *Inequality and Prosperity: Social Europe vs. Liberal America*. New York:

The Century Foundation.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Powdthavee, N. (2008). Putting a price tag on friends, relatives, and neighbours: Using surveys of life satisfaction to value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o-Economics*, 37(4), 1459-80.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35-42.
Putnam, R.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1), 41-51.
Radcliff, B. (2001). Politics, markets, and life satisfa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happin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939-52.
Ragin, C.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gin, C.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gin, C. C. (2012). *fuzzy set /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Retrieved Mar 30, 2012
Ragin, C. C., & Rihoux, B. (2004).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State of the Art and Prospects. *Qualitative Methods*, 2(2), 3-13.
Requena, F. (2010). Welfare Systems, Support Network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Retired Pers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3), 511-29.
Rihoux, B., & Ragin, C. C. (Eds.). (2009). *Configurational comparative methods: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and related techniques*. London: Sage.
Rihoux, B., Rezsöhazy, I., & Bol, D. (2011).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in Public Policy Analysis: an Extensive Review. *German Policy Studies*, 7(3), 9-82, 233-34.
Ritzen, J., Easterly, W., & Woolcock, M. (2000). On "Good" Politicians and "Bad" Policies: Social Cohesion, Institutions, and Growth.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No,2448). The World Bank.
Room, G.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The Policy Press.
Room, G. (1997). Social quality in Europe: perspectives on social exclusion. In W. Beck, van der Maesen, L.G.D., & A. Walker (Eds.),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pp.255-62). Bristol: The Policy Press.
Room, G. (1999). Social exclusion, solidarity and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8(3), 166-74.
Room, G. (2000). Commodification and decommodification: a developmental critique. *Policy & Politics*, 28(3), 331-51.
Rothstein, B.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29(2), 207-41.
Rothstein, B. (2010). Happiness and the welfare state. *Social Research*, 77(2), 441-68.
Rothstein, B., &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41-72.
Rottiers, S. (2008). Relatively happy: How social security contributes to human well-being. In J. Bradshaw (Ed.), Social Security, *Happiness and Well-being* (pp. 21-40). Antwerp: Intersentia.
Saisana, M., & Tarantola, S. (2002). State-of-the-art report on current methodologies and practices for composite indicators Development (Vol, EUR 20408).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Scheepers, P., Grotenhuis, M. T., & Gelissen, J. (2002). Welfare States And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Cross-national Comparisons Of Social Contacts I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Societies*, 4(2), 185-207.
Schneider, C. Q., & Wagemann, C. (2010). Standards of Good Practice in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and Fuzzy-Sets. *Comparative Sociology*, 9(3), 397-418.
Scruggs, L. (2007). Welfare state generosity across space and time. In J. Clasen & N. A. Siegel (Eds.),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pp. 133-65).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Scruggs, L., & Allan, J. P. (2006). The material consequences of welfare stat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9(7), 880-904.
Sen, A.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In M. Nussbaum &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pp. 30-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ianesi, B., & Reenen, J. V. (2003). The Returns to Education: Macro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7(2), 157-200.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78.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1). Report 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tadelmann-Steffen, I. (2011). Social Volunteering in Welfare States: Where Crowding Out Should Occur. *Political Studies*, 59(1), 135-55.
Stavrova, O., Schlosser, T., & Fetchenhauer, D. (2011). Are the unemployed equally unhappy all around the world? The role of the social norms to work and welfare state provision in 28 OECD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1), 159-71.
Stefansson, K. (2008). Getting ahead of ourselves-ca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tell us

how social policy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In J. Bradshaw (Ed.), *Social Security, Happiness and Well-being* (pp. 1-20). Antwerp: Intersentia.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from www.stiglitz-sen-fitoussi.fr.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3), 283-304.

Tamilina, L. (2008). Welfare States and Social Trust: 'Crowding-Out'Dilemma. *Trust in Agent Societies*, 5396, 112-34.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In P. Taylor-Gooby (Ed.), *New Risk,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pp. 1-2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aylor-Gooby, P. (2006). European Welfare Reforms: The Social Investment Welfare Stat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Social Policy at a Crossroad: Trend in Advance Countries and Implication for Korea. Honolulu. July 20-21, 2006.

Tella, R. D.,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1). Preferences over Inflation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Surveys of Happines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335-41.

The New Economic Foundations. (2009). The Happy Planet Index 2.0. from http://www.happyplanetindex.org.

Therborn, G. (2001). On the politics and policy of social quality. In W. Beck, L. J. G. van der Maesen, F. Thomése & A. Walker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pp. 19-30).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Thin, N. (2012). *Social Happiness: Theory into policy and practice*. Bristol: The Policy Press.

Tov, W., & Diener, E. (2009). The Well-Being of Nations: Linking Together Trust, Cooperation, and Democra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 155-73.

UNDP.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Sustainability and Equity: A Better Future for All*.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slaner, E. M. (2001). Trust and Corruption.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on Political Scandals, Past and Present, University of Salford, June 2011.

van der Maesen, L. J. G. (2009). Reflections on the first set of Social Quality Indicators from the European Network Social Quality Indicators. EFSQ Working Paper (No, 3).

van der Maesen, L. J. G., & Verkleij, H. (2009). An Overview of strategies to develop the social quality approach in Europe and Asia during 2007 and 2008. EFSQ Working paper (No, 4).

van der Maesen, L. J. G., & Walker, A. C.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1/2), 8-24.

van der Maesen, L., Walker, A., & Keizer, M. (2005). Social Quality The Final Report, European Network Indicators of Social Quality(ENIQ).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van Oorschot, W., & Arts, W. (2005). The social capital of European welfare states: the crowding out hypothesis revisit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5(1), 5-26.

van Praag, B. M. S., & Ferrer-i-Carbonell, A. (2008). *Happiness quantified : a satisfaction calculus appro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Veenhoven, R. (1993). *Happiness in Nations: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1992*. Rotterdam: Erasmus University of Rotterdam.

Veenhoven, R. (1996a).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1), 1-46.

Veenhoven, R. (1996b). Happy life-expectancy.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1), 1-58.

Veenhoven, R. (2000a).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1), 91-125.

Veenhoven, R. (2000b). Freedom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Forty-Four Nations in the Early 1990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257-88). Cambridge: MIT Press.

Veenhoven, R. (2004). Happy Life Years: a measure of Gross National Happiness. In K. Ura & k. Galay (Eds.),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Thimphu: The Center for Bhutan Studies.

Veenhoven, R., & Ouweneel, P. (1995). Livability of the welfare-sta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1), 1-48.

Venn, D. (2009).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89).

Vis, B. (2007). States of welfare or states of workfare?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16 capitalist democracies, 1985-2002. *Policy & Politics*, 35(1), 105-22.

Vobruba, G. (1997). Social policy for Europe. In W. Beck, van der Maesen, L.G.D., & A. Walker (Eds.),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pp. 119-37). Bristol: The Policy Press.

Wagemann, C., & Schneider, C. Q. (2010).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and Fuzzy-Sets: Agenda for a Research Approach and a Data Analysis Technique. *Comparative Sociology*, 9, 376-96.

Walker, A. (2009). The Social Quality Approach: Bridging Asia and Europe.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09-35.

Walker, A., & van der Maesen, L. (2003). Soci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ISQoLS Conference, July 2003.

Walker, A., & Wigfield, A. (2004). The Social Inclusion Component of Social Qualit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Jan 2004.

Wang, L.-R. (2009). Asian Social Quality Indicators: What is Unique?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97-337.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70.

Wilensky, H. L. (1976). *The New Corporatism, Centr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Sage Publications.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Woolcock, M., & Narayan, D.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49.

World-Wildlife-Fund. (2008). Living Planet Report 2008. from www.footprintnetwork.org.

Yee, J., & Chang, D. (2009). Social Quality as a Measure for Social Progres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3rd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Busan, Korea. October 2009.

Zaidi, A., Grech, A. G., & Fuchs, M. (2006). Pension Policy in EU25 and its Possible Impact on Elderly Poverty. CASE Working Papers (No, 116).

Zapf, W. (1984). Individuelle Wohlfahrt: Lebensbedingungen und wahrgenommene Lebensqualität. In W. Glatzer & W. Zapf (Eds.), *Lebensqualität in der Bundesrepublik* (pp. 13-26). Frankfurt: Campus.

## 3. On-line Database

영화진흥위원회. (2011). 해외 영화산업 통계. Retrieved 20 Dec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12). 간추린 교육통계. Retrieved 16 Jan 2012, from 한국교육개발원.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 (2011). Ireland: Industrial relations profile. Retrieved 18 Nov 2011, from Eurofound, Erionline.

Eurostat. (2011a). Fatal accidents at work: incidence rate. Retrieved 30 Nov 2011, from Eurostat, Health and safety at work.

Eurostat. (2011b). Early leavers from formal education by sex and employment status Retrieved 17 Oct 2011, from Eurostat, Education and training.

Eurostat. (2011c). Gender pay gap in unadjusted form. Retrieved 16 Dec 2011, from Eurostat: Labour market (including Labour Force Survey).

Eurostat. (2011d). Formal childcare by age group and duration - % over the population of each age group. Retrieved 23 Nov 2011, from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rostat. (2012).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tenure status, type of household and income group(ilc_lvho02). Retrieved 08 Mar 2012, from 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IDEA. (2011). Voter Turnout Database. Retrieved 21 Sep 2011, fro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LO. (2011a). R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by economic activity. Retrieved 30 Nov 2011, from Labostat.

ILO. (2011b). Cases of injury with lost workdays, by economic activity. Retrieved 30 Nov 2011, from Labostat.

ILO. (2011c). Labour force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Retrieved 2011 Nov 16, from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7th Edition.

IMF. (2011).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Retrieved 23 Nov 2011.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2011). Internet Users(%),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ata. Retrieved 18 Nov 2011, from UN Data.

OECD. (2010a). Income Distribution: Income distribution: poverty. Retrieved 20 Mar 2012, from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b). Detailed National Account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Retrieved Nov 12 2011, from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c).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Retrieved 20 Nov 2011, from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verall. Retrieved 21 Sep 2011,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e). Labour Market Statistics: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 incidence. Retrieved 14 Oct 2011,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f). Labour Market Statistics: Full-time part-time employment - common definition: incidence. Retrieved 07 Mar 2012,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g).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Retrieved 17 Oct

2011,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h). Hours Worked: Average usual weekly hours worked - averages. Retrieved 17 Oct 2011,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k). Labour Market Statistics: Unemployment by duration: incidence. Retrieved Sep 21 2011,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l). Labour Market Statistics: Involuntary part time workers: incidence. Retrieved 21 Sep 2011,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n). Education at a Glance: Population with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Table A1.2a.). Retrieved 18 Nov 2011, from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2010o). Trade Unions: Trade union density. Retrieved 18 Nov 2011,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p). Labour market programmes: expenditure and participants. Retrieved 18 Nov 2011,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q).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_Incapacity related Expenditure as % of GDP. Retrieved 23 Nov 2011, from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r). Labour Market Statistics: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indicators. Retrieved 29 March 2012, from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0s). Income Distribution: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Retrieved 07 Oct 2011, from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OECD. (2011b).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Retrieved 22 Dec 2011.
OECD. (2011d). Better Life Index. Retrieved 23 Nov 2011, from http://oecdbetterlifeindex.org.
OECD. (2011e). OECD Health Data: Social protection. Retrieved 12 Oct 2011, from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2011f). OECD Health Data: Health care resources. Retrieved 13 Oct 2011, from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2011g).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Retrieved 23 Dec 2011, from OECD Family Database.
OECD. (2011h). Education Database: Expenditure by funding source and transaction type Retrieved Jan 04 2012, from OECD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OECD. (2011j). LMF1.5 Gender pay gaps for full-time workers and earnings by educational attainment. OECD, Family Database.
OECD. (2011k). OECD Health Data: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Retrieved 19 Dec 2011, from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2011l). LMF1.2 Maternal employment. Retrieved Nov 18, 2011, from OECD, Family

Database.
OECD. (2011m). General Government Accounts: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_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percentage of GDP. Retrieved Nov 23, 2012, from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OECD. (2011n).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s(PF3.2). Retrieved 12 Nov 2011, from Family Database.
OECD. (2011o). OECD Health Data: Economic references. Retrieved 20 Mar 2012, from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The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oad density. Retrieved 21 Dec 21 2011, from WDI.
The World Bank. (2011). PM10, country level (micrograms per cubic meter). Retrieved Dec 29 2011,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Global Development Finance.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2).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04-2008. Retrieved 09 Dec 2012, from Transparency International.
UNData. (2011a).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 percentage. Retrieved 16 Dec 2011, from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atabase.
UNData. (2011b). Women's share of legislators and managers. Retrieved 16 Dec 2011, from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Gender Info.
UNESCO. (2011). Cinema infrastructure Retrieved 19 Dec 2011, from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NODC. (2011).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Retrieved 29 Dec 2011, from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s.
Veenhoven, R. (2012a). World Database of Happiness: collection Happiness in Nations, Overview of happiness surveys using Measure type: 122E / 11-step numeral Life Satisfaction. Retrieved 26 Mar 2012, from 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Veenhoven, R. (2012b). Happiness in Nations. Retrieved 17 Apr 2012, from World Database of Happines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The Netherlands.
Veenhoven, R. (2012c). Trends in nations: data file to be used for trend analysis of happiness in nations. from World Database of Happiness.
Veenhoven, R. (2012d). World Database of Happiness. Retrieved Feb 21 2012, from 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 〈부록 1〉 다양한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부록 1〉은 논문 제 1장 2절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여러 국제기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삶의 질' 지수의 개념과 이 지수에서 한국의 순위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삶의 질 지수와 삶의 만족 수준의 상관관계를 정리한다.

### (1) 삶의 질 지수

가.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

인간개발지수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국제 비교지표이다.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s)는 마붑 울 하크(Mahhub ul Haq)의 주도 하에 '발전경제학의 초점을 국민소득 접근에서 인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실현능력 접근(capability approach)을 개념적 틀로 이용하고 있다(Fukuda-Parr, 2003: 301-02). 인간개발지수는 세 가지 차원(건강한 장수, 지식, 적절한 삶의 기준)을 반영하는 세 가지 지수(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 GNI지수)를 네 개의 지표로 측정한다. 기대수명지수는 기대수명, 교육지수는 평균취학년수와 기대취학년수를 이용하고, GNI 지수는 구매력지수로 전환된 1인당 GNI를 이용한다(UNDP, 2011: 167).[137] 지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5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결측이 존재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2010년부터는 HDI의 각 지수값을 해당지수의 불평등 정도로 조정된,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Inequality-adjusted Human Development Index: IHDI)를 보고하고 있다. IHDI는 HDI가 각 지수의 분배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HDI는 세 가지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의 분배 수준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HDI 값을 가질 경우에 같은 수준의 인간개발정도를 보인다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개발보고서는 개별국가에서 기대수명,

137) 교육차원의 구성지표는 2009년까지는 식자율(literacy rate)과 총교육등록률(gross enrolment rate)을 이용하였다. 인간개발지수는 최종적으로 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 GNI지수의 세 지수를 기하평균(geometric mean)한 값이다. 이때 모든 지수는 각 지표를 min-max 전환을 통해서 0부터 1의 값을 가지도록 하며, 1인당 GNI는 로그전환한 값을 바탕으로 min-max 전환을 실시한다. 한편, 교육지수는 평균취학연수 지수와 기대취학연수 지수를 각각 구한 후, 기하평균한다. 이때 기대취학년수의 최대값은 18년으로 고정된다. 한편, 1인당 GNI는 PPP 전환한 1인당 소득으로 최소값은 100으로 고정된다(UNDP, 2011: 168).

교육, 소득의 세 개 지수의 분포 정도를 반영한 IHDI를 발표한다.[138]

HDI와 IHDI에 더불어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와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IHDI가 인간개발의 잠재력이 불평등의 정도로 손실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GII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 역능성(empowerment), 노동시장의 차원에서 인간잠재력의 발현이 저해되는 정도를 고려하고자 한다. 성불평등지수는 건강 차원에서는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139]와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의 지표를, 역능성 차원에서는 2차교육 이상 수료자의 남녀 비율, 의회에서의 남녀 의석 비율,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남녀 노동시장 참가율을 지표로 이용한다.[140]

마지막으로, 다차원빈곤지수는 교육, 건강, 생활조건(standard of living)의 3가지 차원의 10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결핍상태의 정도와 결핍상태에 처한 가구에 소속된 인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MPI의 개발은 빈곤의 다차원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Alkire & Santos, 2010). 이 지수는 각 국의 미시수준인 가구조사(household survey) 자료를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2011년에는 104개의 개발도상국가(developing country)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3가지 차원은 각각 2개, 2개, 6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각 차원은 1/3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각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는 다시 해당 하위 차원에서의 지표수에 따라 가중치를 가진다.[141] 결핍을 측정하는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게 되며, 부여된 가중치를 고려하여 결핍점수(deprivation score)가 33.3%를 초과하는 가구는 결핍가구가 된다. 그리고 각 가구의 결핍점수와 가구구성원의 수를 바탕으로 결핍의 강도(intensity of porverty)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결핍가구의 비율과 결핍의 강도를 곱하여 MPI는 계산된다.

---

138) IHDI는 개별 국가의 해당 지표의 분포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재한 국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53개국에 대한 값은 없다.

139) 10만명의 출생아당 모성사망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모성사망자란 가임기간 또는 임신 종료 후 42일 이내에 임신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140) GII는 남녀의 인간개발정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성별 불평등이 큰 값을 가진다.

141)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가구는 각 지표에서 결핍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교육 차원에서는 1) 가구원 중 누구도 5년의 교육기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취학연령대의 미취학자가 있는 경우이다. 건강 차원에서는 1) 영양실조에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아동가구원이 사망한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생활조건에서는 1) 전기의 미보급 2) 깨끗한 음용수에의 접근 장애 3) 위생시설에의 접근 장애 4) 더러운 바닥을 가지는 경우 5) 더러운 조리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6) 생활자산(교통수단, 라디오, 냉장고 전화 또는 TV)을 한 개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결핍상태에 있다고 본다.

### 나. Economics Intelligence Unit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EIU는 국가들 간의 상대적 경쟁력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 기구이다. EIU의 삶의 질 지수는 주관적 삶의 만족 수준을 설명하는 요인들로 지표를 구성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1999년 또는 2000년에 이뤄진 74개국의 삶의 만족 조사(life-satisfaction surveys) 결과를 설명하는 9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142] 이들 변수는 국가 간 삶의 만족 점수 변량의 80%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EIU, 2005). 즉, 삶의 질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곧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EIU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 물질적 안녕과 정치적 안정과 안전, 가족관계와 공동체 생활의 순서로 삶의 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의 행복한 지구 지수(The Happy Planet Index: HPI)

행복한 지구 지수는 지속가능한 안녕(sustainable well-being)을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생태적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독특함을 가진다(The New Economic Foundations, 2009). 즉, 생태적 제한을 감안하여 자원의 소비 정도가 반영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지수는 행복수명(happy life years)을 생태흔적지수(Ecological footprint index)로 나눈 값이다.

행복수명은 Veenhoven(1996b)의 행복수명 개념을 이용한다. 이는 주관적 생활만족도('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에 기대수명을 곱한 값이다.[143] 생태흔적지수(ecological footprint index)는 세계야생생물기금의 Living Planet Report에서 생태흔적지수(ecological footprint index)-1인당 소비를 위해 필요한 생태면적-를 이용한다.[144]

---

142) 9개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물질적 안녕(well-being): 구매력지수로 전환된 1인당 GDP, 2) 건강: 기대수명, 3) 정치적 안정과 안전, 4) 가족생활: 이혼율(높을수록 5의 값을 가지는, 1~5의 값으로 전환), 5) 공동체생활: 교회출석률 또는 노동조합조직률(높을수록 1의 값을 가지는, 0과 1의 더미 값으로 전환), 6) 기후와 지리: 위도로 구분, 7) 직업안정성: 실업률, 8) 정치적 자유도: 정치적, 공민적 자유의 평균(정치적으로 억압될수록 7의 값을 가지는, 1~7의 값을 전환), 9) 성평등: 남녀소득비율로 구성된다.

143) 신경제재단은 이와 같은 주관적 생활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국가들은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값을 이용한다(The New Economic Foundations, 2009: 53).

144) 생태흔적지수는 한 국가의 전체 구성원이 소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적 면적(육지와 바다)의 넓이를 이용한다. 건축지, 어장, 방목지, 산림 등의 면적이 포함된다. 인간의 생태흔적은 1980년대에 이미 지구 전체의 가용한 자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World-Wildlife-Fund, 2008: 14).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삶의 질 지수들이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용하 등(2009)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2) 삶의 질 측정 지수와 결과

이제부터는 앞서 제시한 여러 삶의 질 지수의 가장 최근 조사값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부록 표 1-1〉에서 한국은 인간개발지수와 성불평등 지수가 양호한 편이지만, 행복수준이 반영되는 행복한 지구 지수에서는 급격한 순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145] 이와 같은 순위의 하락은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곧 한국이 인간개발지수의 세 가지 하위범주 차원에서 지수의 분배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과 안전, 공동체 생활, 그리고 정치적 자유도를 특징으로 하는 EIU의 삶의 질 지수에서도 상당한 순위 하락을 보여준다.

〈부록표 1-1〉 삶의 질 측정 지수와 결과

| | 기준년도 | 평가대상국가 | 1위 국가 | 한국(값, 순위) |
|---|---|---|---|---|
| 인간개발지수(HDI) | 2011 | 187개국 | 노르웨이(0.943) | 0.897(15위) |
|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IHDI) | 2011 | 134개국 | 노르웨이(0.890) | 0.749(28위) |
| 성불평등지수(GII) | 2011 | 146개국 | 스웨덴(0.049) | 0.111(11위) |
| EIU, 삶의 질 지수(quality-of-life index) | 2005 | 111개국 | 아일랜드(8.333) | 6.877(30위) |
| 행복한 지구 지수(HPI) | 2009년 | 143개국 | 코스타리카(76.1) | 44.4(68위) |

주: 다차원빈곤지수(MPI)는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 대상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음 〈부록 표 1-2〉는 삶의 질 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삶의 만족 수준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1인당 국민소득자료의 가장 최근 확보 가능한 자료가 2008년임을 고려하여 다른 삶의 질 지수도 이 시기에 맞췄다. 다만, 성불평등지수는 2008년 값이 존재하나 구성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11년 값을 이용하였다.

삶의 만족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삶의 질 지수는 HDI, IHDI, EIU의 삶의 질

145) 한국은 '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서 분석하고 있는 143개 국가 중에서 67위를 순위를 보이고 있다.

지수이다. 이중에서 IHDI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이 고려될 때 삶의 만족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불평등지수(GII)와 행복한 지구 지수(HPI)는 국민행복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불평등지수는 주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주목하며, 행복한 지구지수는 생태흔적지수가 고려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록표 1-2〉 삶의 질 지수와 GDP, 국가별 삶의 만족 수준의 상관관계

| | HDI | IHDI | GII | EIU의 QOL | HPI | GDPPPP |
|---|---|---|---|---|---|---|
| IHDI, 2010 | .878(**) | | | | | |
| GII, 2011 | -0.175 | -0.357 | | | | |
| EIUQOL, 2005 | .491(*) | .566(**) | -0.225 | | | |
| HPI, 2009 | 0.014 | 0.125 | -.600(**) | -0.154 | | |
| 1인당 GDP, 2008 | 0.294 | 0.413 | -0.045 | .573(**) | -0.345 | |
| 삶의 만족 수준, 2008 | .664(**) | .790(**) | -0.239 | .696(**) | 0.029 | .517(**) |
| N | 24 | 22 | 24 | 24 | 24 | 24 |

주: **= p <.001, *= p <.001

자료:

1) 1인당 GDP: OECD(2011o), OECD Health Data: Economic references.

2) 삶의 만족 수준: Veenhoven(2012a), Happiness measure, code: O-SLW-c-sq-n-11-a.

## 〈부록 2〉 사회지표들

〈부록 2〉는 논문 제 1장 2절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EC와 OECD에서 제시하는 사회지표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OECD의 「How's Life?」에서 제시한 사회지표들의 측정지표와 한국의 순위를 소개한다.

### 1. 유럽 사회지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회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지표를 주요 지표와 2차 지표의 2개의 층위로 구성하여, 10개의 주요 지표와 8개의 2차지표로 구성하였다(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1). 주요 지표에는 빈곤율, 소득분배율, 저임금의 고착, 소득격차, 지역적 응집력(regional cohesion), 장기실업률, 무직가구(jobless households)의 가구원수, 조기학업중단자의 수, 출생시 기대수명, 인식된 건강상태가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한편으로 1990년대 말부터 '유럽 사회지표 체계구축(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의 결과는 Berger-Schmitt and Noll(2000)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기존의 다양한 지표틀을 중심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바탕으로 지표를 구성한다. 정책의 목적은 1) 경제와 사회의 발전, 삶의 질의 개선 2)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응집의 강화 3) 지속적 발전이며, 이를 각각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복지 개념(welfare concept)으로 설정한다.

이에 정책의 목적에 영향을 받는 6개의 정책목표는 '객관적 삶의 조건 개선', '주관적 안녕의 향상', '격차의 축소-동등한 기회-사회적 배제의 축소', '사회적 연계와 유대의 강화', '인적 자본의 향상과 유지',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의 향상과 유지'로 구분된다.[146]

### 2. OECD의 사회지표틀

OECD는 2001년부터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

146)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연구를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지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이희길·신지성, 2010: 30). 현재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은 10개의 주요지표(headline indicators)를 바탕으로, 기능적 목표와 대상(operational objectives and targets), 설명변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Eurostat,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보다 자세한 내용은 Adelle and Pallemaerts(200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표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147] OECD의 지표틀은 2개의 차원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들을 집단화한다(OECD, 2009d: 52-59).

첫 번째 차원영역은 'Pressure-State-Response(PSR)'이라는 모형을 바탕으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적 상황(social status)', '사회적 반응(societal response)'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차원영역은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반응'의 지표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립(self-sufficiency), 평등(equity), 건강상태(health status),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이 그것이다. 모두 6차례의 보고서가 제시되었는데, 보고서 별로 포함되는 지표들은 각각 차이가 있다.[148]

다음 표는 1장에서 논의된 OECD(2011a)의 『How's Life?』 보고서의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와 한국의 순위를 정리한 표이다. 한국은 대체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인지능력, 법제정에서의 협의, 괴롭힘 경험비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관계지원, 투표율, 대기오염 정도, 살인 등은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147) OECD는 1973년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라는 사회지표의 원형적 형태를 발표하였으며, 2001년 '한 눈에 보는 사회'를 통해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안상훈·김영미·최영준, 2010: 234).

148) 보고서는 2001, 2003, 2005, 2006, 2009, 2011년 발간되었으며, 각 보고서에 포함되는 지표는 OECD(2009d: 54)에 정리되어 있다.

〈부록표 2-1〉 OECD, "How's life?"의 측정지표와 한국의 순위

| 측정차원 | 측정영역 | 측정지표 | 순위/표본수 |
|---|---|---|---|
|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 수입과 부 (Income and Wealth) | 1인당 가구 순가처분소득 | 25/33 |
| | | 1인당 가구 순금융자산 | 18/30 |
| | 직업과 소득(Jobs and Earnings) | 고용률 | 23/36 |
| | | 피용자의 연간 평균 소득 | 19/26 |
| | 주거 (Housing) | 1인당 방의 수 | 22/32 |
| | | 불충분한 생활여건 가구(dwelling without basic facilities) | 27/30 |
| 삶의 질(Quality of Life) | 건강상태 (Health status) | 출생 시 기대수명 | 19/40 |
| | | 자기보고된 건강 상태 (self-reported health status) | 31/33 |
| | 일과 삶의 조화(Work and Life) | 장시간(주 50시간) 근로하는 피용자 비율 | - |
| | | 여가나 개인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 11/20 |
| | | 의무취학연령대 아동을 둔 여성의 고용률(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children of compulsory school age) | - |
| | 교육과 기술(Education and Skills) | 학업성취도(educational attainment) : 고등교육이수율 | 16/34 |
| | | 학생 인지 능력(student's cognitive skills): PISA reading scores | 1/38 |
| | 사회적 관계(Social Connections) | 사회적 관계 지원(social network support):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 | 37/40 |
| | 공공참여와 거버넌스(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 투표율(voter turn-out) | 31/39 |
| | | 법제정에서의 협의(consultation on rule-making): 공식적 협의과정 | 6/36 |
| | 환경적 질(Environmental Quality) | 대기오염(air quality): PM10 level | 32/40 |
| | 개인적 안전(Personal Security) | 살인(intentional homicides): 10만명 당 피살자수 | 30/40 |
| | | 괴롭힘 경험 비율(sel-reported victimization) | 9/40 |
| |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 | 26/40 |
| | | 긍정적 감정(affect balance) | 20/40 |

## 〈부록 3〉 사회의 질 지표구성

〈부록표 3-1~4〉는 논문의 제 2장에서 제시한 사회의 질의 네 하위분면의 세부영역과 개념적 지표, 측정지표, 측정지표의 출처, 측정연도를 정리한 것이다.

〈부록표 3-1〉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지표 구성

| 세부 영역 | 개념적 지표 | 측정지표 | 출처 | 측정연도 |
|---|---|---|---|---|
| 소득충분성 | 1. 건강·주거·음식·피복에 대한 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가구 소비지출 대비 필수소비지출 비중 | 1) 유럽국가: Eurostat, Household Budget Survey. 2) 그 외 각국 통계자료. | 2005년 (이탈리아: 1999년, 호주: 2003/4년, 캐나다: 2005년, 일본, 뉴질랜드: 2004년, 한국, 미국: 2005년, 스위스: 2006/8년) |
| 소득보장성 | 2. 생애주기적 사건들이 가구수준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공적연금의 평균소득자의 순소득대체율 | OECD (2005c;2007b;2009a), Pension at a Glance. | 2005, 2007, 2009 평균 |
| | |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 | OECD(2011b), Benefits and Wages: OECD Indicators. | 2004~2008년 평균 |
| | 3.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조건부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 | 사회보장 및 세제 이전 전후 빈곤감소율 | OECD(2010a),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 2000년대 후반(아일랜드: 2000년대 중반) |
| 주거 안전성 | 4.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한 사람의 비율 | 자가소유비율 | 1) Eurostat(2012), Distribution of population by tenure status (Source: SILC) [ilc_lvho02]. 2) 각국 통계자료. | 2005-8년 평균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2007-8년, 독일: 2005년, 스위스: 2010년, 호주: 2003년, 캐나다: 2004년, 일본, 한국: 2005년, 뉴질랜드: 2006년, 미국: 2004-7년) |
| | | 가구소비지출 중 주거관련지출 비율 | OECD(2010b), Detailed National Account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 2004~8년 평균 |
| | 5. 감춰진 가구의 비율 | | | |
| 주거의 조건 | 6. 가구구성원당 사용 면적 | 1인당 방의 수 | OECD(2011a), How's life? | 2009년 또는 가장 최근 자료 |
| | 7.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주거조건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 |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 OECD(2011d), Better Life Index. | 2009년 또는 가장 최근 자료 |
| 사회적, 자연적환경 | 8. 인구1만명당 범죄 피해자수 | 10만명당 범죄피해자수 | UNODC(2011),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2004~8년 평균(호주: 2003년, 오스트리아, |

| | | | | |
|---|---|---|---|---|
| 조건 | | | Assault at the national level. | 아일랜드, 영국: 2005-6년, 그리스: 2004-7년, 이탈리아, 네덜란드: 2004-6년, 한국: 2006-8년, 네덜란드, 스페인: 2007-8년) |
| | | 10만명당 피살자수 | UNODC(2011),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Intentional homicide, count and rate per 100,000 population. | 2004~8년 평균 |
| | 9. 평균이상 오염상태에 노출된 가구의 비율 | PM10 levels | The World Bank(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M10(country level). | 2004~8년 평균 |
| 건강급여의 보장성 | 10. 건강보험(강제적, 자발적)의 포괄성 | 건강보험 포괄성 | OECD(2011e), Health Data: Social protection. | 2004~8년 평균 |
| 건강서비스의 적절성 | 11. 인구1만명당 의사수 | 1천명당 의사수 | OECD(2011f), Health Data: Health care resources. | 2004~8년 평균. (아일랜드: 2006-8년, 일본: 2004/2006/2008년, 스위스: 2008년 ) |
| | 12. 병원까지의 평균 이동시간 | 1천명당 병상수 | OECD(2011f), Health Data: Health care resources. | 2004~8년 평균.(호주: 2004-6/2008년, 뉴질랜드: 2009년) |
| | 13. 응급차량의 평균 도착시간 | | | |
| 돌봄서비스의 적절성 | 14. 돌봄활동에이용되는 평균 시간 | GDP 대비 노령·장애·가족 관련 서비스 급여 지출 비중 | OECD(2010c),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 2003~2007년 평균 |
| 고용안정성 | 15. 노동계약 기간과 조건을 변경하기 전 사전 고지기간의 길이 | 고용보호입법지수 | OECD(2010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Strictnes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veral. | 2004~8년 평균(룩셈부르크: 2008년) |
| | 16. 노동계약 종료 전 고지기간의 길이 | | | |
| 근로조건 | 17. 비정규고용계약에 기반하여 근로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정규고용자 비율(고용계약 기준) | 1) OECD(2010e), Labour Market Statistics: Employment by permanency of the job: incidence. 2) 뉴질랜드: 뉴질랜드노동부(2009), A profile of temporary workers and their employment outcomes(2008년) | 2004~2008년 평균(호주: 2004, 2006년, 뉴질랜드: 2008년, 미국: 2005년) |
| | 18. 불법적인 근로자의 비율 | | | |
| | 19. 육아휴직·병가 등을 이유로 휴직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대상자 중 | 부모휴가 급여의 상근 상당 임금 비율 | OECD(2011g),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 2007/2008년 측정값 |

| | | | | |
|---|---|---|---|---|
| | 실제로 실행한 비율 | | | |
| | 20. 피고용자 10만명당 산재발생율 | 산업재해 사고사망률 | 1) Eurostat(2011a), Health and safety at work: Fatal accidents at work 2) ILO(2011a), Labostat: R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by economic activity. 3) ILO(2011b), Labostat: Cases of injury with lost workdays, by economic activity. | 2004~7년 평균 (그리스, 네덜란드: 2004-6년 평균, 룩셈부르크 2005-6년 평균, 헝가리 2005년). |
| | 21. 정규근로자의 주간노동시간 | 연간근로시간 | (OECD, 2010g),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 2004~8년 평균 |
| 교육의 안전성 | 22.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의 비율 | 학업중단률(20~24세 인구 중 고등학교 미졸업자 비율) | 1) OECD(2010i),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Scoreboard for youth aged 15-24. 2) 한국: 경활부가조사(2007년) | 2008년(한국: 2007년) |
| | 23. 국가평균순임금 대비 교육비 수준 | GDP 대비 가구교육지출 비율(또는 사적교육지출 비율) | 1) OECD(2011h), Education Statistics: Expenditure by funding source and transaction type. 2) 룩셈부르크: OECD(2011i), Education at a Glance 2011. | 2004-2008년 평균(벨기에: 2005-8년, 그리스: 2004-5년, 헝가리: 2004-6년 평균, 룩셈부르크: 2008년) |
| 교육의 질 | 24. 졸업 및 수료 후 1년 내에 직업을 찾은 학생의 비율 | 20-24세 NEET 비율 | 1) OECD(2011i), Education at a Glance 2011. 2) 남재량(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 2004~8년 평균 |

〈부록표 3-2〉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지표 구성

| 영역 | 개념적 지표 | 측정지표 | 출처 | 측정연도 |
|---|---|---|---|---|
| 일반적인 신뢰 | 25.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의 정도 |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값 | EVS, wave 2008(v62). /WVS, wave 2005(v23). | |
| | | 부패인식지수 |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2), Corruption Perception Index(2004-2008). | 2004~2008년 평균 |
| 특별신뢰 | 26. '정부·의회·정당·군대·사법체계·언론·노동조합·경찰·종교제도·공공서비스·경제거래'에 대한 신뢰 | Confidence: 'The Government, Parliament, The Political Parties, Armed Forces, Justice System, The Press, Labour Unions, The | EVS, wave 2008(v222 v211 v221 v206 v218 v208 v209 v210). /WVS, wave 2005(v138 v140 v139 v132 v137 v133 v135 v136). | |

| | | | | |
|---|---|---|---|---|
| | | Police'의 평균값 | | |
| | 27.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사건의 수 | | | |
| | 28. 가족·친구·여가·정치의 중요성/부모에 대한 존경/아동에 대한 부모의 의무의 중요성 | | | |
| 이타주의 | 29. 주당 자원봉사 시간 | People reporting volunteering | 1) OECD(2009c), OECD Factbook 2009, p.257.<br>2) 룩셈부르크는 평균값임. | 2006-2008년 중. |
| | 30. 현혈 | | | |
| 관용 | 31. 이민·다원주의·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점 | "이웃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 '다른 인종'과 '이민자/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평균값을 이용. | EVS, wave 2008(v47 v54).<br>/WVS, wave 2005(v35 v37). | 일본은 WVS, wave2(1989-1993) |
| | 32. 타인의 정체성·신념·행동·선호에 대한 관용 | "동성연애", "이혼", "낙태"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 | EVS, wave 2008(v240 v242 v241).<br>/WVS, wave 2005(v202 v205 v204). | |
| 사회계약 | 33. 빈곤에 대한 귀인 인식: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 | | |
| | 34. 빈자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 | | |
| | 35. 노인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세금 증액의 동의여부 | | | |
| | 36. 소속된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체적 활동을 수행할 의지의 정도 | | | |
| | 37. 남녀 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 | | | |
| 사회적 관계망 | 38. 정치활동·자원봉사·자선단체·스포츠단체에 대한 참여 정도 | 문화활동, 노조, 정당, 체육활동의 단체에 속한 여부 | EVS, wave 2008( v12 v13 v14 v20).<br>/WVS, wave 2005(v26 v27 v28 v25). | |
| | 39. 가족·이웃·친구로부터의 지원 | | | |
| | 40. 친구·동료와의 접촉 빈도 | | | |
| 국적에 대한 정체성 | 41. 국가자긍심의 정도 | "매우 자긍심을 가진다"에 대한 응답 비율 | EVS, wave 2008(v256).<br>/WVS, wave 2005(v209). | |
| | 42. 국기 등의 국가상징에 대한 자긍심 | | | |
| 지역의 정체성 | 43. 지방/공동체/지역 정체성 | | | |
| 대인관계 정체성 | 44. 가족·친족 네트워크에 대한 소속감 | | | |

〈부록표 3-3〉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지표 구성

| 영역 | 개념적 지표 | 측정 지표 | 출처 | 측정연도 |
|---|---|---|---|---|
| 정치권 | 45.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 | | |
| | 46. 지역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과 이를 실행한 사람의 비율 | 투표율 | IDEA(2011), Voter Turnout Database(2004-2008). | 2004~2008년 중 이뤄진 선거의 평균 투표율 |
| 사회권 | 47.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 | 공적연금수급률(수급연령대비) | ILO(2010), World Social Security Report. | 2005년 또는 2006년 |
| | 48.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 | 남성 정규근로자 중위소득 대비 여성 정규근로자 중위소득 | 1) OECD(2010j), OECD Employment Outlook 2010.<br>2) 룩셈부르크: Eurostat(2011c), Gender pay | |

| | | | | |
|---|---|---|---|---|
| | | | gap in unadjusted form.<br>2004~년 평균(벨기에: 2004/5/7년, 프랑스: 2004-7년, 헝가리, 스페인: 2004/5/7/8년, 이탈리아: 2007/8년, 네덜란드: 2004-6년, 스위스: 2004-6년, 2008년, 룩셈부르크: 2008년) | |
| 공민권 | 49. 무료변론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 | | |
| | 50.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 | | |
| 사회적 정치적 관계 | 51. 의회에 임명된 인종적 소수자의 비율 | | | |
| | 52. 의회, 사적 기업이나 재단의 이사회에서 여성의 비율 | 입법 및 관리직 여성 비율 | 1) UNData(2011b), Women's share of legislators and managers.<br>2) 룩셈부르크: UNData(2011a), Seats held by women in national parliament, percentage.<br><br>2004~2008년 평균. | |
| 유급 일자리에의 접근 가능성 | 53.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 | 실업자중 12개월 이상 실업자의 비율 | OECD(2010k), Labour Market Statistics: Unemployment by duration: incidence. | 2004~2008년 평균. |
| | 54. 비자발적 비정규직 고용 또는 일시적 실업의 비율 | 시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 OECD(2010l), Involuntary part time workers: incidence.<br>한국: 김유선(2010), 한국의 노동. p. 33. | 2004~2008년 평균(한국: 2006-8년, 영국:2004-7년). |
| 건강 서비스 | 55. 공공1차의료보호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과 이용률 | 일반정부 건강 지출 비율 | OECD(2011k), Health Data: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 2004~2008년 평균. |
| 주거 | 56. 홈리스의 비율 | | | |
| | 57. 공공주택 이용에 필요한 평균 대기기간 | | | |
| 교육 | 58. 학교교육 참가율과 고등교육 참가율 |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 | OECD(2011i), Education at a Glance 2011. | 2004~2008년 평균. |
| 돌봄 서비스 | 59. 돌봄서비스의 이용 필요를 가진 사람 중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비율 | | | |
| | 60. 돌봄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평균대기기간(아동 돌봄 포함) | | | |
| 금융 서비스 | 61. 소득집단 별로 구분한 신용거부자의 비율 | | | |
| | 62. 금융보조나 상담과 같은 지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 | | | |
| 교통 | 63. 공공교통체계에 접근가능한 사람의 비율 | | | |
| | 64. 공공교통체계의 밀집도와 도로의 밀집도 | 도로밀집도 | The World Bank(2008).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oad density.<br>2004~2008년 평균(호주: 2007-8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2005-8년, 캐나다: 2004, 2006-8년, 독일: 2006-8년, 아일랜드: 2007-8년, 이탈리아: 2005년, 일본:2004-7년, 룩셈부르크: 2004년, 포르투갈: 2004-5년, 스페인: 2006-7년, 미국: 2004-5년, 2007-8년). | |
| 공공/문화서비스 | 65. 1만명당 공공 체육시설의 수 | | | |
| | 66. 1만명 당 공공/문화 시설의 수 | 10만명당 스크린 수 | 1) UNESCO(2011), Institute for Statistics: Cinema infrastructure.<br>2) 뉴질랜드: 영화진흥위원회(2011), 해외 | 2005~2008년 평균. |

| | | | | |
|---|---|---|---|---|
| | | | 영화산업 통계. | |
| 이웃참여 | 67. 이웃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비율 | 도움이 필요할 때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OECD(2011a), How's Life? p.174. | 2010년(노르웨이: 2008, 스위스: 2009) |
| 친교 | 68. 친구를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비율 | | | |
| 가족 생활 | 69. 고독감/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 | | |
| | 70. 친척을 만나는 주기 | | | |
| | 71. 가족으로부터 비공식적 지원을 받는 사람의 비율 | | | |

〈부록표 3-4〉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지표 구성

| 세부 영역 | 개념적 지표 | 측정지표 | 출처 | 측정연도 |
|---|---|---|---|---|
| 지식의 응용 | 72. 지식에 기반을 둔 사회이동의 정도 | 노동인구 중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 | ILO(2011c),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Labour force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 2004~2008년(일본: 2005-8년, 한국: 2004-7년). |
| 정보의 이용가능성 | 73. 문해율 | 중등교육 이상 수료자의 비율 | OECD(2010n), Education at a Glance-Table A1.2a. Population with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 2008년. |
| | 74. 미디어의 자유로운 이용가능성 | | | |
| | 75. 인터넷에의 접속 | 인터넷 이용자 비율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2011), Internet Users(%). | 2004~2008년(오스트리아: 2005-8년). |
| 정보 이용의 사용자 친화성 | 76.사회서비스에서 정보가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도 | | | |
| | 77. 무료변론, 상담, 안내센터의 이용가능성 | | | |
| 고용계약의 통제 | 78. 노조조직률 | 노동조합 조직률 | OECD(2010o), Trade Unions: Trade union density. | 2004~2008년. |
| | 79.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 | 1) Venn(2009),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pp. 16-18. 2) 아일랜드: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2011), Ireland: Industrial relations profile. | 2006년, 또는 2007년(그리스, 헝가리: 2005년, 뉴질랜드: 2000년, 한국: 2001년). |
| 직업 이동의 가능성 | 80. 피용자 중에서 근로기반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의 비율 | GDP 대비 노동시장 프로그램 중 훈련 관련 지출 | OECD(2010p), Labour market programmes: expenditure and participants. | 2004~2008년. |
| | 81. 노동인구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의 비율 | | | |
| | 82. 노동인구 중에서 | | | |

| | | | | |
|---|---|---|---|---|
| | 재취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 | |
| 일과 가족 생활의 양립가능성 | 83. 일가족양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조직의 비율 | 6~14 세 아동 양육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 1) OECD(2011l), Family Database: Maternal employment.<br>2) 한국, 노르웨이: OECD(2011d), Better Life Index. | 2008년. |
| | 84. 피용인구 중에서 일가족 양립수단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 | |
| 정치제도의 개방성과 지원체계 | 85.협의(consultation)과정과 직접민주주의(예를 들어, 국민투표)의 존재여부 | 입법과정에서의 협의 | OECD(2011a), How's Life?. p. 198. | 2008년. |
| 경제제도의 개방성 | 86. 주요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대중참여의 사례수 | | | |
| 조직의 개방성 | 87. 직장협의회가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의 비율 | | | |
| 집합행동에 대한 지원 체계 | 88.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발의를 위해 배정된 전국 및 지방수준의 공공예산 비율 | | | |
| | 89. 지난 12개월간 일어난 전체 시위/행진 가운데 금지된 것의 비율 | | | |
| 문화적 고양 | 90. 모든 문화활동을 위해 배정된 지방 및 전국 수준의 예산 비율 | 문화영역에 대한 일반정부 지출 비율(% of GDP) | 1) OECD(2011m), General Government Accounts: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_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percentage of GDP.<br>2) 호주, 그리스: IMF(2011),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 2004~8년(캐나다: 2005-6년, 뉴질랜드: 2004-5년, 스위스: 2007-8년). |
| | 91. 자발적으로 조직된 문화단체와 활동 숫자 | | | |
| | 92. 다양한 형태의 사적인 문화고양 활동을 정기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비율 | 가구최종소비지출 중 문화영역에 대한 지출 비율 | OECD(2010b), Detailed National Accounts: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 2004~8년(그리스: 2005-8년, 뉴질랜드: 2004-6년, 노르웨이: 2004-7년). |
| 신체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 | 93. 전국 및 지방 수준에서 장애인들에게 배정된 예산의 비율 | 장애관련 지출 비율(% of GDP) | OECD(2010q),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_Incapacity related Expenditure as % of GDP. | 2004~7년. |
| 개인 지원 서비스 | 94. 취학 전/후 아동보호/보육 수준 | 공식적 아동보호 및 보육수준 | 1) OECD(2011n), Family Database: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s.<br>2) 스위스: Eurostat(2011d),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Formal childcare by age group and duration - % over the population of each age group.<br><br>2008년(스위스: 2009년). | |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지원 | 95. 주거 및 환경설계의 포용성 | | | |

## 〈부록 4〉 사회의 질 측정지표

〈부록표 4-1~4〉는 논문의 제 2장에서 사용한 각 지표들의 측정값이다.

〈부록표 4-1〉 사회경제적 안전성 영역의 측정값

| | HouSpenD3 | NRRPension | NRRUnemp | PovRedR60 | HownR | HSpenH | RoomPP | WithoutBP | Assault | Homicide | PM10 | HCCov |
|---|---|---|---|---|---|---|---|---|---|---|---|---|
| AUS | 45.72 | 53.97 | 64.69 | 31.47 | 69.50 | 19.24 | 2.4 | 1.3 | 797.0 | 1.273 | 14.36 | 100.0 |
| AUT | 45.60 | 91.47 | 67.21 | 60.26 | 58.45 | 21.01 | 1.7 | 1.3 | 441.4 | 0.639 | 31.73 | 98.4 |
| BEL | 49.45 | 63.27 | 67.70 | 52.27 | 72.98 | 23.60 | 2.3 | 0.6 | 670.6 | 2.136 | 22.78 | 99.0 |
| CAN | 58.29 | 57.47 | 54.77 | 34.37 | 68.90 | 23.19 | 2.5 | 1.1 | 168.9 | 1.900 | 17.43 | 100.0 |
| DNK | 49.25 | 77.37 | 89.39 | 45.41 | 66.90 | 27.14 | 1.9 | 0 | 208.1 | 0.800 | 17.41 | 100.0 |
| FIN | 48.60 | 70.00 | 77.91 | 53.83 | 72.98 | 25.01 | 1.9 | 0.8 | 609.6 | 2.449 | 16.37 | 100.0 |
| FRA | 50.95 | 65.87 | 53.29 | 64.10 | 61.73 | 24.18 | 1.8 | 0.8 | 265.6 | 0.680 | 13.83 | 99.9 |
| DEU | 51.00 | 63.70 | 65.61 | 58.41 | 53.30 | 24.17 | 1.7 | 1.2 | 612.3 | 0.975 | 17.50 | 99.8 |
| GRC | 54.49 | 106.93 | 28.02 | 53.98 | 76.15 | 19.49 | 1.2 | 1.8 | 69.0 | 0.956 | 34.55 | 100.0 |
| HUN | 54.85 | 99.40 | 49.49 | 60.35 | 88.30 | 18.93 | 1 | 7.1 | 119.9 | 1.684 | 16.86 | 100.0 |
| IRL | 45.00 | 38.40 | 77.20 | 31.27 | 77.90 | 20.44 | 2.1 | 0.3 | 91.3 | 1.279 | 14.52 | 100.0 |
| ITA | 57.17 | 80.50 | 7.89 | 47.21 | 72.75 | 20.42 | 1.4 | 0.2 | 110.6 | 1.082 | 25.86 | 100.0 |
| JPN | 44.17 | 45.67 | 76.30 | 33.50 | 60.90 | 24.57 | 1.8 | 6.4 | 48.3 | 0.490 | 29.12 | 100.0 |
| KOR | 38.28 | 45.45 | 42.34 | 10.79 | 55.60 | 17.59 | 1.3 | 7.5 | 180.9 | 2.298 | 33.95 | 100.0 |
| LUX | 52.35 | 100.83 | 76.98 | 49.67 | 74.15 | 22.53 | 1.9 | 0.8 | 431.7 | 2.500 | 13.69 | 98.4 |
| NLD | 44.14 | 94.70 | 76.73 | 53.39 | 65.85 | 22.19 | 2 | 0 | 345.4 | 1.008 | 32.59 | 98.4 |
| NZL | 51.20 | 40.77 | 67.14 | 25.49 | 49.93 | 20.38 | 2.3 | 0.4 | 23.7 | 1.220 | 12.64 | 100.0 |
| NOR | 46.49 | 67.90 | 82.50 | 51.37 | 84.08 | 20.20 | 1.9 | 0.1 | 66.7 | 0.710 | 15.39 | 100.0 |
| PRT | 55.40 | 72.87 | 53.41 | 43.07 | 74.65 | 14.36 | 1.5 | 2.4 | 362.4 | 1.405 | 23.42 | 100.0 |
| ESP | 57.00 | 85.83 | 49.27 | 33.60 | 83.40 | 16.71 | 1.9 | 0 | 161.9 | 0.896 | 30.70 | 98.3 |
| SWE | 52.17 | 65.43 | 76.09 | 44.55 | 68.80 | 26.74 | 1.8 | 0 | 841.4 | 1.004 | 11.12 | 100.0 |
| CHE | 48.82 | 65.37 | 78.83 | 27.32 | 44.30 | 23.57 | 1.7 | 0.1 | 118.0 | 0.856 | 23.35 | 100.0 |
| GBR | 47.50 | 43.20 | 65.71 | 47.32 | 71.80 | 19.93 | 1.8 | 0.5 | 1006.1 | 1.423 | 13.75 | 100.0 |
| USA | 57.80 | 49.40 | 31.21 | 23.10 | 68.70 | 18.71 | 2.3 | 0 | 278.8 | 5.550 | 21.12 | 85.3 |

<부록표 4-1>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의 측정값(계속)

| | doctor | HosBeds | CareRelateExp | EPL | PermanencyR | FREParentalL | RateofFC | WorkingH | Dropout | HExpE | NEET2024 |
|---|---|---|---|---|---|---|---|---|---|---|---|
| AUS | 2.98 | 3.87 | 0.678 | 1.454 | 95.3 | 0.0 | 2.05 | 1721.4 | 14.3 | 1.34 | 11.38 |
| AUT | 4.6 | 7.70 | 0.970 | 2.15 | 91.0 | 19.3 | 4.55 | 1641.8 | 13.6 | 0.26 | 12.04 |
| BEL | 2.92 | 6.96 | 1.225 | 2.5 | 91.4 | 2.8 | 2.65 | 1561.6 | 14.2 | 0.58 | 16.31 |
| CAN | 2.27 | 3.36 | 0.156 | 1.06 | 87.1 | 19.3 | 2.73 | 1739.4 | 9.9 | 0.77 | 13.69 |
| DNK | 3.43 | 3.78 | 4.427 | 1.822 | 90.9 | 23.2 | 2.00 | 1576.8 | 15.8 | 1.67 | 8.28 |
| FIN | 2.72 | 6.88 | 1.921 | 2.102 | 83.9 | 23.8 | 1.83 | 1711.6 | 9.3 | 0.14 | 13.40 |
| FRA | 3.32 | 7.12 | 1.458 | 2.89 | 85.4 | 27.8 | 2.58 | 1554 | 13.3 | 0.67 | 17.96 |
| DEU | 3.56 | 8.36 | 0.672 | 2.39 | 85.9 | 40.6 | 1.98 | 1432.4 | 12.7 | 0.22 | 16.43 |
| GRC | 6.03 | 4.76 | 0.205 | 2.81 | 88.6 | 0.0 | 2.63 | 2109.4 | 16.9 | 1.23 | 19.71 |
| HUN | 3.09 | 7.58 | 1.196 | 1.79 | 92.8 | 59.3 | 3.50 | 1989.2 | 12.6 | 0.51 | 18.26 |
| IRL | 2.94 | 5.32 | 0.481 | 1.32 | 93.9 | 0.0 | 2.28 | 1640.4 | 10.8 | 0.27 | 12.47 |
| ITA | 4.19 | 3.91 | 0.743 | 2.34 | 87.2 | 7.8 | 2.63 | 1815.8 | 21.4 | 0.85 | 23.03 |
| JPN | 2.15 | 13.98 | 1.585 | 1.45 | 86.1 | 31.2 | 2.74 | 1780.4 | 4.5 | 1.93 | 8.41 |
| KOR | 1.86 | 6.58 | 0.452 | 1.98 | 71.7 | 9.7 | 8.47 | 2328.2 | 1.9 | 2.12 | 11.94 |
| LUX | 2.75 | 5.82 | 1.313 | 3.35 | 94.2 | 12.1 | 2.15 | 1561.2 | 16.4 | 0.11 | 9.74 |
| NLD | 2.88 | 4.63 | 1.928 | 2.228 | 83.4 | 5.3 | 1.70 | 1390.2 | 15.3 | 0.68 | 7.64 |
| NZL | 2.46 | 2.34 | 0.651 | 1.278 | 90.6 | 0.0 | 5.41 | 1788.6 | 19.4 | 1.24 | 14.42 |
| NOR | 4 | 3.91 | 2.684 | 2.676 | 90.4 | 31.6 | 2.10 | 1418.6 | 20.6 | 0.07 | 8.86 |
| PRT | 3.66 | 3.48 | 0.380 | 3.274 | 79.0 | 0.0 | 6.08 | 1748.8 | 39.9 | 0.36 | 13.93 |
| ESP | 3.5 | 3.32 | 0.898 | 3.01 | 67.9 | 0.0 | 3.13 | 1659.4 | 35.6 | 0.54 | 17.70 |
| SWE | 3.73 | 2.90 | 5.386 | 2.428 | 83.8 | 30.9 | 1.43 | 1608.8 | 7.9 | 0.18 | 13.64 |
| CHE | 3.82 | 5.43 | 1.016 | 1.6 | 87.1 | 0.0 | 3.23 | 1655 | 8.9 | 0.57 | 10.63 |
| GBR | 2.6 | 3.63 | 1.596 | 1.1 | 94.3 | 0.0 | 1.35 | 1670 | 12.1 | 1.54 | 17.26 |
| USA | 2.44 | 3.18 | 0.299 | 0.65 | 95.8 | 0.0 | 4.00 | 1798.2 | 9.5 | 1.46 | 16.29 |

〈부록표 4-2〉 사회적 응집성 분면의 측정값

| | Gtrust | CPI | SPtrust | Volunteer | Tolerance | TOthers | Membership | NPride |
|---|---|---|---|---|---|---|---|---|
| AUS | 46.15 | 8.72 | 2.60 | 37.9 | 94.65 | 6.10 | 1.10 | 1.37 |
| AUT | 36.36 | 8.38 | 2.79 | 30.3 | 79.32 | 5.38 | 0.36 | 1.67 |
| BEL | 34.76 | 7.32 | 2.71 | 24.0 | 94.04 | 5.55 | 0.68 | 1.85 |
| CAN | 42.78 | 8.56 | 2.54 | 38.1 | 96.83 | 5.49 | 1.13 | 1.34 |
| DNK | 76.13 | 9.44 | 2.34 | 19.7 | 94.25 | 7.47 | 1.26 | 1.61 |
| FIN | 65.11 | 9.46 | 2.54 | 27.9 | 87.79 | 6.81 | 0.73 | 1.51 |
| FRA | 27.18 | 7.24 | 2.68 | 28.5 | 96.22 | 6.05 | 0.37 | 1.74 |
| DEU | 38.90 | 8.02 | 2.78 | 22.7 | 91.66 | 5.56 | 0.33 | 2.10 |
| GRC | 21.68 | 4.46 | 2.88 | 7.4 | 87.64 | 4.54 | 0.18 | 1.39 |
| HUN | 20.97 | 5.08 | 3.01 | 6.3 | 87.73 | 4.64 | 0.12 | 1.81 |
| IRL | 38.45 | 7.5 | 2.58 | 35.0 | 87.00 | 4.52 | 0.52 | 1.24 |
| ITA | 30.91 | 4.94 | 2.80 | 21.1 | 83.71 | 4.06 | 0.27 | 1.69 |
| JPN | 39.08 | 7.32 | 2.54 | 24.7 | 86.40 | 5.27 | 0.59 | 2.20 |
| KOR | 28.26 | 5.06 | 2.63 | 21.3 | 62.38 | 3.76 | 0.80 | 1.95 |
| LUX | 33.03 | 8.44 | 2.42 | 23.8 | 86.95 | 6.09 | 0.69 | 1.60 |
| NLD | 62.93 | 8.78 | 2.57 | 37.1 | 88.03 | 6.34 | 1.17 | 1.88 |
| NZL | 51.16 | 9.5 | 2.63 | 41.5 | 94.29 | 5.79 | 1.27 | 1.33 |
| NOR | 74.23 | 8.64 | 2.44 | 38.9 | 93.81 | 6.87 | 0.89 | 1.50 |
| PRT | 19.72 | 6.4 | 2.67 | 11.9 | 90.95 | 4.46 | 0.14 | 1.41 |
| ESP | 34.53 | 6.82 | 2.72 | 14.8 | 95.78 | 5.90 | 0.16 | 1.53 |
| SWE | 70.09 | 9.24 | 2.60 | 12.4 | 93.57 | 7.87 | 0.64 | 1.68 |
| CHE | 55.40 | 9.06 | 2.54 | 34.1 | 96.69 | 5.89 | 0.52 | 1.70 |
| GBR | 40.12 | 8.38 | 2.78 | 28.7 | 90.11 | 5.37 | 0.33 | 1.57 |
| USA | 39.37 | 7.38 | 2.59 | 41.9 | 91.62 | 4.93 | 1.22 | 1.42 |

〈부록표 4-3〉 사회적 포용성 분면의 측정값

| | VoterTO | Pensioncoverage | GenderPaygap | WomenPow | Lunemple | InvdpartW | GovHE | TetiaryEdu | RoadDEN | Screen | SocialNet |
|---|---|---|---|---|---|---|---|---|---|---|---|
| AUS | 94.75 | 81.3 | 11.94 | 37.13 | 17.45 | 6.91 | 68.61 | 33.1 | 11 | 10.22 | 95.4 |
| AUT | 80.10 | 93.1 | 20.92 | 27.80 | 26.24 | 1.59 | 77.36 | 17.9 | 128.5 | 7.62 | 94.6 |
| BEL | 91.08 | 81.4 | 9.87 | 31.10 | 49.97 | 2.87 | 74.23 | 31.5 | 498.4 | 5.34 | 92.6 |
| CAN | 61.79 | 90.5 | 20.44 | 36.20 | 8.47 | 4.43 | 69.79 | 47.0 | 14 | 9.53 | 95.3 |
| DNK | 85.57 | 100 | 12.26 | 24.87 | 19.01 | 2.09 | 83.78 | 33.1 | 168.2 | 7.98 | 96.8 |
| FIN | 65.02 | 100 | 21.23 | 29.13 | 22.85 | 3.13 | 74.52 | 35.4 | 23 | 6.73 | 93.4 |
| FRA | 59.98 | 100 | 12.02 | 37.05 | 40.27 | 3.58 | 78.75 | 26.0 | 173 | 9.65 | 93.9 |
| DEU | 77.65 | 100 | 25.38 | 36.73 | 54.09 | 3.84 | 76.97 | 24.6 | 180 | 6.44 | 93.5 |
| GRC | 75.38 | 72.5 | 9.58 | 26.07 | 51.41 | 2.04 | 62.05 | 22.2 | 88 | 4.98 | 86.1 |
| HUN | 64.39 | 84.9 | 2.22 | 35.30 | 46.50 | 0.48 | 71.27 | 17.8 | 200.25 | 4.74 | 88.6 |
| IRL | 67.03 | 64.7 | 16.08 | 30.00 | 31.30 | 1.25 | 76.55 | 30.8 | 137 | 10.85 | 97.3 |
| ITA | 82.08 | 82.8 | 1.31 | 32.63 | 48.35 | 4.20 | 77.88 | 12.9 | 162 | 6.48 | 86.0 |
| JPN | 67.46 | 67.9 | 30.69 | 10.17 | 33.05 | 4.69 | 80.21 | 40.6 | 316.25 | 2.75 | 89.7 |
| KOR | 53.00 | 33.5 | 38.76 | 7.63 | 1.25 | 4.33 | 56.53 | 33.2 | 102.8 | 4.46 | 79.8 |
| LUX | 91.68 | 100 | 12.40 | 21.98 | 27.59 | 0.95 | 82.87 | 25.7 | 202 | 6.24 | 95.0 |
| NLD | 80.35 | 100 | 16.66 | 25.40 | 38.24 | 1.40 | 75.58 | 30.6 | 325.5 | 4.74 | 94.8 |
| NZL | 79.88 | 100 | 7.79 | 37.27 | 7.95 | 3.86 | 78.29 | 38.5 | 35 | 9.81 | 97.1 |
| NOR | 77.44 | 94 | 8.58 | 30.93 | 9.58 | 1.48 | 83.42 | 33.5 | 29 | 10.16 | 93.1 |
| PRT | 64.26 | 100 | 15.56 | 33.17 | 47.45 | 2.36 | 67.34 | 13.4 | 87.5 | 5.51 | 83.3 |
| ESP | 75.85 | 84.8 | 11.81 | 31.93 | 30.22 | 3.27 | 70.82 | 28.3 | 132 | 10.73 | 94.1 |
| SWE | 81.99 | 100 | 15.41 | 31.20 | 14.76 | 2.99 | 81.61 | 29.7 | 101.2 | 11.48 | 96.2 |
| CHE | 48.28 | 100 | 19.51 | 28.60 | 37.32 | 1.44 | 59.11 | 30.3 | 173 | 8.10 | 93.2 |
| GBR | 61.36 | 100 | 21.00 | 33.80 | 22.34 | 1.69 | 81.64 | 30.8 | 166.8 | 6.39 | 94.9 |
| USA | 60.21 | 74 | 20.05 | 42.13 | 11.00 | 1.03 | 46.08 | 39.8 | 67.5 | 14.57 | 92.3 |

〈부록표 4-4〉 사회적 역능성 분면의 측정값

| | LFwithTEdu | PwithSEdu | InternetUsers | TUdensity | ColAgreCov | ALMPtrainEXP | MatemalER | OpenCS | GovExpCUL | HosExpCUL | PubExpIC | ERChildCare |
|---|---|---|---|---|---|---|---|---|---|---|---|---|
| AUS | 36.86 | 70 | 67.53 | 20.01 | 60 | 0.014 | 70.5 | 10.5 | 0.83 | 11.48 | 2.32 | 41.8 |
| AUT | 20.96 | 81 | 63.62 | 31.49 | 99 | 0.354 | 71.0 | 7.1 | 1.00 | 10.37 | 2.50 | 44.9 |
| BEL | 35.90 | 70 | 63.67 | 52.97 | 96 | 0.154 | 62.7 | 4.5 | 1.24 | 9.39 | 2.34 | 73.9 |
| CAN | 49.00 | 87 | 71.98 | 27.58 | 32 | 0.086 | 71.1 | 10.5 | 0.91 | 10.18 | 0.92 | 40.4 |
| DNK | 35.24 | 75 | 84.07 | 69.92 | 82 | 0.406 | 77.5 | 7 | 1.64 | 11.51 | 4.32 | 78.6 |
| FIN | 39.40 | 81 | 78.20 | 71.05 | 90 | 0.388 | 76.0 | 9 | 1.11 | 11.87 | 3.75 | 51.4 |
| FRA | 27.16 | 70 | 53.13 | 7.69 | 95 | 0.294 | 66.0 | 3.5 | 1.49 | 8.88 | 1.80 | 70.9 |
| DEU | 27.90 | 85 | 71.73 | 20.71 | 63 | 0.296 | 65.9 | 4.5 | 0.62 | 9.34 | 1.99 | 55.2 |
| GRC | 25.12 | 61 | 30.35 | 24.46 | 85 | 0.056 | 51.7 | 6.5 | 0.35 | 5.68 | 0.91 | 31.1 |
| HUN | 20.86 | 80 | 44.61 | 17.03 | 35 | 0.054 | 58.9 | 7.9 | 1.59 | 8.41 | 2.76 | 47.9 |
| IRL | 32.30 | 69 | 51.86 | 33.40 | 44 | 0.266 | 55.2 | 9 | 0.72 | 7.17 | 1.63 | 43.6 |
| ITA | 16.00 | 53 | 38.31 | 33.57 | 80 | 0.19 | 48.9 | 5 | 0.85 | 6.94 | 1.73 | 63.3 |
| JPN | 35.58 | - | 69.54 | 18.57 | 16 | 0.036 | 65.9 | 7.3 | 0.14 | 10.77 | 0.75 | 59.1 |
| KOR | 29.13 | 79 | 76.82 | 10.22 | 12 | 0.048 | 60 | 10.4 | 0.73 | 8.01 | 0.54 | 58.8 |
| LUX | 29.20 | 68 | 73.91 | 39.97 | 60 | 0.096 | 57.2 | 6 | 1.89 | 7.98 | 3.12 | 62.3 |
| NLD | 33.30 | 73 | 81.29 | 20.20 | 82 | 0.112 | 74.6 | 6.1 | 1.41 | 10.40 | 3.28 | 61.5 |
| NZL | 33.90 | 72 | 67.07 | 20.95 | 30 | 0.172 | 75.3 | 10.3 | 1.18 | 13.01 | 2.74 | 66.0 |
| NOR | 36.20 | 81 | 83.95 | 54.35 | 72 | 0.294 | 79 | 8.1 | 1.09 | 12.94 | 4.43 | 72.9 |
| PRT | 13.22 | 28 | 38.20 | 20.96 | 62 | 0.248 | 67.4 | 6.5 | 1.10 | 7.45 | 2.18 | 63.3 |
| ESP | 31.54 | 51 | 51.39 | 15.14 | 80 | 0.16 | 56.7 | 7.3 | 1.54 | 8.85 | 2.51 | 68.0 |
| SWE | 31.52 | 85 | 85.70 | 73.76 | 92 | 0.242 | 76.1 | 10.9 | 1.07 | 11.56 | 5.37 | 68.9 |
| CHE | 33.18 | 87 | 74.00 | 18.89 | 48 | 0.232 | 77.0 | 8.4 | 0.89 | 8.22 | 3.18 | 37.2 |
| GBR | 32.50 | 70 | 71.58 | 28.18 | 35 | 0.026 | 67.3 | 11.5 | 1.05 | 11.59 | 2.39 | 66.7 |
| USA | 60.62 | 89 | 70.13 | 11.79 | 13 | 0.052 | 73.2 | 8.3 | 0.31 | 9.70 | 1.28 | 43.5 |

## 〈부록 5〉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다음은 본문 4장과 관련된 것이다. 〈부록 표 5-1〉은 측정의 과정에서 '완전한 소속' 기준을 적용한 퍼지소속점수를 보여준다.측정(calibration)의 과정에서는 소속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완전한소속의 기준 이상 소속'을 설정하였으며, 이때 소속의 정도에서 최대값은 .95가 된다. 이와는 달리 소속의 기준을 '완전한 소속'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속의 정도는 최대값이 .99가 되고, 최소값은 .01이 된다.

〈부록 표 5-2〉는 각 국가의 사회의 질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한 조건배열에의 소속점수와 최적배열이다. 〈부록 표 5-3〉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서 일관성 값과 설명력 값의 계산과정이다.

〈부록표 5-1〉 '완전한 소속' 기준을 적용한 퍼지소속점수

| | 결과조건 | 원인조건 | | | | |
|---|---|---|---|---|---|---|
| 국가 | FLS | FSES | FSC | FSI | FSE | FGDPPPP |
| | 삶의 만족 | 사회경제적 안전성 | 사회적 응집성 | 사회적 포용성 | 사회적 역능성 | 1인당 GDP |
| AUS | 0.8453 | 0.4406 | 0.9836 | 0.4328 | 0.6062 | 0.7783 |
| AUT | 0.7198 | 0.9217 | 0.1723 | 0.5370 | 0.5928 | 0.6796 |
| BEL | 0.3170 | 0.7134 | 0.3036 | 0.5122 | 0.5322 | 0.4677 |
| CAN | 0.9274 | 0.2274 | 0.9861 | 0.9142 | 0.5833 | 0.7216 |
| DNK | 0.9933 | 0.9046 | 0.9917 | 0.9918 | 0.9869 | 0.6569 |
| FIN | 0.9534 | 0.9545 | 0.9187 | 0.4939 | 0.9717 | 0.4325 |
| FRA | 0.2095 | 0.8334 | 0.2851 | 0.4325 | 0.2751 | 0.2890 |
| DEU | 0.2236 | 0.9188 | 0.0557 | 0.1837 | 0.2011 | 0.4354 |
| GRC | 0.1438 | 0.0936 | 0.0409 | 0.0256 | 0.0067 | 0.0868 |
| HUN | 0.0067 | 0.3327 | 0.0067 | 0.1642 | 0.2223 | 0.0067 |
| IRL | 0.9845 | 0.7744 | 0.7604 | 0.8999 | 0.1506 | 0.9631 |
| ITA | 0.1179 | 0.0511 | 0.0368 | 0.0463 | 0.0377 | 0.2193 |
| JPN | 0.1223 | 0.3738 | 0.1006 | 0.1557 | 0.1549 | 0.3045 |
| KOR | 0.0530 | 0.0067 | 0.0366 | 0.0067 | 0.2230 | 0.0424 |
| LUX | 0.4793 | 0.9768 | 0.7248 | 0.9565 | 0.5095 | 1.0000 |
| NLD | 0.5932 | 0.9262 | 0.9184 | 0.8041 | 0.7365 | 0.8470 |
| NZL | 0.7384 | 0.0939 | 0.9933 | 0.9933 | 0.9039 | 0.0902 |
| NOR | 0.9754 | 0.9933 | 0.9848 | 0.9903 | 0.9811 | 0.9997 |
| PRT | 0.0211 | 0.0609 | 0.0999 | 0.0170 | 0.0850 | 0.0252 |
| ESP | 0.4279 | 0.0389 | 0.1797 | 0.4900 | 0.4127 | 0.1948 |
| SWE | 0.8684 | 0.9846 | 0.7856 | 0.9823 | 0.9933 | 0.6575 |
| CHE | 0.8975 | 0.5929 | 0.7482 | 0.2414 | 0.4907 | 0.9285 |
| GBR | 0.3587 | 0.2536 | 0.3039 | 0.9202 | 0.8439 | 0.5488 |
| USA | 0.8046 | 0.0131 | 0.9702 | 0.6940 | 0.2523 | 0.9903 |

〈부록표 5-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서 원인 배열의 퍼지소속점수

| | SCIE | SCIe | SCiE | SciE | sCIE | SCie | SciE | sclE | Scle | sCiE | sCIe | Scie | sCie | scIe | sciE | scie | Max |
|---|---|---|---|---|---|---|---|---|---|---|---|---|---|---|---|---|---|
| AUS | 0.4595 | 0.4357 | 0.4643 | 0.0789 | 0.4595 | 0.4357 | 0.0789 | 0.0789 | 0.0789 | 0.5357 | 0.4357 | 0.0789 | 0.4357 | 0.0789 | 0.0789 | 0.0789 | 0.5357 |
| AUT | 0.2806 | 0.2806 | 0.2806 | 0.5222 | 0.1856 | 0.2806 | 0.4778 | 0.1856 | 0.4439 | 0.1856 | 0.1856 | 0.4439 | 0.1856 | 0.1856 | 0.1856 | 0.1856 | 0.5222 |
| BEL | 0.3780 | 0.3780 | 0.3780 | 0.5073 | 0.3665 | 0.3780 | 0.4927 | 0.3665 | 0.4807 | 0.3665 | 0.3665 | 0.4807 | 0.3665 | 0.3665 | 0.3665 | 0.3665 | 0.5073 |
| CAN | 0.3244 | 0.3244 | 0.1947 | 0.0720 | 0.5502 | 0.1947 | 0.0720 | 0.0720 | 0.0720 | 0.1947 | 0.4498 | 0.0720 | 0.1947 | 0.0720 | 0.0720 | 0.0720 | 0.5502 |
| DNK | 0.7941 | 0.0695 | 0.0534 | 0.0538 | 0.2059 | 0.0534 | 0.0534 | 0.0538 | 0.0538 | 0.0534 | 0.0695 | 0.0534 | 0.0534 | 0.0538 | 0.0534 | 0.0534 | 0.7941 |
| FIN | 0.4964 | 0.1071 | 0.5036 | 0.1893 | 0.1387 | 0.1071 | 0.1893 | 0.1387 | 0.1071 | 0.1387 | 0.1071 | 0.1071 | 0.1071 | 0.1071 | 0.1387 | 0.1071 | 0.5036 |
| FRA | 0.3586 | 0.3655 | 0.3586 | 0.3586 | 0.2757 | 0.3655 | 0.3586 | 0.2757 | 0.4593 | 0.2757 | 0.2757 | 0.5407 | 0.2757 | 0.2757 | 0.2757 | 0.2757 | 0.5407 |
| DEU | 0.1547 | 0.1547 | 0.1547 | 0.2901 | 0.1547 | 0.1547 | 0.3041 | 0.1891 | 0.2901 | 0.1547 | 0.1547 | 0.6959 | 0.1547 | 0.1891 | 0.1891 | 0.1891 | 0.6959 |
| GRC | 0.0474 | 0.1012 | 0.0474 | 0.0474 | 0.0474 | 0.1309 | 0.0474 | 0.0474 | 0.1012 | 0.0474 | 0.1012 | 0.2039 | 0.1309 | 0.1012 | 0.0474 | 0.7961 | 0.7961 |
| HUN | 0.0474 | 0.0474 | 0.0474 | 0.2736 | 0.0474 | 0.0474 | 0.3205 | 0.2736 | 0.2736 | 0.0474 | 0.0474 | 0.3971 | 0.0474 | 0.2736 | 0.3205 | 0.6029 | 0.6029 |
| IRL | 0.2616 | 0.6666 | 0.2112 | 0.2616 | 0.2616 | 0.2112 | 0.2112 | 0.2616 | 0.3334 | 0.2112 | 0.3230 | 0.2112 | 0.2112 | 0.3230 | 0.2112 | 0.2112 | 0.6666 |
| ITA | 0.1236 | 0.1236 | 0.1236 | 0.1253 | 0.1236 | 0.1236 | 0.1253 | 0.1253 | 0.1400 | 0.1236 | 0.1236 | 0.1476 | 0.1236 | 0.1400 | 0.1253 | 0.8524 | 0.8524 |
| JPN | 0.2117 | 0.2117 | 0.2117 | 0.2654 | 0.2117 | 0.2117 | 0.2654 | 0.2654 | 0.2662 | 0.2117 | 0.2117 | 0.4232 | 0.2117 | 0.2662 | 0.2654 | 0.5768 | 0.5768 |
| KOR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1233 | 0.0474 | 0.0474 | 0.1233 | 0.0474 | 0.3210 | 0.6790 | 0.6790 |
| LUX | 0.5057 | 0.4943 | 0.1354 | 0.3587 | 0.0958 | 0.1354 | 0.1354 | 0.0958 | 0.3587 | 0.0958 | 0.0958 | 0.1354 | 0.0958 | 0.0958 | 0.0958 | 0.0958 | 0.5057 |
| NLD | 0.6495 | 0.3505 | 0.3000 | 0.1897 | 0.1798 | 0.3000 | 0.1897 | 0.1798 | 0.1897 | 0.1798 | 0.1798 | 0.1897 | 0.1798 | 0.1798 | 0.1798 | 0.1798 | 0.6495 |
| NZL | 0.2043 | 0.2043 | 0.0474 | 0.0474 | 0.7932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2068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7932 |
| NOR | 0.9145 | 0.0855 | 0.0586 | 0.0756 | 0.0474 | 0.0586 | 0.0586 | 0.0474 | 0.0756 | 0.0474 | 0.0474 | 0.0586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9145 |
| PRT | 0.0805 | 0.0805 | 0.1623 | 0.0805 | 0.0805 | 0.1623 | 0.1623 | 0.0805 | 0.0805 | 0.1938 | 0.0805 | 0.1623 | 0.2109 | 0.0805 | 0.1938 | 0.7891 | 0.7891 |
| ESP | 0.1274 | 0.1274 | 0.1274 | 0.1274 | 0.2868 | 0.1274 | 0.1274 | 0.4473 | 0.1274 | 0.2868 | 0.2868 | 0.1274 | 0.2868 | 0.4940 | 0.4473 | 0.5060 | 0.5060 |
| SWE | 0.6855 | 0.0474 | 0.0825 | 0.3145 | 0.0763 | 0.0474 | 0.0825 | 0.0763 | 0.0474 | 0.0763 | 0.0474 | 0.0474 | 0.0474 | 0.0474 | 0.0763 | 0.0474 | 0.6855 |
| CHE | 0.3347 | 0.3347 | 0.4944 | 0.3347 | 0.3347 | 0.5056 | 0.3422 | 0.3347 | 0.3347 | 0.4439 | 0.3347 | 0.3422 | 0.4439 | 0.3347 | 0.3422 | 0.3422 | 0.5056 |
| GBR | 0.3435 | 0.2665 | 0.1874 | 0.3435 | 0.3782 | 0.1874 | 0.1874 | 0.6218 | 0.2665 | 0.1874 | 0.2665 | 0.1874 | 0.1874 | 0.2665 | 0.1874 | 0.1874 | 0.6218 |
| USA | 0.0695 | 0.0695 | 0.0695 | 0.0695 | 0.3426 | 0.0695 | 0.0695 | 0.1101 | 0.0695 | 0.3426 | 0.6204 | 0.0695 | 0.3796 | 0.1101 | 0.1101 | 0.1101 | 0.6204 |

주: 음영은 각 사례의 최적 배열(best fits)을 의미한다.

〈부록표 5-3〉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계산(Y-Cons, N-Cons, Coverage)

| | | Y-Cons | N-Cons |
|---|---|---|---|
| 필요조건검증 | $FLS_i \leq FSES_i$ | | |
| | FSES | $\sum \min(FSES_i, FLS_i) = 9.5499$ | $\sum \min((1-FSES_i), FLS_i) = 6.9694$ |
| | | $\sum FSES_i = 12.3872$ | $\sum (1-FSES_i) = 11.6128$ |
| | | $\sum FLS_i = 12.6666$ | $\sum FLS_i = 12.6666$ |
| | | 필요조건의<br>'Y-Cons=9.5499/12.6666=.7539',<br>'Coverage=9.5499/12.3872=.7709'. | 필요조건의<br>'N-Cons=6.9694/12.6666=.5502'. |
| 충분조건검증 | | $FSES_i \leq FLS_i$ | |
| | FSES | $\sum \min(FSES_i, FLS_i) = 9.5499$ | $\sum \min(FSES_i, (1-FLS_i)) = 6.6899$ |
| | | $\sum FSES_i = 12.3872$ | $\sum FSES_i = 12.3872$ |
| | | $\sum FLS_i = 12.6666$ | $\sum (1-FLS_i) = 11.6128$ |
| | | 충분조건의<br>'Y-Cons=9.5499/12.3872=.7709',<br>'Coverage=9.5499/12.6666=.7539'. | 충분조건의<br>'N-Cons=6.6899/12.3872=.5401'. |
| | fses | $\sum \min((1-FSES_i), FLS_i) = 6.969$ | $\sum \min((1-FSES_i), (1-FLS_i)) = 8.4$ |
| | | $\sum (1-FLS_i) = 11.6128$ | $\sum (1-FSES_i) = 11.6128$ |
| | | $\sum FLS_i = 12.6666$ | $\sum (1-FLS_i) = 11.3334$ |
| | | 충분조건의<br>'Y-Cons=6.9694/11.6128=.6001',<br>'Coverage=6.9694/12.6666=.5502'. | 충분조건의<br>'N-Cons=8.4961/11.6128=.7316'. |

# Abstract

##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application of 'Social Quality(SQ)'

Jung, Hae-Si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has two major objectives; to measure the social quality, and to apply the concept of social quality in understanding the welfare states and explaining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For these objectives, this study first selected the indicators reflecting the social quality of economically developed na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measured the social quality using the indices. The study then explored the utility of social quality as a framework to analyze the welfare states by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quality level and welfare states and explored the utility of social quality approach by examining the social quality as a societal condition factor in relation to gross national happiness.

Social quality theory is a theoretical framework could be used to measure the various social contexts level of welfare states, and consists of four domains;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and social empowerment. As the theory has largely remained at a theoretical level lacking empirical basis in its applicability, this study measured the level of social quality using indicators selected from 18 sub-domains of four domains. Once the level of social quality was measur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quality and welfare states was examined which was followed by analyses on relation between social quality and gross national happines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ndings on the measurement are discussed. This study identified a total of 19 indicators from five sub-domains of socio-economic security, a total of 8 indicators from four sub-domains of social cohesion, a total of 11 indicators from four sub-domains of social inclusion, a total of 12 indicators from five sub-domains of social empowerment.

Scandinavian countries showed the highest social quality level which were constructed by composite indices of four domains, followed by Anglo-Saxon countries, continental Europe countries, and then the southern Europe countries. Excluding welfare states such as Greece, Italy, Portugal and Korea scoring low in all four social quality domains, the level of social quality development was identified to be non-linear. In other words, the social development measured using four domains of social quality differed by each welfare state.

Second, the findings on social quality and its relation to welfare states are discussed.

Social expenditure, a traditional indicator used to assess the level of welfare stat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only with socio-economic security domain. However, in-kind social expenditur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inclusion and empowerment. Among the welfare state output factors, unemployment rate was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cohesion, and employment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variable related to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and social empowerment.

A typology of social quality level was developed using the four domains of social quality and the findings were similar to Esping-Andersen's three welfare regime types. However, findings also showed that southern European state was uniquely different from the three regime types. The liberal welfare states were characterized with high social cohesion while the conservative corporatist welfare states generally had a close-to-average level of development.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were well developed evenly across all four domains. Lastly, Korea along with som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was found to be at low in development across all four domains.

These analyses show that traditional welfare state approach which emphasizing economic security is limited in explaining the various contexts of social quality and indicates the need for new understanding of welfare states via the social quality approach.

Thir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ur domains of social quality as causal conditions and gross national happiness. If four domains are found to be necessary conditions for gross national happiness, it then would indicate that social quality approach may be appropriate in explaining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In addition, identifying which causal combinations better explains the level of gross national happiness would provide an empirical basis for developing goals for social development necessary for 'happy nation'.

The analyses were divided in two parts. First, only the four domains of social quality were set as causal conditions. Second, the GDP per capita was added as a causal condition. The first analysis yielded findings that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and social empowerment were almost always necessary conditions for a high level of gross national happiness. Causal combination yielding the highest level of gross national happiness entails a causal pathway with high social cohesion, high social inclusion, and high social empowerment and another causal pathway with high socio-economic security, high social cohesion, and high social empowerment. In other words, a high level of gross national happiness does not result from development of one particular domain of social quality. Rather it is better explained by causal combinations of various domains.

Second, GDP per capita, a representative factor of private resources area was added to the analysis as socio-economic security dimension measured by public resources area failed to explain the gross national happiness in some stat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GDP per capita was also an important necessary condition for gross national happiness. Three causal pathways were identified and for some states such as U.S.A. and Australia, GDP per capita was also found to be a conditional facto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ed the discourse on social quality to the measurement level, by identifying four domains and sub-domains of each domain. The findings provided a basis for argument on the importance of social cohesion, social inclusion, and social empowerment in addition to traditionally emphasized domain, socio-economic securit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welfare states of the 21st century. The study provided an empirical basis for the utility of social quality approach in understanding gross national happiness.

The findings show that development in one particular domain of social quality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n overall improvement of society, implying that social development strategies must be im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social contexts rather than improvement in one area or one particular dimension of society.

Keywords: Social Quality, Welfare State, Gross National Happiness, Socio-economic security, social cohesion, fsQCA

Student Number: 2006-30756